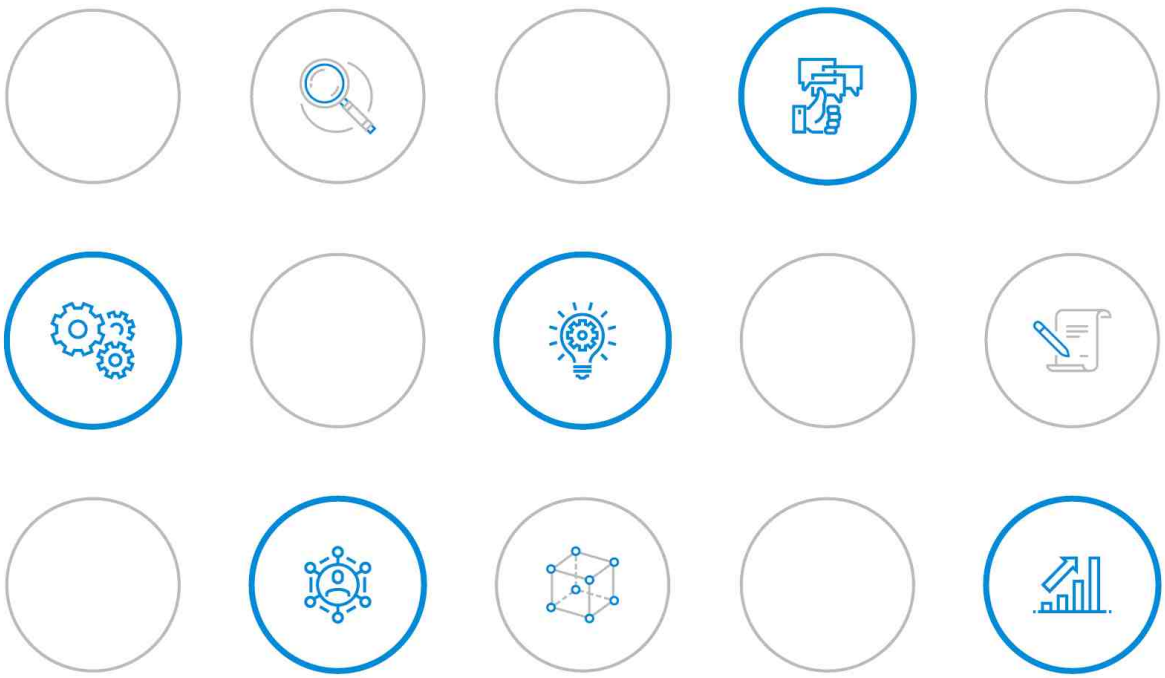
정책 26-07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in Goyang City

• 박종윤, 김용덕, 안지호, 유진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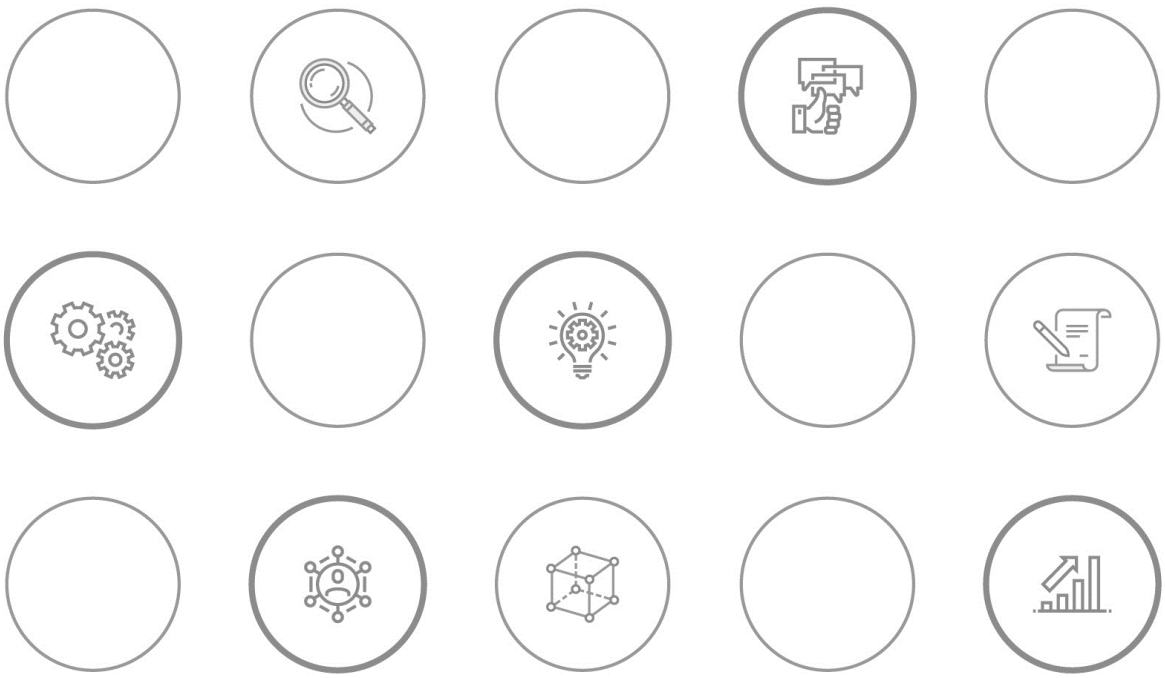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정책 26-07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in Goyang City

• 박종윤, 김용덕, 안지호, 유진근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in Goyang City

연구책임자

박종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김용덕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안지호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유진근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

김범수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김지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이기엽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윤효림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외부연구진

이준범 체어드랩스, 정책학 박사
유제웅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강사

정 책 제 안

□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 사업공간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지만 주거, 인력, 조세, 금융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도 높음

-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용수, 전력, 교통, 주거 등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야 함

○ R&D 기반 산업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유치 지원정책이 필요함

분류	정책안
주거지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산업클러스터 임직원 임대보증금 지원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오픈이노베이션·PoC	· 경기도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 관내 대학 PoC 트랙
네트워킹 및 행정지원	· 기업·바이어 런치 교류회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파견 · 지산학 협력과 신설
융자·보증	· 데이터 가치평가 매칭 · 전략산업 특례보증
멘토링·컨설팅	· 1:1 멘토링 트랙 · 국제전시회 고양관 운영
인력	· 대학연계 전략산업 취업연계 비학위과정

□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

○ 위치: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일산테크노밸리

○ 1안 : 고양 퀀텀캠퍼스 조성안

- 양자 산업 하드웨어가 아닌 양자보안·SW·실증 중심 도시형
- 1단계 양자암호(의료·국방·드론 보안) → 2단계 양자컴퓨팅(양자 알고리즘)
- 대학연계 3단계 양자교육, 양자산업 추진단(시장 직속)

○ 2안 : 고양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안

- 도심형 피지컬 AI 통합 실증지구
- 1단계: 순찰·배송 로봇(실·검증) → 2단계 휴머노이드·돌봄·산업 로봇(지역산업 연계)
- 실검증 인프라 구축, 순찰로봇 공공조달, 피지컬 AI 추진단, 운영 인력 지역인재 우선채용

요 약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유치 필요성 확대
- 수도권 중심 첨단·지식기반 산업 유치 경쟁 심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
  - 기업유치 역량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
  - 기업지원정책이 인프라·정주환경·정책지원 등 복합 요소로 확대

□ 연구 필요성

-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본격화,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 산업기반 확충 필요.
- 서울 인접·정주환경 강점에도 제조업 기반 취약·산업집적도 낮음·통근 의존 구조
- 고양시 특성에 적합한 기업유치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유치

□ 연구 목적

- 기업 수요 기반(입지요인·정책수요) 실증 분석
- 정책 사례 및 설문조사 기반 시사점 도출
-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도출

□ 고양시 기업환경 분석

- 고양시는 수도권 접근성, 양호한 정주환경, KINTEX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기반으로 평가됨
- 산업집적도와 기업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족적인 산업생태계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는 산업 간 연계와 집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기업유치 정책은 개별 기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보유한 입지적 강점과 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 정책·클러스터 사례 분석

- 지자체 정책 비교(7대 유형): 고양시는 금융지원만 '우수', 인건비·복지 '부족', 사업공간·조세·R&D·행정 '보통'. 타 특례시·경의권은 산업단지·기술 기반 집적 → 고양시는 입지기반 확충·산업생태계 조성 확대 필요
- 클러스터 형성 유형
  - 유형1 (자생적 대학 앵커형): 원주 의료기기 – 대학 단일 앵커, 장기 축적
  - 유형2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파주 디스플레이 – 국가·광역 패키지, 거점기업
  - 유형3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포항 팁스타운 – 민간 거대자본+대학, 산업전환
  - 유형4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양재 AI – 도심 인접, 다중 앵커, 통합 거버넌스
- 고양시 전략 : 단일 모델이 아닌 "다중 앵커 기반 선택적 결합 모델" : 유형4 핵심, 유형1 보완(관내 대학), 유형2는 중앙·경기도 '원팀' 협력 요소만 수용

□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분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는 비수도권에 비해 기업 인센티브 구조에서 불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증설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수도권 밖 이전 시에만 5~10년 100% + 3~5년 50% 감면이 적용
    · 본사 지방이전 감면도 과밀억제권역은 출발지로만 작용하며 비수도권 전속 인센티브
  - 산업단지 입주 취득세는 고양시 35%(수도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75%로 차등
  -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는 청년창업만 50% 감면이 인정되고 일반창업은 감면 없음
  -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5+2년 감면은 비수도권 원칙 적용(수도권은 인구감소·접경지역만 예외,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부재)

○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입지기반이 아닌 시설요건, 업종요건, 특구지정, 시조례 자체감면 위주가 되어야 함

- 지식산업센터, 창업벤처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시설요건 지방세 감면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시 조례 자체감면은 외투·창업·중견·중소기업에 공통 활용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구 지정 필요
-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 등 업종요건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업을 선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지원 정책수요 설문 분석

○ 내부 기업 설문

- 긍정요인 1위 거래처·시장 접근성(39.3%)
- 잔류요인 = 수도권 접근성으로 정책 인지 53.6%
- 투자유치 정책 인지 40%로 인지도 낮음
- 희망정책 1위 금융지원(42.9%), 애로=정보 접근성 부족(32.1%)

○ 외부 기업 설문

- 입지요인 1위 저렴한 입지 확보(61.1%), 이어 인센티브·교통·인적자본
- 희망정책은 사업공간 → 인건비·조세 → 금융의 단계적 구조
- 정책별 이전의사에서 "다른 요건(인력·교통·인프라)이 함께 해결돼야 이전 가능" 응답이 다수
  · 지방자치단체간 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용수, 전력, 교통, 주거 등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야 함
- 고양시 인프라 인식은 "정보 부족"이 35.1%로 최다

○ ① 수도권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 ② 수요는 직접 비용절감형(금융·공간·인력)에 집중 ③ 정책 인지도·정보 접근성이 최대 병목 → 통합 정보 플랫폼 필요 ④ 비용지원만으로는 한계 → 재정+행정+인프라·인력이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 필요

□ 고양시 전략산업 도출

- 고양시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 전사문 21건(독립 참여 단위 20개)을 수집하고, 개방코딩과 축코딩·주제분석을 통해 통합 질적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5개의 핵심 주제가 도출
  - 첫째,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부지·보조금이 아니라 실증 기회: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
  - 둘째, 유치의 본질은 수요·매출 기회의 연계: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필요
  - 셋째, 수도권 규제·판교 인력 마지노선·베드타운 인식이라는 3중 제약이 존재
  - 넷째, 국립암센터·병원 집적·킨텍스 등 앵커 자산이 플랫폼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다섯째, 산업 테마의 압축과 10년 이상의 정책 지속성이 성패를 좌우함
- 핵심 전략산업
  - ①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 ②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 ③ 드론·UAM·항공 R&D
    · 연계·보완 산업: AI 데이터센터·미디어 AI, 양자보안, 스마트물류, 푸드테크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6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8

제2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이론적 배경 11

제1절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정의 13
제2절 기업유치 지원정책 도구상자 분류 25
제3절 도구상자 1의 이론적 근거 29
제4절 도구상자 2의 이론적 근거 36
제5절 도구상자의 통합과 정책설계 44

제3장 경제 및 기업 환경 분석 47

제1절 국외 경제 및 기업환경 49
제2절 국내 경제 및 기업환경 53
제3절 고양시 경제 및 기업환경 58

제4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67

제1절 도시별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69
제2절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92
제3절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 95
제4절 사례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27

제5장 고양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분석 135

제1절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137
제2절 고양시 내부 정책수요 150
제3절 고양시 외부 정책수요 166
제4절 고양시 전략산업 도출 198

제6장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211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213
제2절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 225
제3절 고양시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 237

참고문헌 253

부록 265

Abstract 293

표 목차

[표 2-1] Bartik의 이원적 도구상자 비교 ····· 26
[표 2-2] Porter의 결정요인과 도구상자 2 정책수단 ····· 39
[표 2-3] 클러스터 생명주기 ····· 40
[표 4-1] 수도권 특례시 기본현황 ····· 70
[표 4-2] 경의권 도시 기본현황 ····· 71
[표 4-3]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90
[표 4-4]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91
[표 4-5]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 94
[표 4-6] 관련 기사 '원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활발' ····· 96
[표 4-7] 최근 3년간 전국/강원도/원주시 소재 의료기기 기업의 재무적 성장 ····· 100
[표 4-8] 관련 기사 'LG. Philips LCD 파주 공장 준공' ····· 108
[표 4-9] 서울, 대전, 포항 팁스(TIPS) 타운 특징 비교 ····· 114
[표 4-10] '양재 AI 특구' 특화사업 15개 ····· 121
[표 4-11]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127
[표 4-12]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128
[표 4-11] 산업클러스터 유형별 국내외 사례 매핑 ····· 129
[표 5-2] 고양시 활용 가능 기본 지방세 감면 수단 ····· 145
[표 5-3]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 체계 ····· 146
[표 5-4] 특구·지구 지정을 통한 상위법 감면 활용 ····· 147
[표 5-5] 업종요건별 세액공제 체계 ····· 148
[표 5-6] 사업 분야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153
[표 5-7] 기업 규모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154
[표 5-8] 사업단계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154
[표 5-9]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157
[표 5-10]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157
[표 5-11] 사업단계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158
[표 5-12] 기업 지원정책 인지도 및 수혜 경험 분석 ····· 159
[표 5-13] 사업 분야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161
[표 5-14] 기업 규모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161

[표 5-15] 사업단계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162
[표 5-16]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경험 ····· 164
[표 5-17] 투자유치 지원정책 수혜 이후 투자유치 성과 ····· 165
[표 5-18] 사업 분야별 입지 선택 요인 ····· 170
[표 5-19] 기업 규모별 입지 선택 요인 ····· 171
[표 5-20] 사업단계별 입지 선택 요인 ····· 172
[표 5-21] 사업 분야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174
[표 5-22] 기업 규모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175
[표 5-23] 사업단계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176
[표 5-24]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190
[표 5-25]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191
[표 5-26] 사업단계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192
[표 5-27] 사업 분야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193
[표 5-28] 기업 규모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194
[표 5-29] 사업단계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195
[표 5-30] 연구참여자 목록 ····· 199
[표 5-31] 코딩 결과 ····· 201
[표 5-32] 전략산업 후보 평가 ····· 207
[표 6-1]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215
[표 6-2]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 216
[표 6-3] 유치 대상 양자암호통신 기업 및 역할 ····· 239
[표 6-4] 산업별 양자컴퓨팅 응용분야 및 고양시 관련기관 ····· 243
[표 6-5] 로봇 활용 분야 및 관련기업 ····· 249
[부록 표 5-1] 범주-코드-인용문 매핑[표 (주요코드 발췌) ····· 289

그림 목차

[그림 3-1] 고양시 산업 및 기업 현황 ····· 59
[그림 3-2] 고양시 지역별 기업 현황 ····· 60
[그림 3-3]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사업현황 ····· 62
[그림 4-1] 고양시 지원시책 ····· 74
[그림 4-2] 수원시 지원시책 ····· 77
[그림 4-3] 용인시 지원시책 ····· 80
[그림 4-4] 화성시 지원시책 ····· 83
[그림 4-5] 김포시 지원시책 ····· 86
[그림 4-6] 파주시 지원시책 ····· 89
[그림 4-7]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및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위치도 ·· 122
[그림 5-1]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152
[그림 5-2]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156
[그림 5-3]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160
[그림 5-4] 기업 지원정책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효과 ····· 163
[그림 5-5]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계획 ····· 168
[그림 5-6] 입지 선택 요인 ····· 169
[그림 5-7] 기업유치 희망 지원정책 수요 ····· 173
[그림 5-8] 사업 공간 지원 ····· 177
[그림 5-9] 이전 의사(1) ····· 177
[그림 5-10] 조세 혜택 ····· 178
[그림 5-11] 이전 의사(2) ····· 179
[그림 5-12] 인건비 지원 ····· 180
[그림 5-13] 이전 의사(3) ····· 181
[그림 5-14] 금융 지원 ····· 182
[그림 5-15] 이전 의사(4) ····· 183
[그림 5-16] R&D 지원 ····· 184
[그림 5-17] 이전 의사(5) ····· 185
[그림 5-18] 복지 ····· 186
[그림 5-19] 이전 의사(6) ····· 187

[그림 5-20] 이전 의사(7) ····· 188
[그림 5-21] 고양시 인프라 인식 ····· 189
[그림 5-22]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192
[부록 그림 1-1] 일반현황 ····· 267
[부록 그림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269
[부록 그림 1-3] 사업 특성 ····· 270
[부록 그림 1-4] 연도별 매출액 & 종사자 수 ····· 271
[부록 그림 1-5] 정책 지원금 & 외부 투자금 ····· 272
[부록 그림 2-1] 대표자 성별 ····· 274
[부록 그림 2-2] 대표자 연령 ····· 274
[부록 그림 2-3] 사업장 유형 ····· 275
[부록 그림 2-4] 사업장 소재지 ····· 276
[부록 그림 2-5] 입지 형태 ····· 277
[부록 그림 2-6] 주력 사업 분야 ····· 278
[부록 그림 2-7] 기업 규모 및 사업단계 ····· 279
[부록 그림 2-8] 기업 인증·지정 여부 ····· 280
[부록 그림 2-9] 매출액 규모 ····· 281
[부록 그림 2-10] 종사자 수 ····· 282
[부록 그림 2-11] 정책 지원금 수혜 ····· 283
[부록 그림 2-12] 외부 투자 유치 ····· 284
[부록 그림 3-1]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1) ····· 285
[부록 그림 3-2]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2) ····· 286
[부록 그림 4-1]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1) ····· 287
[부록 그림 4-2]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2) ····· 288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유치 필요성 확대

○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IC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산업 유치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유치 역량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이 단순한 비용 중심에서 인프라, 정주환경, 정책지원은 물론 연구개발(R&D)·실증(Test-bed) 기회와 수요·판로 연계 등 복합적 요소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임

□ 고양시 산업 여건 변화 및 정책 대응 필요

○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본격화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 개발 추진에 따라 고양시의 산업기반 확충 및 기업유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됨

-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고양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주요 개발사업과 킨텍스(KINTEX), 국립암센터, 관내 대형병원, 한국항공대 등 기존 앵커 자산은 고양시의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양자, 드론(UAV), 피지컬 AI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실증(Test-bed)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고양시는 서울 인접 입지 및 정주환경 등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집적도가 낮은 구조적 한계를 보임

-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통근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공장 신·증설 등 입지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가 인센티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비용절감형 유치수단의 활용 여지가 제한되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주요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2. 연구 필요성

□ 기업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필요

○ **기업의 입지 선택 기준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 요인을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획일적인 지원정책은 기업유치 효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수요 기반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내외 정책 및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필요

○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 지원정책과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형성 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 방식 및 지원체계의 특징과 클러스터 형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양시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발생 동인·추진 주체·핵심 자원·진화 경로에 따라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고양시 여건에 부합하는 클러스터 조성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와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기업유치 정책 수립 필요

○ **고양시는 서울 인접성, 우수한 정주환경, 신규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잠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집적도와 자족 기능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조성 관점의 정책 전환이 요구됨**

- 기업 대상 설문조사,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 및 국내외 정책·클러스터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양시 산업 여건과 기업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신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드론(UAV), 피지컬 AI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중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세제·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비용절감형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활동 환경 개선, 행정지원 체계 강화,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지원 기능 확보 등 맞춤형 기업 서비스를 결합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 기업 수요 기반 기업유치 지원정책 도출

○ 기업의 입지 선택 요인 및 정책 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양시에 적합한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성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양시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고양시의 입지적 특성과 산업구조, 수도권 규제 여건을 고려하여 고양시에 정합적인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함

-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과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사례 및 설문조사 기반 시사점 도출

○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정책·클러스터 사례 분석,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첨단산업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향후 고양시 기업유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연구 내용

□ 기업유치 지원정책 이론 및 경제·기업환경 분석

○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정책수단을 세제·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도구상자 1과 맞춤형 기업 서비스 중심의 도구상자 2로 구분하여 이론적 근거를 분석함

○ 국외·국내 및 고양시의 경제·기업환경을 분석하고 PEST·SWOT 분석을 통해 고양시 기업유치 여건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

□ 국내외 기업유치 지원정책 및 산업 클러스터 사례 분석

○ 수도권 주요 지자체(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및 경의권 도시(김포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사업 공간·조세·인건비·금융·연구개발(R&D)·복지·행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비교함

○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형성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원주 의료기기, 파주 디스플레이, 포항 팁스타운, 서초 양재 AI 등 국내 사례와 케임브리지, 신주과학공업원구, 피츠버그, 싱가포르 원노스 등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클러스터 모델을 도출함

□ 정책수요 분석 및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와 비수도권 간 세제혜택을 11개 항목으로 비교하여 인센티브 격차를 진단하고, 고양시 내부·외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체감도, 입지 선택 요인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함

○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고양시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과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을 제시함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1. 연구 수행 체계

□ 문헌·법령 검토, 사례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한 연구 수행

○ 본 연구는 문헌·법령 검토, 국내외 정책 및 산업 클러스터 사례분석, 기업 대상 설문조사,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수행함

- 기업의 실제 수요와 정책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고양시 산업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 기반의 통계 분석, 정책·클러스터 사례에 대한 비교·내용 분석, 인터뷰 전사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정책 제안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기업 수요 기반 정책 접근 추진

○ 기업유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기업이 실제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입지 요인과 정책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함
- 첨단산업 현장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기업의 실제 입지 결정 논리를 반영하여 정책 대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함

2. 연구 수행 방법

□ 기업 대상 설문 분석

○ 고양시 소재 기업(유효응답 28개사)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인식, 정책 체감도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함

○ 고양시 외 지역 기업(유효응답 131개사)을 대상으로 동일 기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지 선택 요인 및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함

□ 문헌·법령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선행연구·이론 문헌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여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기업 인센티브 수단을 분석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와 비수도권 인센티브 간 격차를 세제혜택 11개 항목 기준으로 비교하고, 시설요건·업종요건·특구지정·조례 자체감면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함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공개자료에 제시된 기업유치·기업지원 정책과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조사·분석함

- 수도권 주요 지자체(수원시·용인시·화성시) 및 경의권 도시(김포시·파주시)의 정책은 사업 공간·조세·인건비·금융·연구개발(R&D)·복지·행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국내외 클러스터 사례는 발생 동인·추진 주체·핵심 자원·진화 경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생명주기 관점에서 분석함

□ 전문가 인터뷰 질적분석 및 종합 정책 도출

○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 전사문 21건(대면 심층 인터뷰 19건, 서면 답변 2건)을 대상으로 개방코딩·축코딩·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질적분석을 수행하여 핵심 주제와 전략산업을 도출함

- 설문조사·사례분석·질적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양시 기업유치 정책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과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을 제시함

제2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정의
제2절 기업유치 지원정책 도구상자 분류
제3절 도구상자 1의 이론적 근거
제4절 도구상자 2의 이론적 근거
제5절 도구상자의 통합과 정책설계

제2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정의

1. 기업지원정책의 학술적 정의와 위상

□ 학술적 정의

○ "기업유치지원 정책(firm attraction policy)"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기업을 자국·자지역의 관할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인센티브·제도·재정 지원·행정 편의 제공 활동을 의미함

○ 좁은 의미로는 신규 진입 기업(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타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유인 정책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존 입지 기업의 이탈 방지(retention)와 재투자 유도 정책까지 포함함

○ 영문 표현으로는 'firm attraction policy', 'business attraction policy', 'industrial recruitment policy', 'investment promotion policy' 등이 혼용됨

□ 정책의 위상

○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지역경제정책(regional economic policy)·외국인직접투자정책(FDI policy)의 교집합에 위치함

○ 거시정책이 아닌 미시·지역 단위의 정책으로 분류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가 동시에 정책 주체가 되는 다층적 특성을 가짐

○ 정책 목표는 ① 자본 형성, ② 고용 창출, ③ 기술 이전, ④ 산업구조 고도화, ⑤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다층화됨

2. 기업지원정책의 정책수단의 학술적 분류

□ Loewendahl(2001)의 분류

○ 재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 세제 감면·보조금·정부지분 참여

○ 비재정적 인센티브(non-financial incentives): 행정 편의·인허가 패스트트랙·정보 제공

○ 인프라 인센티브(infrastructure incentives): 입지·전력·교통·통신 인프라 제공

□ UNCTAD(2011)「Investment Promotion Handbook for Diplomats」

○ 정책 옹호(policy advocacy)·이미지 구축(image building)·투자 유인(investment generation)·투자 서비스(investment services)의 4단계 모형

○ 단계별로 ① 거시 정책 환경 조성 → ② 지역·산업 브랜딩 → ③ 표적 기업 발굴 → ④ 사후 관리·재투자 유도로 진화

□ OECD(2018)의 분류

○ 일반 인센티브(horizontal incentives): 모든 기업·산업에 동일 적용

○ 선별 인센티브(vertical incentives): 특정 산업·기업·지역에 차별 적용

○ 자동 부여(rule-based) vs 재량 부여(discretionary)의 이중 축으로 추가 구분

3. 기업지원정책의 법적 개념

1) 법체계

□ 일반법: 기업유치의 공통 기반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일반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국세 감면의 일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지방세 감면의 일반법

○「지방자치법」 및「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운용의 일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입지 규제의 일반법

□ 특별법 : 특구·특화 입지의 차별적 우대 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외국인투자 거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관세 자유 거점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 북한 인접지역 거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민간자본 주도 도시 거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일반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 규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성장 거점

2) 핵심 법령의 법률상 정의 조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근간

○ 외국인(제1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제3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제4호):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① 주식·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 소유(가목), ②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대여(나목), ③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출연(다목), ④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공장 신증설 등 활용(라목), 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출연(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국투자가(제5호):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제6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자본재(제9호):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등과 시험운전에 필요한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시설·조언을 위한 기술·용역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제9호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거점

○ 경제자유구역(제1호):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

○ 외국인(제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제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

○ 외국교육기관(제5호):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

○ 국내복귀기업(제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제7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

○ 핵심전략산업(제8호):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세 자유 거점

○ 자유무역지역(제1호):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입주기업체(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업체(제3호):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외국인투자기업(제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 관세등(제6호): 관세·부가가치세·임시수입부가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 관세영역(제7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

○ 지식서비스산업(제12호):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북한 인접지역 거점

○ 북한 인접지역(제1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평화경제특별구역(제2호):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

○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제3호):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

○ 외국인(제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민간자본 주도 도시 거점

○ 기업도시(제1호):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기업도시개발구역(제2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기업도시개발사업(제3호):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 유형의 법률상 정의

○ 산업단지(제8호): 산업시설용지(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재활용·자원비축·물류·교육연구 등)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국가산업단지(가목):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나목):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다목):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라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8호의2):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제9호)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용지조성·건축·기반시설·환경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형 집적시설

○ 공장(제2조 제1호)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지식산업센터(제2조 제13호)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多層型) 집합건축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 집적 거점

○ 벤처기업(제1항):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 투자(제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 벤처기업집적시설(제4항):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 실험실공장(제5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제6항):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제9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소셜벤처기업(제10항):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첨단전략산업 거점

○ 국가첨단전략기술(제1호): 공급망 안정·국가·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서 동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제2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제3호): 전략산업·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2026년 시행): 균형성장 거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폐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2026)으로 통합·개편된 현행 법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비수도권 원칙으로 운영

○ 조특법 제121조의33(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및 지특법 제80조의2와 연계

3) 법적 정의의 핵심 요소

□ 기업유치지원 법령의 법률상 정의를 관통하는 5대 요소

○ 주체: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다층 거버넌스)

○ 대상: 외국인투자기업·국내 신설·이전 기업·창업기업·중소기업·대기업·국내복귀(유턴)기업·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

○ 수단: 조세 감면·부담금 감면·현금지원·임대료 감면·인프라 제공·인허가 우대

○ 입지: 일반지역·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스마트그린산단·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신기술창업집적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특화단지

○ 효과: 자본 형성·고용 창출·기술 이전·산업구조 고도화·지역 경제 활성화

□ 법령 간 위계와 적용 순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입지 규제(상위): 다른 법령의 입지 인센티브를 제약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세제 감면의 모법(母法): 다른 특별법은 동 법에 위임하여 감면율을 결정

○ 특별법(경자법·자유무역지역법·평화경제특구법·기업도시법 등): 일반법의 특례

○ 조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보조금 운용

4. 기업지원정책의 분류

1) 주체별 분류

□ 중앙정부 차원

○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소관, 조세지출 예산 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 지자체 조례 협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법·기업도시법·평화경제특구법(국토부·통일부 공동)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법·창업지원법 소관, TIPS 등 창업보육 사업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

○ 도세 감면 조례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 도 자체 기업유치보조금 (입지·고용·교육훈련) 운영

○ 광역 차원의 외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

○ 시·군세 감면 조례 운영

○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기반한 자체 보조금 운영

○ 인허가 패스트트랙·전담 부서 운영

2) 정책수단별 분류

□ 세제 인센티브

○ 국세 감면(조특법): 법인세·소득세·세액공제

○ 지방세 감면(지특법):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 관세 면제(관세법·자유무역지역법)

○ 부가가치세 영세율(자유무역지역법·부가가치세법)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특례법)

□ 재정 인센티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고시):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비수도권 적용이 원칙)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외투촉진법 제14조의2)

○ 시·도·시·군 자체 보조금(조례 기반)

□ 입지·인프라 인센티브

○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FEZ(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부지 공급

○ 공공임대형 산업용지·지식산업센터 저가 분양·임대

○ 도로·용수·전력·통신 기반시설 우선 설치

□ 행정·인허가 인센티브

○ 다른 법률 적용배제(경자법 제17조 등)

○ 인허가 패스트트랙·원스톱 서비스

○ 외국인 임직원 비자 우대(EP·EntrePass)

□ 인력·R&D 인센티브

○ 산학협력·계약학과 운영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감면(지특법 제46조)

○ 국가 R&D 매칭 사업 우선 참여

3) 대상별 분류

□ 자본 형태별

○ 외국인투자기업: 외투촉진법 정의 충족(의결권 10% + 1억 원 이상)

○ 내국법인: 국내 자본 100% 또는 외국인 지분 10% 미만

○ 합작법인: 내외국 자본 결합

□ 기업 규모별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규모별 차등 (중소 12% / 중견 6% / 대기업 3% :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 기능 형태별

○ 본사 기능형·생산 기능형·판매 기능형·R&D 기능형·지역본부형

□ 신규성별

○ Greenfield Investment(신설투자)·M&A(인수합병)·Joint Venture(합작)·Reinvestment(이익 재투자)

4) 지역별 분류

□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

○ 수도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함

○ 과밀억제권역: 서울·인천 일부·경기 14개 시에 적용되며 가장 강력한 규제

○ 성장관리권역: 경기 일부 지역에 해당되며 일부 규제가 완화됨

○ 자연보전권역: 한강 상류에 적용되며 환경 규제임

○ 비수도권: 지자체 자율적 유치 환경을 조성함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행안부 고시)

○ 2026년 현재 89개 시·군·구 지정

○ 지특법 제78조의 산업단지 입주 취득세·재산세 75% 감면 적용 대상

○ 추가 인구감소지역 특례 다수

□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경기도: 김포·파주·연천(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양·양주·동두천·포천·가평(시행령 2조 2항)

○ 인천: 강화·옹진(시행령 제2조 제1항)

○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시행령 제2조 제1항), 춘천·속초(시행령 2조 2항)

○ 접경지역 특별 인센티브

○ 평화경제특구 1차 지정 우선 대상

5) 특구·지구별 분류

□ 외자 유치 거점 특구

○ 외국인투자지역(외투촉진법 제18조): 단지형·개별형·서비스형

○ 경제자유구역(경자법):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강원·광주·울산의 9개 지정

○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법): 산업·공항·항만의 3유형

□ 국가전략 거점 특구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국가첨단전략산업법): 평택·용인(반도체)·청주(이차전지)·구미(반도체)·새만금(이차전지)·포항·울산(이차전지) 등

○ 첨단투자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균형발전 거점 특구

○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비수도권 원칙, 조특법 제121조의33 법인세 5년 100% + 2년 50%

○ 기업도시(기업도시법): 충주·태안·영암·해남 등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거점: 조특법 제62조 연계

□ 도시·중소기업형 거점

○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법): 수도권 도시 내 고밀도 집적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도시형 다층 집합건축물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기업법)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지특법 제60조 제3항)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 특화산업 거점 (양재 AI 특구 등)

□ 평화·안보 거점 특구

○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법, 2023년 제정): 북한 인접지역 한정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및 제8호의2)

○ 지특법 제78조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 수도권 35% / 수도권 외 50~60% / 인구감소지역 75%

5. 시사점

□ 학술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

○ 학술적으로 기업유치지원 정책은 입지·집적이론·외국인직접투자이론·지역혁신체제·신제도경제학·재정연방주의 등 다양한 이론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정책수단도 재정·비재정·인프라의 3축으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는 외투촉진법·조특법·지특법의 3대 일반법과 9개 이상의 특별법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이며, 학술적 정책수단 분류와 대체로 정합됨

○ 다만 학술적으로 동등 비중을 가지는 'R&D·인력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인허가·정보)'에 비해 법적 체계는 여전히 '세제 감면'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 5대 분류 축의 정책적 함의

○ 주체별 분류: 다층 거버넌스의 역할 분담 설계에 기여함

○ 수단별 분류: 정책 패키지의 조합 설계에 활용 가능함

○ 대상별 분류: 표적 기업 발굴 전략의 기반이 됨

○ 지역별 분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차등 정책 설계의 기초임

○ 특구별 분류: 입지 유형별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설계의 토대임

제2절 기업유치 지원정책 도구상자 분류

1. Bartik의 핵심 명제

□ 두 도구상자(Two Toolboxes)의 구분

○ Bartik(1991)은 Who Benefits from Stat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에서 미국 50개 주·수천 개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후속 연구(Bartik, 2017, 2019)에서 핵심 명제를 정련함

○ (핵심 명제) 기업유치 정책 도구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두 범주로 나뉘며, 두 범주의 효율성·작동 메커니즘·재정 부담이 본질적으로 다름

○ (도구상자1) 첫 번째는 세제·재정 인센티브(Tax Incentives & Financial Inducements)로 법인세 감면·재산세 감면·투자세액공제·직접 보조금·현금 지원 등 '비용 절감형'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도구상자2) 두 번째는 맞춤형 기업 서비스(Customized Business Services)로 인력 양성·R&D 지원·인프라 구축·산학협력 매칭·기술이전·시장 정보 제공·창업보육 등 '역량 구축형' 수단임

□ 두 도구상자의 작동 메커니즘 차이

○ 도구상자 1 (재정 인센티브)은 '기업의 사적 비용을 직접 절감'하는 사후적·금전적 보전 방식이며, 효과는 기업의 자본·세후 이익 함수에 직접 작용함

○ 도구상자 2 (맞춤형 서비스)는 '기업이 자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외부성·공공재·인적 자본'을 지원하는 사전적·역량적 보전 방식이며, 효과는 기업의 생산함수·학습곡선에 작용함

○ 도구상자 1은 단기적·직접적 효과가 크나 '부의 이전(transfer)' 성격이 강한 반면, 도구상자 2는 장기적·누적적 효과가 크고 '부의 창출(creation)' 성격이 강함

□ Bartik의 실증적 결론

○ Bartik(2017)에 따르면 미국 33개 주 47개 도시의 도구상자 1과 도구상자 2의 효율성(1달러당 일자리 창출 효과)을 비교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가 세제 인센티브보다 평균 2~3배 효율적이었음

○ Bartik(2019)은 주·지방정부 인센티브 예산의 약 70~80%가 도구상자 1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계 효율성 측면에서 도구상자 2로의 재배분이 필요함을 주장함

○ ‘But-for 문제(But-for Problem)’의 관점으로 보면 세제 인센티브의 75% 이상이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발생했을(would have happened anyway)’ 투자에 지급되어 순 효과가 제한적임

○ ‘일자리당 비용(Cost per Job)’ 지표에서 세제 인센티브는 일자리당 평균 5~6만 달러, 맞춤형 인력 양성은 일자리당 평균 1~2만 달러로 추정됨(Bartik, 2017)

□ 정책 함의: 도구상자의 균형 재조정

○ 기업유치 정책 설계의 핵심은 두 도구상자의 ‘배합비(mix ratio)’와 ‘타이밍’의 최적화임

○ Bartik(2019)은 ① 세제 인센티브를 약 30~50%로 축소 ② 맞춤형 서비스(특히 인력 양성·인프라·R&D 지원)를 약 50~70%로 확대하는 재조정을 권고함

○ 장기적으로는 두 도구상자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활용 : 단기 정착(도구상자 1) + 장기 역량 누적(도구상자 2)의 결합이 필요함

표 2-1 | Bartik의 이원적 도구상자 비교

구분	도구상자 1 (재정 인센티브)	도구상자 2 (맞춤형 서비스)
작동 시점	사후 (비용 발생 후 보전)	사전·상시 (역량 사전 구축)
작동 메커니즘	사적 비용 절감 → 세후 이익 증대	외부성 내부화 → 생산성 증대
일자리당 비용($/일자리)	평균 5~6만 달러	평균 1~2만 달러
효과 지속성	단기·일회성	장기·누적
기업 정착성	낮음(인센티브 소멸 시 이탈)	높음(자산 특수성 누적)
대표 정책	법인세 감면·보조금·현금 지원	인력 양성·R&D·인프라·산학협력
But-for 문제	높음(75% 이상 deadweight)	낮음
주된 이론적 근거	시장실패 교정·거래비용·제도이론	집적경제·앵커·클러스터· 수요 측면 혁신정책

2. 도구상자 1: 세제·재정 인센티브

1) 핵심 정책수단

○ 법인세·소득세 감면 (Corporate/Personal Income Tax Credits)

○ 재산세 감면 (Property Tax Abatements)

○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s)

○ 직접 보조금·현금 지원 (Cash Grants)

○ 매칭 보조금 (Matching Funds)

○ 저리 대출·정책금융 (Subsidized Loans)

2) 작동 원리와 한계

□ 작동 원리

○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을 낮춤 → 한계실효세율(METR) 감소 → 신규 투자 또는 입지 유인 증대

□ 한계

○ But-for 문제: 인센티브 없이도 어차피 발생할 투자에 지급되는 비율이 매우 큼

○ 지대추구: 기업이 혁신보다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로비에 자원을 투입함

○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센티브 규모의 과잉이 발생함

○ 일몰 후 이탈 위험: 인센티브 소멸 시 기업 이탈 가능성이 큼

3. 도구상자 2: 맞춤형 기업 서비스

1) 핵심 정책수단

○ 인력 양성: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 직업훈련 보조

○ R&D 지원: 공동 R&D,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원

○ 산학협력 매칭: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채널 구축

○ 인프라 제공: 시험·인증센터, 공용 연구장비, 산업단지 인프라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멘토링, 후속 투자 연계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수출 컨설팅, 글로벌 인증, 네트워킹

○ 규제 안내·인허가 원스톱: 거래비용 절감형 행정 서비스

2) 작동 원리와 효율성

□ 작동 원리와 축적 효과

○ 외부성·공공재·정보 비대칭으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정부가 직접 공급함

○ 한 번 구축된 인력·인프라·네트워크는 다수 기업이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계비용을 체감하는 구조를 형성함

□ 기업 역량 및 정착성 강화

○ 집적경제·앵커기관·수요 측면 혁신정책 관점에서 지역 고유의 역량과 정착성을 강화함

○ 자산 특수성 누적으로 외부 인센티브 변화에 둔감함

3) Bartik가 강조하는 도구상자 2의 우위

○ '인력 양성·맞춤 R&D'가 '세제 감면'보다 일자리당 비용이 2~3배 낮음

○ 지역 승수효과(local multiplier effect)가 더 크고, 효과의 지역 누설(leakage)이 적음

○ 저소득층·약자에게도 혜택이 확산되어 분배 측면에서 우월함

제3절 도구상자 1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실패

□ 외부성과 과소투자

○ 기업 R&D·기술 학습·전후방 산업 형성·고용 창출은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을 발생시키나 시장 가격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Pigou, 1920)

○ 사적 한계편익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투자를 야기함

○ 보조금과 세제감면은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격차를 보전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교정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것이 도구상자 1이 원리상 정당화되는 첫 번째 근거임

○ 다만 이러한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실제 정책 효과는 이후 검토하는 실효성과 제도 제약의 문제와 구분하여야 함

○ 이상의 논리는 본 연구 제5장 제1절에서 검토하는 각종 감면·보조 제도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활용됨

□ 정보 비대칭과 신용 제약

○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잠재력 있는 신생·혁신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함(Stiglitz & Weiss, 1981)

○ 역선택·도덕적 해이·신용 할당(credit rationing)이 자금 시장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외부성이 투자 '수준'의 실패라면 정보 비대칭은 자금 '배분'의 실패로서, 시장실패의 두 번째 축을 구성함

○ 담보력이 부족한 신생·혁신 기업일수록 신용 할당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신용보증·정책자금·모태펀드 등 공적 금융수단으로 자금 공급 실패를 보완하는 개입이 정당화됨

○ 이러한 논리는 본 연구 제5장 제2절 설문조사에서 금융지원 수요가 1위(42.9%)로 확인되는 결과와 직결되며, 제6장 제2절의 데이터 가치평가 연계 융자 및 전략산업 특례보증 정책안의 직접적 근거가 됨

2. 재정적 유인의 구조적 한계

○ 그러나 시장실패 교정의 정당성이 곧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음

○ 제2장 제2절에서 확인한 일자리당 재정비용 격차(도구상자 1이 도구상자 2의 2~3배) 논의가 시사하듯, 재정적 유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함

□ But-for 문제와 감면의 실효성

○ But-for 문제란 인센티브가 없었어도 어차피 이루어졌을 투자에 지원이 지급되는 초과보상의 문제로, 재정적 유인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핵심 논거임(Bartik, 2019)

○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기업의 입지결정을 실제로 바꾸는 비율은 약 2~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 이상은 인센티브가 없었어도 실행되었을 투자로 추정됨(Bartik, 2019; Slattery & Zidar, 2020)

○ 그 결과 일자리당 재정비용이 과다해지고, 기업이 입지결정을 지렛대로 삼아 지원을 극대화하는 지대추구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 제5장 제1절의 감면 실효성 검토에서 출혈경쟁의 무익함을 판단하는 분석 렌즈로 활용됨

□ 지방정부 간 조세경쟁과 바닥으로의 경주

○ 주민과 기업이 조세-공공서비스 조합을 비교하여 거주지와 입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는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함(Tiebout, 1956)

○ 이러한 경쟁은 공공서비스 효율화의 순기능도 있으나,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세율 인하 경쟁은 국가 전체로는 제로섬이며 지방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초래함(Zodrow & Mieszkowski, 1986)

○ But-for 문제가 개별 감면 차원의 한계라면, 조세경쟁은 지자체 간 상호작용 차원의 한계로서 인센티브 확대 경쟁의 구조적 무익함을 시사함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4장 제1절의 수도권 주요 특례시·경의권 5개 도시 지원정책 비교에서 확인되는 수단 동형화 현상의 해석 틀이 되며, 제5장 제1절의 '비수도권과의 감면 격차를 감면으로 맞대응하는 전략은 무익하다'는 판단의 이론적 근거가 됨

□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수단 배분

○ 재정연방주의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재분배 기능과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는 상위정부가, 지역 정보를 요하는 장소기반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비교우위를 가짐(Oates, 1972)

○ 따라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세제·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것은 수단과 주체의 불일치이며, 기초지자체가 비교우위를 갖는 영역은 감면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맞춤 서비스임

○ 조세경쟁의 한계를 처방의 차원으로 전환하면 '어떤 정부가 어떤 수단을 맡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제4절에서 다루는 맞춤형 서비스(도구상자 2)로의 전환을 예고함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5장 제1절에서 확인되는 구조, 즉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회발전특구 등 대형 재정 수단이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되어 고양시가 배제되는 현실의 해석 틀이자, 제6장의 경기도 매칭·국비 연계 설계의 근거가 됨

3. 고양시의 제도적 조건: 수도권 규제와 이중 배제

○ 이상의 한계가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일반론이라면, 고양시에는 이에 앞서는 별도의 구속이 존재함

- 과밀억제권역 지정이라는 공식 제도가 도구상자 1의 가용성 자체를 제약함

□ 제도와 경제적 성과

○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거래비용과 유인구조를 결정하며,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집합 자체를 규정함(North, 1990)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고양시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상자 1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구속적 공식 제도로 기능함

○ 앞서 살핀 구조적 한계가 '효과'의 문제라면 제도적 제약은 '가용성'의 문제로서, 고양시는 재정적 유인을 쓸지 말지 이전에 쓸 수 있는지부터 제약됨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3장 제2절(기회발전특구 배제)과 제5장 제1절의 과밀억제권역-비수도권 세제혜택 11개 항목 비교 및 '이중 배제' 진단의 이론적 예고가 됨

□ 제약 하의 합리적 선택: 우회 전략의 논리

○ 구속적 제도 제약하에서 지방정부의 합리적 대응은 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우회'이며, 이는 제도가 규정한 전략 집합 안에서 가용한 경로를 조합하는 선택의 문제임(North, 1990)

○ 구체적 우회 경로는 ① 입지 무관 요건의 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지식산업센터 등 시설요건, 신성장·원천기술 등 업종요건), ② 조례에 근거한 자체 감면·보조금, ③ 법률상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통로(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④ 특구 지정 신청, ⑤ 비가격 경쟁(도구상자 2)으로의 전환으로 유형화됨

○ 이는 제도 제약의 '진단'을 실천적 '처방'으로 전환하는 다리로서, 감면 격차 자체보다 규제와 저촉되지 않는 산업·수단의 선택이 관건임을 시사함

○ 이러한 우회 전략의 유형화는 본 연구 제5장 제1절이 도출하는 5대 우회 경로와 일대일로 대응하며, 제6장의 전략산업 선정 논리('생산이 아닌 실증', 규제 비저촉 산업)를 예고함

4. 제한적 활용의 설계 원리: 거래비용과 신뢰성 있는 약속

○ 제도적 제약의 우회를 통해 확보되는 좁은 활용 공간(조례 감면·시설/업종요건 감면 등)에서는 지원의 '크기'보다 '설계'가 효과를 좌우하며, 그 설계 원리는 거래비용이론과 신뢰성 있는 약속 개념에서 도출됨

1) 거래비용·자산 특수성과 hold-up 문제

○ 기업의 존재 이유는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탐색·협상·계약·감시·집행)을 내부화하는 데 있음 (Coase, 1937)

○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불확실성·거래 빈도가 거래의 지배구조 선택을 결정함 (Williamson, 1985)

○ 거래비용은 가격 외에 거래 수행에 드는 모든 자원(시간·인지·정보·법적·정치적 비용)을 포함

○ Williamson(1991)은 자산 특수성을 입지·물적·인적·전용·브랜드·시간 특수성 등 6가지로 분류함

○ 자산 특수성이 높을수록 기회주의(hold-up problem) 위험이 증대하여 계약·감시 비용이 상승함

○ 기업의 입지 투자는 특정 지역에 결박되는 입지·물적·인적 특수성이 높은 관계특수적 투자이므로, 투자가 매몰된 이후 정책이 번복될 위험(hold-up)에 대한 우려가 투자 자체를 억제함

○ 따라서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면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지속'이며, 좁은 도구상자 1의 효과는 지원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번복 위험을 낮추는 설계에 달려 있음

○ 한편 인허가·규제 대응 등 행정절차의 거래비용을 직접 절감하는 서비스형 수단은 본문 용법상 도구상자 2에 속하므로 제4절 1에서 다룸

○ 이러한 논리는 본 연구 제4장 제3절의 파주(장기 임대·계약형 인센티브) 및 신주과학공업원구(45년 정책 일관성) 사례 분석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됨

2) 시간 비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

○ 재량적 정책은 사후 번복의 유인을 내포하며, 사전 약속의 신뢰성이 훼손되면 민간은 애초에 움직이지 않음

- 최적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문제임 (Kydland & Prescott, 1977)

○ 해법은 재량이 아닌 규칙 기반 운용이며, 역사적으로도 정부 약속의 제도적 잠금장치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음 (North & Weingast, 1989)

○ 감면 일몰의 사전 명시, 조례 명문화, 전담조직 설치, 마스터플랜의 정례적 갱신은 약속을 제도에 잠그는 장치로서 hold-up 우려에 대한 정부 측 해법임

○ ‘10년 지속성’ 그 자체가 유치 유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본 연구 제5장 제4절 전문가 인터뷰 핵심 주제 5(‘시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10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제6장 제3절의 시장 직속 추진단·마스터플랜 연 1회 갱신·조례 명문화 설계의 이론적 근거가 됨

3) 수단별 효과 경로와 운용 원칙

○ 우회를 통해 확보한 좁은 도구상자 1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수단별 효과 경로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성과연동·환수 설계가 요구됨(Bartik, 2019)

□ 조세 인센티브의 효과 경로

○ (작동 원리) 이익 발생 이후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량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선별(self-selection)을 유도함

○ (장점)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직접 재정지출 부담과 행정비용을 상대적으로 절감함

○ (단점)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스타트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유인효과가 제한적이며,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국제적 실효성이 일부 약화됨

□ 직접 보조금의 효과 경로

○ 투자 초기 단계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한계 실효세율을 낮추고 신규 투자 결정에 주요 역할을 함

○ (장점) 기업의 신용 제약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및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됨

○ (단점) 재정 부담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지대추구 및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대표 사례) 산업통상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제도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운영됨

□ 운용 원칙

○ 선별 강화: 메뉴식 계약과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의 선별 기능을 강화함

○ 성과 연동: 고용, 연구개발(R&D), 특허 등 객관적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일몰·환수: 지원의 종기(일몰)를 사전에 명시하고 약속 미이행 시 환수(clawback) 조항을 결합하여 재정 규율과 약속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함(Bartik, 2019)

○ 정부 간 역할 분담 원칙(다층 거버넌스)은 도구상자 1·2의 통합 운용 문제와 함께 제5절에서 다룸

○ 이상의 운용 원칙은 본 연구 제5장 제1절의 조례 자체감면·보조금 설계와 제6장 제2절의 융자·특례보증 정책안에서 성과 연동·환수 설계의 준거로 활용됨

□ 소결: 깔때기의 종합과 경쟁축의 전환

○ 재정적 유인은 시장실패 교정의 관점에서 정당하나 실효성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고,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로 그 가용성마저 봉쇄되어 있으며, 우회로 확보되는 좁은 공간은 신뢰성 있는 약속의 설계를 통해서만 유효함

○ 따라서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경쟁축은 도구상자 1이 아니라 도구상자 2(맞춤형 서비스)이며, 그 이론적 근거를 제4절에서 검토함

제4절 도구상자 2의 이론적 근거

○ 본 절은 제3절의 소결(경쟁축의 전환)을 이어받아, 도구상자 2(맞춤형 서비스)가 왜 고양시의 주력 경쟁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문 제3~6장이 실제로 사용하는 다섯 개의 이론 축으로 제시함

○ 다섯 개의 축은 ① 집적경제, ② 앵커기관과 플랫폼형 앵커, ③ 클러스터의 동태적 발전(생명주기·관련 다양성·스마트 전문화), ④ 수요 측면 혁신정책(실증·테스트베드·공공조달), ⑤ 지역혁신체계와 인재 착근이며, 이에 앞서 도구상자 2의 성격 규정(역량 구축과 거래비용 절감)을 프레임으로 둠

1. 도구상자 2의 지향: 역량 구축과 거래비용 절감

○ 제3절이 '쓸 수 없는 것'(재정적 유인의 제약)을 논증하였다면, 본 절은 '쓸 수 있는 것'의 성격 규정에서 출발함

- 도구상자 2는 비용 인하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투입을 공급하는 수단임

□ 역량구축형 서비스의 개념

○ 맞춤형 서비스는 정보·인력·기술·공간·네트워크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입을 직접 공급하는 역량구축형 수단으로, 일자리당 재정비용이 세제감면 대비 낮고 효과의 지속성이 높음 (Bartik, 2019)

○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과 기업에 모방이 어려운 역량을 축적시킨다는 점에서, 지원이 종료되면 효과가 함께 소멸하는 비용절감형 수단과 근본적으로 구별됨

○ 이 성격 규정은 본 연구 제6장 제2절의 정책안 12종(주거지원·PoC·네트워킹·행정·융자보증·멘토링·인력양성) 전체가 속하는 범주를 규정하며, 제2장 제5절 고양시 함의 ①~④의 프레임이 됨

□ 거래비용 절감형 행정서비스

○ 기업이 입지 과정에서 부담하는 탐색·인허가·규제 대응·정책 정보 획득 비용은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비용이며,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 운용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됨 (Coase, 1937; Williamson, 1985)

○ 원스톱 행정, 전담공무원, 통합 정보 플랫폼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직접 절감하는 '보이지 않는 감면'으로서 재정 부담 없이 작동하며, 역량 구축의 전제가 되는 거래 마찰의 제거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논리는 본 연구 제5장 제2절(정보 접근성 부족 32.1%)·제3절(고양시 인프라 '정보 부족' 35.1%)의 설문 결과와 제4장의 파주 원스톱 행정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며, 제6장 제2절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통합 정보 플랫폼 정책안의 직접 근거가 됨

2. 집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미시적 기초

○ 맞춤형 서비스는 개별 기업 단위로도 제공되나 그 효과는 공간적 집적 속에서 배가되므로 논의를 기업 단위에서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 제3장 제3절 소결(개별 기업 유치가 아닌 산업 생태계 조성 관점)과 접속됨

□ Marshall의 외부경제와 산업 분위기

○ 동일하거나 연관된 산업의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생산성과 혁신성이 향상되는 외부경제 효과를 창출함 (Marshall, 1890)

○ 지역 내 지식·기술·정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산업의 분위기(industrial atmosphere)'를 형성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함

○ 집적이 창출하는 노동풀·전문 공급자·지식 파급의 외부경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지역 단위의 경쟁우위 원천임

○ 이 고전적 통찰은 본 연구 제3장 제3절의 고양시 진단(산업집적도 낮음·기업 간 연계 부족 = 외부경제 부재 상태)과 제4장 제3절 케임브리지 사례(Marshallian 외부경제의 전형)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됨

□ 공유·매칭·학습의 미시 메커니즘

○ 집적 이익의 미시적 기초는 분할 불가능한 설비의 공유(sharing), 노동시장에서의 매칭(matching), 대면 접촉을 통한 지식 학습(learning)의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정식화됨 (Duranton & Puga, 2004)

○ Marshall의 직관을 현대 도시경제학이 정식화한 이 세 메커니즘은 도구상자 2의 정책수단을 분류·설계하는 준거가 됨

- 공동 활용 인프라는 공유를, 인력 양성·인재 매칭은 매칭을, 산학협력·기술교류는 학습을 각각 구현함

○ 이 메커니즘은 본 연구 제6장 제3절의 로봇 공용 인프라(공유), 제2절의 인력 매칭·취업연계 과정(매칭), PoC 트랙·산학협력(학습)으로 구현되며, 제2장 제5절 함의 ②(시험·인증·실증 인프라 집중 육성)와 대응됨

□ 임계규모와 집적의 자기강화

○ 공유·매칭·학습의 효과는 집적 규모의 함수이며, 집적이 일정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넘어서면 기업과 인력의 유입이 자기강화적으로 가속되는 경로의존적 집중이 나타남 (Krugman, 1991)

○ 역으로 임계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맡겨서는 집적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초기 집적 기반을 조성하는 선제적 정책 개입이 정당화됨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5장 제4절 핵심 주제 3의 인터뷰 결과, 즉 인력난·베드타운 제약은 '완전히 모여지면 해결되는' 관리 가능 변수라는 발견의 해석 틀이며, 제6장의 핵심기업 선제 유치·앵커 락인 정책의 근거가 됨

3. 앵커기관과 플랫폼형 앵커: 집적의 구심점

○ 집적은 저절로 시작되지 않으며, 임계규모 이전 단계에서 첫 유인을 제공하는 구심점이 필요함

○ 그 구심점이 앵커기관이며, 이는 본 연구 제4장 유형 분류의 '핵심앵커' 축과 접속됨

□ 앵커기관 이론

○ 대학·병원·연구기관·대기업 등 이동성이 낮은 대형 기관은 고용·구매·연구개발·인재의 지역 구심점으로서 혁신 생태계의 형성을 주도함 (Birch et al., 2013; Initiative for a Competitive Inner City [ICIC], 2011)

○ 앵커 기관은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며 대규모 고용, 구매력 창출 및 투자 유발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함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및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함

○ 앵커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클러스터 경쟁력을 제고함

○ 특히 연구집약적 핵심 임차기업(anchor tenant)의 존재가 지역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활성화한다는 앵커테넌트 가설은 앵커'기관'을 넘어 앵커'기업' 유치의 근거를 제공함 (Agrawal & Cockburn, 2003)

○ 이 이론은 본 연구 제4장 제2절 클러스터 유형 분류의 '핵심앵커' 축과 8개 사례(케임브리지 대학, 파주 LG, 피츠버그 CMU, 원노스(one-north) A*STAR 등) 전체를 관통하는 분석 틀이며, 제2장 제5절 함의 ③(R&D 거점·앵커기관 확보)과 접속됨

□ 플랫폼형 앵커와 락인: 데이터·실증·전시 플랫폼

○ 앵커의 현대적 진화형은 물리적 구심점을 넘어 데이터·실증 기회·전시 수요를 매개하는 플랫폼이며, 산업 플랫폼은 보완자 생태계의 혁신을 조직하는 허브로 기능함 (Gawer & Cusumano, 2014)

○ 플랫폼은 참여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지며, 이로 인한 전환비용이 기업과 인재를 지역에 결박하는 락인(lock-in) 기제로 작동함(Katz & Shapiro, 1985)

○ 전통적 앵커론이 기관의 '존재'를 강조하였다면 플랫폼형 앵커는 기관이 매개하는 '거래와 데이터의 흐름'을 강조하며, 자산의 보유가 아니라 접근권의 지역 결박이 유치 유인이 됨

- 제조 집적이 없는 고양시가 보유 앵커를 활용하는 방식임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5장 제4절 핵심 주제 4('잠자는 앵커', '지금은 플랫폼이 앵커의 역할')의 인터뷰 발견을 이론화한 것이며, 제6장 제3절의 국립암센터 연합학습 의료데이터 플랫폼('고양에 거점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 구조 설계)·킨텍스 전시 플랫폼·도시 주행데이터 디지털트윈 설계의 직접 근거가 됨

표 2-2 | Porter의 결정요인과 도구상자 2 정책수단

Porter 결정요인	도구상자 2 정책수단
요소조건	인재 양성, R&D 인프라 구축, 기술 인프라 확충 지원
수요조건	공공조달 확대, 테스트베드 운영, 선도수요 창출 지원
연관·지원산업	전후방 산업 동반 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기업전략·구조·경쟁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신규 진입장벽 완화 추진

4. 클러스터의 동태적 발전: 생명주기·관련 다양성·스마트 전문화

○ 앵커라는 구심점이 확보되어도 클러스터는 단계적으로 진화하며, 어느 단계에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의 선택이 성패를 좌우함

- 시간 축(생명주기), 방향 축(관련 다양성), 선택 원리(스마트 전문화)의 세 층위로 검토함

□ 클러스터 생명주기

○ 클러스터는 출현(emergence)→성장(growth)→성숙(sustainment)→쇠퇴(decline) 또는 재생(renewal)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단계마다 유효한 정책수단이 상이함 (Menzel & Fornahl, 2010)

○ 출현기에는 앵커 유치와 기초 인프라 구축, 성장기에는 산학연 협력과 인력 양성, 성숙기에는 외부 지식 유입과 관련 다양성 확보, 쇠퇴기에는 기술 분기를 통한 재생이 각각 핵심 과제가 됨

○ 이 단계론은 본 연구 제4장 제3절 8개 사례의 서술 틀(태동기→형성기→도약기→성숙기)로 사용되며, 제6장 제3절 클러스터 조성안의 1단계→2단계 설계(양자보안→양자컴퓨팅, 실증지구→확장)의 논리적 근거가 됨

표 2-3 | 클러스터 생명주기

시기 구분	내용
출현기	앵커기관 및 앵커기업 유치와 기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집적 기반을 조성함
성장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
성숙기	외부 지식 유입을 촉진하고 관련 다양성을 확대하여 산업 고착을 방지함
쇠퇴/재생기	기술 분기(branching)와 신산업 진입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

□ 경로의존성과 관련 다양성·기술 분기

○ 지역의 신산업 발전은 기존 산업과 인지적·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Boschma & Frenken, 2006)

○ 기존 산업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술적 분기(branching)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

○ 관련 다양성(related variety)은 산업 간 지식 파급과 혁신을 촉진하고 비관련 다양성(unrelated variety)은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외부 충격을 완충하며, 산업 특화 대 다양성 논쟁(MAR 대 Jacobs)은 이 관련 다양성 개념으로 종합됨 (Frenken et al., 2007)

○ 생명주기의 다음 단계는 무작위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역량에서 분기하므로, 신산업의 선택은 지역 기존 자산과의 인지적·기술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이 논리는 본 연구 제4장 유형 분류의 '진화경로' 축과 피츠버그 사례(철강→AI·로봇 전환)에서 확인되며, 제5장 제4절의 산업 융합 발견(병원로봇·메디컬드론 등 전략산업 간 조합)과 제6장의 방송영상+AI·의료+양자 확장 설계의 근거가 됨

□ 스마트 전문화: 선택과 집중의 원리

○ 지역은 모든 분야가 아니라 자기 자산과 정합적인 소수의 우선순위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그 우선순위는 행정의 탁상이 아니라 현장 기업·전문가의 지식을 동원하는 '기업가적 발견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으로 도출해야 함 (Foray et al., 2009; Foray, 2015)

○ 스마트 전문화는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공식 원리로 채택되면서 지역 산업정책의 표준 프레임으로 확산됨 (McCann & Ortega-Argilés, 2015)

○ 관련 다양성이 '가능한 방향들'을 알려준다면 스마트 전문화는 그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의 정책 원리로서, 두 이론은 선후 관계로 결합됨

○ 이 원리는 본 연구 제5장 제4절 핵심 주제 5(산업 정체성 부재 → 테마 3개 이내 압축)와 전략산업 도출 절차(전문가 인터뷰 21건의 질적분석 = 기업가적 발견 과정의 방법론적 구현)에서 확인되며, 제6장의 전략산업 3순위 체계와 클러스터 조성 2안(퀀텀캠퍼스·피지컬 AI)의 선정 논리가 됨

○ 다층 거버넌스 (Hooghe & Marks, 2003)와 정책혼합 (Flanagan et al., 2011) 논의는 도구상자 1·2의 통합 운용과 정책 설계의 문제이므로 제5절에서 다룸

5. 수요 측면 혁신정책: 실증·테스트베드·공공조달

○ 공급 측 조건(집적·앵커·특화)을 갖추어도 수요가 없으면 기업은 이동하지 않음

○ 클러스터 성장의 연료는 결국 시장이며, 고양시가 팔 수 있는 것은 값싼 공간이 아니라 실증 기회와 초기 매출임

□ 수요기반 혁신정책과 선도수요

○ 혁신정책은 R&D 보조 등 공급 측 수단에 편중되어 왔으나, 공공이 수요를 창출·명세화하는 수요 측면 정책이 혁신과 기업 입지의 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음(Edler & Georghiou, 2007)

○ 까다롭고 선도적인 수요가 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논지는 국가 경쟁우위론의 수요조건 분석에서 확인되며(Porter, 1990), 신제품 개념의 원천이 선도사용자(lead user)라는 실증과도 상통함(von Hippel, 1986)

○ 이 관점은 본 연구 제3장 제1절(글로벌 R&D·실증 입지 수요의 폭증)과 제5장 제4절 핵심 주제 1(입지결정 요인은 임대료가 아니라 실증 기회 :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주제 2(유치의 본질은 매출 기회 :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다')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됨

□ 혁신지향 공공조달과 초기 시장 창출

○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공공이 신기술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레퍼런스와 매출을 제공하고 민간 확산의 신호 효과를 창출하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임 (Edquist & Zabala-Iturriagagoitia, 2012)

○ 선도수요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 조달이며, 이는 수요 측면 정책을 추상적 '수요 신호'에서 구체적 '구매 행위'로 전환함

○ 이 논리는 본 연구 제5장 제4절의 공공구매 확약·군납 연계 요구에서 확인되며, 제6장 제3절의 순찰로봇 공공조달 초기구매·실증 후 공공구매 연계 설계의 직접 근거가 됨

□ 테스트베드·리빙랩과 도시 실증

○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실험 공간인 리빙랩은 실험실과 시장 사이의 중간 수준 혁신을 중개하는 결정적 검증 단계를 제공함 (Almirall & Wareham, 2011)

○ 도시 단위 테스트베드는 기술 검증·인증·데이터 축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자체를 혁신 인프라로 전환시키며, 조달이 '구매'라면 테스트베드는 '검증 기회'의 제공으로서 수요 신호→실증 기회→초기 구매의 3단계 수요 측면 정책을 완성함

○ 국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이러한 실증 공간의 법제화 장치로서 도시 실증 전략과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음

○ 이 이론은 본 연구 제6장 제3절의 도심형 통합 실증지구(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호수공원 등 7대 거점 단일 노선)·실증비 보조와 제2절의 PoC 트랙 정책안의 이론적 근거이며, 제2장 제5절 함의 ②와 대응됨

6. 지역혁신체계와 인재 착근: 시스템과 사람

○ 실증과 수요 연계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담아내는 지역의 제도(지산학 연계)와 사람(정주 인재)이 필요하며 이는 도구상자 2의 마지막 축임

□ 지역혁신체계(RIS)

○ 혁신은 기업 단독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이 상호학습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함 (Cooke, 1992)

○ 국가혁신체계 논의(Lundvall, 1992)를 지역 수준으로 구체화한 지역혁신체계론에서는 지역에 착근된(sticky) 지식과 전역적으로 이동 가능한(ubiquitous) 지식의 결합이 지역 경쟁력의 관건이 됨 (Asheim & Isaksen, 2002)

○ 이 이론은 본 연구 제6장 제2절의 지산학협력과 신설·지산학협력센터·대학 브랜치(부산·슈타인바이스 모델) 정책안이 지향하는 제도적 구축의 직접 근거이며, 제4장의 원주·케임브리지 산학연 사례와 대응됨

□ 트리플헬릭스와 지산학 협력

○ 대학-산업-정부 3나선(triple helix)의 상호작용과 역할 혼성이 혁신의 원천이며, 각 주체가 전통적 경계를 넘어 서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때 혁신의 역동성이 극대화됨 (Etzkowitz & Leydesdorff, 2000)

○ 지역혁신체계가 ‘체계’라면 트리플헬릭스는 그 체계를 움직이는 ‘주체 간 관계’ 모델로서, 기초지자체가 매개자로 나서는 한국형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 정책의 원형 이론임

○ 이 모델은 본 연구 제6장 제2절의 관내 대학(항공대·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중부대·농협대) 연계 PoC 트랙과 제3절의 계약학과·3단계 인력양성(연구자-융합개발자-시민) 설계의 직접 근거가 됨

□ Sticky Places와 인재 착근

○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자본과 인재의 이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특정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산업거점으로 유지되는 요인을 설명함 (Markusen, 1996)

○ 앵커 기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및 특화된 인적 자본이 결합되어 지역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형성함

○ 지역 내 축적된 지식, 기술 및 네트워크가 기업과 인재의 이탈을 억제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점착성(stickiness)을 창출함

○ 고학력 인재의 입지 선택에는 고용 기회뿐 아니라 정주 어메니티가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는 실증은 고양시의 정주환경 강점을 인재 유치 자산으로 이론화하는 근거를 제공함 (Glaeser et al., 2001)

○ 지산학 시스템이 인재를 길러도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무효이므로 착근이 마지막 과제이며, Markusen(1996)의 산업지구 4유형론이 본 연구 제4장 제2절의 클러스터 유형 분류 틀로 별도 사용됨을 고려하면 본 항(점착성)과 제4장(유형론)은 동일 문헌의 상이한 활용에 해당함

○ 이 논의는 본 연구 제5장 제4절 핵심 주제 3(판교 마지노선 인력·베드타운 낙인)의 제약 진단과 대응되며, 제6장 제2절 주거지원 3종(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임대보증금 지원·소호형 주거클러스터 = 착근률·이직률 관리)과 제3절 정주 패키지(‘교육받고 떠나는 문제 방지’)의 직접 근거가 됨

□ 소결: 5축의 종합

○ 거래비용 절감 → 집적 → 앵커·플랫폼 → 단계·선택 → 수요·실증 → 시스템·인재로 이어지는 연쇄는 곧 본 연구의 정책 설계 논리로서,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 다중 앵커의 선택적 결합, 10년 지속’이라는 결론이 이론적 필연으로 도출되는 경로임

○ 두 도구상자의 배합 비율, 다층 거버넌스와 정책혼합을 포함한 통합 설계의 문제는 제5절에서 다룸

제5절 도구상자의 통합과 정책설계

1. 두 도구상자의 상호보완성

1) 시간 축에서의 상호보완성

□ 초기 유치 단계

○ 도구상자 1(세제지원·현금보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입지선택과 투자 결정을 유도함

□ 정착 단계

○ 도구상자 2(인력 양성·R&D 지원·산업 인프라 구축)를 통해 자산 특수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축적하여 장기 정착을 촉진함

□ 성숙 단계

○ 도구상자 2의 비중을 확대하여 혁신역량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함

2) 산업 유형별 배합

○ 자동차·철강 등 성숙 산업은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의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인력, 기술 및 혁신 인프라 중심의 도구상자 2를 확대 적용함

○ AI, UAM, 바이오 등 신생 첨단산업은 도구상자 1을 통해 초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도구상자 2를 통해 장기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균형적 접근을 적용함

○ 서비스·콘텐츠 산업은 인적자본과 산업생태계의 중요성이 높으므로 도구상자 2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도구상자 1은 보조적으로 활용함

3) 기업 규모별 배합

□ 대기업

○ 대기업은 도구상자 1의 추가 유인효과(but-for effect)가 제한적이므로 인재, 연구개발 및 산업생태계 지원 중심의 도구상자 2를 우선 적용함

□ 중소기업·스타트업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신용제약 해소를 위한 도구상자 1과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상자 2를 결합하여 지원함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은 세제지원 및 보조금과 함께 인력, 인프라 및 규제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함

2. 정책 설계의 종합 원리

□ Bartik의 권고: 도구상자의 균형 재조정

○ (기존) 기존 기업유치정책은 도구상자 1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구상자 2의 비중을 확대함

○ (권고) 도구상자 1은 전체 정책수단의 30~50%, 도구상자 2는 50~70% 수준으로 구성하여 균형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함

○ 지역의 산업구조, 발전단계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두 도구상자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함

□ 메커니즘 디자인: 두 도구상자 공통 안전장치

○ 성과연동, 일몰조항, 환수조항 및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고용, 연구개발, 특허 및 기술이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관리함

○ 민간 전문운영기관 및 벤처캐피털(VC)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함

□ 다층 거버넌스 정합성

○ 중앙정부는 국가전략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인센티브와 광역 인프라를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는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함

○ 도구상자 1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높으며 도구상자 2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높음

□ 지역 맥락 반영

○ 지역의 산업기반, 앵커기관, 인적자본 수준 및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도구상자별 정책 비중을 차등 적용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도구상자 2 중심의 정책전략을 강화함

○ 비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등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여 도구상자 1과 도구상자 2를 동시에 적극 활용함

3. 고양시 정책 설계의 이론적 함의

○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여 현금지원 및 특구 중심 인센티브 활용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및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구상자 2 기반의 정책 설계가 이론적·실증적으로 타당하며 5가지 방안을 제시함

① 고양시 관내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함

② 시험·인증·실증·테스트베드 기능을 집중 육성함

③ 첨단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을 유치하여 지역 내 앵커기관을 확보함

④ 원스톱 행정지원, 기업 전담관 제도 및 규제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비금전적 거래비용을 절감함

⑤ 도구상자 1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산업 등 전략 분야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함

제3장 경제 및 기업 환경 분석

제1절 국외 경제 및 기업환경

제2절 국내 경제 및 기업환경

제3절 고양시 경제 및 기업환경

제3장

경제 및 기업 환경 분석

제1절 국외 경제 및 기업환경

1. 글로벌 FDI 추이

□ 양적 정체 속 디지털 경제 전환

○ 2024년 글로벌 FDI는 약 1.5조 달러로 컨듀잇 보정 시 전년 대비 △11%이며, 2025년 1.6조 달러로 1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UNCTAD, 2025a, 2026)

○ UNCTAD WIR 2025의 부제는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로 설정되어 데이터센터·AI·디지털 인프라가 FDI 신성장 영역임을 명시함 (UNCTAD, 2025a)

○ 2025년 상반기 글로벌 FDI는 전년 동기 대비 △3%로 산업·인프라 투자가 타격을 받았으나 디지털·서비스 부문은 회복 추세를 보임 (UNCTAD, 2025b)

2. 산업별 FDI 분포

□ 반도체·AI·바이오·에너지·UAM 5대 트렌드

○ AI 인프라 투자는 2029년까지 누적 2.8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며, 2025년 세계 반도체 매출은 7,010억 달러(+11.2%)로 전망됨 (Reuters, 2025b; SIA, 2025)

○ 청정에너지 투자는 2.2조 달러로 화석연료(1.1조 달러)의 2배 규모임 (IEA, 2025)

○ 2025년 1~10월 바이오 딜 규모가 2024년 연간 총액을 초과함 (IntuitionLabs, 2025)

○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은 2023년 2,408억 달러→2033년 1조 6,350억 달러(연 21% 성장)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은 2024년 4.7조 원에 도달함 (KDI 경제정보센터; Fortune Business Insights; KoreaBio Brief 197호)

○ 글로벌 MICE 시장은 2025년 1조 2,260.7억 달러→2034년 3조 625.5억 달러(CAGR 10.86%)로 전망되며, 한국은 종합경쟁력 21개국 중 18위에 그침 (Fortune Business Insights; Mordor Intelligence)

3. 미·중 디커플링 + IRA·CHIPS Act 보조금

□ 공급망 재편

○ 중국의 대미(對美) 수입점유율은 2017년 22%(정점)에서 2022년 17%로 낮아졌고 2018년 이후 7.7%p 감소하였으며, 베트남·멕시코가 이를 흡수함 (Bank of America Institute, 2025; Stanford FSI, 2024)

○ IPEF 14개국은 세계 GDP 약 40%를 차지하며, 공급망 협정이 2024.2 발효됨 (USTR, 2024)

○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생산기지'로 부상함 (KOTRA, 2026)

□ 미국 CHIPS Act 직접 보조금 520억 달러 기업별 배정

○ 삼성전자 47.5억 달러, TSMC 66억 달러, 마이크론 61.65억 달러(+저금리 대출 75억 달러), 인텔 57억 달러(2025.8 트럼프 재협상)가 지급되었으며, 미국 내 약속 투자는 총 약 3,000억 달러에 달함 (한국경제, 2024; Intel, 2025)

○ 미국 CHIPS and Science Act의 총 지원 규모는 2,800억 달러임 (SIA, 2024)

□ EU CHIPS Act €43bn 패키지

○ 정책 투자 €43bn(공공 €6.2bn, 그중 EU 예산 €3.3bn)로 2030년 EU 반도체 점유율 10%→20%를 목표로 함 (European Commission, 2024a; Bruegel, 2026; SEMI Europe, 2025)

○ ESMC(TSMC 70% 지분) 신규 팹은 €100억 규모(보조금 €50억)로 추진됨 (European Commission, 2024b)

○ EU 반도체법은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를 목표로 함 (European Commission, 2024a)

□ IRA : 한국 배터리 3사 영향

○ IRA 시행 후 미 정부 대출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누적 117억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BlueOval SK(Ford+SK On) 단일 대출이 92억 달러에 달함 (KEIA; IRS; EPA)

○ LG엔솔·SK온·삼성SDI의 미국 EV배터리 수출은 +27%(2023.11)에 도달하였으며, OBBBA(2025)에서 일부 보조금은 축소되었음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A], 2025)

□ 트럼프 2기 관세 및 한미 합의

○ 2025.4 상호관세 시행 후 한미 합의(2025.7)로 한국 IEEPA 관세는 25%→15%, 자동차 232조 관세는 15%로 인하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정함 (White House, 2025)

4. 글로벌 도시 간 기업유치 경쟁

□ 싱가포르 EDB : 대규모 외투 약정 지속

○ 2024년 고정자산투자(FAI) 약정은 S$13.5bn + 연간사업비(TBE) S$8.4bn = 총 S$21.9bn에 달하며, 5년 내 1만 8,700개 일자리·연간 부가가치 S$23.5bn 창출이 전망됨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2025; Reuters, 2025a)

○ 제조업 약정은 S$11.1bn으로 반도체·바이오메디컬이 중심임 (EDB, 2025)

□ 홍콩 InvestHK : 해외기업 지역본부 사상 최대

○ 2025년 기준 해외·중국 본토 모기업의 지역본부·지사·현지법인은 총 11,070개(+11%)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데일리홍콩, 2026)

○ 모기업 소재지는 중국본토 3,090, 미·일 각 1,550, 영국 770, 싱가포르 590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한국 기업도 120개가 진출함 (데일리홍콩, 2026)

□ 런던·도쿄·두바이

○ 런던(London & Partners)·도쿄(JETRO·아시아 본사 유치)·두바이(Free Zone 모델)는 도시 단위 외투 경쟁의 글로벌 표준임

○ 시사점: 고양시는 R&D·MICE·바이오 영역에서 도시 단위 경쟁(KINTEX·국립암센터 자산)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

5. ESG·CBAM·디지털 규제

□ EU CBAM 2026 본격 시행

○ 2026.1.1 전환기→확정단계로 진입하며, 대상 6품목(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에 적용됨 (전국인력신문, 2026; KITA, 2026)

○ 한국 對EU 수출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은 51억 달러(7.5%)이며, 철강이 89.3%를 차지함 (KITA, 2026)

○ 2026.4 CBAM 인증서 가격은 톤당 €75.36 수준임 (KITA, 2026)

□ 한국 RE100 가입기업

○ 글로벌 RE100 가입 한국 기업은 36개사이며, SK그룹 8개사가 최초(2020.11), 삼성전자가 2022.9에 가입함 (전기신문, 2024; 한국에너지융합협회, n.d.)

○ 한국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률은 9%(전세계 평균 50%)로 격차가 큼 (전기신문, 2024)

□ 디지털 규제

○ EU CSRD·CSDDD 공급망 실사 의무,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 적용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기준이 변화됨 (European Commission, 2024~2026)

6. 요약 및 시사점

□ 슈퍼사이클 수혜 + 자본 유출 압력 공존

○ AI·반도체·바이오·UAM 슈퍼사이클로 한국 FDI는 사상 최대를 갱신하나, 미국 CHIPS·IRA 흡수 효과로 한국 자본의 대미(對美) 유출이 동시 발생함

□ R&D·실증입지 수요 부상

○ 디지털 헬스케어·MICE·UAM·양자 등 R&D·실증입지 수요가 폭증하여 고양시(KINTEX·국립암센터·한국항공대) 자산과 정합함

□ ESG 의무화로 친환경 입지 매력 변수 강화

○ CBAM 시행과 RE100 확산으로 재생에너지·저탄소 입지가 외투 결정 변수에 추가됨 : 경기 RE100 9GW 정책 활용이 필수임

□ 글로벌 거시: 완만한 둔화 후 회복

○ 세계 GDP는 2025년 3.2%→2026년 2.9%→2027년 3.1%로 전망되며,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관세 영향에 가장 민감함 (OECD, 2025; 한국개발연구원, 2025)

□ 글로벌 환경 통합 결론

○ 글로벌 FDI는 양적 정체(2024 △11%)에도 디지털·AI·바이오·UAM 산업으로 질적 재편이 가속되며, 자본은 미국(IRA·CHIPS 인센티브)으로 흡수되는 일방향 흐름이 강화됨

○ 권역별 양극화(북미 +23%·EU △58%)에서 ASEAN(+10%)·인도(280억$)·아프리카(+75%)가 신흥 흡수처로 부상하여 한국은 동맹국 생산기지 + 신흥국 진출 거점의 이중 역할이 요구됨

○ 글로벌 도시 경쟁(싱가포르 EDB S$13.5bn·홍콩 InvestHK 11,070개·런던·도쿄)은 정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 인센티브 패키지가 결정 변수임을 입증함 : 고양시는 R&D·MICE·바이오 영역에서 도시 단위 경쟁 전략 수립이 필수임

○ ESG·CBAM·디지털 규제(2026.1.1 확정·CBAM 톤당 €75.36)는 비용 변수가 아닌 입지 선정의 사전 통과 요건으로 진화하며, 경기 RE100 9GW·고양 RE100 시·군 매칭(200MW)이 정책 자원에 해당함

제2절 국내 경제 및 기업환경

1. 한국 경제 환경

□ 한국 거시경제: 완만한 회복 속 불확실성

○ 2026년 GDP 성장률은 1.8~2.1%로 전망되며, 2025년 수출은 7,097억 달러로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함 (한국은행, 2025; 한국개발연구원, 2025; OECD, 2025; 산업통상부, 2026c)

○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급격히 성장함

○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초중반 고환율이 지속되고, 실업률 4.0%(5년 최고)·청년실업률 7.7%를 기록함 (통계청, 2025)

□ 경쟁력 하락 경고

○ IMD 종합 27위(7계단 하락), 기업효율성 23→44위, 노동시장 31→53위로 평가됨 (IMD, 2025)

○ Heritage 경제자유는 17위(3계단 하락), 노동시장은 100위(최약점)로 평가됨 (Heritage, 2025)

□ 자본 흐름: 유출 우위 지속

○ 2024년 해외직접투자(유출) 639.5억 달러로 FDI 유입(345.7억)의 약 2배 격차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2025)

2. 한국 FDI

□ FDI 추이

○ 2024년 신고액은 345.7억 달러(+5.7%), 2025년은 360.5억 달러(+4.3%)로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함 (산업통상자원부, 2025; 산업통상부, 2026d)

○ 2024 상반기 신고는 153.4억 달러(역대 3위), 도착은 69억 달러, 3분기 누적은 251.8억 달러(+5.2%, 역대 최대)임 (산업통상자원부, 2024a)

○ 국가별로 중화권 25.7%·일본 18.9%·미국 17.0%·EU 12.8%로 다변화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24a)

□ 산업별 분포

○ 제조업 157.7억(+8.8%), 서비스업 190.5억(+6.8%, AI 데이터센터 견인)으로 지식·기술 집약형 FDI로 전환 중임 (산업통상부, 2026d)

○ 2024년 첨단산업 부문에서 반도체 +46.5%, 바이오 +254.2%, 소부장 111.3억(+52.7%, 역대 최고)을 기록함 (산업통상자원부, 2025)

○ 산업별 FDI 시계열·국가별 분포는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2024.12.31 기준)에서 확인 가능함 (산업통상부, 2026b)

□ 외투기업 지원 단계적 상향

○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는 40%(2023)→50%(2024)→최대 75%(2025)로 단계적 상향됨 (관계부처 합동, 2025)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한도는 60→100억 원으로 상향됨(2025) (산업통상자원부, 2025)

3. 한국 정책 현황

□ 이재명정부 국정기조: AI 대전환·외투 인센티브 강화 및 비수도권 투자

○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 + K-반도체 대도약 + K-에너지' 기조를 추진함 (국정기획위원회, 2025)

○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비수도권 성장전략을 정책기조로 추진함

□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9 시행

○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전,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기술임

○ 50개 세부 중점기술이 설정되며 2024년 R&D 예산은 5조 원(전년 대비 +2,952억 원)으로 확대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 2025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12대 분야·50개 세부기술 로드맵이 완비됨

○ 2025년 K-반도체 33조 원 패키지와 국가전략기술 R&D 6.8조 원이 투입됨 (CNBC, 2025)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로봇·방산 등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됨

○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포항·새만금·울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바이오(인천·시흥, 대전, 춘천·홍천, 화순, 안동·포항) 특화단지 등

□ K-칩스법 세제혜택

○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중견 15→20%, 중기 25→30%로 확대됨(적용기한 2029.12.31.) (김·장 법률사무소, 2025)

□ 비수도권 위주 산업정책: 기회발전특구 1·2차

○ 1차(2024.6): 40.5조 원

-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에 신규 26조 + 기투자 14.5조 = 40.5조 원이 지정됨 (산업통상자원부, 2024b)

○ 2차(2024.11): 33.8조 원

- 6개 시·도(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150개 기업에 16.4조 + 착공 17.4조 = 33.8조 원이 추가 지정됨 (산업통상자원부, 2024b)
- 누적 14개 시·도 74.3조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양시는 수도권 제외 : 정책 위협 요인에 해당함 (산업통상자원부, 2024b)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정이 원칙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함

□ 평화경제특별구역

○ 17년 만에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산업형·관광형 개발사업이 시행 가능함

○ 제2조 정의·제8조 지정·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제29조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조항이 핵심임

○ 경기도 후보지 3곳(2026.3.27 선정)은 연천·파주·포천이며, 고양은 미선정으로 광역 정책 패키지에서 배제됨

○ 2026~2027년 총 4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예정됨

4. 경기도 경제 및 기업 환경

□ 전국 1위 산업·인구 거점

○ 인구 1,372만(전국 1위), GRDP 651조(2024, 전국 1위, +3.6%)이며, 사업체·종사자 수도 전국 1위에 해당함 (통계청·경기통계 2025)

○ 산업단지는 200여 개로 전국 최다이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보유함

○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2024.12.28 개통되어 고양·파주의 서울 접근성이 혁신됨

□ 경기 북부 vs 남부 인구·GRDP 격차

○ 10개 시·군, 인구 360만(경기 26%), GRDP 비중 약 17%로 인구 대비 저생산 구조임

○ 1인당 GRDP는 광역단위 환산 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함

○ 고양시와 같은 일부 지역은 삼중규제(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가 누적되어 있음

□ 핵심 클러스터

○ 판교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1,803개, 2판교 매출 44.7조, IT 비중 66.4%임 (경기도 2024)

○ 평택 삼성 P5는 60조 원(2028 가동), P1~P6 전체 생산유발 550조·일자리 130만 명임 (뉴시스, 2025)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 380조(국가산단 360조·기흥 미래연구단지 20조) + SK하이닉스 600조로 메가클러스터 980조 규모임 (한국경제, 2025)

○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4.7조, 종근당 2.2조 R&D 투자가 진행됨 (BRIC, 2024)

□ 경기 정책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5. 7. 18.)으로 고용보조금·첨단업종 정의가 신설됨 (경기도, 2025a)

○ 경기 RE100은 2030년 대규모 3GW + 31개 시·군 6GW(시·군별 200MW) 목표임 (경기도, 2025b)

5. 종합적 시사점

□ 시사점 1: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 한국, 그러나 자본은 미국으로 역류

○ 미·중 디커플링·프렌드쇼어링으로 한국 FDI는 2년 연속 사상 최대(360.5억 달러)를 달성

○ 다만 한국 해외투자(639억)가 FDI 유입의 약 2배에 달해 순유출 구조가 지속됨

○ 고양시는 한국 전체 FDI 매력 상승의 수혜를 누리되 자본 유출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 놓임

□ 시사점 2: AI·반도체·바이오 슈퍼사이클이 산업입지 수요를 재정의

○ AI 인프라 2.8조 달러, 세계 반도체 1조 달러 팹투자, 바이오 딜 사상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1.6조 달러 흐름으로 R&D·실증(Test-bed) 입지 수요가 폭증함

○ 고양시 보유 자산(일산테크노밸리·KINTEX·국립암센터·한국항공대)은 이 트렌드의 직접 수혜 대상에 해당함

□ 시사점 3: 정부 인센티브의 양극화, 외투 75% 현금지원 vs 수도권 규제

○ 외투 현금지원 75%, 지방투자보조금 100억, K-칩스 세제 등 인센티브가 비수도권·외투 중심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고양시 전역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차등 규제 적용 대상임. 정책 활용은 가능하나 수도권 규제 우회 전략이 필수임

□ 시사점 4: 경기 메가클러스터 980조의 흡수 효과 vs 경기북부 최하위

○ 용인·평택·화성에 980조 원이 집중되는 동안 경기북부는 GRDP 비중 17%, 1인당 광역 최하위에 머무름

○ 고양시는 경기북부 거점도시(인구 105.8만)임에도 산업단지 0개·1인당 GRDP 26위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함

□ 시사점 5: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흐름에서의 위치

○ 2026.03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후보지에서 고양은 미포함이며, 기회발전특구 74.3조 원도 수도권 제외로 고양 배제

○ 고양시는 광역 정책 패키지의 직접 수혜에서 배제되는 흐름에 노출되어, 경자구역·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자체 정책 트랙 강화가 요구됨

제3절 고양시 경제 및 기업환경

1. 고양시 현황

□ 고양시 산업 및 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고양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119,540개, 종사자 수는 396,369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활동 기반과 고용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산업별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 37,035개, 숙박 및 음식점업 12,092개, 운수 및 창고업 10,229개, 제조업 7,079개 순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고양시 산업구조가 생활서비스 및 유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은 사업체 수 7,079개, 종사자 수 30,670명으로 나타났으며, 공장등록업체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346개, 공장등록 근로자 수는 13,304명으로 나타남

- 고양시가 제조업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생산활동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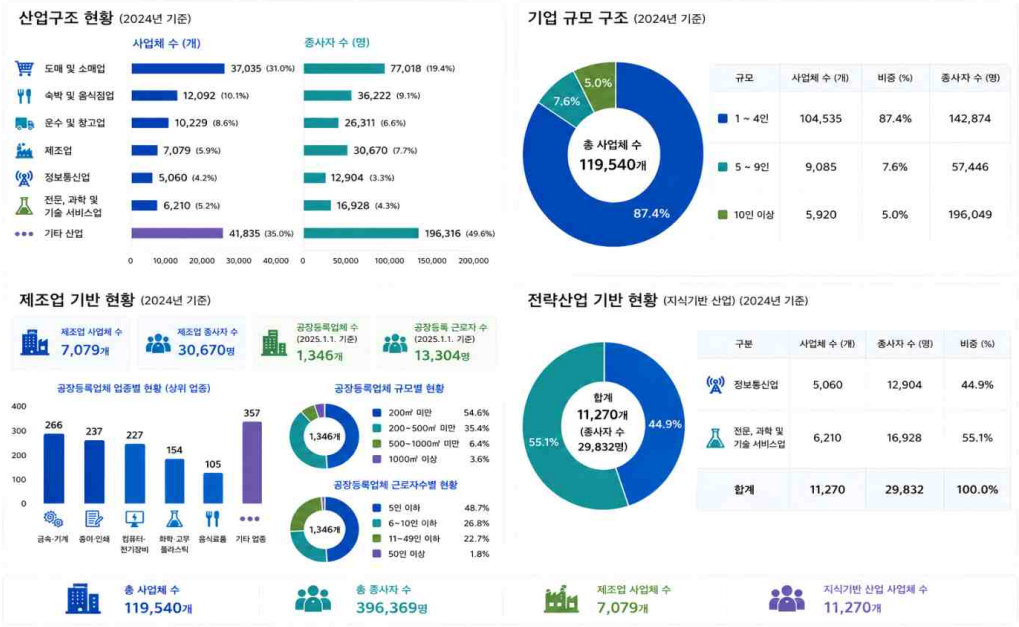
○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가 104,535개로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5~9인 사업체는 9,085개로 7.6%, 10인 이상 사업체는 5,920개로 5.0%를 차지함

- 고양시는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기업구조를 보이며,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스케일업 유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업은 사업체 수 5,060개, 종사자 수 12,904명이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 수 6,210개, 종사자 수 16,928명으로 나타남

- 두 산업을 합산하면 총 11,270개 사업체와 29,832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잠재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3-1 | 고양시 산업 및 기업 현황



〈자료〉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 고양시 지역별 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사업체 수는 덕양구 48,417개, 일산동구 44,234개, 일산서구 26,889개로 나타남

- 사업체는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이 전체 사업체의 약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수는 일산동구 157,577명, 덕양구 156,667명, 일산서구 82,125명으로 나타남

- 일산동구와 덕양구가 고양시 고용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지역의 종사자 수 비중은 전체의 약 7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사업체 수는 일산동구 3,606개, 덕양구 2,254개, 일산서구 1,219개로 나타나며, 제조업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일산동구에 위치함

○ 제조업 종사자 수는 일산동구 17,037명, 덕양구 9,383명, 일산서구 4,250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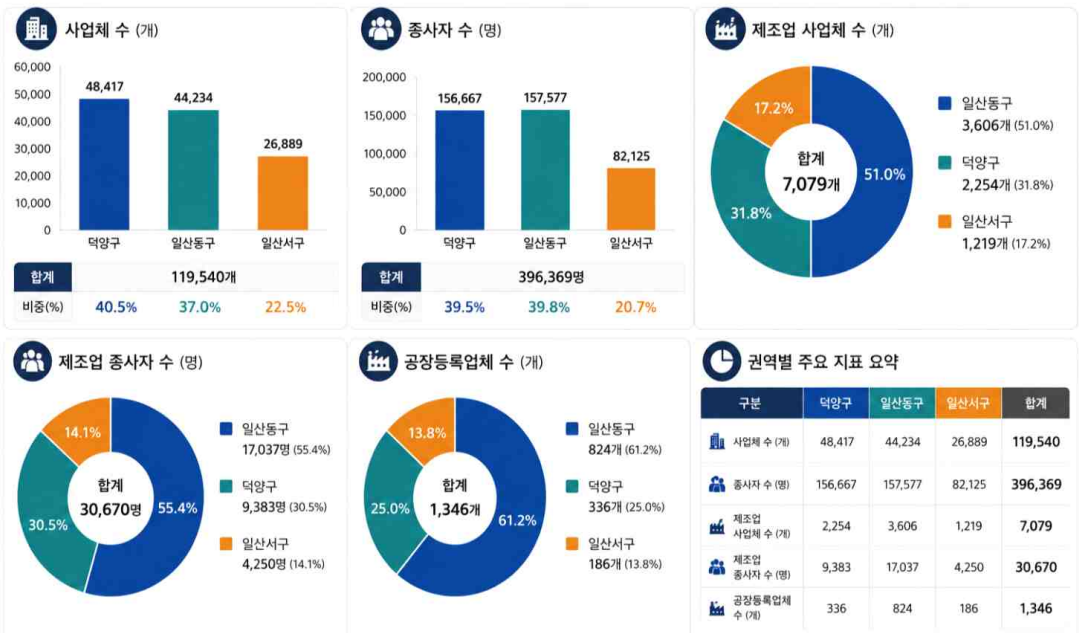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 역시 일산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기반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장등록업체 수는 일산동구 824개, 덕양구 336개, 일산서구 186개로 나타나며, 전체 공장등록업체의 약 61.2%가 일산동구에 위치함

○ 종합적으로 덕양구는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일산동구는 제조업과 공장등록업체가 집중된 산업 거점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기업유치 정책 수립 시 권역별 산업구조와 입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 | 고양시 지역별 기업 현황



〈자료〉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 고양시 투자유치환경

○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북부 거점도시로서 우수한 입지 경쟁력과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접근이 용이하며,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등이 연결되어 있음
- GTX-A 노선,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경제권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KINTEX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컨벤션(MICE)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KINTEX 제1·2전시장이 운영 중이며, 제3전시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외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과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방송영상 및 콘텐츠 산업 기반도 고양시의 주요 경쟁요인으로 평가됨**

- MBC, SBS, JTBC, CJ ENM, EBS, 빛마루 등 방송영상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방송영상밸리 조성을 통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음
- AI, 디지털 기술 및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 의료, 문화 및 상업시설이 집적된 우수한 정주환경 역시 투자유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종합병원, 대규모 상업·문화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어 기업 종사자와 가족의 생활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음**

-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와 도시 브랜드 경쟁력도 고양시의 강점으로 평가됨**

- KINTEX, 고양종합운동장,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호수공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세계 10대 역동적 도시 선정,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수상, BBC 우수 혁신도시 사례 소개 등 국내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음

○ **종합적으로 고양시는 우수한 접근성,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콘텐츠 산업 기반, 정주환경 및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AI, 드론(UAV), 피지컬 AI 등 연구개발(R&D) 및 실증 중심 첨단기술 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산테8크노밸리 권역 개발 현황

○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KINTEX 제3전시장,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경기북부 대표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 콘텐츠, 전시·컨벤션, 주거 기능이 집적된 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약 87만㎡(약 26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사업비는 약 8,493억 원 규모임**

-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메디컬·바이오 및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음**

- 산업시설용지 내 첨단제조시설 24개 필지, 지식기반시설 73개 필지, 연구시설 3개 필지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주변에는 KINTEX 제3전시장,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시·컨벤션 산업과 콘텐츠 산업 간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기반과 첨단기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일산테크노밸리는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 있으며,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접근도 용이하여 국내외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인력 이동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 권역은 첨단산업, 콘텐츠 산업, 전시·컨벤션 산업이 결합된 고양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평가됨

- 향후 AI, 드론(UAV), 로봇, 피지컬 AI 등 연구개발(R&D)과 실증(Test-bed)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 유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3 |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사업현황



〈자료〉 일산테크노밸리 브로슈어

2. PEST 분석

□ 정치(Political)

○ **고양시는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정책을 병행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정책적 추진 방향은 고양시가 기존 주거 중심 도시에서 산업 및 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드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정책 환경은 고양시가 첨단기술 기반 기업 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제(Economic)

○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여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 주요 경제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입지 및 경제활동 수행에 있어 지리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어 국내외 이동 및 기업의 물류·비즈니스 활동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 및 물류 효율성이 높은 지역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KINTEX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MICE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함

○ **최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은 연구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R&D), 실증(Test-bed),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산업거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업 유치 경쟁도 확대되고 있음

□ 사회(Social)

○ 종합병원, 교육시설, 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여 기업의 인력 유치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수도권 내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 및 인력 확보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며, 통근 부담 완화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함

○ 수도권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 인력시장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Technological)

○ 방송영상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지식기반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향후 첨단기술 기업 유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근 드론(UAV), 로봇, 피지컬 AI 등 실환경 기반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R&D)과 실증(Test-bed)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콘텐츠·미디어 산업과 AI 기술 간 융합이 확대되면서 산업 간 협력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AI 및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수 있음

3.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입지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도권 주요 경제권과의 연계성이 높아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KINTEX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인력 유입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기업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 인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신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연구개발(R&D) 및 실증 중심 기업 유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약점(Weaknesses)

○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집적도가 낮아 기업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며, 자족적인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산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 내 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유치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산업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남

□ 기회(Opportunities)

○ 일산테크노밸리 및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및 콘텐츠 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 신산업 유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AI, 드론(UAV), 로봇,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환경에 대한 기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수도권 기업의 입지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기업 유치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의 AI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정책 확대와 함께 지역 단위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첨단기술 기반 기업 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위협(Threats)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파주시 등 수도권 내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용인·화성·수원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김포·파주는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자체 간 우수기업 및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업 유치 성과가 제한될 수 있음

4. 고양시 내부 환경 분석 종합 시사점

□ 내부 환경 분석 종합 시사점

○ 고양시는 수도권 접근성, 양호한 정주환경, KINTEX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기반으로 평가됨

○ 산업집적도와 기업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족적인 산업생태계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는 산업 간 연계와 집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기업유치 정책은 개별 기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보유한 입지적 강점과 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제1절 도시별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제2절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제3절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
제4절 사례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제1절 도시별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1. 사례 분석 개요

□ 수도권 특례시 비교

○ **고양시와 유사한 수도권 입지 및 행정 규모를 가진 특례시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

- 분석 대상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로 설정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동일한 특례시 규모를 가지면서도 권역별 산업구조 및 기업유치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함
- 고양시는 서비스 및 생활경제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수원과 용인은 첨단산업 및 제조업이 결합된 구조, 화성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특례시 기본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는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및 경제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인구 105.8만 명 규모의 특례시로서 수원시(118.6만 명), 용인시(109만 명)와 유사한 행정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고양시 GRDP는 26.0조 원으로 수원시(41.0조 원), 용인시(37.7조 원), 화성시(95.2조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수원시와 용인시가 반도체·전자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고양시는 소비·생활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는 남부권 직주형 도시 특성을 보이고 고양시는 서울 통근형 도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 입지 수요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고양시는 제조업 중심의 특례시와 동일한 기업유치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 첨단지식산업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4-1 | 수도권 특례시 기본현황

구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인구 (2026년)	105.8 (만 명)	118.6 (만 명)	109 (만 명)	99.5 (만 명)
GRDP (2022년)	25,973,034 (백만 원)	40,958,756 (백만 원)	37,659,520 (백만 원)	95,150,714 (백만 원)
기존 권역	북서부권	남부권	남부권	남부권
산업 권역	소비·생활 서비스 복합 권역	지식·첨단 제조 융합형 권역	지식·첨단 제조 융합형 권역	생산단지 권역
통근 권역	서울 통근형	남부 직주형	남부 직주형	남부 직주형
로고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용인특례시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출처〉 KOSIS, 2025년 경기도 권역 구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 특례시 홈페이지

□ 경의권 도시 비교

○ **고양시와 동일한 경의권에 속한 김포시와 파주시를 추가 비교 대상으로 검토함**

- 경의권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로 구성되는 경기 서북부 권역으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생활·경제권이 연계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고양시는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파주시는 디스플레이 및 첨단제조업, 김포시는 제조업 및 물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동일 권역 내 산업 특성과 기업유치 전략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됨

○ **경의권에 속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기본현황을 비교한 결과, 세 지역은 동일한 북서부 생활·경제권에 속해 있으나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인구 105.8만 명 규모의 대도시로 김포시(48.4만 명)와 파주시(53.1만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행정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고양시 GRDP 또한 26.0조 원으로 김포시(18.0조 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파주시는 GRDP가 25.2조 원으로 고양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산업 권역 측면에서 고양시는 소비·생활서비스 중심의 복합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여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세 지역 모두 서울 생활권과 연계된 통근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서부 서울통근형, 고양시와 파주시는 서울 통근형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 입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고양시는 동일 생활권에 속한 김포시, 파주시와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경의권 내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입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 | 경의권 도시 기본현황

구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구 (2026년)	105.8 (만 명)	48.4 (만 명)	53.1 (만 명)
GRDP (2022년)	25,973,034 (백만 원)	18,010,735 (백만 원)	25,158,505 (백만 원)
기존 권역	북서부권	북서부권	북서부권
산업 권역	소비·생활 서비스 복합 권역	제조-생활 서비스 복합 권역	제조-생활 서비스 복합 권역
통근 권역	서울 통근형	서부 서울통근형	서울 통근형
LOGO	고양특례시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	시민중심 더큰 파주

〈출처〉 KOSIS, 2025년 경기도 권역 구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 시 홈페이지

○ **사례 분석은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 정책 유형을 중심으로 수행함**

- 사업 공간 지원
- 조세 혜택
- 인건비 지원
- 금융 지원
- 연구개발(R&D)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행정 편의 제공

○ **각 지자체의 정책 구조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고양시의 정책적 위치와 차별성을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기업유치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고양시

□ 고양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고양시는 우수한 정주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집적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사업 공간 지원

○ **고양시는 기업 입주공간 제공과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개선을 결합한 입지 기반형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산업단지 조성과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복합형 입지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기업의 입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 집적을 유도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표 사례로는 기업입주시설 운영, 기업환경 개선 사업,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이 있음**

□ 조세 혜택

○ **고양시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세제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짐

○ **세제 지원은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 동시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산업 유치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함

○ **대표 사례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이 있음**

□ 인건비 지원

○ **고양시는 통합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력을 연결하는 고용 매칭 중심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보다는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인건비 지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비용 및 인력 탐색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 결과적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 사례로는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음**

□ 금융 지원

○ **고양시는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벤처펀드 운영이 결합된 복합 금융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운영자금 중심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 지원이 병행되는 특징을 가짐

○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동시에 창업부터 성장, 투자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 **대표 사례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추천 지원, 고양벤처펀드 운영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고양시는 기술개발, 디자인,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기술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개발부터 생산, 판로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정책적으로는 기술 기반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닥터 사업,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이 있음**

□ 복지 지원

○ **고양시는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현장 지원을 중심으로 한 환경 기반 복지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짐

○ **근로환경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적으로는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 유지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고양시는 기업애로 상담 및 행정절차 지원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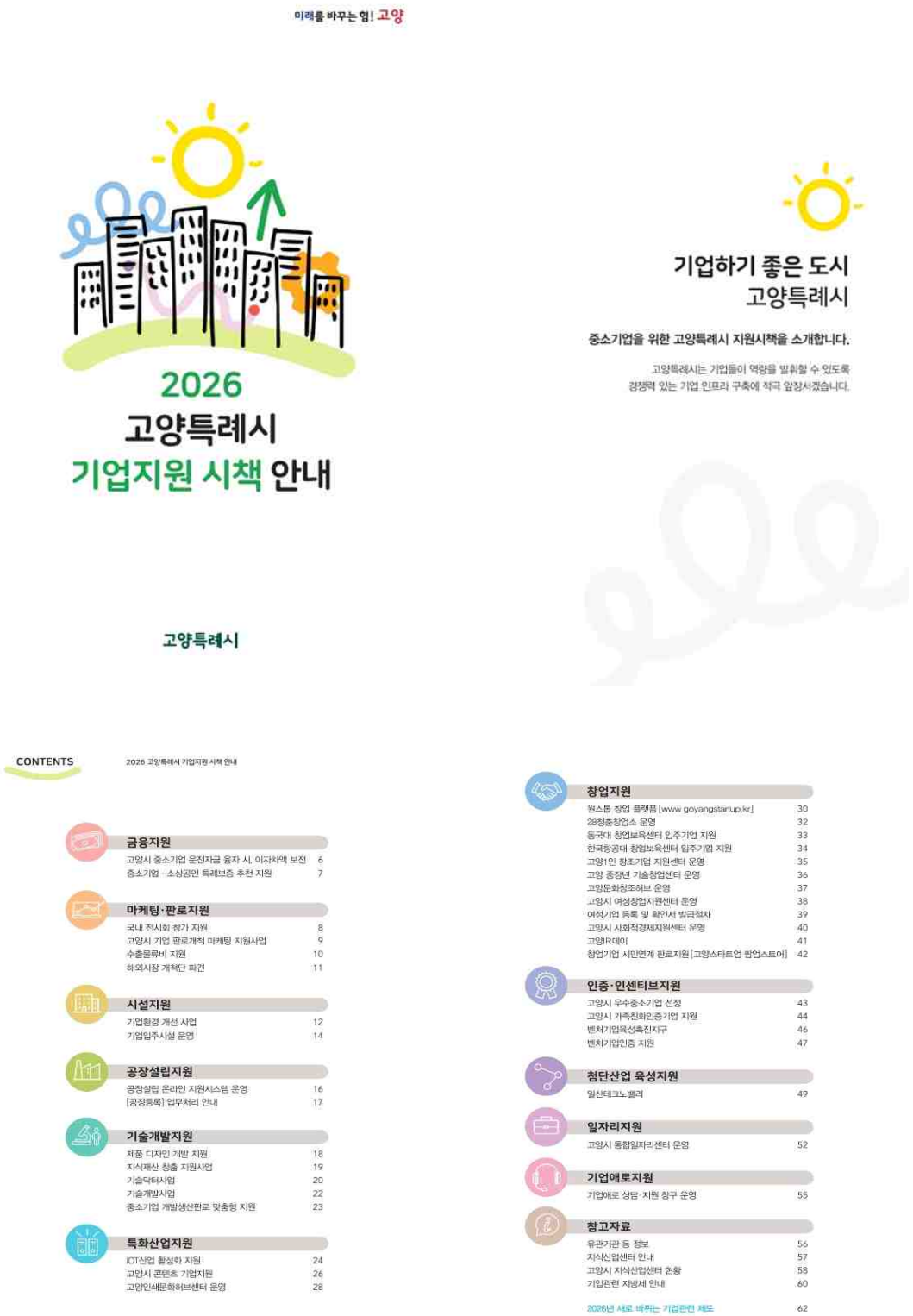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행정 지원이 병행되는 특징을 가짐

○ **행정 처리 시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짐**

- 이러한 결과로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애로 상담·지원 창구 운영,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이 있음**

그림 4-1 | 고양시 지원시책



〈자료〉 2026 고양특례시 기업지원 시책 안내

3. 수원시

□ 수원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수원시는 제조업 기반 산업집적과 벤처·창업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로, 자금·기술·창업 지원이 연계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델타플렉스를 중심으로 산업집적 및 인프라 기반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사업 공간 지원

○ 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입주 인프라를 결합한 입지 기반형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창업지원센터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단계별 입주공간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의 입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집적을 통해 생산성과 협업 효과 제고로 이어지며, 산업단지 중심의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수원델타플렉스 조성 및 운영,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있음

□ 조세 혜택

○ 수원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일부 세제 완화 정책이 병행되고 있음

○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전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특정 산업 및 기업군 유치를 위한 정책적 유인으로 작용함

○ 대표 사례로는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가 있음

□ 인건비 지원

○ 수원시는 일자리센터 및 신중년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과 직무교육을 결합한 고용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업 수요 기반 직무교육과 인력 매칭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짐

○ 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표 사례로는 수원일자리센터 기업인력애로 해소지원, 신중년 맞춤형 직무교육 및 인력지원 사업이 있음

□ 금융 지원

○ 수원시는 펀드 투자, 이차보전,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결합된 종합적인 자금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창업·이전 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 금융지원 체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하며, 투자유치와 금융지원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 대표 사례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전·창업 기업 시설자금 지원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수원시는 기술개발, 디자인, 지식재산, 판로 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기술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의 개발·생산·판로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기술 지원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

- 나아가 수출 및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기술닥터,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IP 나래 프로그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이 있음

□ 복지 지원

○ 수원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근로환경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료 지원 및 통근버스 운영 등 근로환경 개선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 및 장기 근속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표 사례로는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무료 통근버스 운영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수원시는 기업SOS넷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 중심의 행정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온라인 및 현장 대응이 결합된 기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함

-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SOS넷 운영, 기업애로 해소 지원 체계 운영이 있음

그림 4-2 | 수원시 지원시책





목차

Ⅰ. 기본현황 07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해소 11
1.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12
2. 수원기업 IR데이 수원 판(PANN) 13
3. 글로벌네트워킹 참가지원 14
4. 중소기업 동행지원 15
5.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지원 16
6. 이전·창업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17
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8
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19
9.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20
10. 기업SOS넷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 21
11. 수원일자리센터 기업인력애로 해소지원팀 운영 22
12. 수원시신중년센터 기업맞춤형 직무교육 및 인력지원 사업 운영 23
13. 중소기업 교육 아카데미 24
14. 중소기업 경영맞춤 컨설팅 지원 25
15.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26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27
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28
2.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29
3.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30
4. 기술닥터 31
5.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32
6. 지식재산 긴급 지원 34
7. IP나래 프로그램 35
8.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36

Ⅳ. 창업기업 지원 37
1.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38
2.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41
3. 창업보육센터 운영 42

Ⅴ. 국외 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43
1. 수출대금결제 간소화 지원 44
2. 찾아가는 수출절차 간소화 지원 45
3. 찾아가는 TV방송 수출홍보 지원 46
4. AI기반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47
5. 중소기업 AI무역청 48
6. 중소기업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49
7. 글로벌 박람회 수원시관 참가 지원 50
8.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51
9.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52
10. 글로벌 수출개척단 참가 지원 53
11. 국외 안전 인증 취득 지원 54
12. 국외 수출보험 지원 55

Ⅵ. 기업 네트워킹 지원 56
1. 수원시 기업인의 날 57
2. 매출벤처포럼 58

Ⅶ. 수원델타플렉스 및 공장설립 지원 59
1. 수원델타플렉스 조성 현황 60
2. 수원델타플렉스 입주 절차 61
3. 수원델타플렉스 기업지원 사업 64
4.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무료통근버스 운행 65
5.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66
6.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신청 67
7. 공장등록 실태조사 68
8.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69
9.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70
10. 제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 71

Ⅷ.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72
1. 수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73
2. 수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운영 74

〈자료〉 2026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4. 용인시

□ 용인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용인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투자유치·수출지원이 결합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공장설립 지원,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입지 기반과 기술 기반 지원이 동시에 강화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사업 공간 지원

○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설립 지원을 중심으로 입지 기반형 기업유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산업단지 입주계약 지원 및 공장설립 승인 지원을 통해 기업 입지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지원은 기업의 입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산업집적을 통한 생산 및 협력 기반 형성으로 이어짐

- 반도체 및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공장설립 승인 및 입주계약 지원, 산업단지 입주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 있음

□ 조세 혜택

○ 용인시는 창업기업 및 공장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중심의 세제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제도는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기반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함

○ 대표 사례로는 공장설립계획 승인 시 개발부담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있음

□ 용인시 인건비 지원

○ 용인시는 일자리센터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취업지원과 인력 매칭이 결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음

○ 기업의 인력 수급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 사례로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고용지원 사업, 여성 취업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수출기업 인턴 지원사업이 있음

□ 금융 지원

○ 용인시는 융자, 이차보전,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결합된 종합 자금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보험료 지원 등 리스크 완화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금융지원 체계는 자금 조달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함

- 동시에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 형성으로 이어짐

○ 대표 사례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용인시는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지식재산, 반도체 특화 지원이 결합된 기술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실증 및 협력 기반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

○ 기술 지원 확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

- 나아가 첨단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기술닥터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반도체 오픈랩 구축 및 실증 지원사업이 있음

□ 복지 지원

○ 용인시는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 기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작업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 기숙사 지원 등 근로환경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유지 및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 대표 사례로는 노동환경 개선사업, 휴게시설 개선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용인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공장설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 체계를 보이고 있음

- 원스톱 지원센터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행정 처리 효율성 제고로 이어짐

- 아울러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애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SOS 시스템 운영이 있음

그림 4-3 | 용인시 지원시책



Contents

01 자금·보증지원 0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체조물책임보험 지원

02 환경개선 지원 14
노동환경 개선사업(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기업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기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사업(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애로 해소사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03 기업SOS 22
기업애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경기도 기업애로해결 플랫폼 및 경기기업옴브즈만 운영
중소기업 경영자문센터

04 수출·통상지원 28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용인시 단체관 운영
해외전시회 용인시 단체관 운영
용인특례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달리바바닷컴 용인브랜드관 입점 지원
용인시 중소기업 AI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용인 AI무역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사업
용인 다통해(통번역 서포터즈)
해외전출 종합지원사업
판로개척 역량강화 지원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용인특례시 수출상담회 운영
경인지역 해외 연합시장 개척단
무역인증지원

목차 3

05 기업 맞춤형지원 48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인증·지식재산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기술거지행가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공공판로 개척 지원
마케팅 지원
공동인증서발급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설측장비 교정비 지원사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YPA-ETRI 시스템반도체 오픈랩 운영
YPA-KIMM 협력형 R&D 지원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용인시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06 창업지원 76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 운영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 아카데미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07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84
용인시 제조기업 현황
공장설립 등 승인
공장설립계획 승인
산업단지 추진현황
산업단지 시행(추진) 절차도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온라인 접수 활성화

4 2026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08 소상·공인 지원 94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제도약 환경개선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인프라 운영
창의융합 캠퍼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09 인증 108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10 고용·일자리·노동권익 112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생활임금 서약제
일자리센터 제공 서비스
일자리센터 채용행사
용인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1 기타 지원 126
경영정보지원책자 제공
기업정보 검색 서비스
찾아가는 기업교육
일반교육
연수교육
경영인아카데미
명사초청 조찬 세미나
유관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 '2026 용인시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의 지원사업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5

〈자료〉 2026년도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5. 화성시

□ 화성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화성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집적과 수출 기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자금·수출·기술 지원이 결합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높은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사업 공간 지원

○ 화성시는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입지 기반형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관리 등을 통해 기업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입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 중심 산업집적 형성으로 이어짐

- 산업단지 기반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짐

○ 대표 사례로는 산업단지 현황 관리, 공장설립(변경) 승인, 공장등록 및 관리가 있음

□ 조세 혜택

○ 화성시는 지방세 안내 및 세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세제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해당 지원은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행정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 기능함

-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됨

○ 대표 사례로는 각종 세제혜택 안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안내가 있음

□ 인건비 지원

○ 화성시는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채용 지원과 고용 프로그램이 결합된 고용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및 신중년 대상 고용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병행되고 있음

○ 인력 지원은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작용함

- 지역 내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고용 지원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 있음

□ 금융 지원

○ 화성시는 특례보증, 운전자금, 펀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결합된 종합 자금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보증 지원과 금리 지원, 투자 지원이 병행되는 특징을 가짐

○ 이와 같은 금융지원 체계는 자금 조달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함

- 동시에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 형성으로 이어짐

○ 대표 사례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화성시 임팩트펀드 투자 지원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화성시는 기술개발, 지식재산, 실증,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기술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R&D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반도체,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중심의 실증 및 기술개발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

○ 기술개발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첨단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성장 기반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기술닥터 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사업이 있음

□ 복지 지원

○ 화성시는 산업현장 중심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이 결합된 환경 기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작업환경 개선 및 휴게시설 지원 등 근로환경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짐

-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형성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환경 개선 사업,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화성시는 기업지원 플랫폼 및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체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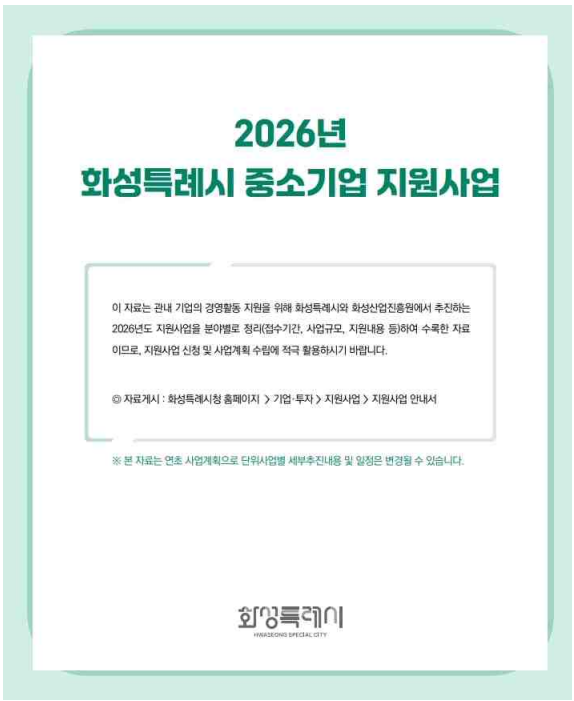
- 온라인 기반 기업지원 시스템과 현장 대응이 병행되고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 애로 대응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운영됨

- 기업 지원 환경 개선과 행정 대응력 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운영,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음

그림 4-4 | 화성시 지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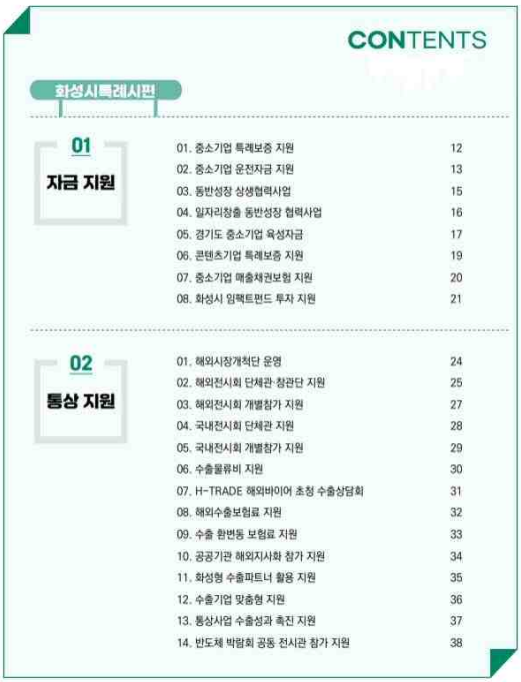
2026년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 자료는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정리(접수기간, 사업규모, 지원내용 등)하여 수록한 자료이므로,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게시 :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 기업·투자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안내서

※ 본 자료는 연초 사업계획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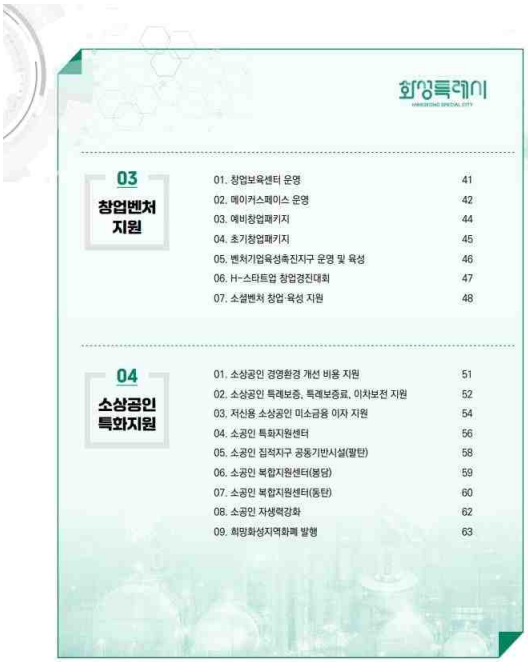


CONTENTS

화성시특례시편

01 자금 지원
0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2
0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3
03.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15
04.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협력사업 16
05.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7
0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19
0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20
08. 화성시 임팩트펀드 투자 지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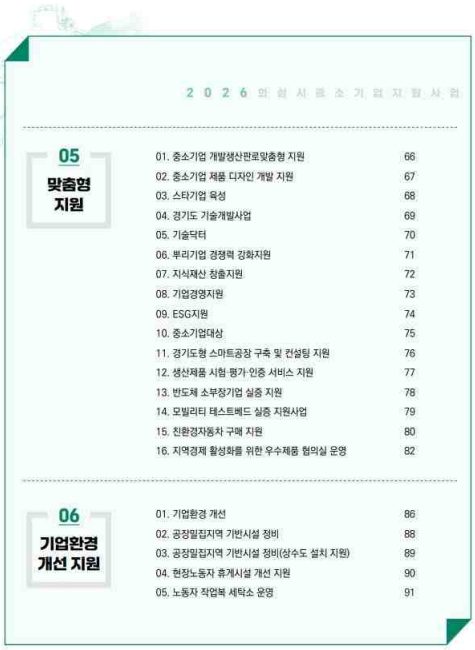
02 통상 지원
0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24
02. 해외전시회 단체관·참관단 지원 25
0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7
04.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 28
05.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9
06. 수출물류비 지원 30
07.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1
08. 해외수출보험료 지원 32
09. 수출 환변동 보험료 지원 33
10. 공공기관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34
11. 화성형 수출파트너 활용 지원 35
12.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36
13. 통상사업 수출성과 촉진 지원 37
14. 반도체 박람회 공동 전시관 참가 지원 38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03 창업벤처 지원
01. 창업보육센터 운영 41
02.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42
03. 예비창업패키지 44
04. 초기창업패키지 45
0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및 육성 46
06. H-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47
07. 소셜벤처 창업·육성 지원 48

04 소상공인 특화지원
0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비용 지원 51
02.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차보전 지원 52
03.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54
0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56
05.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말탄) 58
06.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봉담) 59
07.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동탄) 60
08. 소공인 자생력강화 62
09. 희망화성지역화폐 발행 63



2026 화성시특례소기업지원사업

05 맞춤형 지원
0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맞춤형 지원 66
02.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67
03. 스타기업 육성 68
0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69
05. 기술닥터 70
06.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71
07. 지식재산 창출지원 72
08. 기업경영지원 73
09. ESG지원 74
10. 중소기업대상 75
11.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76
12. 생산제품 시험·평가·인증 서비스 지원 77
13.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 78
14.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사업 79
15.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80
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품 협의실 운영 82

06 기업환경 개선 지원
01. 기업환경 개선 86
02.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88
03.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상수도 설치 지원) 89
0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90
05.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91

〈자료〉 2026년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6. 김포시

□ 김포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김포시는 중소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 판로개척, 기업환경 개선이 결합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사업 공간 지원

○ 김포시는 기업환경 개선과 공장설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공장설립 개요 안내, 공장총량 제도 안내,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신청 안내 등을 통해 기업 입지 및 공장 운영 관련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노후 생산시설 개선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제조업 생산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와 산업현장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짐

○ 대표 사례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공장설립 개요 안내, 공장총량 제도 안내가 있음

□ 조세 혜택

○ 김포시는 지방세 안내와 감면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세제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와 지방세 감면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세무 행정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지원은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제도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됨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대표 사례로는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 감면 안내가 있음

□ 인건비 지원

○ 김포시는 일자리 연계와 근로자 복지 지원이 결합된 고용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 복지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병행되고 있음

- 일자리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기업의 인력 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대표 사례로는 김포시 일자리센터 일자리연계 지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 서비스, 청년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음

□ 금융 지원

○ **김포시는 융자지원, 특례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결합된 종합 금융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기업과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대표 사례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기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김포시는 기술개발, 지식재산,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형 기술지원 구조를 보임**

-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닥터 지원, 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기술닥터 지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이 있음**

□ 복지 지원

○ **김포시는 근로자 복지와 작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복지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노동자 기숙사 지원과 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근로환경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지원프로그램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김포시는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지원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채널과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기업애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채널 운영,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기업 SOS넷 온라인 기업애로 신청 안내, 환경SOS 상담반 운영이 있음**

그림 4-5 | 김포시 지원시책



〈자료〉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7. 파주시

□ 파주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특징

○ 파주시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수출지원, 판로개척 및 생산기반 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비중이 높고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사업 공간 지원

○ 파주시는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현장 기반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과 노동·작업·소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조성에 기여함

- 산업현장 환경 개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짐

○ 대표 사례로는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 노동·작업·소방환경 개선 지원이 있음

□ 조세 혜택

○ 파주시는 직접적인 조세 감면보다는 금융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세제 지원보다는 자금지원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지원은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함

-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접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건비 지원

○ 파주시는 일자리 연계와 장기근속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취업지원 종합서비스와 일자리박람회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이 병행되고 있음

-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화와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일자리박람회 개최,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있음

□ 금융 지원

○ 파주시는 이차보전, 특례보증, 정책자금 연계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자금지원 구조

를 보이고 있음

- 운전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지원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여력 확보를 뒷받침함

-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 형성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이 있음

□ 연구개발(R&D) 지원

○ 파주시는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지식재산 지원이 결합된 기술혁신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기술닥터,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기술혁신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음

□ 복지 지원

○ 파주시는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 기반 지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작업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지원,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이 병행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짐

- 동시에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 대표 사례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LH 중소기업 기숙사 기관공급 사업이 있음

□ 행정 편의 지원

○ 파주시는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SOS 지원체계와 각종 기업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지원체계는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함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표 사례로는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이 있음

그림 4-6 | 파주시 지원시책



〈자료〉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8. 고양시 외부 사례 분석 종합 시사점

□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종합 시사점

○ **수도권 특례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사업 공간, 조세, 인건비, 금융, 연구개발(R&D), 복지, 행정 지원 등 공통적인 정책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방식과 중점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남

○ **고양시는 정주환경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집적 및 입지 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 정책을 통해 기업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 집적을 통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함

○ **수원시는 산업단지와 창업지원 인프라가 결합된 균형형 기업지원 구조를 보임**

-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지 결합형 지원 구조를 보임**

-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연계된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및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짐

○ **화성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집적과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 중심 지원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결합된 체계를 통해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수도권 특례시는 산업단지 및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금융 및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산업단지 조성 및 입지 기반 확충을 통해 기업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4-3 |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조세 혜택	보통	우수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우수	우수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우수
행정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자료〉 각 특례시 홈페이지, 저자 작성

□ 경의권 기업유치 지원정책 종합 시사점

○ **경의권에 속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세 지자체 모두 금융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분야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김포시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특례보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파주시는 수출지원과 기술혁신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물류비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시장 확대 정책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4-4 |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조세 혜택	보통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보통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행정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자료〉 각 시 홈페이지, 저자 작성

○ **종합적으로 볼 때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고도화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는 창업 및 금융지원 중심 정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 및 창업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 확충, 기술사업화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1. 개요

○ 산업클러스터는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① 발생 동인 ② 핵심 앵커 ③ 핵심 자원 ④ 진화 경로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되는 다수의 유형이 존재함

○ 따라서 '일반론적 클러스터 정책'은 효과가 낮으며, 형성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책 패키지(type-specific policy mix)'가 필요함

○ 원주 의료기기·파주 디스플레이·포항 팁스타운·서초 양재 AI 4대 사례를 형성 유형론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유형별 핵심 메커니즘과 정책 함의를 도출함

2. 클러스터 유형론의 학술적 기원

○ 산업클러스터 유형론은 집적의 발생 원인, 조직 구조, 네트워크 특성 및 진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음

○ Marshallian, Hub-and-Spoke, Satellite Platform 및 State-Anchored의 네 가지 유형을 통해 산업집적의 조직 구조를 설명함(Markusen, 1996)

○ 순수 집적(Pure Agglomeration), 산업 복합(Industrial Complex),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세 유형을 통해 기업 간 상호작용 방식을 설명함(Gordon & McCann, 2000)

○ 영토적 생산체계(Territorial Production System) 개념을 통해 거래적·비거래적 상호의존성이 클러스터 경쟁력의 핵심 요인임을 제시함(Storper, 1997)

○ 혁신적 환경(Innovative Milieu) 이론을 통해 집단 학습, 협력적 행동 및 지역 정체성이 혁신 창출의 기반임을 설명함(Maillat, 1995)

○ Brenner & Mühlig(2013)는 클러스터 형성 과정을 자생적(Spontaneous), 계획적(Planned), 하이브리드(Hybrid)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형성 경로와 정책적 함의를 비교함으로써 발생 메커니즘의 차이를 분석함

○ 본 절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한국형 산업클러스터 분석에 적합한 유형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3.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프레임워크

1) 분류의 4대 축

□ 발생 동인(Genesis)

○ 자생적(Spontaneous): 기업, 대학 및 지역 혁신주체의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됨

○ 계획적(Planned):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정책 개입을 통해 조성됨

○ 하이브리드(Hybrid): 자생적 집적 기반 위에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 발전함

□ 핵심 앵커(Anchor)

○ 대학 앵커형: 대학이 연구개발, 인재 양성 및 기술이전의 중심 기능을 수행함

○ 대기업 앵커형: 단일 대기업이 전후방 산업과 공급망을 주도하며 산업생태계를 형성함(Hub-and-Spoke)

○ 공공기관 앵커형: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국가 인프라가 혁신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 민간 자본 앵커형: 민간 대기업 또는 민간 투자자본이 산업 발전을 주도함

○ 다중 앵커형: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도시형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을 보임

□ 핵심 자원(Core Asset)

○ 지식·인적 자본: 대학,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창출함

○ 물적 자본: 산업단지, 생산설비 및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를 강화함

○ 제도적 자본: 규제특례, 세제지원 및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함

○ 평판·네트워크: 산학연 협력체계와 글로벌 연결성을 기반으로 지식 확산과 혁신을 촉진함

□ 진화 경로(Path)

○ 선형 진화: 단일 산업 내에서 출현, 성장 및 성숙 단계로 발전하는 경로를 의미함

○ 분기 진화: 기존 산업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는 경로를 의미함

○ 재생 진화: 산업의 성숙 이후 새로운 기술 및 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로를 의미함

○ 병합 진화: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경로를 의미함

○ 클러스터의 유형과 진화 경로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수단과 지원 방식이 상이하므로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유형 분류

○ 상기 4개 축을 결합하여 본 글은 한국형 클러스터 형성 4유형을 제시함

표 4-5 |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형 분류

유형	발생동인	핵심앵커	핵심자원	진화경로	사례
유형 1 자생적 대학 앵커형	자생적+점진적 정부 결합	대학+공공기관	지식·인적 자본	분기 진화	원주 의료기기
유형 2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계획적	대기업(외자)	물적 자본+제도적 자본	선형 진화	파주 디스플레이
유형 3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하이브리드	민간 대기업+공공 대학	물적+지식 자본	분기 진화	포항 팁스타운
유형 4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하이브리드	다중(대학·대기업·공공)	네트워크+제도적 자본	재생 진화	양재 AI/ICT

제3절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

1.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사례 (자생적 대학 앵커형)

1) 경과

(1) 태동기

□ 100년 이상 축적된 임상 인프라와 국내 최초의 의공학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의료와 공학의 융합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

○ 1913년 강원 남부권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서미감병원(The Swedish Methodist Hospital)이 개원하면서 원주 지역 의료서비스의 기반이 형성되었음

○ 1959년 원주연합기독병원으로 재개원한 이후 1976년 연세대학교 재단에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1,000여 병상을 갖춘 강원권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의료기술 실증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73년 '원주기독병원'으로 개칭 후 1976년 연세대학교 재단과 합병. 1977년 설치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가 1982년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1983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으로 전환. 1,000개 병상을 갖춘 강원 내륙 최대의 대학병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1)]

○ 1979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舊 원주캠퍼스)에 의공학과(Division of Biomedical Engineering)를 설립함

○ 의공학은 의학·공학·이학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으로, 질병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학문임

○ 연세대학교 의공학부는 의공학전공과 바이오공학전공 투트랙(two-track)으로 구성되며, 1979년 선제적으로 관련 학부를 설립한 이래 국내외 의공학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2)]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6583) (검색일 : 2026년 3월 20일)

2)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홈페이지 (https://bme.yonsei.ac.kr/ymbme/intro/greetings.do) (검색일 : 2026년 3월 20일)

(2) 형성기

□ 원주시는 기존의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 1997년 원주시와 연세대학교는 공동으로 통상산업부가 주관한 '지역산업 육성사업(테크노파크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원주 지역에 의료기기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신 바 있음(한국개발연구원, 2021a)

○ 하지만 원주시와 연세대학교는 의료기기산업 특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1998년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흥업면 보건소의 유휴 공간 열 칸을 개조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함

표 4-6 | 관련 기사 '원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활발'

"강원도 원주시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 한상철 원주시장은 8월초 산업자원부를 방문, 의료전자기기 단지 조성에 관한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고 최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24일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방향 ▲'1실험실 1창업 운동'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지역에 있는 13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10일 산.학.연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교류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시는 6월 흥업면에 창업보육센터를 열어 13개 입주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문화일보(1998.09.13) 원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활발.

○ 창업보육센터 개소 이후 입주기업이 대학의 R&D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2001년 5월 원주시는 문막읍 동화리 일대에 10만 평 규모의 의료기기 전용 산업단지(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2004년 10월 준공) 조성을 계획하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외형을 갖추고자 하였음

□ 중앙정부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대한 원주시와 지역대학인 연세대학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이후 본격적으로 금전적·제도적 지원 시작

○ 1999년 연세대학교는 과학기술부의 우수 지방대학 연구활성화 목적 사업인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RRC)사업"에 선정되었고(1999.6.~2013.2.),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에도 선정되면서(1999.12.~2009. 6.), 대학 부설 연구소인 의공학연구소가 "의료전자기기연구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TIC)"로 지정됨

○ 2000년 말 중소기업청은 원주시 흥업 및 태장 일대와 연세대학교 캠퍼스 일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함

(3) 도약기

□ 2003년 11월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現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Wonju Medical Industry Institute of Technology, WMIT)”가 설립됨으로써, 원주시는 기존의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 중심의 의료기기산업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 마련

○ 원주시는 2002년 5월 산업자원부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전체예산 265.5억, 국비 167.2억, 지방비 76억, 연세대 20억, 주관기관 2.3억)”을 통해 ▲의료기기벤처타워 건축, ▲임대공장 증축, ▲연세대학교 의공학연구소에 의료공학교육센터 구축,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등을 추진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는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체 출연기관임

○ 설립 당시 원주시와 강원도,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였으나, 2024년 말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주시가 각각 51.34%와 48.66%의 출연지분 보유(원주시, 2025)

○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초기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주의료기기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의 형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음(이우천·윤형로, 2007)

□ 2004년 원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전국 7대 혁신 클러스터 시범단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

○ 참여정부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 기지에서 R&D 중심의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군산과 더불어 '원주'를 전국 7대 시범 혁신클러스터(의료기기 특화)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함

○ 또한 원주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옥외광고·외국인유치 등에 관한 규제 혜택을 받게 되었음

□ 2005년 5월 “원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 결성되고, 같은 해 6월부터 “원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원주시 의료기기산업은 단순한 지역 특화 산업을 넘어 국가의 첨단 전략산업을 견인하는 위치로 부상

○ 원주시는 2004년, 2005년 지역산업진흥사업평가 및 2006년 지역특화발전특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음

□ 2008년에서 2010년 초반까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 4+9)〉이라는 이중 구조 하에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기초지자체 단위 클러스터를 넘어 강원광역경제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공식 편입

○ 전자의료기기산업이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프로젝트로 채택되면서, 원주 중심의 홍천·횡성 의료기기 산업벨트 구축이 광역 정책 과제로 설정되었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허브로 하여 R&D 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기업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음

○ 다만 당시에도 기업 규모의 영세성, R&D 역량의 미흡,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잔존하였으며, 원활한 선순환 체계의 구축은 2013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DCC)의 준공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음

□ 2013년 원주에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의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edical Device Complex Center, MDCC)”가 완공됨으로써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하드웨어 인프라' 완성

○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DCC)의 설립으로 이전까지 원주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의료기기산업 유관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이 하나로 통합됨

- 단일 콤플렉스 내에 R&D 컨설팅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임대형 생산 공장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해짐
- 특히 국내 최초로 대규모 의료기기 전용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해외 바이어들이 제품을 직접 보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의 거점이 됨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 본부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DCC)로 이전을 완료하여, 원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한 단계 더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음

(4) 성숙기

□ 2019년 7월 강원도 원주·춘천 일대 약 80만㎡ 규모의 지역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발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최초 지정 규제자유특구 중 하나로 2019년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총 2년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차례의 실증특례 연장 기간을 거쳐 총 6년(2019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간 적용되었음

○ 강원도가 특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산간 격오지, 높은 노령인구, 군부대 밀집 등 지리적·사회적 특수성과 함께 바이오·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지역산업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하드웨어 중심의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으로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원주가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대한민국 「의료법」 제34조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엄격히

금지해 왔음. 이 때문에 뛰어난 웨어러블 기기나 헬스케어 앱을 개발해도 국내에서는 테스트조차 불가능했음.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유예될 수 있었음. 예컨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집에서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생체 데이터(심전도, 혈당 등)를 병원으로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진단 및 처방 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실증 테스트'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음

-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혜택을 입은 대표적 사례로 △㈜메쥬(MEZOO)의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하이카디', △㈜휴레이포지티브(Hurayposition)의 모바일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휴레이포지티브', △㈜바이오닉스(Bionics)의 만성질환 재택 모니터링 실증사업, △㈜오톰(OTOM)의 포터블 엑스레이, △㈜리얼타임메디체크(Real Time MediCheck)의 AI기반 백신 수요 예측 시스템 등이 있음

□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약 16,875㎢)이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테크노파크,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담당기관으로 참여

○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4년(최대 6년)간 운영 예정인 특구로서 총사업비 126억 원(국비 78억 원 포함)이 투입되고 법령상 금지된 사항 외의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이 적용된 규제샌드박스임(강원연구원, 2024)

- 혁신특구 내에서는 '분산형 자택 임상(DCT), 허가 의약품 배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그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에 막혀 시행되지 못하던 각종 헬스케어 관련 파급력이 큰 혁신 사례들이 전격 허용되었음
- 혁신특구 지정의 주요 목표는 '△AI 헬스케어 R&D,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생태계 조성, △제품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임.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수출 22억 9천만 달러, 신규 고용 1,400명, 기업 100개 유치, 딥테크 유니콘 기업 1개 이상 신규 육성을 목표로 함
- 현재 ㈜더존비즈온, ㈜대양의료기, ㈜메디데이터, 강원대 산학협력단 등 120개 기업 및 기관이 함께 AI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음

○ 특히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130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이 밀집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동화산업단지 등)를 보유하고 있어,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내 의료기기산업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 성과

□ 원주시는 약 30년간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직·간접적 노력을 기울이며 의료기기산업의 혁신과 육성에 매진해왔음. 이러한 원주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검토의 필요성 대두[3)]

○ 원주시는 최근 3년간 수출액과 고용인원수 측면에서 전국 및 강원도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기 산업이 매출과 수출에서 두 자릿수의 역성장(-14.79%, -18.31%)을 기록한 것과 달리, 원주시는 매출(2.32%), 수출(1.70%), 고용(12.05%) 등 모든 지표에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수출과 고용에서 전국 및 도내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음

표 4-7 | 최근 3년간 전국/강원도/원주시 소재 의료기기 기업의 재무적 성장

	소재지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CAGR)
기업체수(개)	전국	4,176	4,223	4,346	2.02
	강원도	180	182	188	2.20
	원주시	**127**	**127**	**132**	**1.95**
매출액(백만원)	전국	15,737,442	11,314,751	11,426,706	-14.79
	강원도	977,910	1,012,188	1,065,716	4.39
	원주시	**337,201**	**343,266**	**353,022**	**2.32**
수출액(만불)	전국	787,533	518,378	525,511	-18.31
	강원도	78,688	69,413	74,720	-2.55
	원주시	**20,993**	**20,403**	**21,712**	**1.70**
고용인원수(명)	전국	89,333	89,487	91,801	1.37
	강원도	7,138	6,737	7,493	2.46
	원주시	**2,907**	**3,061**	**3,650**	**12.05**

〈자료〉 원주시(2025). 「2025년도(2024년 실적)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참조

3) 특구의 정확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준실험설계 등 정밀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추정이 필요함(중소기업연구원, 2015)

2) 시사점

□ 원주의료기기 산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기반이 태동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적·정책적 협력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음(이우천·윤형로, 2007)

○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최초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만든 자생적 산업 집적단지가 모범적 클러스터로 자리잡은 매우 특수한 사례임

- 지역 기반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혁신지향적 중소·중견기업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참여 주체 모두에게 상호 이익(win-win)을 제공할 수 있는 '산학협력'이 유용하다고 평가되는바(중소기업연구원, 2006),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지역 대학 중심의 기술 혁신과 기초지자체의 공간적 연계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가 창발한 지역 주도형 혁신 거버넌스의 표본임

○ 한편, 지역 전문가·민간·지자체가 거버넌스의 실질 주체로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직접 반영한 상향식 자율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고양시가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롤모델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산업단지 조성이 일반적인 반면 스페인·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학 또는 민간기업이 산업집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상향식 모델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경기연구원, 2024)

□ 원주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형성 초기에는 클러스터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지원기관, 지역 대학, 정부, 전·후방산업체, 금융기관, 해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이우천·유왕근, 2007)

○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컨트롤타워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을 고도화하여 자족적 산업 콤플렉스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의료기기산업의 전국적인 역성장 기조 속에서도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는 고용과 수출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함

□ 고양시에 위치한 주요 대학으로는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중부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3곳이 있으며 상기 3개 대학은 특화 산업으로 각각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우주항공 모빌리티 분야'가 대표분야

□ 먼저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에서 이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 대전, 인천, 경기(시흥),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이 지정되어 대규모 국비를 선점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된 상태임

- 더욱이 오송, 원주, 송도 등 기존 선도 거점들이 장기간의 예산 투입을 통해 이미 확고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대학과 병원을 연계한 '산학연병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방식 역시 서울대(시흥), 연세대(송도) 등 타 지자체에서 범용적으로 추진 가능한 모델임

○ 따라서 고양시가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단순 집적 전략을 내세울 경우, 중앙정부 정책 유치 및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다음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을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역시 전국 지자체의 선점 경쟁이 포화 상태에 진입

○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세종, 대구, 경기를 비롯해 전국 수십 개 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범용적인 실증 인프라로 자리잡았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광주(자율주행 부품)와 대구(전기차 모터)가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핵심 거점을 선점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등이 지정되어 관련 선행 예산과 실증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상황임

○ 따라서 고양시가 중부대학교의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전기차·자율주행 중심)를 내세우는 전략을 취할 경우, 이미 막대한 국비 투입과 확고한 완성차 및 부품 생태계를 구축한 선도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차별적 경쟁력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분야' 역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거점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어 신규 지자체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태

○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을 공식 지정하고 2030년까지 약 3,800억 원의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며 국가적 밸류체인을 형성시켰음

○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또한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을 통해 전남 고흥(1단계 개활지)을 거쳐 수도권으로 넘어온 상황으로, 고양시가 킨텍스~김포공항 구간 실증 노선을 확보하고 최근 킨텍스 인근 버티포트(이착륙장) 조성을 추진 중이긴 하나(2026년 기준), 인천 및 서울 등 인접 거대 지자체들과의 인프라 주도권 경쟁이 극심

□ 이러한 한계 속에서 고양시는 킨텍스의 도심 실증 이점과 한국항공대학교의 특화 역량을 십분 결합한 '저궤도 위성 기반 AI 관제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로 특화하는 초니치(Ultra-Niche) 전략을 고려

○ 무엇보다 고양시로의 기업유치와 산업집적을 견인할 핵심 동력은 고양시의 강한 정책 의지와 일관된 실행력임 (경기연구원, 2020)

2. Cambridge 클러스터 사례 (자생적 대학 앵커형)

1) 경과

(1) 태동기

□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1209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설립 이후 약 700년에 걸쳐 축적된 학문적 권위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대학 앵커형 클러스터

○ 케임브리지대학교는 오랜 기간 기초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학문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인해 산업과의 직접적 연계를 제한하였음

○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까지 케임브리지 지역의 과학기반 산업 활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음

○ 1953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캐번디시 연구소(Cavendish Laboratory)의 Francis Crick과 James Watson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하는 등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 및 기술사업화는 미흡한 수준이었음

(2) 형성기

□ 1969년 대학의 산업 연계 정책 전환은 케임브리지 클러스터 형성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됨

○ 케임브리지대학교는 「Mott Report」를 통해 기존의 산업 분리주의 입장을 폐기하고 대학의 토지·인력·연구역량을 과학기반 산업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1970년 Trinity College는 자체 보유 부지에 영국 최초의 사이언스파크인 Cambridge Science Park를 조성하여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Cambridge Science Park는 정부 보조금보다 College 자체 자본과 자율적 운영방식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음

○ 해당 모델은 이후 영국 전역의 사이언스파크 조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인 대학 주도 혁신단지 모델로 확산되었음

○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연구역량, 우수 인재 및 College의 토지·자본 공급이 결합되면서 스핀오프(spin-out) 기반의 창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3) 도약기

□ 1980년대 이후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대학 스핀오프 기업의 연속적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적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음

○ 1979년 설립된 Acorn Computers와 이를 모태로 1990년 출범한 ARM Holdings는 케임브리지 스핀오프 모델의 대표 성공사례로 평가됨

○ ARM은 반도체 설계(IP) 라이선싱 중심의 팹리스(fabless) 모델을 구축하며 글로벌 모바일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 Autonomy, Cambridge Silicon Radio(CSR), Solexa 등 세계적 기술기업이 연이어 배출되며 ICT·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산업 집적이 가속화되었음

○ 1987년 St John's College는 St John's Innovation Centre(SJIC)를 설립하여 영국 최초의 본격적 대학 연계 창업보육시설을 구축하였음

○ SJIC는 이후 영국 대학 인큐베이터의 표준모델로 확산되며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4) 성숙기

□ 2010년대 이후 케임브리지는 ICT 중심 클러스터에서 생명과학·인공지능·첨단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발전

○ 2014년 Cambridge Biomedical Campus 확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ICT 중심 구조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가 추가되었음

○ 2016년 글로벌 제약기업 AstraZeneca가 약 5억 파운드 규모의 글로벌 연구개발 본부를 이전하며 생명과학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음

○ Microsoft Research Cambridge, Apple AI Research, Amazon Development Centre, Samsung AI Research Cambridge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이 지속적으로 집적되었음

○ 케임브리지는 대학 기반 스핀오프 중심 생태계에서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이 결합된 복합 혁신클러스터로 진화하였음

○ Cambridge Innovation Capital(CIC) 및 Amadeus Capital Partners 등 벤처투자 펀드가 조성되면서 연구개발, 창업, 투자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완성되었음

(5) 성과

□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며 연구개발, 창업, 투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가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

○ 2023년 기준 약 5,300개의 기술기업과 약 67,000명의 종사자가 집적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내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약 1조 파운드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 대학 스핀오프(spin-out) 기업은 누적 600여 개에 달하며, ARM 등 24개의 유니콘 및 대형 기술기업을 배출하였음

○ Microsoft, Apple, Amazon, Samsung, AstraZeneca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되며 ICT·AI·바이오를 포괄하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음

○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이 영국 평균의 약 4배, 1인당 GVA는 영국 평균의 약 1.8배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본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성과는 60년 이상 축적된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의 결과로,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장기 발전 모델이라는 특징을 가짐

2) 시사점

□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대학과 College의 자율적 혁신역량이 장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대표적인 자생적 대학 앵커형(University-Anchored) 클러스터로, 국내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가장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이는 사례

○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나 대규모 재정지원보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혁신활동이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중심 앵커 역할을 수행하였음

○ 두 사례 모두 대학을 단일 핵심 앵커로 하여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중앙정부 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보임

○ 노동시장 풀링(labor market pooling), 지식 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 전문 공급자 집적 등 Marshallian 외부경제가 클러스터 성장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음

□ 케임브리지 사례는 대학 중심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연구역량 자체보다 연구-창업-투자-성장이 연결되는 혁신생태계의 완결성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줌

○ Cambridge Science Park, St John's Innovation Centre, Cambridge Innovation Capital 등 연구개발, 창업보육 및 벤처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

○ ARM, Autonomy 등 세계적 기술기업의 배출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가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

○ 대학 스핀오프, 창업보육, 벤처투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가 결합된 혁신생태계 구축이 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고양시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자생적 대학 앵커형 모델의 직접 모방보다 도시형 다중 앵커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점

○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와 한국항공대학교 등 지역 대학 자원만으로 케임브리지대학교 수준의 연구집적과 스핀오프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고양시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산업단지 및 도시 인프라를 결합하는 다중 앵커형(Multi-Anchor) 발전전략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산업·연구·창업 기능이 결합된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기반 스핀오프, 기술사업화, 창업보육 및 인큐베이션 기능은 장기적으로 육성하되 이를 보조적 성장축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고양시는 유형 4(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를 기본 모델로 설정하고, 유형 1(자생적 대학 앵커형)의 핵심 요소인 대학 창업과 혁신자본 축적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접목하는 복합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사례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1) 경과

(1) 클러스터 관련 투자합의서(MOA) 체결 이전

□ 1999년 9월 TFT-LCD 세계 1위 기업인 LG.Philips LCD 출범

○ 1999년 1월 LG전자와 LG반도체의 LCD 부문 통합으로 국내 최초의 LCD 전문기업 LG LCD(주)가 탄생함

○ 1999년 9월 LG LCD(주)는 16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 완료 후 지분 50%를 필립스에 매각함으로써 합작법인 LG.Philips LCD를 출범시킴

□ 2002년 LG.Philips LCD가 차세대(7세대) 대규모 투자를 기획할 당시, 기존 주력 생산 기지였던 경북 구미를 비롯해 수도권 내 여러 후보지와 중국, 대만 등 해외 지역까지 다양한 부지 물색

○ 디스플레이 산업은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 산업이자 미세한 수율(Yield) 차이로 조 단위의 적자와 흑자가 갈리는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이므로, 핵심 R&D 엔지니어 인력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함

○ LCD 패널은 부피가 크고 충격에 민감하여 수출 시 선박 운송뿐 아니라 대규모 항공 운송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는 바, 수출 물류비용과 운송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중요성이 큼

○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파격적인 부지 제공을 약속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으나, LG.Philips LCD는 석·박사급 최상위 엔지니어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겪고 있었고, 구미 지역은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 클러스터를 수용할 단일 평탄 부지의 부재 및 글로벌 물류(항공) 접근성의 한계 등이 뚜렷하였음

○ 경기도는 LG.Philips LCD의 신규 부지 투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각종 법령 및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음

-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 신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신설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의 법률적 장벽이 매우 컸고, 경기 북부의 경우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고도 제한 및 개발 통제라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으며, 구미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정치적 반발까지 겹치며 법률적·공간적·정치적 삼중고에 직면

□ 당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면서까지 첨단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도지사 손학규)와 협력하여 수도권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 2003년 2월 LG.Philips LCD와 경기도는 파주에 LCD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파주 산업단지 현장에서 군단장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작전성 회의가 열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대체 군사 시설물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을 허용함

○ 2003년 7월 경기도와 파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군사시설 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파주가 LCD 특화 산업단지로 공식 지정됨

(2) 클러스터 관련 투자합의서(MOA) 체결 이후

□ 2003년 12월 LG.Philips LCD는 경기도(도지사 손학규) 및 파주시(시장 이준원)와 함께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합의서(MOA) 공식 체결

○ LG.Philips LCD의 차세대 생산 시설과 R&D 센터가 들어설 50만 평 외에, 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탄생시키고자 하였음

○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한 '국가 LCD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과제인 '접경지 경제 활성화 및 안보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 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되었음

표 4-8 | 관련 기사 'LG. Philips LCD 파주 공장 준공'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의 기반 위에 개별 기업 성장의 차원을 넘어서 상생 경영과 대규모 고용 창출, 외국인 직접 투자 유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과정에서 정부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 부처와 경기도, 파주시 등 15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투자의향서를 체결('03. 2月)한지 불과 13개월 만에 산업부지 착공('04. 3月)을 가능케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확보와 묘지 이장을 위해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섰고,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폐수 종말 처리장,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자유로와 LG로의 확대 개통을 추진하는 등 원스톱(One Stop)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실현했다.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정부의 혁신적인 투자 유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자료〉 LG디스플레이(2006). "[보도자료]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LG.Philips LCD 파주 공장 준공(2006.04.27.)"

□ 2006년 4월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준공(투자규모 약 5.3조원) 이후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클러스터 관련 누적 투자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LG디스플레이, 2026)

2) 시사점

□ 파주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존임지, 문화재, 묘지, 송전선 등 사실상 거의 모든 형태의 규제와 갈등이 집결된 입지였음에도, 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낸 매우 특수한 사례

□ 이러한 성공적 유치의 배경이 (1)국가전략사업과의 연동, (2)광역자치단체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고양시 역시 단독으로 수많은 규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나, 상위 정부를 향한 설득과 협력을 통해 원팀(one-team)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이 유효

○ 현재 고양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 구조를 탈피하고자 직주근접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지역적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이는 수도권 내 타 지자체(성남, 용인, 화성 등)들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보편적 논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뚜렷함

○ 따라서 고양시가 유치하려는 산업클러스터는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함

○ 예컨대, 고양시는 국가 전략사업인 K-콘텐츠산업의 전진기지로 포지셔닝하고, 넷플릭스·디즈니 등 해외 초대형 OTT 기업의 해외 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글로벌 OTT 및 콘텐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획부터 제작, 유통, 소비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메가 콘텐츠 클러스터가 필수적
- 고양시는 상암의 방송 인프라, 마곡의 R&D 역량, 글로벌 관문인 인천공항을 잇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에 있어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가장 적합한 입지임
- 따라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등의 K-컬처 거점 조성 사업을 단순한 지역 테마파크 개발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1위의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생산 기지'로 그 위상과 당위성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는 작업이 요구됨

4. 신주과학공업원구 사례(국가전략 거점기업형)

1) 경과

(1) 태동기

□ 신주과학공업원구(Hsinchu Science Park)는 대만 정부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정책에서 출발

○ 1973년 대만 행정원은 공업기술연구원(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을 설립하여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1976년 미국 RCA로부터 CMOS 반도체 기술을 이전받아 대만 자체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였음

○ ITRI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던 대만계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첨단기술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풀을 형성하였음

○ 대만 정부는 1970년대부터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경제구조를 자본·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였음

○ 기술이전, 연구개발 역량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결합한 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였음

(2) 형성기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정부 주도의 계획적 산업클러스터 조성전략에 따라 구축된 대표적인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클러스터

○ 1979년 대만 행정원은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스탠퍼드 리서치 파크와 일본 쓰쿠바 과학도시를 벤치마킹한 대규모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음

○ 부지 조성, 조세 인센티브,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유치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음

○ 1980년 신주시에 신주과학공업원구를 공식 개원하고 국가과학위원회(현 국가과학및기술위원회) 산하 관리국(Hsinchu Science Park Bureau)을 설치하여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음

○ 초기 인력은 ITRI 출신 엔지니어와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한 대만계 기술인력이 중심이 되어 산업생태계 형성의 기반을 제공하였음

○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00개 기업이 입주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음

(3) 도약기

□ TSMC 설립과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은 신주과학공업원구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음

○ 1987년 모리스 창(Morris Chang)의 주도로 TSMC가 설립되며 세계 최초의 순수 파운드리(Pure-Play Foundry) 모델이 구축되었음

○ 행정원 발전기금과 네덜란드 필립스의 공동 출자를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기업이 형성되었음

○ TSMC는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정립하며 글로벌 팹리스(Fabless) 산업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였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UMC, MediaTek 등 핵심 기업이 성장하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결합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었음

○ 단일 거점기업 중심 구조에서 복수 거점기업이 상호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 구조로 발전하였음

(4) 성숙기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이 집적된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하였음

○ TSMC, UMC, MediaTek, ASE, AU Optronics 등 반도체 설계·생산·패키징·테스트·디스플레이 기업이 집적되면서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였음

○ 2000년대 이후 반도체 가치사슬 전 과정이 단일 클러스터 내에 집적되면서 강력한 집적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음

○ 타이난 및 타이중 사이언스파크가 추가 조성되면서 신주-타이중-타이난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회랑(Semiconductor Corridor)이 구축되었음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단일 산업단지를 넘어 대만 반도체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음

(5) 성과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전략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하며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2023년 기준 약 620개 기업과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된 세계적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였음

○ 연간 매출은 약 1.3조 대만달러에 달하며 대만 첨단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TSMC는 시가총액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며 대만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았음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대만 GDP의 약 6%,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약 6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관리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와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됨

2) 시사점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국가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클러스터로, 국내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가장 유사한 사례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관리국을 중심으로 장기 토지임대, 조세감면, 연구개발 지원, 전력·용수 공급 및 기술이전이 결합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대규모 장기투자를 유도하였음

○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역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를 극복하고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적 정책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두 사례 모두 국가 또는 광역정부가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임

○ TSMC와 LG디스플레이라는 단일 거점기업(anchor firm)을 중심으로 협력기업이 집적되는 Hub-and-Spoke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산업생태계의 조직 원리가 유사함

○ 거점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서비스 기업이 동심원 형태로 집적되며 강한 집적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음

□ 신주과학공업원구는 거버넌스와 혁신기반 측면에서 파주 클러스터보다 더욱 체계적인 국가전략 모델을 구축하였음

○ 신주는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관리국을 중심으로 단일 창구(one-stop) 방식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반면 파주는 중앙정부, 경기도, 산업통상부, LH 및 기초자치단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신주는 클러스터 조성 이전부터 ITR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 반면, 파주는 LG디스플레이 자체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신주는 1980년 이후 약 45년간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산업 축적이 이루어진 반면, 파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아직 집적효과가 누적되는 단계에 있음

□ 신주 사례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정책 일관성과 제도적 신뢰성이 중요함을 시사

○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세제지원보다 장기간 유지되는 정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의해 결정됨

○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인재, 인프라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패키지형 정책 접근이 중요함

□ 고양시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신주형 국가전략 거점기업 모델의 직접 모방보다 상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전략사업 연계가 현실적이라는 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고양시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보유하고 있음

○ 단일 대기업에 대한 장기 토지공급, 대규모 조세감면 및 전략산업 특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 역시 제한적임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 차원의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신주 또는 파주와 같은 대규모 제조업 클러스터 유치 가능성은 제한적임

○ 따라서 고양시는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된 사업 논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자산업, AI, UAM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지원 패키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파주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보다 국가전략사업과 연계된 광역 차원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고양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5. 포항시 팁스(TIPS) 타운 사례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1) 현황

(1)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타운

□ 2013년 시작된 팁스(TIPS)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및 정책 결정을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실무 운영 및 지원금 집행 관리를 전담하며, 정부가 지정한 벤처캐피털(VC)과 엔젤투자자 등의 민간기관이 '팁스 운영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및 밀착 멘토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초기 자금 지원 이상의 운영사 노하우 전수와 후속 투자 유치 연계 등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공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

□ 팁스(TIPS) 타운은 TIPS에 참여하는 운영사, 창업기업, 유관기관 등이 상주하는 공간이자 TIPS에 선정된 기업을 보육하기 위한 전용 창업보육센터(BI)

○ 2026년 3월 현재 팁스타운은 서울·대전·포항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투자·R&D·멘토링·네트워킹·글로벌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표 4-9 | 서울, 대전, 포항 팁스(TIPS) 타운 특징 비교

구분	서울 팁스타운[4]	대전 팁스타운	포항 팁스타운
위치	강남구 역삼동 (S1~S4, S5)	유성구 충남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	POSTECH 캠퍼스 내 체인지업그라운드 6층
개소연도	2015년	2021년 5월	2023년 6월
설립비용	전액 국비	국비+지방비 매칭	포스코 (830억원)
운영방식	민관협력형 (공공 중심)	공공주도 (창업진흥원 직접 운영)	민관협력형 (민간 중심)
운영주체	창업진흥원 + 엔젤투자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포스코
규모	1.2만㎡ 이상	3,873㎡	4,037㎡
입주기업수	수백 개	30여 개	40여 개
주요 특징	수도권 창업의 핵심 허브 데모데이·IR·네트워킹 집중	연구특구(대덕) 연계 기술기업 중심 지원	비수도권 최초의 민관협력형 보육센터

〈자료〉 저자 작성

4) 서울 팁스타운 중 가장 나중에 설립된 S6은 포스코와 중기부가 함께 조성한 민간 중심 민관협력형 보육공간

○ **서울 팁스타운은 공공 중심의 민관협력형, 대전 팁스타운은 공공주도형, 포항 팁스타운은 민간 중심의 민관협력형 모델을 취하고 있음**

- 서울 팁스타운은 압도적 규모의 입주기업 수를 자랑하며 벤처캐피털(VC)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에 특화된 창업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임
- 대전 팁스타운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기술집약적 기업 R&D 육성에 강점을 보이며, 포항 팁스타운은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보육센터 모델로서 상징성이 큼

(2) 포항 팁스타운

□ 포항 팁스타운은 철강전문기업 포스코(POSCO)가 운영하는 체인지업그라운드 6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철강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경제도시로 도약하려는 포항시와 포스코(POSCO)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탄생

○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2025년 말 현재 입주사 기업가치 약 2.3조원 규모, 1,9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CES 수상기업 배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내 팁스타운에 입주한 기업의 성과는 타운 설립 이후 시간이 그다지 많이 경과하지 않아 별도 확인이 어려우나, 입주기업들 역시 추후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입주한 타 기업의 평균적인 성과와 유사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포항 팁스타운은 서울 및 대전 팁스타운과 달리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자본으로 공간을 먼저 조성한 후 정부 제도를 안착시킨 창업보육센터(BI)

○ 서울 팁스타운은 전액 국비, 대전 팁스타운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건립된 것과 달리, 포항 팁스타운은 민간기업인 포스코(POSCO)가 약 830억원 전액을 투입하여 건립함

□ 포항 팁스타운 입주기업은 포스텍(POSTECH)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기존에 포스코(POSCO)가 보유하고 있는 산·학·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및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에 비해 큰 장점을 보유

○ 특히 POSTECH·RIST가 보유한 방사광가속기라는 인프라의 성격상 소재·신에너지·바이오·첨단제조 분야 기업이 해당 인프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해당 업종의 기업이 집적되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주업종으로 하는 입주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서울 및 대전 팁스타운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고 있음

□ 포항 팁스타운을 품고 있는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역 스타트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를 넘어, 수도권 및 타 지자체의 유망 벤처기업이 포항으로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기업 역이동'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

○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개관 이후 약 3년 만에 수도권 등에 소재하던 36개 이상의 기업이 포항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 및 신설함

- '기업 역이동'의 대표적 사례인 딥테크 기업 ㈜그래핀스퀘어는 2021년에 본사를 경기도 수원에서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로 이전하고, 포항 산업단지에 대규모 양산 공장까지 착공하며 지역 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보여준 바 있음

○ 포항 팁스타운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가 보유한 민간 자본 및 비즈니스 연계 환경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형태의 역이동 성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사점

□ 고양시는 "성사 창조혁신캠퍼스", "백석 업무빌딩" 등 기업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하고자 고심을 거듭 중

○ 2025년 10월 성사 창조혁신캠퍼스에 '경기북부 AI캠퍼스(전문 인재 양성·취창업 지원)'와 '경기 SW미래채움 북부센터(초·중·고 및 시민 대상 기초 교육·체험)'가 동시 입주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AI·SW를 접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가 전문 교육을 거쳐 지역 내 기업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체험-취창업' 순환 구조가 구축되었으나(고양신문, 2025),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고양시 기업지원 공간에 대한 고도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포항 팁스타운 사례에서 나타난 (1) 상주 액셀러레이터의 중요성, (2) 기보유 인프라와의 정합성 관점을 적용 가능

○ (1) 포항 팁스타운에서는 '포스텍홀딩스(POSTECH Holdings)'라는 역량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같은 층에 상주하여 입주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후속 투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방향은 입주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 포항 팁스타운이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한 결정적 요인은 단순히 쾌적한 보육 공간을 제공한 것을 넘어, 포스코(POSCO)가 기존에 축적해 둔 막강한 산·학·연 인프라를 입주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데 있음.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타 지역 팁스타운과 달리, 포항이 철강·소재·에너지 등 연구장비와 실증이 필수적인 '딥테크' 기술 창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역의 기보유 인프라와 입주기업의 수요를 정합시킨 '선택과 집중'의 결과임

- 고양시 역시 "성사 창조혁신캠퍼스"와 "백석 업무빌딩"을 범용적인 오피스 임대 공간으로 소비하는 대신, 각 거점이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유치할 특화 인프라와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군을 타기팅해야 함

- [성사 창조혁신캠퍼스 : AI·SW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 연계] '경기북부 AI캠퍼스'와 '경기 SW미래채움 북부센터'를 단순 교육 시설로 국한하지 않고, 이곳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력이 캠퍼스 내 입주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으로 즉시 수급되는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바

람직함. 이를 통해 공간 내에서 '교육-체험-취창업'이 완결되는 SW 및 데이터 기반 혁신 벤처 특화 거점으로 고도화할 수 있음

- [백석 업무빌딩 : 산학융합 기반의 R&D 딥테크 클러스터] 백석 업무빌딩을 '우주항공, 드론, 첨단 모빌리티' 등 고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업들의 집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학 부속기관과 입주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는 '특화 기술 기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포지셔닝할 필요성이 큼

6. Pittsburgh 클러스터 사례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1) 경과

(1) 태동기

□ 피츠버그는 19세기 후반 철강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철강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 거대자본이 향후 산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교육·문화·연구 인프라를 구축

○ 1875년 앤드루 카네기가 에드거 톰슨 제강소를 설립한 이후 카네기철강이 성장하며 피츠버그는 미국 철강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음

○ 1901년 카네기철강이 US Steel로 통합되면서 피츠버그는 세계 최대 철강산업 집적지로 자리매김하였음

○ 카네기는 철강산업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교육·문화·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음

○ 카네기기술학교(현 Carnegie Mellon University), 카네기도서관, 카네기뮤지엄 등 핵심 공공 인프라가 이 시기에 조성되었음

○ 이는 민간 거대자본이 대학·문화·연구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2) 형성기

□ 피츠버그는 산업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산업구조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방정부 및 주정부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1948년부터 「Pittsburgh Renaissance」 프로젝트를 통해 공기질 개선, 하천 정비 및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였음

○ 민간 협의체, 시 정부 및 주 정부가 참여하는 3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음

- ○ 1967년 카네기기술학교와 멜런산업연구소가 통합되어 Carnegie Mellon University(CMU)가 출범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음
- ○ 민간자본과 대학, 지방정부가 결합된 혁신생태계의 기반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음

(3) 위기기

- □ 1970~1980년대 글로벌 철강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피츠버그는 급격한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음
  - ○ 일본·한국 등 신흥 철강국의 성장과 미국 제조업 쇠퇴로 철강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
  - ○ 철강산업 종사자는 1979년 약 9만 명에서 1990년 약 8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 도시 인구 역시 1950년 약 68만 명에서 1990년 약 3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 그러나 CMU, 피츠버그대학교, UPMC 등 기존에 축적된 교육·연구·의료 인프라가 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였음
  - ○ 이는 다른 러스트벨트 도시와 차별화되는 피츠버그의 구조적 강점으로 작용하였음

(4) 도약기·전환기

- □ 피츠버그는 대학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AI 및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신산업 전환을 추진하였음
  - ○ 1979년 CMU 로보틱스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자율주행 및 로봇산업 연구의 세계적 거점으로 성장하였음
  - ○ 1980년대 이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선도하였음
  - ○ 1990년대 이후 CMU를 중심으로 IT·AI 스타트업이 집적되며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 시 정부는 Pittsburgh Technology Council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음
  - ○ Uber, Aurora, Argo AI, Duolingo 등 글로벌 기술기업이 피츠버그에 입지하며 산업 전환이 본격화되었음

(5) 성숙기

□ 피츠버그는 AI·로보틱스·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다축 산업구조를 구축하며 신경제 도시로 전환하였음

○ UPMC는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2023년 기준 약 9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지역 최대 고용기관으로 성장하였음

○ AI, 로보틱스 및 생명과학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되면서 산업 다각화가 본격화되었음

○ 청년층과 고급 인재의 유입이 확대되며 도시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었음

○ 산업 전환과 도시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6) 성과

□ 피츠버그는 철강 중심 산업도시에서 AI·로보틱스·헬스케어 중심 혁신도시로의 전환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 2023년 기준 광역도시권 인구 약 230만 명, 지역 GDP 약 1,650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로보틱스 기업 100여 개와 생명과학·헬스케어 종사자 약 14만 명이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였음

○ 철강산업 붕괴 이후 약 30~40년에 걸쳐 산업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성과는 100년 이상 축적된 민간자본, 대학 및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단기간 내 모방이 어려운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2) 시사점

□ 피츠버그는 민간 거대자본이 대학·연구·문화·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력산업 쇠퇴 이후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전환을 달성한 대표적인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클러스터 사례

○ 피츠버그와 포항은 모두 민간 거대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임

○ 두 사례 모두 주력산업 위기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었음

○ 피츠버그 사례는 산업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일 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AI·로보틱스·헬스케어 등 복수의 성장축을 육성하는 산업 다각화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줌

○ 또한 도심 재생, 청년 인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이 산업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음

□ 고양시에 대한 함의는 민간 앵커기업과 지역 혁신자산을 연계한 장기적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있음

○ 민간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창업 및 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항공대학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을 연계하여 AI·UAM·바이오 분야의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츠버그형 모델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자산 축적이 전제되는 만큼 단기적 기업유치보다 혁신인프라와 인재생태계 구축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서초구 양재AI/ICT 클러스터 사례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1) 현황

(1)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양재 AI특구)

□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가 AI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

○ 2017년 서초구는 양재·우면·개포동 일대 약 380만㎡를 지역특화발전특구(“양재 R&CD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서울시 및 강남구와 함께 유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구 지정이 보류된 바 있음

- 양재 R&CD의 핵심 개념은 기존의 R&D(연구·개발)에 기술 연계·융합(Connection), 창업 생태계 조성(Company), 지역사회 교류(Community), 상생·문화 공간(Culture)의 네 가지 'C'를 더해,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도심복합형 혁신거점을 구현하는 것임 (서초구청, 2017)

○ 2021년 12월 서울시는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초구는 舊 양재 R&CD특구를 ‘AI특구(양재1동·우면동)’와 ‘ICT특정개발진흥지구(양재1·2동)’로 병행하여 재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 특구 지정 시 대기업 연구소가 유입됨으로 인해 기존의 중소기업이 내몰릴 수 있다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교통난 심화 문제 등의 지적사항 반영
- ‘연구단지(R&CD)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AI(인공지능) 산업 특화'라는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로 구체화하고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은 양재·우면동 일대로 대상지를 축소하여 추진 방향 재설계

○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양재 AI특구 지정'이 구정 최우선 핵심 과제로 격상되었고, 결국 2024년 11월 양재·우면동 일대 약 40만㎡가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

- 2024년 5월에 핵심 앵커 시설인 '서울 AI 허브'가 개관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과 대학이 결집한 '국가 AI 연구거점'이 '서울 AI 허브'에 정식 개소하여 서초구가 AI관련 산·학·연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 AI거점 지역으로 부상
-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 초기 향토자원 활용 중심의 특구에서 진일보한 결과로, AI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특구의 지향점을 전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려는 지자체의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성과임

□ 서초구는 '양재 AI특구'가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 6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15개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양재 AI 특구'에 특허법·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6개 규제 특례가 적용되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15개 특화사업을 향후 5년간 추진함으로써, 서초구가 글로벌 AI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됨(중소벤처기업부, 2024)**

표 4-10 | '양재 AI 특구' 특화사업 15개

구분	주요 사업내용	위치	특화사업자
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AI 대학원 운영	서울AI허브	KAIST
	AI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		서울AI허브
	서초 AI 칼리지 운영	서초구 일원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서초구 일원	서초구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AI 특구지원센터 운영	강남 데이터센터(GDC)	서초구
	서울AI허브 운영 및 스타트업 발굴, 육성	서울AI허브	서울AI허브
AI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	AI 산학연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서울AI허브	서울AI허브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AI 콘퍼런스 개최		
	AI 반도체 기술사업화 지원		
AI 저변확대 및 지원인프라구축	AI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시민의숲, 문화예술공원, 더케이호텔,양재동 201-2	서초구
	AI 특구 공공디자인사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		

〈자료〉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2024). "양재 40만㎡ 일대 'AI 특구'로 지정! 글로벌 기업·인재 유입."

(2)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양재 ICT 지구)

□ 2026년 1월 양재 일대 약 111만㎡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기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규모 AI·ICT 산업벨트가 구축[5)]

○ 총면적 157만㎡ (양재 지역 111만㎡, 개포 지역 46만㎡)인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이 하나의 진흥지구로 묶여 지역 간 시너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첫 사례임(서초구의회, 2025)

○ 지난 2016년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성과로서 AI·ICT 관련 중소기업 350여 개가 밀집함에 따른 산업 집적도, 성장 가능성, 전략성 등 측면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진흥지구 선정의 주된 배경이 되었음(서초구청, 2026)

그림 4-7 |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및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자료〉 서초구청(2026). “[보도자료] 서초구,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완료(2026.01.22.).”

5)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특정 산업의 집적·육성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국제 무역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도시계획 제도임. 서울시는 2007년 11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2) 시사점

□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기초지자체의 '상향식 기획(Bottom-up)'과 광역지자체의 '하향식(Top-down) 승인 및 지원'이 결합된 제도로서 수도권 내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간 대표적 협업 모델

○ 광역지자체는 전략산업 풀(pool) 선정, 인센티브 패키지(용적률 상향, 세제 감면, 자금지원) 제공,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총괄하고, 기초지자체는 지역 인프라와 산업 집적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수립 및 구체화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함

-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010년 종로(귀금속)·여의도(금융)·성수(IT)·마포(디자인/출판)를 시작으로 2016년 중랑(패션), 2017년 중구(인쇄)를 거쳐 최근 양재·개포(ICT)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지정되고 있음
- 서울시는 각 지역의 인프라에 맞춘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략적 집적화(클러스터링)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

□ 고양시의 산업 기획과 경기도의 규제 완화 권한을 연계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자족형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능

○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명시된 '용도지구' 제도를 근거로 함. 따라서 경기도의 조례 검토를 거쳐 고양시에도 유사한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바이오·첨단정밀의료, 방송·미디어 콘텐츠, 드론·UAM 등 현재 고양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일산테크노밸리와 같은 특정 블록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추후 규제특례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새로운 규제특례를 도입하거나 제도적 특혜를 추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도록 상위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것임 (중소기업연구원, 2016)

8. Singapore one-north 사례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1) 경과

(1) 태동기

□ 군사·중공업 중심 지역에서 지식기반 혁신도시로의 전환 구상

○ Queenstown·Buona Vista 일대는 영국군 기지와 조선·기계 등 중공업 시설이 입지한 지역으로,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71년 영국군 철수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개발 대상지로 부상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정부는 실리콘밸리, 케임브리지, 쓰쿠바 등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차원의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였음

○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넘어 연구개발, 창업, 주거 및 문화 기능이 결합된 '도시 속 연구개발 도시(R&D City within a City)'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2) 형성기

□ 장기 마스터플랜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

○ 2001년 JTC Corporation은 one-north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Queenstown·Buona Vista 지역을 첨단 연구개발 및 혁신기업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장기 개발전략을 추진하였음

○ MRT 5개 역이 연결된 도심 인접 입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창업, 주거 및 문화 기능이 결합된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음

○ 약 20년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한 창의적 공간계획을 도입하였음

○ 2002년 JTC, EDB, A*STAR, MTI가 참여하는 One-North Work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개발, 투자유치, 인재양성 및 정책 총괄 기능을 통합 운영하였음

○ 도시재생과 산업정책, 연구개발 정책을 결합한 국가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음

(3) 도약기

□ 분야별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 확장

○ 2003년 Biopolis 개원을 통해 생명과학 중심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되었으며,

글로벌 제약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되기 시작하였음

○ 2008년 Fusionopolis 조성을 통해 ICT, 미디어, 물리과학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추가되면서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였음

○ 2015년 Mediapolis 조성을 통해 생명과학, ICT, 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다중 앵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였음

○ 같은 해 LaunchPad @ one-north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가 집적된 도심형 창업생태계를 형성하였음

○ 연구개발,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및 투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4) 성숙기

□ 동남아시아 대표 도시형 다중 앵커 혁신클러스터로 성장

○ Biopolis, Fusionopolis, Mediapolis, LaunchPad로 구성된 4축 다중 앵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동남아시아 대표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였음

○ 글로벌 연구개발 기관, 다국적 기업, 스타트업 및 투자기관이 집적되면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생명과학, ICT, 콘텐츠 및 창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복합 생태계를 형성하였음

○ 2020년대 들어 핀테크, 애그테크, 양자컴퓨팅 등 신산업 분야가 추가되면서 산업적 다양성과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다수의 혁신산업이 공존·융합하는 도시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발전하였음

(5) 성과

□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형 다중 앵커 혁신클러스터로 성장

○ 2023년 기준 one-north에는 약 400개 기업, 5만여 명의 종사자, A*STAR 산하 7개 연구소, 100여 개의 글로벌 연구개발 본부 및 700여 개 스타트업이 집적되어 싱가포르 최대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였음

○ 싱가포르 전체 연구개발 투자와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이 one-north에 집중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생명과학, ICT, 미디어, 창업 기능이 결합된 다중 앵커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였음

○ 특히 약 20~25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JTC, EDB, A*STAR, MTI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부지 개발, 연구개발, 투자유치 및 인재양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평가됨

○ 이는 도시재생, 혁신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형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

2) 시사점

□ one-north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창업 및 글로벌 기업을 단계적으로 집적시킨 대표적인 도시형 다중 앵커(Multi-Anchor) 혁신클러스터 사례로, 국내 서초 양재 AI·ICT 클러스터와 가장 유사

○ one-north와 양재는 모두 도심 인접 입지와 기존 연구개발 자산을 기반으로 다중 앵커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형 혁신클러스터라는 공통점을 보임

○ 두 사례 모두 정부 주도의 장기 계획 아래 연구개발, 창업 및 산업 기능을 결합하여 기존 도시공간을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Path Renewal 전략을 추진하였음

○ one-north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양재는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형 거버넌스와 단기 사업 중심 구조를 갖는 차이가 있음

○ one-north 사례는 도시형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통합 거버넌스, 장기 비전, 글로벌 인재 유치 및 단계적 앵커시설 조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 고양시에 대한 함의는 도시형 다중 앵커 재생형 클러스터 구축에 있음

○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 바이오 관련 인프라 등 다양한 혁신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one-north형 도시 다중 앵커 모델 적용 가능성이 높음

○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하는 20~30년 장기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경기도,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인허가,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AI, 바이오, 콘텐츠·미디어, 창업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분야별 앵커시설이 상호 연계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양시는 해외 사례 중 one-north 모델을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클러스터' 전략을 중장기 발전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사례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 도시별 기업지원정책 사례 비교 및 종합 시사점

□ 수도권 내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종합 시사점

○ **수도권 내 특례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사업 공간, 조세, 인건비, 금융, 연구개발(R&D), 복지, 행정 지원 등 공통적인 정책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방식과 중점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남

○ **고양시는 정주환경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집적 및 입지 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 정책을 통해 기업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 집적을 통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함

○ **수원시는 산업단지와 창업지원 인프라가 결합된 균형형 기업지원 구조를 보임**

-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지 결합형 지원 구조를 보임**

-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연계된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및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짐

○ **화성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집적과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 중심 지원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결합된 체계를 통해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표 4-11 |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조세 혜택	보통	우수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우수	우수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우수
행정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자료〉 각 특례시 홈페이지, 저자 작성

○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수도권 특례시는 산업단지 및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금융 및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산업단지 조성 및 입지 기반 확충을 통해 기업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의권 기업유치 지원정책 종합 시사점

○ 경의권에 속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세 지자체 모두 금융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분야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김포시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특례보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파주시는 수출지원과 기술혁신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물류비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시장 확대 정책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고도화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는 창업 및 금융지원 중심 정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 및 창업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 확충, 기술사업화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2 |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조세 혜택	보통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보통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행정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자료〉 각 시 홈페이지, 저자 작성

2. 산업 클러스터 유형 분류별 한국·외국 사례 매핑

○ 본 보고서가 채택한 4유형 분류 프레임워크에 따라 한국과 외국의 8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대응됨

표 4-11 | 산업클러스터 유형별 국내외 사례 매핑

유형	국내 사례	해외 사례	핵심 특징
자생적 대학 앵커형	원주 의료기기	Cambridge Cluster	대학 단일 앵커, Marshallian 외부경제, 장기 시간축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파주 디스플레이	Hsinchu Science Park	국가·광역 패키지, 신뢰 가능한 장기지원, 거점기업 중심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포항 팁스타운	Pittsburgh	민간 거대자본, 대학·연구기관, 산업전환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서초 양재 AI·ICT	Singapore one-north	도심 인접 입지, 다중 앵커, 통합 거버넌스

3. 유형별 비교 매트릭스 분석

○ 분석 결과, 클러스터는 형성 주체와 핵심 자원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보이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형 선택이 중요함

○ 유형 1(원주·케임브리지)은 대학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모델로, 장기간의 지식 축적과 Marshallian 외부효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함

○ 유형 2(파주·신주)는 국가와 광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점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델로, 정책 패키지와 장기적 지원체계가 성공의 핵심 요인임

○ 유형 3(포항·피츠버그)은 민간 거대자본과 대학이 결합하여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위기 이후 신산업으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됨

○ 유형 4(양재·one-north)는 도심 인접 입지와 기존 혁신자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창업, 기업 기능을 집적한 도시형 혁신클러스터 모델임

표 4-12 | 유형별 산업 클러스터 사례 비교 매트릭스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핵심 앵커	대학(연세대 / Cambridge)	거점기업(LGD / TSMC)	민간자본+대학(POSCO·POSTECH / Carnegie·CMU)	다중 앵커
주도 주체	대학·기초지자체 / 대학·College	중앙·광역 / 행정원	민간자본·공공 / 민간자본·민관협의체	다기관 / 4기관 일원화
정부 자금	제한적·후속 / 거의 없음	결정적 / 결정적	제한적·후속 / 제한적·후속	결정적 / 결정적
시간축	약 30년 / 60년+	약 20년 / 45년	약 60년 / 120년	약 10년 / 25년
형성 속도	점진적	급속	초장기	중속
글로벌 연결성	국내 중심 / 글로벌 R&D 거점	국가 거점 / 세계 60% 점유	지역 중심 / 글로벌 자율주행 거점	국내 중심 / 동남아 거점
종사자 규모	수천 명 / 67,000명	수만 명 / 16만 명	1.9천 명+ / 14만 명	형성 중 / 5만 명
주력 산업	의료기기·디지털헬스 / ICT·바이오·R&D	디스플레이 / 반도체	철강·딥테크 / AI·로보틱스·헬스케어	AI·ICT / 바이오·ICT·미디어·창업

4. 형성기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유형 1: 자생적 대학 앵커형

○ 핵심 메커니즘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혁신역량 축적에 있음

○ 원주와 Cambridge는 모두 대학을 단일 앵커로 하여 인재, 연구개발 및 창업생태계가 성장한 자생적 클러스터라는 공통점을 보임

○ 정부 지원보다 대학의 연구역량과 Marshallian 외부경제(노동시장 풀링, 지식 파급효과, 전문 공급자 집적)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Cambridge는 60년 이상의 장기 축적과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보한 반면, 원주는 아직 지역 중심의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유형 2: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 핵심 메커니즘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과 신뢰 가능한 제도적 약속(credible commitment)에 있음

○ 파주와 Hsinchu는 모두 국가 또는 광역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거점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장하였음

○ 단일 거점기업을 중심으로 협력기업이 집적되는 Hub-and-Spoke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임

○ Hsinchu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 반면, 파주는 다기관 중심의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Hsinchu는 ITR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기반이 선행 구축된 반면, 파주는 기업 중심 연구개발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유형 3: 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

○ 핵심 메커니즘은 민간 거대자본, 대학 및 장기적 시간 축의 결합에 있음

○ 포항과 Pittsburgh는 모두 민간 거대기업이 대학·연구기관·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형성하였음

○ 주력산업 쇠퇴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신산업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임

○ Pittsburgh는 AI·로보틱스·헬스케어 중심의 산업 다각화에 성공한 반면, 포항은 이차전지 중심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과제로 남아 있음

○ 또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도심 재생, 청년 인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유형 4: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 핵심 메커니즘은 통합 거버넌스와 단계적 다중 앵커 구축에 있음

○ 양재와 one-north는 모두 도심 인접 입지와 기존 혁신자산을 활용하여 다중 앵커 기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연구개발, 창업 및 산업 기능을 단계적으로 집적시켰다는 공통점을 보임

○ one-north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비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양재는 다기관 중심의 분산형 거버넌스와 단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

○ 또한 one-north는 글로벌 인재 유치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양재는 국내 인재 중심의 발전 경로를 보이고 있음

5. 고양시 적용을 위한 종합 시사점

1) 1차 모델: 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 중심 전략 (유형 4)

□ 고양시는 입지 여건과 보유 자산 측면에서 유형 4(양재·one-north형) 모델이 가장 적합

○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성사 창조혁신캠퍼스 및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연계한 도시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장기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경기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AI, 바이오, 콘텐츠·미디어 및 창업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다중 앵커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2차 보강: 자생적 대학 앵커 축의 강화 (유형 1)

□ 대학 기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유형 1의 장점 보완 필요

○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학교 및 농협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AI 및 항공우주 분야 박사급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창업기업(Spin-out)의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3) 제한적 활용: 국가전략 거점기업형 (유형 2)

□ 유형 2는 직접 모방보다 일부 요소의 선택적 활용 필요

○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는 필요하나, 대규모 단일 거점기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 다만 파주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하여 협력 패키지를 확보하는 원팀(One-Team) 전략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장기 비전: 민간자본 하이브리드와의 결합 가능성 (유형 3)

□ 유형 3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발전모델

○ 민간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결합된 혁신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자산 축적이 전제되는 만큼 단기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기는 어려움

5) 종합: 4유형의 선택적 결합

□ 고양시 클러스터 전략의 핵심은 특정 모델의 모방이 아닌 유형별 강점의 선택적 결합

○ 클러스터 형성은 '단일 유형의 모방'이 아닌 '유형별 맞춤 정책의 설계'가 핵심임.

○ 유형 4(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를 핵심 모델로 설정하고, 유형 1(자생적 대학 앵커형)을 보완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유형 3(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은 장기 비전으로 검토하고, 유형 2(국가전략 거점기업형)는 원팀 전략 등 일부 요소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고양시는 지역의 자산과 제약조건을 고려한 '다중 앵커 기반 선택적 결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고양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분석

제1절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제2절 고양시 내부 정책수요
제3절 고양시 외부 정책수요
제4절 고양시 전략산업 도출

제5장

고양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분석

제1절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1. 분석의 목적과 틀

□ 분석 목적

○ 고양시가 기업유치 정책을 설계할 때, 조세혜택이라는 수단이 인근(수도권) 및 수도권 외 기초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지 진단함

○ 수도권 규제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에서 인센티브 총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경제자유구역(FEZ)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포함한 인센티브 총량 확대 경로를 정리함

□ 본 절의 분석 중심축

○ 고양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세제혜택 비교표(11개 항목, ★/O/△/X 판정)를 비교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음

○ 본 절에서는 "11개 항목 비교표(표 5-1) → 항목별 세부 분석(2.) → 고양시 가용 수단(3.)"의 순서로 논리를 전개함

2) 비교 대상

□ 고양시의 위상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자 경기 서북부 거점도시임

□ 비교 대상은 세 축

○ 수도권 인근: 파주·김포·성남

○ 수도권 산업유치 경쟁군: 화성·용인·평택(반도체), 성남(판교 IT)

○ 수도권 외 산업 거점: 천안·아산·청주·충주·구미·포항·창원·나주·광양·원주·춘천

□ 핵심 비교 변수

○ 조세혜택의 실질 경쟁력은 다섯 가지 변수로 결정됨

- 상위법(「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의 감면율
-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등
- 광역·기초 조례의 추가 감면
- 특구·특화단지 지정 여부
- 비세제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 다섯 변수를 구체 항목으로 전개한 것이 본 절의 11개 항목 비교표(표 5-1)임

- 법인세 축: ① 신·증설 감면(조특법 제63조), ② 본사 지방이전(조특법 제63조의2), ⑤ 창업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⑥ 외국인투자기업(조특법 제121조의2), ⑩ 기회발전특구(조특법 제121조의33)
- 지방세 축 : ③ 산업단지 취득세·④ 재산세(지특법 제78조 제5항), ⑦ 외투 지방세(지특법 제78조의3), ⑪ 기회발전특구 지방세(지특법 제80조의2)
- 비세제·규제 축: ⑦ 외투 현금지원(「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 제14조의2), ⑧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14조·제24조), ⑨ 수도권 입지·증설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제7조·제18조)

2. 고양시와 비수도권의 세제혜택 비교

1) 세제혜택 종합 비교표

○ 고양시는 수정법 제6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국세·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제도 전반에서 비수도권과 상반된 지위에 있음

○ 이하 비교표는 조특법(시행 2026.07.01.)·지특법(시행 2026.06.02.)·외촉법·수정법·지방분권법 등 현행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11개 항목을 검증한 결과임

○ 감면율·감면기간·일몰기한 등 수치는 법령 원문 기준이며, 기호(★·O·△·X)로 양 지역의 접근 가능성을 표시함

○ 범례: ★ 최대 혜택, O 가능, △ 제한적, X 불가·배제·일몰

표 5-1 | 고양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세제혜택 비교

비교 항목	근거 법령	고양시(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격차·시사점
① 법인세 신·증설 감면(공장 지방이전)	조특법 §63	X 과밀억제권역 내 신·증설은 적용 배제(수도권 밖 이전 시에만 감면)	★ 수도권 밖 이전 시 5~10년 100% + 3~5년 50%(이전지역별 차등: 일반 5+3년, 수도권 밖 광역시 중 성장촉진·인구감소·위기지역 7+4년, 그 외 낙후지역 최대 10+5년 ; 2028.12.31까지 사업개시, 신축 이전 시 2031.12.31)	고양시 감면 전무, 비수도권 최대 10+5=15년 감면
②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조특법 §63의2	X 해당 없음(과밀억제권역은 '출발지')	★ 본사 이전 시 5~10년 100% + 3~5년 50%(§63 지역구분 준용; 부동산업·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있음)	본사이전 인센티브 비수도권 전속(최대 15년)
③ 산업단지 입주 취득세	지특법 §78⑤	△ 수도권 35% 경감(인구감소지역 외), 일몰 2028.12.31	★ 수도권 외 50% 경감, 인구감소지역 75%, 일몰 2028.12.31	비수도권 일반 +15%p, 인구감소지역 +40%p
④ 산업단지 입주 재산세	지특법 §78⑤	△ 수도권 35% 경감(5년)	★ 수도권 외 60%(5년), 인구감소지역 75%(5년)	재산세 격차 25~40%p
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2026.1.1 이후 창업)	조특법 §6(일몰 2027.12.31)	△ 청년창업 50%, 일반창업 감면 없음(연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50%)	★ 청년창업 100%(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75%(수도권 비과밀 청년창업), 일반창업 50%(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25%(수도권 비과밀)	감면기간 5년(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4년), 과세연도별 감면한도 5억 원(§6⑬); 청년창업 기준 최대 2배(50% 대 100%) 격차
⑥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121의2 (법인세·소득세 2018.12.31 감면신청분 종료, 지방세 관련 조항은 2019.12.31)	X 신규 감면 일몰 (기존 잔여기간만 적용)	X 신규 감면 일몰(양 지역 동일)	신규 국세감면 종료 → 현금지원 중심으로 대체
⑦ 외국인투자 지방세 감면 + 현금지원	지특법 §78의3, 외촉법 §14의2	△ 현금지원(외촉법 §14의2)은 외투지역·FEZ 지정 시 협상 가능. §78의3 지방세 감면	O 현금지원 매칭(국비·지방비 합산 최대 50% : 외촉법 시행령·산업부	지방세 감면 신규분은 양 지역 공통 일몰(연장 입법 필요). 감면구조: 개별형 외투지역·신성장 기술사업 5년

비교 항목	근거 법령	고양시(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격차·시사점
		신규 신청은 2025.12.31 일몰 경과(기존 감면결정분만 잔여기간 적용, 조례로 15년까지 연장 가능)	현금지원기준) 우위 유지. §78의3 신규분 일몰은 동일	100%+2년 50%, 경자구역 등 3년 100%+2년 50%. 현금지원 매칭은 비수도권 우위
⑧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분권법 §14·§24, 같은 법 시행령 §23(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X 지원 대상 아님(수도권 제외)	★ 입지·설비 보조 + 고용보조(중앙·지방 매칭)	비수도권 전속 보조금
⑨ 수도권 입지·증설 규제	수정법 §7·§18	X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제한 및 공업지역 지정 제한(§7),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18)	O 규제 없음(자유로운 신·증설)	입지·증설 자유도 비수도권 우위
⑩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33(2028.12.31까지 창업·신설)	△ 특구 지정 제한적 (수도권 원칙 제외, 인구감소·접경지역만 예외)	★ 창업·신설 기업 5년 100% + 2년 50%(총 7년)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전속
⑪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지특법 §80의2, 지방분권법 §23	△ 특구 지정 제한적 (수도권 원칙 제외, 인구감소·접경지역만 예외)	★ 취득세 50% 경감 + 재산세 5년 면제(수도권 특구는 3년 면제 + 2년 50%)(취득세 경감 일몰 2026.12.31; 조례로 취득세 최대 +50%p·재산세 5년 연장 추가경감 가능)	취득·재산세 패키지 감면 격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7.01., 2025.12.23. 공포)·「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6.02.)·「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6.06.0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6.07.01., 2026.03.05. 공포) 등

2) 항목별 세부 분석

□ 법인세 이전·신증설 감면: 고양시는 '출발지'로서 원천 배제

○ 조특법 제63조(공장의 지방이전)와 제63조의2(본사의 지방이전)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이전지역 구분에 따라 5~10년간 100%, 이후 3~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로, 202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신축 이전 시 2031.12.31.) 적용됨

○ 감면기간은 이전지역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일반 지역 5+3년, 수도권 밖 광역시 중 성장촉진·인구감소·위기지역 7+4년, 그 외 낙후지역 최대 10+5년이며, 감면기간이 최대 15년에 달하는 가장 강력한 국세 인센티브임

○ 그러나 두 조항 모두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므로,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로의 이전이나 고양시 내 신·증설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고양시는 제도상 감면의 수혜지가 아니라 기업이 떠나야 감면이 발생하는 '출발지'로 규정되어 있음
- 즉 본 조항은 고양시 입장에서 단순한 혜택 부재를 넘어 관내기업의 역외이전을 유인하는 역(逆)인센티브로 작동함

□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35% 대 50~75%의 상시 격차

○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경감되나, 경감률이 지역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음

○ 취득세는 고양시 등 수도권이 35% 경감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경감됨(일몰 2028.12.31.)

○ 비수도권 일반 지역과 15%p, 인구감소지역과는 40%p의 격차가 발생함

○ 재산세는 수도권 35% 경감(5년)인 데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은 60%(5년), 인구감소지역은 75%(5년)로, 25~40%p의 격차가 5년간 지속됨

○ 산업단지라는 동일한 입지 유형에서도 지역 구분만으로 초기 투자비(취득세)와 보유비용(재산세)이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항목임

□ 창업중소기업 감면: 청년창업 50% 대 100%

○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 2027.12.31.)는 2026.1.1. 이후 창업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해당 과세연도 + 그 다음 4년)의 감면을 두되, 감면율이 입지에 따라 크게 차등됨

○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는 청년창업만 50% 감면이 인정되고 일반창업은 감면이 없음(다만 제6조 제6항에 따라 연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감면)

○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창업 100%(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일반창업 50%가 적용되며, 수도권 비과밀 지역은 청년창업 75%·일반창업 25%임

- 동일한 청년창업이라도 창업지가 고양시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2배(50% 대 100%) 차이 남
- 각 과세연도 감면세액 합계에 5억 원 한도가 적용됨(제6조 제13항, 2024.12.31. 신설)
- 창업 초기 5년간의 법인세 부담 격차는 스타트업의 입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외국인투자·보조금: 좁아진 틈새와 비수도권 전속 지원의 공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은 2018.12.31. 감면신청분을 끝으로 일몰되어(지방세 관련 조항은 2019.12.31.), 신규 외투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은 고양시와 비수도권 모두 불가함(기존 기업의 잔여 감면기간만 적용)

- 감면구조는 신성장 기술사업 등 5년 100%+2년 50%, 경제자유구역 등 입주 사업 3년 100%+2년 50%였음
- 신규 국세감면 종료 이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중심은 현금지원과 지방세 감면으로 이동하였음

○ 지특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외촉법 제14조의2(현금지원)는 11개 항목 중 고양시가 유일하게 활용 가능성을 가진 입지형 인센티브임

- 다만 제78조의3의 신규 감면신청 기한은 2025.12.31.로 이미 경과하여, 연장 입법이 없는 한 신규 외투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불가함(기존 감면결정분은 잔여기간 적용, 지자체 조례로 15년까지 연장 가능)
- 감면구조는 개별형 외투지역·신성장 기술사업이 5년 100%+2년 50%, 경제자유구역 등 입주 사업이 3년 100%+2년 50%임

○ 따라서 현행 기준 고양시가 활용 가능한 외투 인센티브는 현금지원(외촉법 제14조의2 : 협상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과 임대료 감면 등으로 좁혀지며, 지방세 감면은 일몰 연장 입법을 전제로 함

○ 비수도권은 현금지원 매칭(국비·지방비 합산 최대 50% : 비율은 외촉법 시행령·산업통상부 현금지원기준 사항)에서 국비 분담 비율이 높아 외국인투자 유치에서도 우위에 있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방분권법 제14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은 입지·설비 보조와 고용보조를 중앙·지방 매칭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나,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수도권 전속 보조금임

○ 요컨대 외국인투자 분야는 '고양시가 진입할 수 있는 좁아진 틈새(현금지원·임대료, 일몰 연장 전제의 지방세 감면)'와 '비수도권만의 우위(현금지원 매칭·투자보조금)'가 병존하는 영역임

□ 기회발전특구·수도권 규제: 인센티브 배제와 규제 부과의 이중 구조

○ 기회발전특구는 현행 제도 중 가장 강력한 감면 패키지이나, 수도권인 고양시는 지정이 제한적

- 법인세는 조특법 제121조의33에 따라 2028.12.31.까지 특구에서 창업·신설하는 기업에 5년 100% + 2년 50%(총 7년) 감면이 적용됨
- 지방세는 지특법 제80조의2 및 지방분권법 제23조에 따라 취득세 50% 경감(일몰 2026.12.31.)과 재산세 5년 면제가 적용됨(수도권 내 특구는 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로 축소; 조례로 취득세 최대 +50%p·재산세 5년 연장 추가경감 가능)
- 그러나 특구 지정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만 예외로 인정하므로,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지정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 수정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고, 제18조는 공장·학교 등에 대한 총량규제를 부과함

○ 비수도권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신·증설이 가능함

○ 결국 고양시는 최대 인센티브(기회발전특구)가 제한적인 동시에 입지·증설 규제까지 부담하는 '이중 배제' 구조에 놓여 있음

3) 종합

○ 11개 비교 항목 중 고양시는 X(불가·배제·일몰) 5개(①②⑥⑧⑨)·△(제한적) 6개(③④⑤⑦⑩⑪)로, ★(최대 혜택) 항목이 하나도 없음

- 비수도권은 ★ 8개·O 2개(⑦ 외투 현금지원 - 지방세 감면 신규분 일몰로 축소, ⑨ 규제 없음)·X 1개(⑥ 외투 국세감면 : 양 지역 공통 일몰)임
- 이는 개별 제도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인센티브의 '배제지'이자 이전 감면의 '출발지'로 설계한 법체계의 구조적 산물임
- 따라서 고양시가 감면율·감면기간 등 세제 조건으로 비수도권과 정면 경쟁하는 전략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우회 경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도 활용 가능함

- (조례 자체감면) 지특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추가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 자체 감면조례를 전략업종 유치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외촉법 제14조의2 현금지원과 외투지역·FEZ(경제자유구역)의 임대료 감면은 고양시가 진입할 수 있는 입지형 인센티브 경로임
- 지특법 제78조의3 지방세 감면은 신규 신청분 일몰(2025.12.31.) 경과로 연장 입법을 전제로 함
- (입지 무관 국세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입지 요건이 없는 국세 공제와 R&D 매칭·정부공모사업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고양시 입주기업도 동일하게 수혜 가능함

○ 결론적으로 고양시 기업유치 정책은 세제 격차의 '해소'가 아닌 '우회'를 전제로, 조례 감면·외투 현금지원·입지 무관 공제의 조합과 비세제 경쟁력(입지·인력·시장 접근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3.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1) 시설 요건 지방세 감면수단

○ 수도권 차등에도 불구하고 시설 요건으로 접근 가능한 지방세 감면 수단이 존재함

표 5-2 | 고양시 활용 가능 기본 지방세 감면 수단

근거	대상	혜택
지특법 제58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집적시설 입주 벤처: 취득·재산세 각 50%(2026.12.31.까지) / 촉진지구(수도권): 취득세 35%·재산세 20%(2028.12.31.까지)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 중소기업: 취득세 35%·재산세 5년간 35%(2028.12.31.까지)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2026.12.31.까지 창업분)
지특법 제60조 제3항	창업보육센터(BI) 사업자	취득·재산세 50%(수도권 외 60%, 2026.12.31.까지) – 입주기업 중과배제 특례는 2023.12.31. 일몰
지특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 수도권 기준 중소 45%·일반 30%(2028.12.31.까지; 신성장·국가전략 연구소 +15%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수도권 배제)

2) 조례 자체감면·보조금

○ **수도권 차등은 상위법 문제일 뿐, 지자체 자체 조례 감면은 별개로 작동함**

- 지특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자체 조례로 취득·재산세 추가 감면 가능 : 수도권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함
- 지특법 제78조 제6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례 추가 경감(취득세 100분의 25 범위, 대수선분 100분의 15)이 가능함
- 시 자체 보조금: 고용·교육훈련·임대료·이전비 보조 : 시 자체 재원으로 운용 가능함

○ **조례 감면의 제도적 제약(설계 시 유의)**

- 감면 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연장은 재의결이 필요함
- 법정 감면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지특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 예외), 감면총량 상한(같은 조 제6항)을 준수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경제자유구역(FEZ) 직접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수도권을 일률 배제하지 않음

○ 지정 시 인센티브 체계

표 5-3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 체계

항목	근거	내용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78조의3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 취득·재산세 3년 100% + 2년 50%(개별형 외투지역·신성장 기술사업은 5년 100% + 2년 50%) – 신규 감면신청 2025.12.31. 일몰 경과, 연장 입법 필요(기존 감면결정분만 잔여기간 적용)
부담금 감면	경자법 제15조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 개발사업시행자 대상(입주기업 직접 감면 아님)
임대료·자금	경자법 제16조	토지·시설 임대료 감면, 시·도 자금지원 –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 입주기업 자금지원(제16조 제2항 제3·4호)은 수도권 소재 경자구역 제외 (고양 FEZ에서는 외투·국내복귀기업 중심)
외투 현금지원	외촉법 제14조의2	협상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첨단전략기술 우대 (비율은 시행령·산업부 현금지원기준)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경자법 제17조	입주 외투·국내복귀기업에 수정법 제7조·제18조 등 적용배제 – 인허가 의제(패스트트랙)는 경자법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 경자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의 전략적 의미

○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외투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정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제18조(총량규제) 등 수도권 규제가 적용배제됨

○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임

□ 현행 한계: 두 개의 일몰

○ 조특법 제121조의2(외투 법인세 5년 100% + 2년 50% 또는 3년 100% + 2년 50%)는 2018.12.31. 감면신청분을 끝으로 일몰되어 신규 적용이 종료됨(기존 결정분은 잔여기간만 적용)

○ 지특법 제78조의3(외투 지방세 감면)도 신규 감면신청 기한이 2025.12.31.로 경과하여, 연장 입법이 없는 한 신규 외투기업에는 적용 불가함

○ 따라서 현행 기준 경제자유구역(FEZ) 인센티브의 실질 축은 부담금(개발단계)·임대료·현금지원·수도권 규제 적용배제의 4개이며, 지방세 감면 축은 일몰 연장 입법을 전제로 함

○ 신규 외투 유치 경쟁은 현금지원·임대료 감면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임

4)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 추진

□ 지정 요건 : 시행령상 '북한 인접지역'에 고양시 명시 포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년 제정, 이하 "평화경제특구법") 제2조 제1호는 대상지를 "북한 인접지역"(DMZ·NLL 접경 시·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으로 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시행 2026.1.2.)는 경기도의 인접지역으로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을, 제2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시·속초시를 명시함

- 즉 고양시는 현행법령상 이미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이며,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지정 신청이 가능함

□ 지정 시 인센티브 체계

○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 (3년 100% + 2년 50%)

○ 개발사업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40여 개 인허가 의제, 각종 부담금 감면·면제 가능, 법인세 감면 (3년 50% + 2년 25%)

○ 기반시설 설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등 국비 지원 검토

○ 추가로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부담금 감면·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

5) 기타 특구·지구 지정

○ 특구·지구 지정을 통한 상위법 감면 활용

표 5-4 | 특구·지구 지정을 통한 상위법 감면 활용

특구·지구	근거	혜택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 감면 + 조성원가 인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외투 현금지원·임대료 등 입지 지원(국세 감면은 2018년 말, 지특법 제78조의3 지방세 감면 신규분은 2025년 말 일몰 – 연장 입법 전제)
첨단투자지구·특화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화단지)	세제 + 기반시설 + 인허가 패키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외촉법 제18조)의 전략적 위상**

- 외투지역 지정은 현금지원 협상력을 높이는 실행 수단이며, 지방세 감면(5년 100% + 2년 50% 구조)까지 확보하려면 지특법 제78조의3의 일몰 연장 입법이 전제됨

6) 업종요건 세액공제

○ **업종형 국세공제는 입지와 관련된 조세혜택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부가 업종 유치 자체가 인센티브 총량을 늘림**

○ **다음 업종의 경우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세액공제함**

표 5-5 | 업종요건별 세액공제 체계

공제	대상	수준
조특법 제24조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AI·드론·UAM·지능형 로봇 등	세액공제: 시설 일반 3% / 중견 6% / 중소 12% + 증가분 10%(직전 3년 평균 초과분, 기본공제의 2배 한도)
조특법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	세액공제: 시설 15% / 중소 25%(반도체 분야 시설 20% / 중소 30%, 2029.12.31.까지) + 증가분 10%
조특법 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 R&D)	바이오·AI·드론·UAM·지능형 로봇 등	세액공제: 중견 20~30% / 중소 30~40%(국가전략기술 R&D는 30~40% / 중소 40~50%)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10%(중소 15%) + 추가 10%(중소 15%, 국내 제작비 비중 요건), 2028.12.31.까지

4. 정책적 시사점

○ 고양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한계로 비수도권과 인센티브 총량 정면 경쟁은 불가하므로 우회수단을 고려해야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식산업센터, 창업벤처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시설 요건 지방세 감면수단을 적극 활용

○ 지특법 제4조에 따른 시 조례 자체감면은 외투·창업·중견·중소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 활용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구 지정을 우선시함

○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 등 업종요건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업을 선제 유치

- 입지 무관 국세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대상임
- 정부 R&D 매칭(방위사업청·산업부)과 결합 가능함
- R&D 기반 산업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점임

○ 종합하면 시조례 자체감면을 확장하고 특구지정을 우선시하되 R&D 기반 첨단산업 벤처·스타트업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고양시 내부 정책수요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고양시 내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과 기업지원정책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 기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입지 여건, 산업 인프라, 인력수급, 행정지원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고양시 기업환경의 강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정책의 활용 경험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조사명: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설문조사(고양시 내부 기업 대상)

○ 조사 수행기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 조사 기간: 2026년 3월 27일 ~ 2026년 4월 7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서베이몽키 활용)

○ 조사 대상: 고양시 내부 기업

○ 응답 현황: 총 32개사 응답, 이 중 유효 응답 28개사 분석 활용

○ 분석 제외: 불성실 응답 및 중복 응답 등은 분석에서 제외

□ 조사 내용

○ 일반현황 조사

- 기업 입지 형태 및 사업 분야, 기업 규모 및 사업 단계
- 기업 지정 여부 및 기업 현황,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
- 정책 수혜 및 투자유치 현황 등

○ 기업활동 환경 조사

- 고양시 기업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 고양시 기업 입지의 장점 및 한계 요인
- 타 지자체 이전 계획 및 이전 사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요인 등

○ 기업지원정책 현황 조사

- 고양시 기업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 경험
- 지원정책 수혜 분야 및 향후 지원 수요, 정책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정책 실효성 및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인식, 정책 개선 의견 및 자유의견 등

○ 투자유치 지원정책 현황 조사

-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 경험, 투자유치 이후 투자 단계 및 투자 규모
- 투자유치까지 소요 기간, 투자유치 기여 요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등

□ 분석 방향

○ 기업지원정책 분석에서는 정책 인지도, 수혜 경험, 정책 만족도 및 향후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실효성을 검토함

-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산업 클러스터 지원 등 주요 정책별 수요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함

○ 투자유치 지원정책 분석에서는 정책 수혜 이후 실제 투자유치 여부와 투자 단계, 투자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검토함

- 특히 기업 성장 단계별로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업이 정책 활용 과정에서 겪는 행정절차, 규제, 정보 접근성 등의 애로사항을 함께 분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함

-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활용 한계를 검토하여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고양시 기업환경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기업활동 환경 조사

□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고양시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11개사(3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가 각각 4개사(14.3%)로 조사됨

○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는 각각 3개사(10.7%)로 나타났으며, 사업부지 확보 여건은 2개사(7.1%), 물류 여건은 1개사(3.6%) 수준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고양시의 입지적 경쟁력과 수도권 시장 접근성을 가장 큰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2순위 응답에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이 8개사(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7개사(25.9%),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5개사(18.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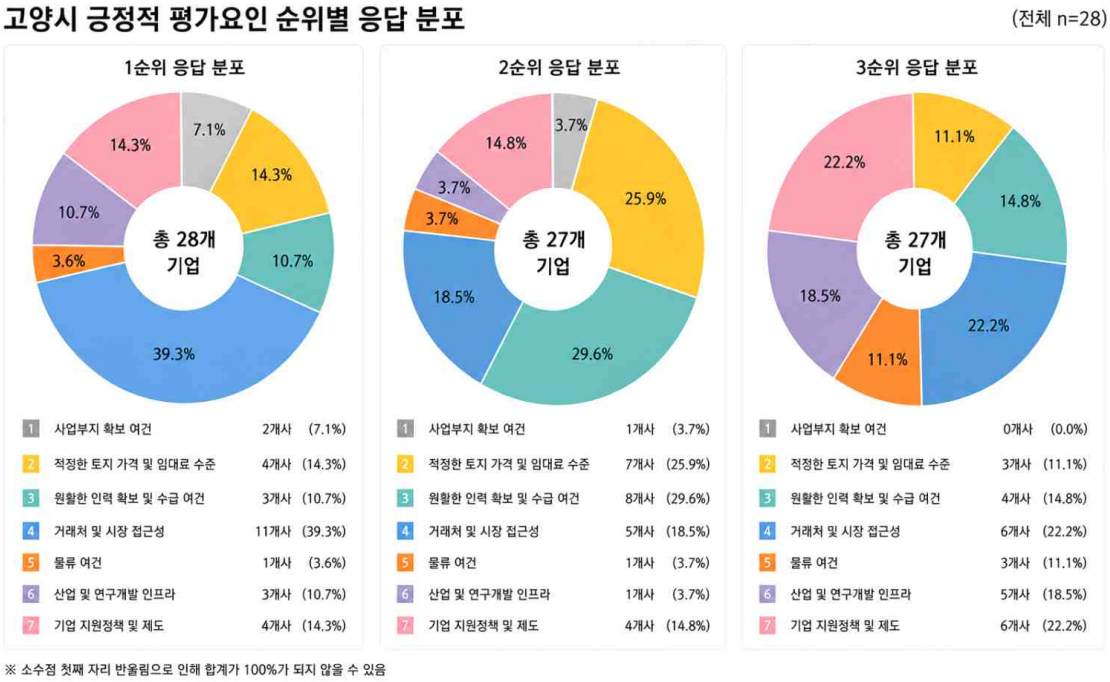
- 기업들은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와 사업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고양시의 기업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3순위 응답에서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가 각각 6개사(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5개사(18.5%),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 4개사(14.8%) 순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고양시의 주요 강점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여건, 기업 지원정책,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균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시장과의 우수한 접근성은 고양시가 보유한 대표적인 경쟁우위 요인으로 평가되며, 기업 지원정책과 인적·기술적 기반 역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강점으로 확인됨

그림 5-1 |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분야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사업 분야별 고양시 기업활동 환경의 긍정적 평가요인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은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주요 강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업종에서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인력 확보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일부 확인됨

- 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업활동 환경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시장 접근성과 기술혁신 기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주요 경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표 5-6 | 사업 분야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사업 분야	사업부지	토지가격	인력확보	시장접근성	물류	산업·R&D	지원정책	합계
제조업	0	0	2	1	0	0	0	3
정보통신업	0	2	0	3	0	2	0	7
전문·과학기술	1	0	1	2	0	2	0	6
기타	1	2	2	5	1	0	1	12
합계	2	4	5	11	1	4	1	28

□ 기업 규모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기업 규모별 고양시 기업활동 환경의 긍정적 평가요인을 비교한 결과, 스타트업은 사업부지 확보 여건,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등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견기업은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주요 강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타트업은 초기 정착과 운영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입지 여건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과 매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접근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규모가 확대될수록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5-7 | 기업 규모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기업규모	사업부지	토지가격	인력확보	시장접근성	물류	산업·R&D	지원정책	합계
스타트업	2	2	1	2	0	0	1	8
중소기업	0	2	4	9	1	2	0	18
중견기업	0	0	0	0	0	2	0	2
합계	2	4	5	11	1	4	1	28

□ 사업단계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 사업단계별 고양시 기업활동 환경의 긍정적 평가요인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 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주요 강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 기업은 사업부지 확보 여건과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 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확장 단계 기업 역시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함

-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술혁신 기반과 시장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입지비용과 사업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와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시장 접근성이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8 | 사업단계별 고양시 기업활동 긍정적 평가 요인

사업단계	사업부지	토지가격	인력확보	시장접근성	물류	산업·R&D	지원정책	합계
연구개발·제품개발	0	1	0	3	0	2	1	7
초기 시장 진입	2	2	0	2	0	0	0	6
안정적 매출 확보	0	1	4	4	0	2	0	11
사업 확장	0	0	1	2	1	0	0	4
합계	2	4	5	11	1	4	1	28

□ 타 지자체 이전 계획 사유

○ 기업들은 고양시의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 부족을 가장 주요한 이전 검토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 공간 확보와 확장 기반 마련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높은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또한 주요 이전 계획 사유로 확인됨

- 기업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 비용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지원정책 및 세제 지원 부족,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

□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응답 기업이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사업부지 확보 여건이 양호함,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각각 5개사(2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이 4개사(18.2%)로 조사됨

○ 또한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물류 여건 양호,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는 각각 1개사(4.5%) 수준으로 확인되며, 기업들이 고양시의 입지 경쟁력과 사업 운영 여건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2순위 응답에서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6개사(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5개사(22.7%),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 4개사(18.2%) 순으로 조사됨

○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은 각각 3개사(13.6%)로 확인되었으며, 사업부지 확보 여건이 양호함은 1개사(4.5%)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입지적 장점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환경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3순위 응답에서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6개사(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 5개사(23.8%),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와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이 각각 3개사(14.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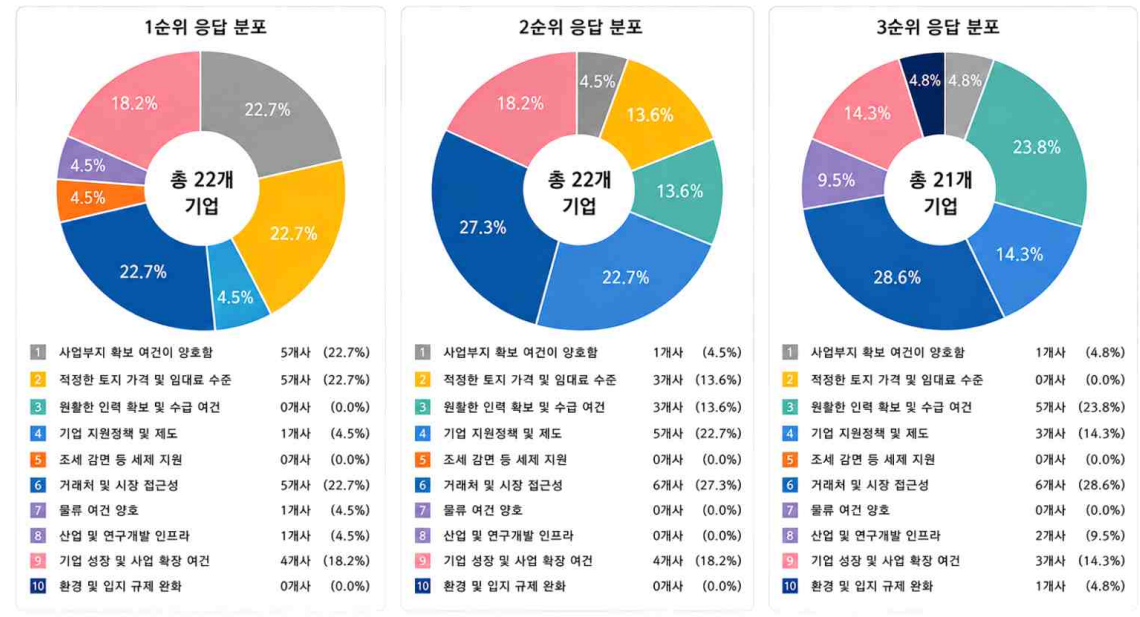
○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는 2개사(9.5%), 사업부지 확보 여건이 양호함과 환경 및 입지 규제 완화는 각각 1개사(4.8%) 수준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력 확보 여건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고양시에 계속 입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을 중심으로 사업부지 확보 여건,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가능성 등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지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도권 시장과의 우수한 접근성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경쟁우위 요인으로 평가되며, 성장 가능성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기업의 지속적인 입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2 |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사업분야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를 비교한 결과, 정보통신업은 사업부지 확보 여건,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등이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 제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업종은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시장 접근성과 혁신 기반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기타 업종은 기업 성장 가능성과 사업 확장 여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표 5-9 |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사업 분야	사업 부지	토지 가격	인력 확보	시장 접근성	지원 정책	물류	R&D 인프라	성장여건	합계
제조업	0	0	0	0	1	0	1	0	2
정보통신업	2	2	0	1	1	0	1	0	7
전문과학기술	1	1	0	0	3	0	1	0	6
기타	2	0	1	0	0	1	0	3	7
합계	5	3	1	1	5	1	3	3	22

□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기업규모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를 비교한 결과, 스타트업은 사업부지 확보 여건과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게 확인됨

-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정착과 성장 기반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실제 기업활동과 매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접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응답도 확인되어 기술혁신 기반 역시 기업의 지속적인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0 |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기업규모	사업 부지	토지 가격	인력 확보	시장 접근성	지원 정책	물류	R&D 인프라	성장 여건	합계
스타트업	3	0	1	0	1	0	1	2	8
중소기업	2	3	0	1	4	1	2	1	14
합계	5	3	1	1	5	1	3	3	22

□ 사업단계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 사업단계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를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 기업은 사업부지 확보 여건과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시장진입 단계 기업은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 기업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확장 단계 기업은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물류 여건 양호를 주요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술혁신 기반과 사업 수행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안정

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사업확장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물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1 | 사업단계별 고양시 이전 비계획 사유

사업단계	사업 부지	토지 가격	인력 확보	시장 접근성	지원 정책	물류	R&D 인프라	성장 여건	합계
연구개발·제품개발	2	1	0	0	1	0	2	0	6
초기 시장 진입	1	0	0	0	1	0	0	3	5
안정적 매출 확보	2	1	1	1	3	0	1	0	9
사업 확장	0	1	0	0	0	1	0	0	2
합계	5	3	1	1	5	1	3	3	22

3. 기업 지원정책 현황

□ 기업 지원정책 인지도 및 수혜 경험 분석

○ **기업 지원정책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양시의 기업 지원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개사(53.6%)로 나타났으며,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3개사(46.4%)로 조사됨**

- 상당수 기업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 지원정책 수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실제 수혜를 받은 기업은 13개사(46.4%)로 나타났으며,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2개사(7.1%)로 조사됨**

○ **반면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3개사(46.4%)로 나타나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부 기업이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접근성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신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2 | 기업 지원정책 인지도 및 수혜 경험 분석

구분	응답	응답수	비율(%)
기업 지원정책 인지 여부	예	15	53.6
	아니오	13	46.4
기업 지원정책 수혜 경험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13	46.4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2	7.1
	신청하지 않았다	13	46.4

□ 기업 지원정책 수혜 사업 분야

○ 기업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받은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시설지원과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특화산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도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지원 및 마케팅·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 사례도 일부 나타남

- 기업들이 단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확보, 산업 육성 등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시설지원과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의 사업 운영 기반 구축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고양시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정책을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금융지원사업'이 12개사(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시설지원'이 4개사(14.3%)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개발지원'은 3개사(10.7%), '마케팅·판로지원'과 '특화산업지원'은 각각 2개사(7.1%) 수준으로 확인됨

- 반면 '공장설립지원', '첨단산업 육성지원', '산업 클러스터 입주지원', '기술 및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각각 1개사(3.6%) 수준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순위 응답에서는 '일자리지원'이 4개사(1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증·인센티브지원', '창업지원', '시설지원'은 각각 3개사(11.5%) 수준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기업애로지원', '기술개발지원', '특화산업지원', '금융지원사업'이 각각 2개사(7.7%) 수준으로 확인됨

- 반면 '마케팅·판로지원', '공장설립지원', '첨단산업 육성지원', '산업 클러스터 입주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은 각각 1개사(3.8%)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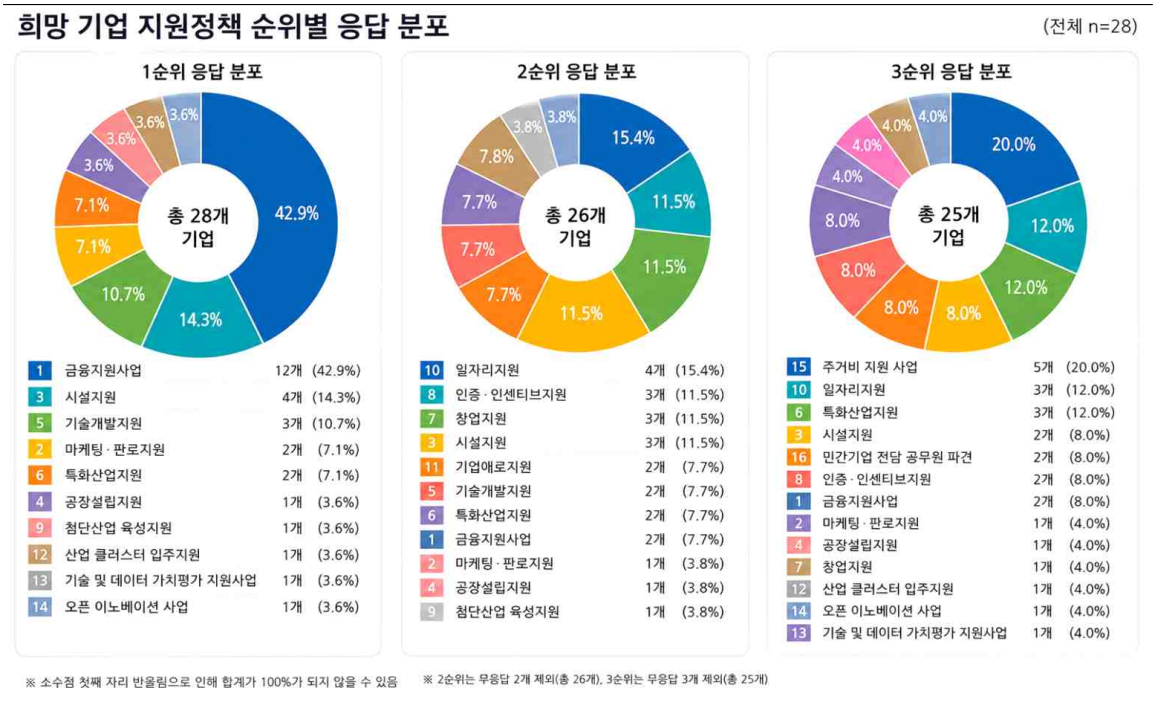
○ 3순위 응답에서는 '주거비 지원 사업'이 5개사(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특화산업지원'이 각각 3개사(12.0%) 수준으로 조사됨

- 또한 '시설지원',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파견', '인증·인센티브지원', '금융지원사업'은 각각 2개사(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케팅·판로지원', '공장설립지원', '창업지원', '산업 클러스터 입주지원', '기술 및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각각 1개사(4.0%)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직접적인 경영지원 외에도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산업 특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주거비 지원 사업이 3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력 유치 여건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됨

그림 5-3 |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사업 분야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사업분야별 희망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기타 업종에서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금융지원사업(2개사)과 함께 시설지원(1개사), 기술개발지원(1개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정보통신업은 금융지원사업(4개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술개발지원(2개사)과 금융지원사업(1개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가 확인됨

○ **전반적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산업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가 일부 확인됨**

표 5-13 | 사업 분야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사업 분야	금융	마케팅	시설	기술개발	특화산업	기타	합계
제조업	2	0	1	1	0	0	4
정보통신업	4	0	1	0	1	1	7
전문·과학기술	1	0	1	2	0	1	5
기타	5	2	1	0	1	3	12
합계	12	2	4	3	2	5	28

□ 기업 규모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기업규모별 희망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모두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타트업은 금융지원사업(5개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마케팅·판로지원, 기술개발지원, 특화산업지원 및 기타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 각각 1개사 수준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사업(7개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원정책(4개사), 시설지원(3개사), 기술개발지원(2개사) 순으로 조사됨
- 중견기업은 1개사로,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시설지원 및 기술개발지원과 함께 공장설립지원, 첨단산업 육성지원, 산업클러스터 입주지원, 기술 및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등 기타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 일부 확인됨**

표 5-14 | 기업 규모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기업규모	금융	마케팅	시설	기술개발	특화산업	기타	합계
스타트업	5	1	0	1	1	1	9
중소기업	7	1	3	2	1	4	18
중견기업	0	0	1	0	0	0	1
합계	12	2	4	3	2	5	28

□ 사업단계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 **사업단계별 희망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모든 사업단계에서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사업이 4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정책 수요도 일부 확인됨
- 초기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사업 외에도 시설지원, 기술개발지원, 특화산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사업(4개사)에 이어 기술개발지원(2개사), 시설지원(1개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사업(3개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5-15 | 사업단계별 희망 기업 지원정책 수요

사업단계	금융	마케팅	시설	기술개발	특화산업	기타	합계
연구개발·제품개발	2	0	1	1	0	0	4
초기 시장 진입	4	0	1	0	1	1	7
안정적 매출 확보	1	0	1	2	0	1	5
사업 확장	5	2	1	0	1	3	12
합계	12	2	4	3	2	5	28

□ 기업 지원정책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효과

○ 기업 지원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정보 접근성 부족'이 9개사(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규모의 한계'는 8개사(28.6%), '복잡한 행정절차'는 5개사(17.9%) 수준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3개사(10.7%)로 조사되었으며, '규제 및 인허가 장벽', '제반 환경의 한계', '기타'는 각각 1개사(3.6%) 수준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 지원정책 자체보다는 정책 정보 접근과 지원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 지원정책 사업의 경영상 도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가 각각 9개사(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6개사(21.4%)로 조사되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개사(10.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개사(3.6%) 수준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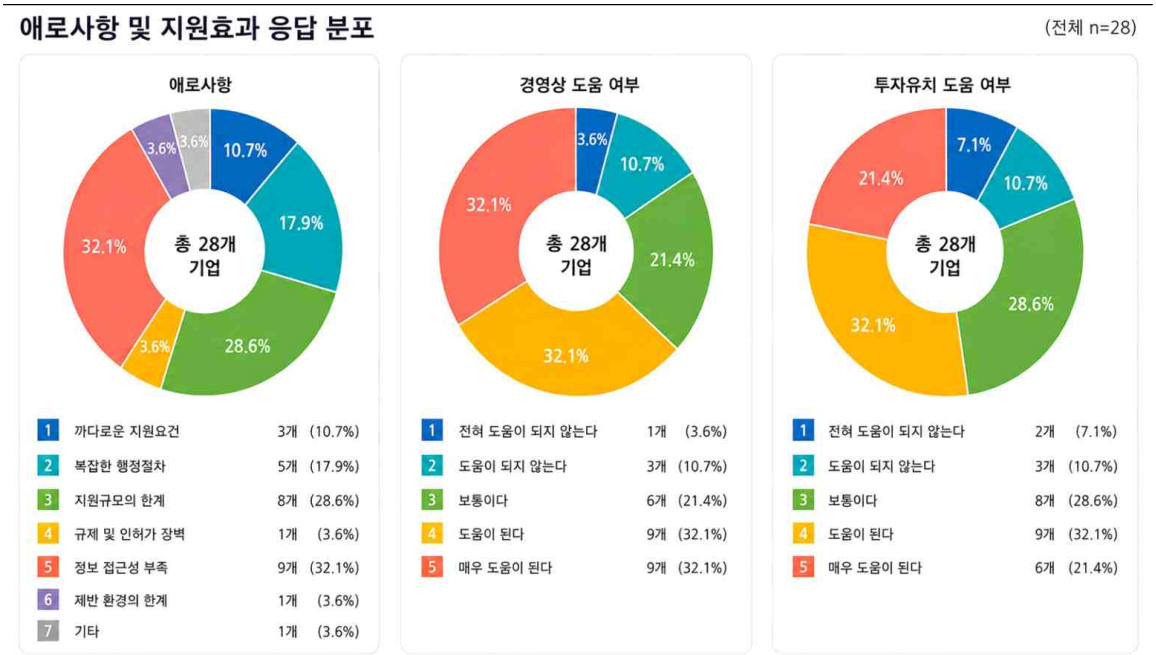
- 긍정 응답('도움이 된다' 및 '매우 도움이 된다')은 총 18개사(64.3%)로 조사되어, 다수의 기업이 기업 지원정책 사업이 실제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 지원정책 사업의 투자유치 도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가 9개사(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8개사(28.6%), '매우 도움이 된다'는 6개사(21.4%) 수준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개사(10.7%)로 확인되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개사(7.1%) 수준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은 총 15개사(53.6%)로 조사되어, 과반수의 기업이 기업 지원정책 사업이 투자유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4 | 기업 지원정책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효과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 지원정책 관련 개선 필요 의견

○ **기업들은 고양시의 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정보 접근성과 홍보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기업은 정책 관련 정보가 게시판이나 개별 홈페이지 등에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 및 전용 채널 구축 필요성을 제안함
- 또한 정책 일정과 지원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자료의 난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청년 인력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도 주요 의견으로 확인됨**

- 청년층이 고양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성도 제시됨**

- 성장 단계 기업 간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 정기적인 교류 모임, 주제별 토론 및 협업 탐색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됨

- 특히 창업 초기 지원 이후에도 기업 간 연계와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는 후속 지원 체계 필요성이 제안됨

○ **기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타남**

- 일부 기업은 창업 7년 이하 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시설 지원 필요성을 제시함
- 또한 구독형 SW 및 AI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운영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됨

○ **지원사업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응답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기업들은 단순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 접근성 개선,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과 함께, 기업 성장단계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투자유치 지원정책 현황

□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경험

○ **고양시의 투자유치 지원정책(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 등)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0%(10개사), '모른다'는 응답은 60.0%(15개사)로 나타남**

-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지원 경험을 살펴본 결과,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은 16.0%(4개사), 지원 경험이 없는 기업은 84.0%(21개사)로 나타남**

- 실제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정책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6 |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경험

구분	응답	응답수	비율(%)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 여부	예	10	40.0
	아니오	15	60.0
정책지원 경험	예	4	16.0
	아니오	21	84.0

□ 투자유치 지원정책 수혜 이후 투자유치 성과

○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유형을 살펴본 결과, Seed 단계가 3개사(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Series A 단계는 1개사(25.0%)로 나타남

○ 투자유치 금액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3개사(75.0%)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개사(25.0%)로 조사됨

○ 투자유치 소요기간은 1년 이내가 3개사(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년 이내는 1개사(25.0%)로 나타남

○ 투자유치 기여요인을 살펴본 결과,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이 2개사(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증가와 우수한 기술력은 각각 1개사(25.0%) 수준으로 조사됨

- 다만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응답 기업 수가 4개사에 불과하여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표 5-17 | 투자유치 지원정책 수혜 이후 투자유치 성과

구분	응답	응답수	비율(%)
투자유치 경험	예	4	100
유치한 투자라운드 종류	Seed	3	75.0
	Series A	1	25.0
투자 유치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25.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	75.0
투자유치 소요기간	1년 이내	3	75.0
	2년 이내	1	25.0
투자유치 기여요인	고용 증가	1	25.0
	우수한 기술력	1	25.0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2	50.0

5. 내부 설문 분석 소결

○ 고양시 내부 기업들은 수도권 접근성과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물류 여건 등을 고양시의 주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가능성,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 부족, 높은 토지 가격 및 임대료 부담,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정책 활용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나타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들은 금융지원, 시설지원,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수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성장 기반과 관련된 지원 요구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제3절 고양시 외부 정책수요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고양시 외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이전 및 투자 의향, 입지 결정 요인, 기업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특히 기업이 실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원 수준과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 개선 방향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기업환경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조사명: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설문조사(고양시 외부 기업 대상)

○ 조사 수행기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 조사 기간: 2026년 3월 27일 ~ 2026년 4월 7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나우앤서베이 활용)

○ 조사 대상: 고양시 외부 소재 기업

○ 응답 현황: 총 181명 응답, 이 중 유효 응답 131명 분석 활용

○ 분석 제외: 불성실 응답 및 중복 응답 등은 분석에서 제외

□ 조사 내용

○ 일반현황 조사

- 기업 입지 형태, 업종 및 기업 규모
- 사업 단계 및 기업 지정 여부
-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 등 기업 현황

○ 기업 이전 및 투자 요인 조사

- 향후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계획
- 이전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인
- 고양시 이전 시 희망 지원정책 우선순위

○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요 조사**

- 사업 공간 지원
- 조세 감면 지원
- 인건비 지원
- 금융 지원
- R&D 지원
- 복지 및 정주 지원
- 행정 지원 수요 등

○ **정책 실효성 및 애로사항 조사**

- 지원 수준 보장 시 실제 이전 의향
- 지자체 기업지원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 고양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인식
- 기업유치 정책 관련 자유의견 등

□ 분석 방향

○ **기업의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계획과 함께 입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유치 정책의 핵심 고려 요소를 도출함**

-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인적 자본, 정주환경, 행정지원 등 기업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요 분석에서는 사업 공간 지원, 조세 감면 지원, 인건비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복지 및 정주 지원, 행정지원 등에 대한 정책 선호도와 기대 수준을 분석함**

- 기업이 실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지원 수준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 실효성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지원 수준 보장 시 실제 이전 의향을 분석하여 기업유치 정책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단순 정책 선호 수준을 넘어 실제 기업 이전 가능성과 정책 유인 효과를 함께 파악하고자 함

○ **지자체 기업지원정책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자유의견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함**

-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행정절차, 정보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고양시 산업 여건 및 기업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투자 요인

□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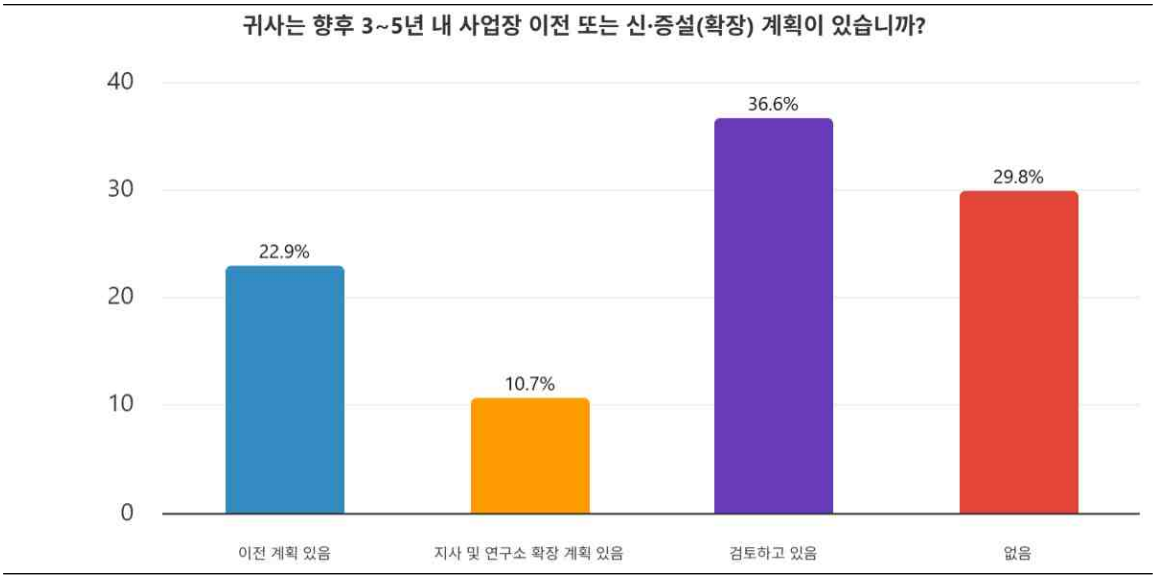
○ 향후 3~5년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48개사(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없음'은 39개사(29.8%)로 조사됨

○ 실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30개사(22.9%)였으며, 지사 및 연구소 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은 14개사(10.7%)로 확인됨

○ 이전 계획 또는 확장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44개사(33.6%) 수준으로 나타남

- 상당수가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 및 산업 입지 정책에 대한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검토하고 있음'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향후 경영환경 변화, 사업 확장,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음
-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지원정책 수준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이전 및 투자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일부 기업은 지사 및 연구소 확장 계획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본사 이전뿐 아니라 연구·생산 기능 확대와 관련된 기업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5 |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계획



□ 입지 선택 요인

○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로 80개사(61.1%)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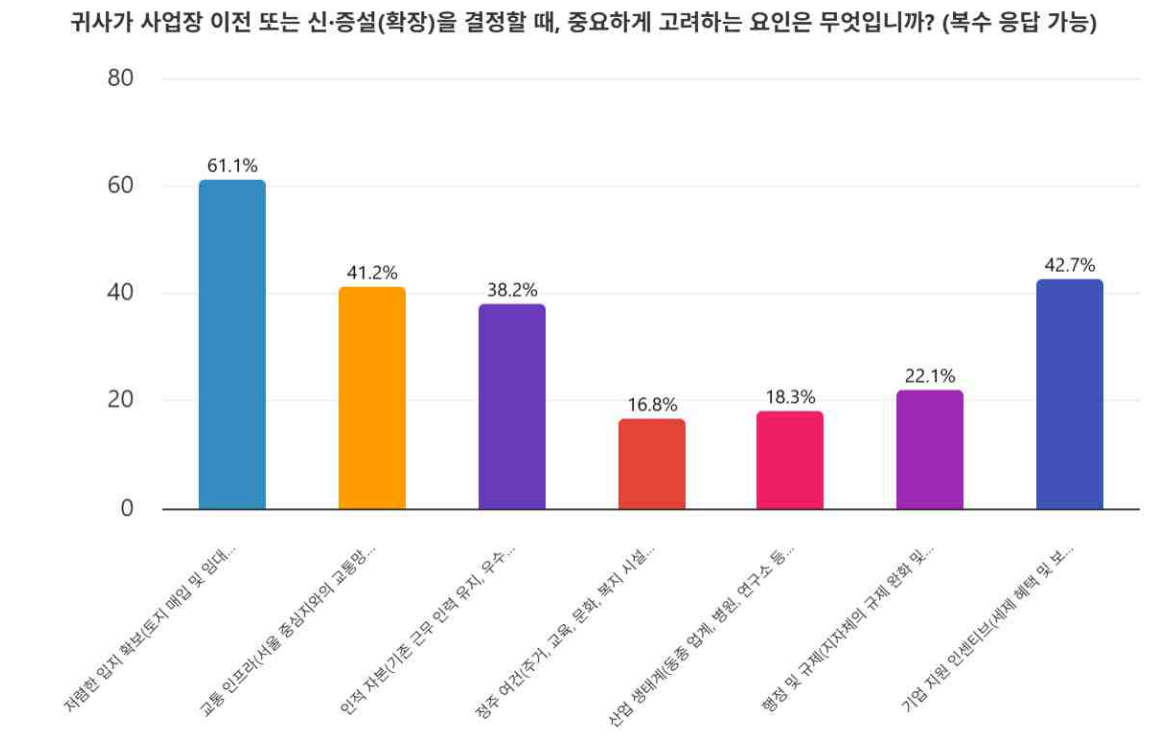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 인센티브(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 56개사(42.7%), '교통 인프라' 54개사(41.2%), '인적 자본' 50개사(38.2%) 순으로 조사됨

○ 반면, '정주 여건'은 22개사(16.8%), '산업 생태계'는 24개사(18.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과정에서 비용 부담 완화와 사업 운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입지 비용과 세제·보조금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유치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완화와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핵심적인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 확보 역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단순 비용 요인뿐 아니라 물류 접근성, 출퇴근 여건, 인력 확보 가능성 등 실제 기업 운영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산업 생태계 및 정주 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이는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제조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특성과 일부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5-6 | 입지 선택 요인



□ 사업 분야별 입지 선택 요인

○ 사업분야별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 시 중요 고려요인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가 50개사(6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지원 인센티브(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 36개사(49.3%), '인적 자본' 28개사(38.4%), '교통 인프라' 25개사(34.2%) 순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업은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이 각각 8개사(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입지 확보'와 '기업 지원 인센티브'는 각각 6개사(46.2%) 수준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이 각각 5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입지 확보'와 '기업 지원 인센티브'는 각각 4개사(40.0%) 수준으로 조사됨

- 제조업은 토지 확보 및 기업 운영 비용과 직결되는 입지 여건과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우수 인력 확보와 접근성을 중시하는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표 5-18 | 사업 분야별 입지 선택 요인

사업 분야	저렴한 입지 확보	교통 인프라	인적 자본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	행정 및 규제	기업 지원 인센티브
제조업	50	25	28	11	12	18	36
정보통신업	6	8	8	2	2	2	6
전문·과학기술	4	5	5	2	1	1	4
기타	20	16	10	6	8	7	14
합계	80	54	51	21	23	28	60

□ 기업 규모별 입지 선택 요인

○ 기업규모별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 시 중요 고려요인을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은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가 11개사(7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기업 지원 인센티브(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 6개사(40.0%), '행정 및 규제' 5개사(33.3%)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저렴한 입지 확보'가 67개사(6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 인프라'와 '기업 지원 인센티브'가 각각 49개사(44.5%), '인적 자본' 43개사(39.1%) 순으로 확인됨

○ 중견기업은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이 각각 2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저렴한 입지 확보', '인적 자본', '산업 생태계'가 각각 1개사(50.0%)로 조사됨

- 모든 기업 규모에서 저렴한 입지 확보가 주요 고려요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스타트업은 기업 지원 인센티브와 행정·규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9 | 기업 규모별 입지 선택 요인

기업규모	저렴한 입지 확보	교통 인프라	인적 자본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	행정 및 규제	기업 지원 인센티브
스타트업	11	3	4	3	3	5	6
중소기업	67	49	43	19	20	24	49
중견기업	1	2	2	0	0	0	1
대기업	1	0	1	0	1	0	0
합계	80	54	50	22	24	29	56

□ 사업단계별 입지 선택 요인

○ 사업단계별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 시 중요 고려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는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가 4개사(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지원 인센티브(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가 3개사(60.0%) 수준으로 조사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는 '저렴한 입지 확보'가 15개사(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지원 인센티브' 8개사(44.4%), '교통 인프라' 7개사(38.9%), '인적 자본' 6개사(33.3%) 순으로 확인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는 '저렴한 입지 확보'가 44개사(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 인프라' 34개사(44.7%), '기업 지원 인센티브' 33개사(43.4%), '인적 자본' 28개사(36.8%) 순으로 조사됨

○ 사업 확장 단계는 '저렴한 입지 확보'가 17개사(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적 자본' 15개사(46.9%), '교통 인프라' 13개사(40.6%), '기업 지원 인센티브' 12개사(37.5%) 순으로 확인됨

- 모든 사업단계에서 저렴한 입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초기 단계 기업은 기업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와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교통 인프라와 인적 자본 확보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사업 확장 단계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우수 인력 확보와 조직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사업단계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초기 단계 기업에는 비용 부담 완화와 정책 지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 및 확장 단계 기업에는 인력 확보와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함

표 5-20 | 사업단계별 입지 선택 요인

사업단계	저렴한 입지 확보	교통 인프라	인적 자본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	행정 및 규제	기업 지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제품개발	4	0	1	0	0	1	3
초기 시장 진입	15	7	6	4	4	5	8
안정적 매출 확보	44	34	28	11	15	17	33
사업 확장	17	13	15	7	5	6	12
합계	80	54	50	22	24	29	56

□ 기업유치 희망 지원정책 수요

○ **고양시 이전 시 희망하는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 사업 공간 지원(25.2%)과 인건비 지원(22.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사업장 이전 및 신규 입지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사업 공간 확보와 초기 운영 비용 부담 완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특히 제조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토지·공장·사무공간 확보 비용과 인건비 부담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는 금융 지원(19.1%), 조세 혜택(14.5%), R&D 지원(9.2%)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 편의 및 복지·정주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입지 초기 단계에서는 정주환경이나 행정서비스보다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및 운영 안정성과 관련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2순위 지원정책에서는 조세 혜택(22.9%)과 인건비 지원(21.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공간 지원도 19.1% 수준으로 조사됨**

- 동일 응답자가 복수 순위를 선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은 초기 입지 확보 이후 지속적인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세제 감면과 인건비 지원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경영 안정성 측면의 정책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금융 지원(13.0%)과 R&D 지원(12.2%)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술 기반 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3순위 지원정책에서는 금융 지원이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세 혜택(19.1%), 사업 공간 지원(16.8%), 인건비 지원(13.7%) 순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입지 및 운영비 절감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성장 및 확장 단계에서는 투자 확대와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시설 투자, 생산 확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중·장기 자금 수요가 정책 금융 지원 요구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유치 정책 수요는 사업 공간 지원 → 인건비 및 조세 지원 → 금융 지원 중심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우선순위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초기 입지 결정 단계에서는 공간 확보와 비용 절감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는 인건비 및 세제 부담 완화 수요가 확대되며, 성장·확장 단계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남

그림 5-7 | 기업유치 희망 지원정책 수요



□ 사업 분야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사업분야별 희망 지원정책(1순위)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인건비 지원'이 16개사(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공간 지원'과 '금융 지원'이 각각 15개사(20.5%), '조세 혜택' 12개사(16.4%) 순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업은 '금융 지원'이 4개사(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과 'R&D 지원'이 각각 3개사(23.1%) 수준으로 확인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공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각각 3개사(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 혜택', 'R&D 지원', '복지 지원', '행정 편의'는 각각 1개사(10.0%) 수준으로 조사됨

○ 기타 업종은 '사업공간 지원'이 14개사(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 7개사(20.0%), '금융 지원' 6개사(17.1%), '조세 혜택' 5개사(14.3%) 순으로 확인됨

- 제조업은 사업장 확보와 인력 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정보통신업은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공간 지원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 중심 산업 역시 기업 운영 기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21 | 사업 분야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사업 분야	사업공간	조세혜택	인건비지원	금융지원	R&D지원	복지지원	행정편의
제조업	15	12	16	15	7	4	4
정보통신업	1	1	3	4	3	1	0
전문·과학기술	3	1	3	0	1	1	1
기타	14	5	7	6	1	0	2
합계	33	19	29	25	12	6	7

□ 기업 규모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기업규모별 희망 지원정책(1순위)을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은 '금융 지원'이 5개사(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 4개사(26.7%), '사업공간 지원' 3개사(20.0%)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사업공간 지원'이 30개사(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 24개사(21.8%), '금융 지원' 18개사(16.4%), '조세 혜택' 15개사(13.6%) 순으로 확인됨

○ 중견기업은 '조세 혜택'과 '금융 지원'이 각각 2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은 '조세 혜택'과 '인건비 지원'이 각각 1개사(50.0%)로 조사되었으나, 응답 기업 수가 2개사에 불과하여 결과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함

- 스타트업은 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공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스타트업은 기업 성장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과 운영 자금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사업장 확보 및 확장을 위한 공간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견기업은 조세 혜택과 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기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 부담 완화와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스타트업은 금융 중심의 성장 지원 정책, 중소기업은 사업공간 및 인력 지원 정책, 중견기업은 투자 및 세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5-22 | 기업 규모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기업규모	사업공간	조세혜택	인건비지원	금융지원	R&D지원	복지지원	행정편의
스타트업	3	1	4	5	1	0	1
중소기업	30	15	24	18	11	6	6
중견기업	0	2	0	2	0	0	0
대기업	0	1	1	0	0	0	0
합계	33	19	29	25	12	6	7

□ 사업단계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 사업단계별 희망 지원정책(1순위)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는 '사업공간 지원', '조세 혜택', '인건비 지원', '금융 지원', '행정 편의'가 각각 1개사(20.0%)로 나타나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는 '사업공간 지원', '인건비 지원', '금융 지원'이 각각 5개사(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D 지원'이 2개사(11.1%) 수준으로 조사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21개사(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공간 지원' 19개사(25.0%), '조세 혜택' 12개사(15.8%), '금융 지원' 11개사(14.5%) 순으로 확인됨

○ 사업 확장 단계는 '사업공간 지원'과 '금융 지원'이 각각 8개사(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세 혜택' 5개사(15.6%), 'R&D 지원' 4개사(12.5%) 순으로 조사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사업공간 확보와 운영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 인건비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사업공간 지원과 금융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 기업 성장에 따른 시설 확충과 투자 자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초기 단계 기업에는 사업공간 및 운영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 기업에는 인력 확보와 사업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5-23 | 사업단계별 희망 지원정책 수요

사업단계	사업공간	조세혜택	인건비지원	금융지원	R&D지원	복지지원	행정편의
연구개발·제품개발	1	1	1	1	0	0	1
초기 시장 진입	5	1	5	5	2	0	0
안정적 매출 확보	19	12	21	11	6	4	3
사업 확장	8	5	2	8	4	2	3
합계	33	19	29	25	12	6	7

□ 사업 공간 지원

○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 수준은 3.3㎡당 50만 원 전후를 중심으로 비교적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기업들이 사업장 이전 또는 신규 입지 확보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보다는 실제 입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사업장 확보 비용은 기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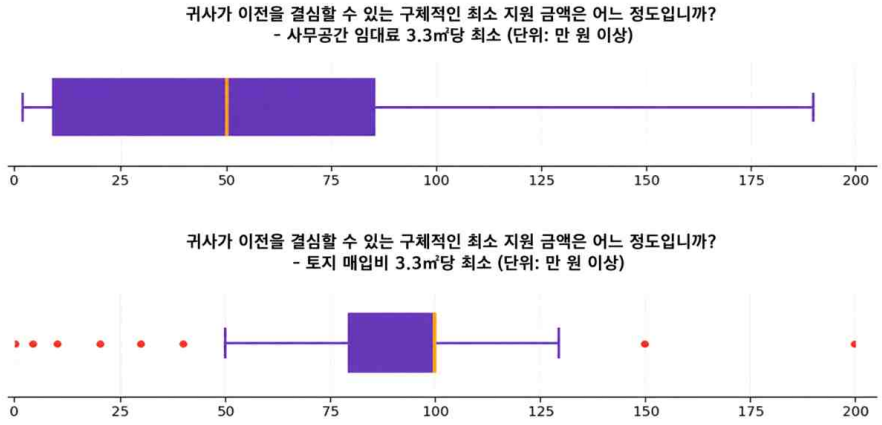
○ **토지 매입비 지원 수준은 3.3㎡당 70만 원~100만 원 수준 구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토지 확보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생산시설 및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응답은 일정 범위 내의 현실적 수준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 기업 간 규모, 업종, 사업 단계 등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일정 범위 내의 현실적 지원 수준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직접적인 입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기업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8 | 사업 공간 지원



○ 앞선 조사에서 사업 공간 지원과 토지 매입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해당 지원 금액이 실제로 보장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6개사(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들은 입지 비용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이전 결정에는 인력 수급,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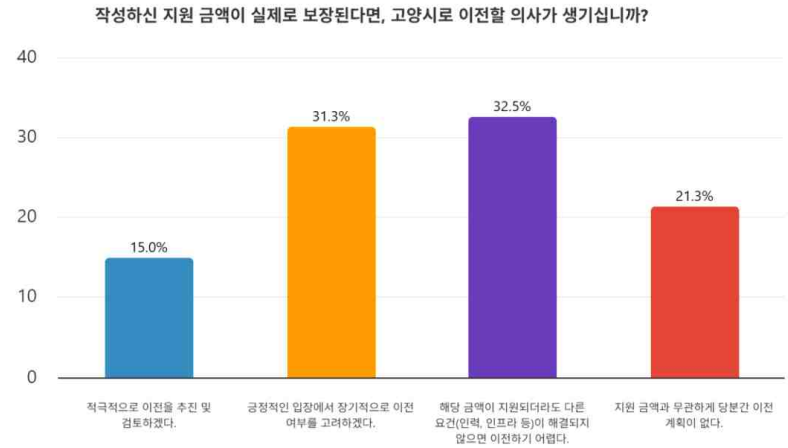
○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5개사(31.3%)로 조사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2개사(15.0%)로 나타남

- 사업 공간 지원 등 직접적인 비용 지원 정책은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지원 금액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7개사(21.3%)로 조사됨

- 일부 기업은 재정 지원보다 현재 입지의 안정성 및 기존 사업 환경 유지에 더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9 | 이전 의사(1)



□ 조세 혜택

○ 취득세 감면 지원 수요는 주요 응답이 50%~70% 수준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자산 취득 비용 부담 완화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제조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토지·시설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기업 입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감면 지원은 주요 응답이 50% 수준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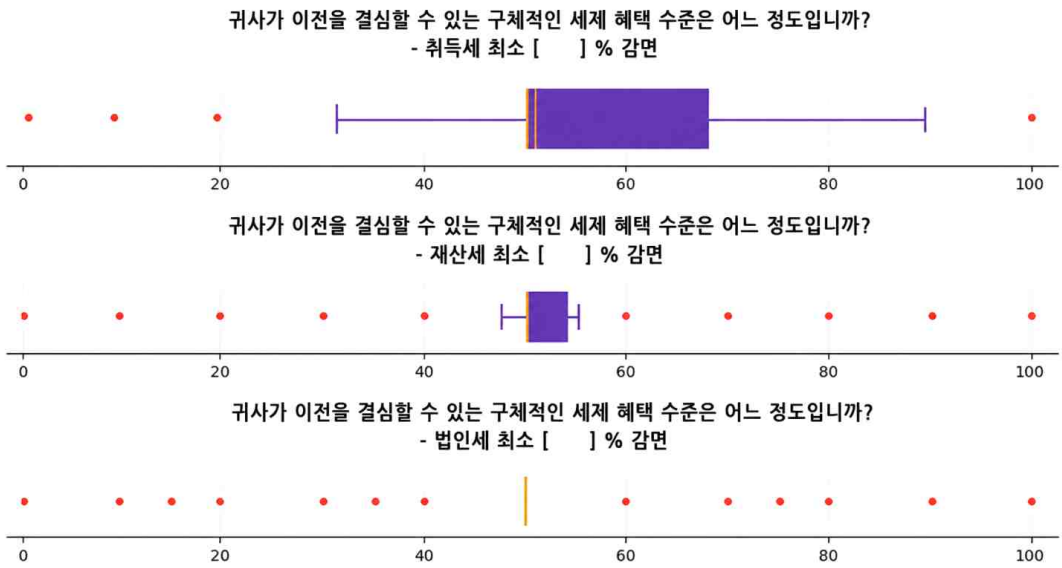
- 기업들이 사업장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유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장기적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인세 감면 지원 수요 역시 50% 수준 응답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전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순이익 및 투자 여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성장 단계 기업이나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과정에서 단순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세제 부담 완화 정책을 매우 중요한 기업유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0 | 조세 혜택



○ 앞선 조사에서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작성한 세제 혜택 수준이 실제로 보장될 경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9개사(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세제 감면 정책이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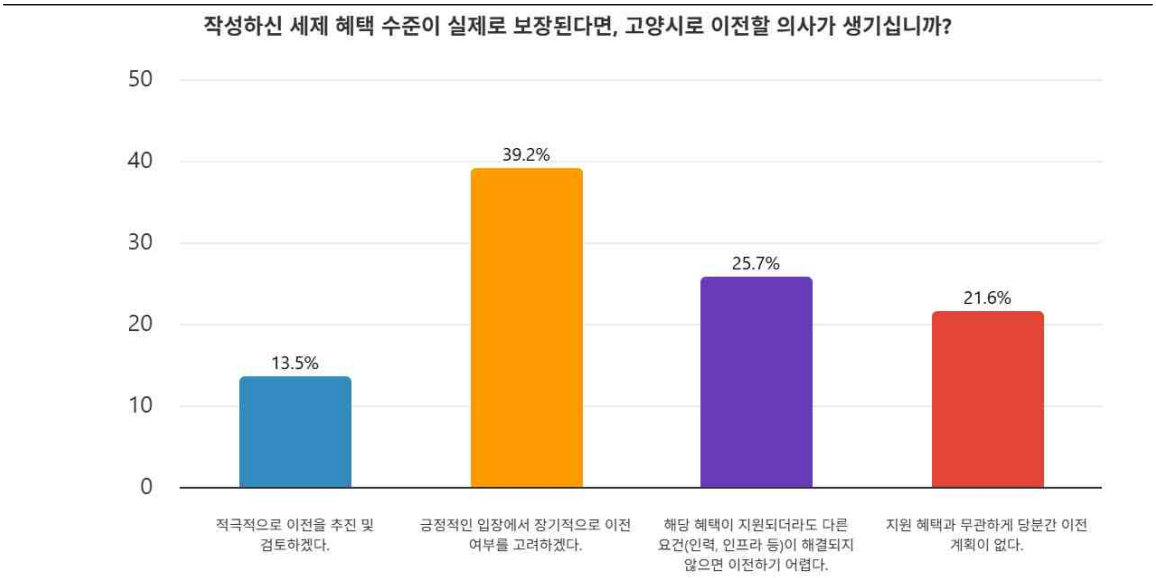
○ '해당 혜택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9개사(25.7%)로 조사됨

-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함께 인력 확보,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원 혜택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6개사(21.6%)였으며,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10개사(13.5%)로 확인됨

- 일부 기업은 세제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기존 사업 기반 유지와 현재 입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1 | 이전 의사(2)



□ 인건비 지원

○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1인당 고용보조금 지원 수준은 50만 원~100만 원 구간에 주요 응답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 및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기업 운영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기업은 200만 원~300만 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 기업 규모, 필요 인력 수준 등에 따라 인력 확보 비용 부담에 차이가 존재함
-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한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기반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채용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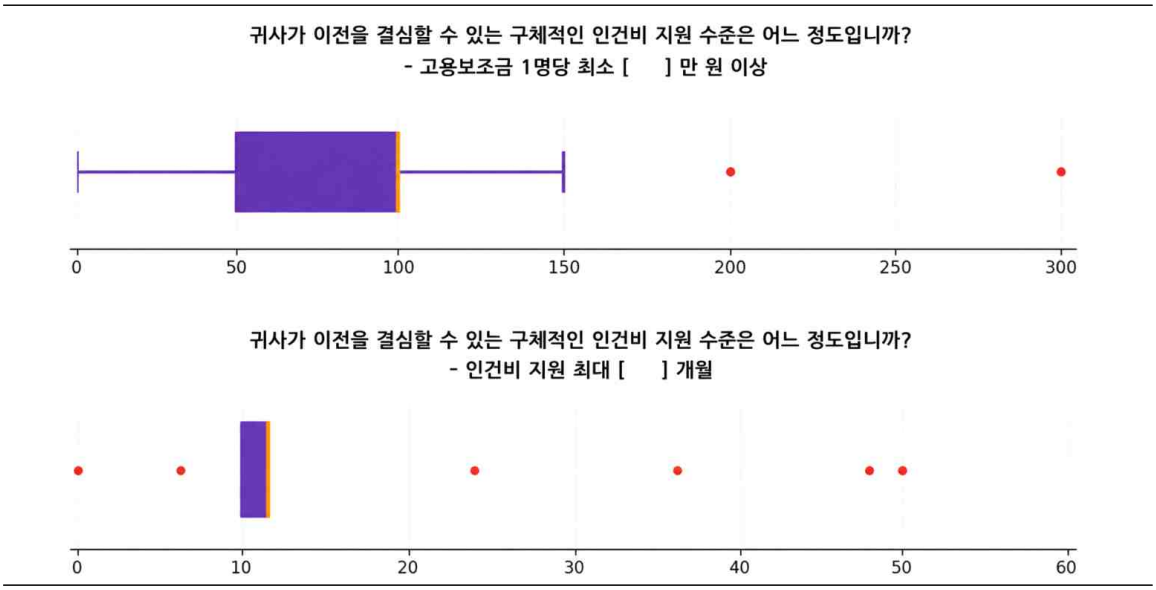
○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주요 응답이 약 10개월~12개월 수준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단기적 일회성 지원보다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속형 인건비 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일부 응답에서는 24개월 이상의 장기 지원 필요성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정착 이후에도 인력 유지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채용 지원뿐 아니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5-12 | 인건비 지원



○ 앞선 조사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작성한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될 경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9개사(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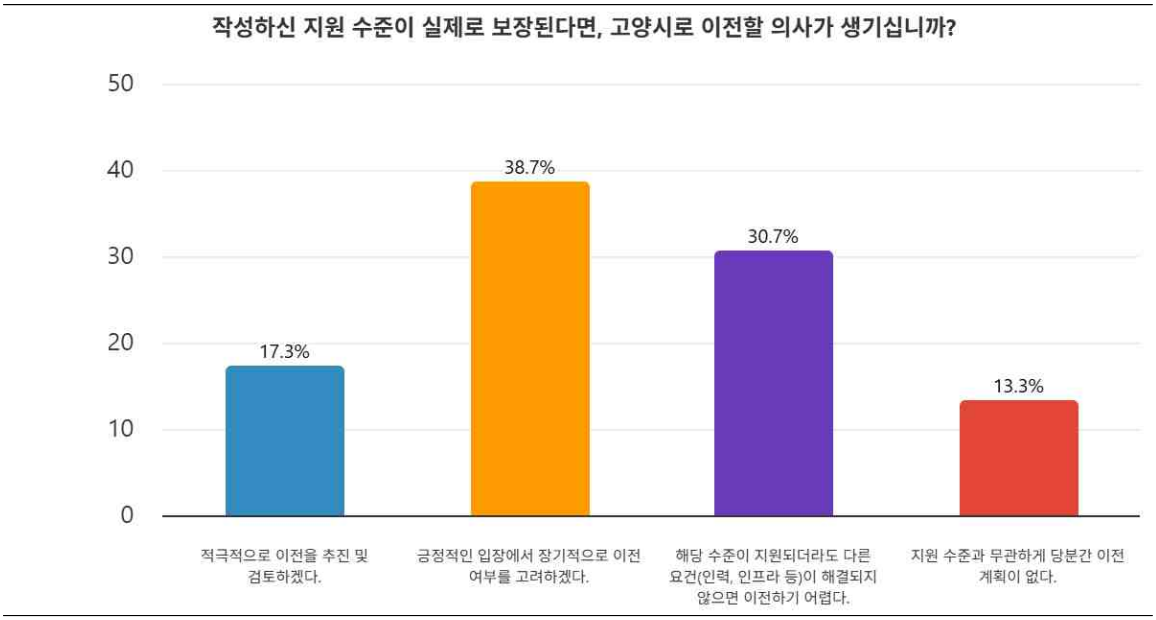
○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3개사(30.7%)로 조사됨

- 기업들은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인력 확보 여건,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13개사(17.3%)로 확인되었으며,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0개사(13.3%)로 나타남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보조금 정책은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 이전 결정에는 다양한 입지 및 경영 여건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3 | 이전 의사(3)



□ 금융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 수요를 살펴보면, 주요 응답은 2%~3% 수준 구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의 이자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중소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부담 완화는 기업 운영 안정성과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기업은 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이자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9% 수준의 응답 사례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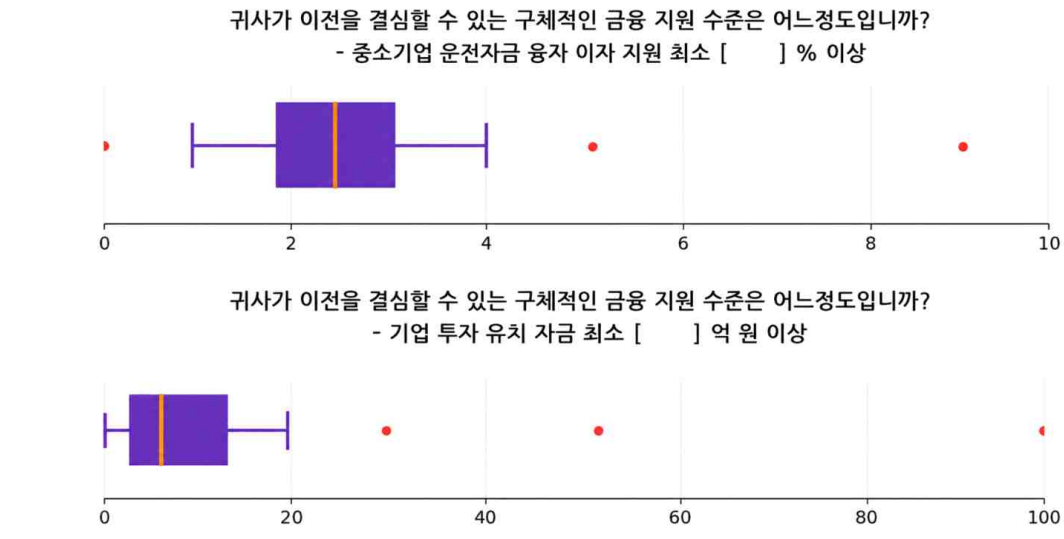
○ 기업 투자유치자금 지원 규모는 주요 응답이 약 3억 원~15억 원 수준 구간에 집중됨

- 기업들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자금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제조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생산시설 확보, 장비 투자, 연구개발 확대 등에 필요한 중규모 이상의 자금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일부 기업은 30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유치자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0억 원 수준의 응답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단순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비용 완화와 투자자금 확보를 중요한 기업유치 정책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4 | 금융 지원



○ 앞선 조사에서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과 기업투자유치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될 경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6개사(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성 금융 지원이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투자유치자금 지원 수준이 보장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0개사(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23개사(28.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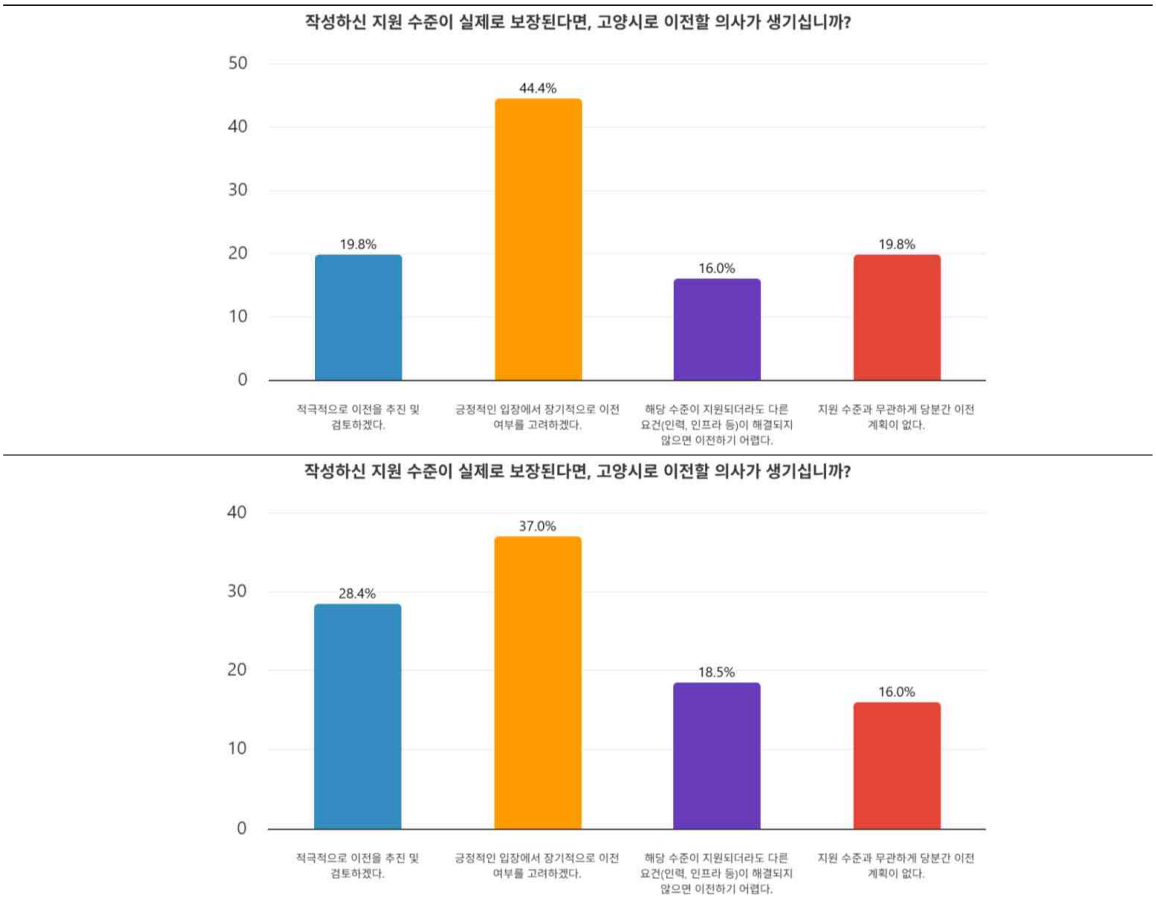
- 투자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정책은 기업의 적극적인 이전 의향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두 항목 모두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13개사(16.0%), 15개사(18.5%)로 확인됨

- 기업들은 금융 지원과 함께 인력 확보, 산업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15 | 이전 의사(4)



□ R&D 지원

○ 기업이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지원 혜택으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25개사(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은 연구개발 수행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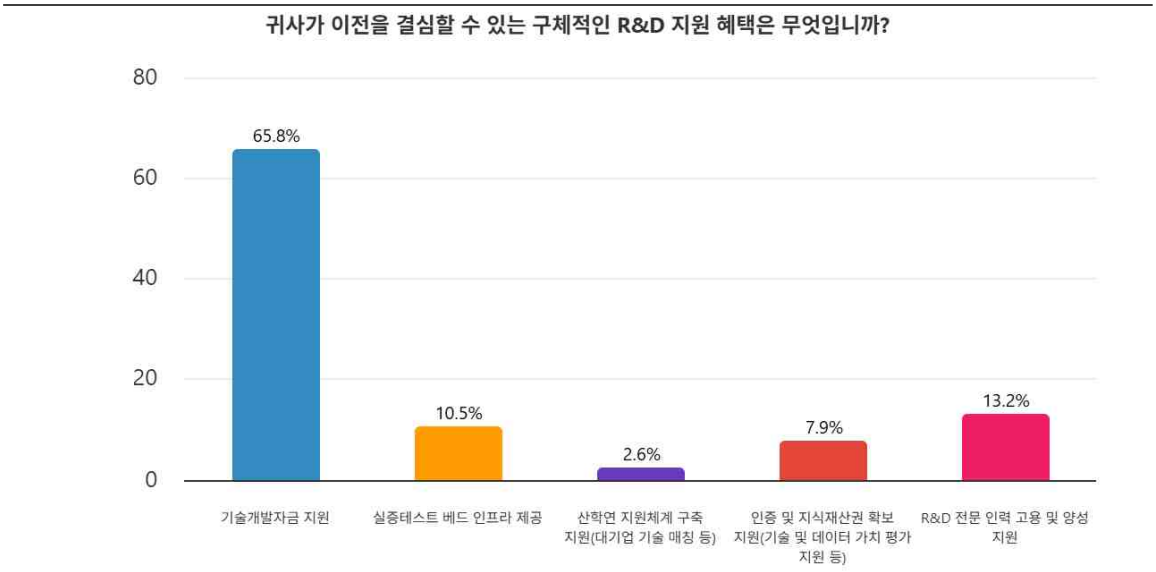
○ 'R&D 전문 인력 고용 및 양성 지원'은 5개사(13.2%),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제공'은 4개사(10.5%)로 조사됨

- 인력 확보와 실증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은 3개사(7.9%),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1개사(2.6%)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협력체계 구축이나 간접 지원보다는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 연결되는 지원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6 | R&D 지원



○ 앞선 조사에서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R&D 전문 인력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택한 R&D 지원 혜택이 실제로 보장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3개사(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들은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함께 산업 인프라, 전문인력 확보, 교통 접근성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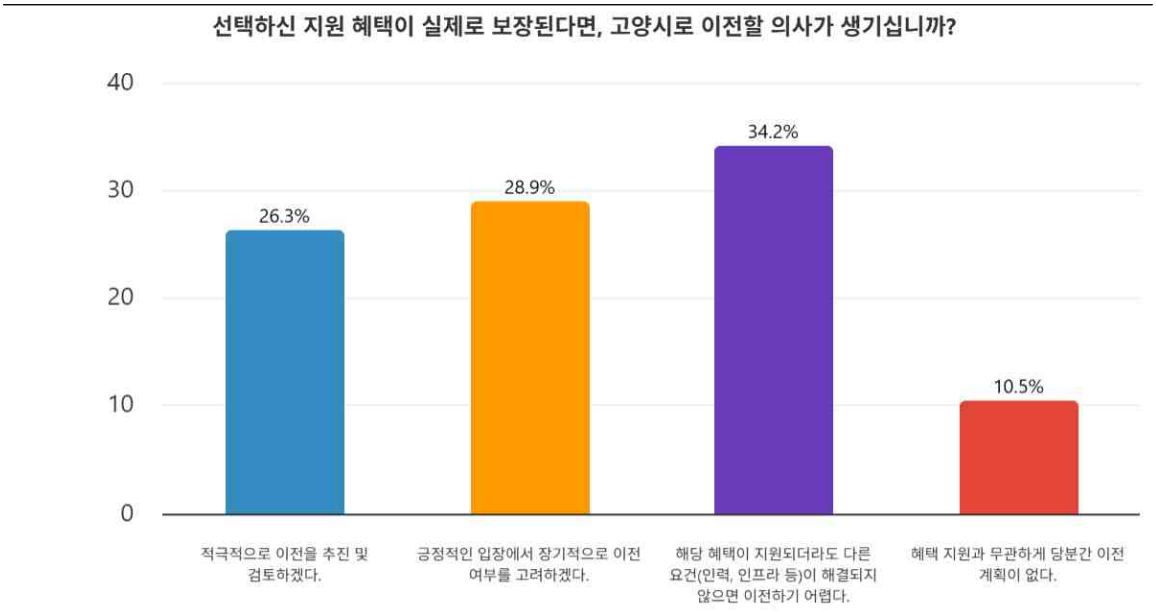
○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1개사(28.9%),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10개사(26.3%)로 조사됨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지원 정책은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혜택 지원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개사(10.5%)로 나타남

- 일부 기업은 연구개발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기존 사업 기반 유지와 현재 입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7 | 이전 의사(5)



□ 복지

○ 기업이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및 정주 지원 혜택으로는 '기숙사 건립 지원 및 주거비 보조'가 11개사(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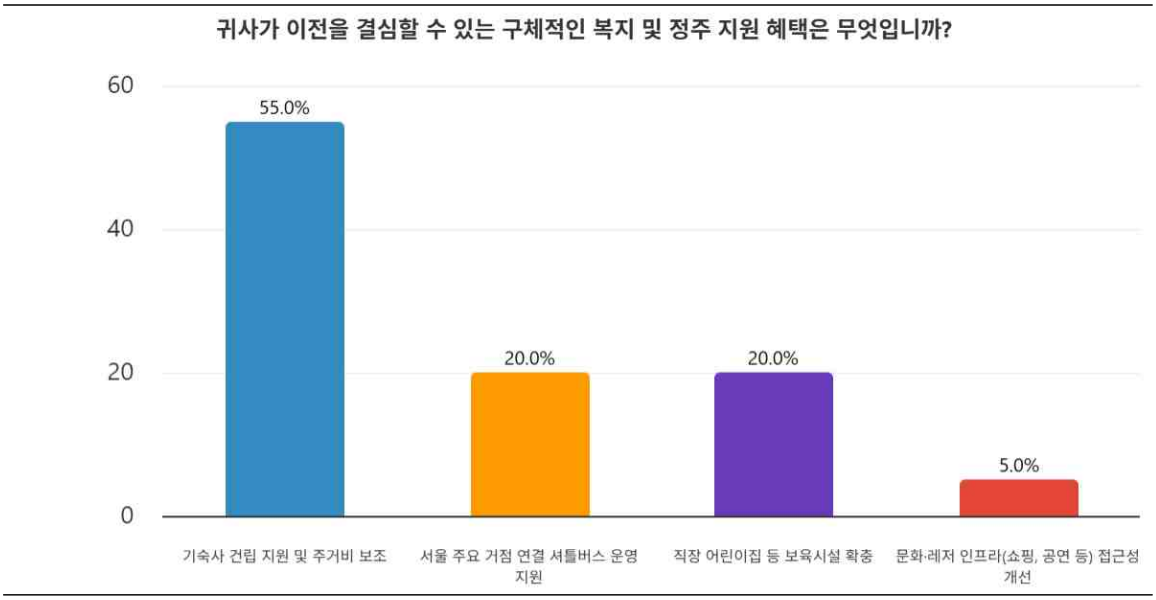
○ '서울 주요 거점 연결 셔틀버스 운영 지원'과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은 각각 4개사(20.0%)로 조사됨

- 교통 접근성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문화·레저 인프라 접근성 개선'은 1개사(5.0%)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문화·여가 요소보다는 실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출퇴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원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8 | 복지



○ 앞선 조사에서 기숙사 건립 지원 및 주거비 보조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택한 복지 및 정주 지원 혜택이 실제로 보장될 경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0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복지 및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이 기업의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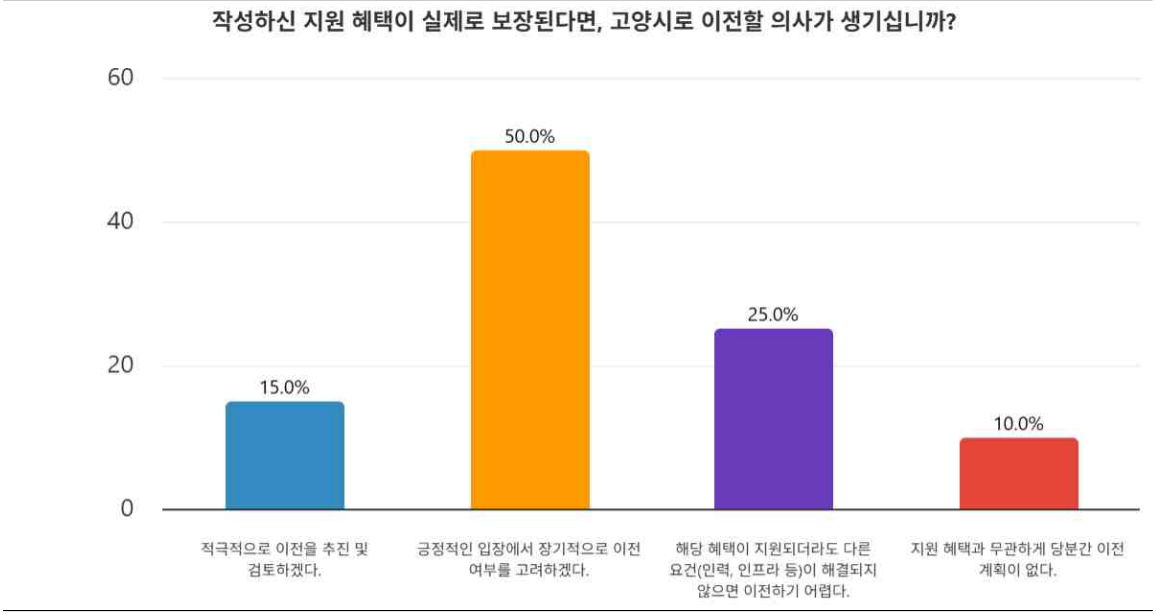
○ '해당 혜택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개사(25.0%)로 조사됨

- 기업들은 복지 지원과 함께 인력 확보, 산업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3개사(15.0%), '지원 혜택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개사(10.0%)로 확인됨

- 일부 기업은 복지 및 정주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기존 사업 기반 유지와 현재 입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19 | 이전 의사(6)



□ 행정 편의

○ 주관식 의견에서는 세제 감면, 임대료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형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수 확인되며, 초기 이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 교통 접근성 및 기업활동 편의와 관련된 요구도 다수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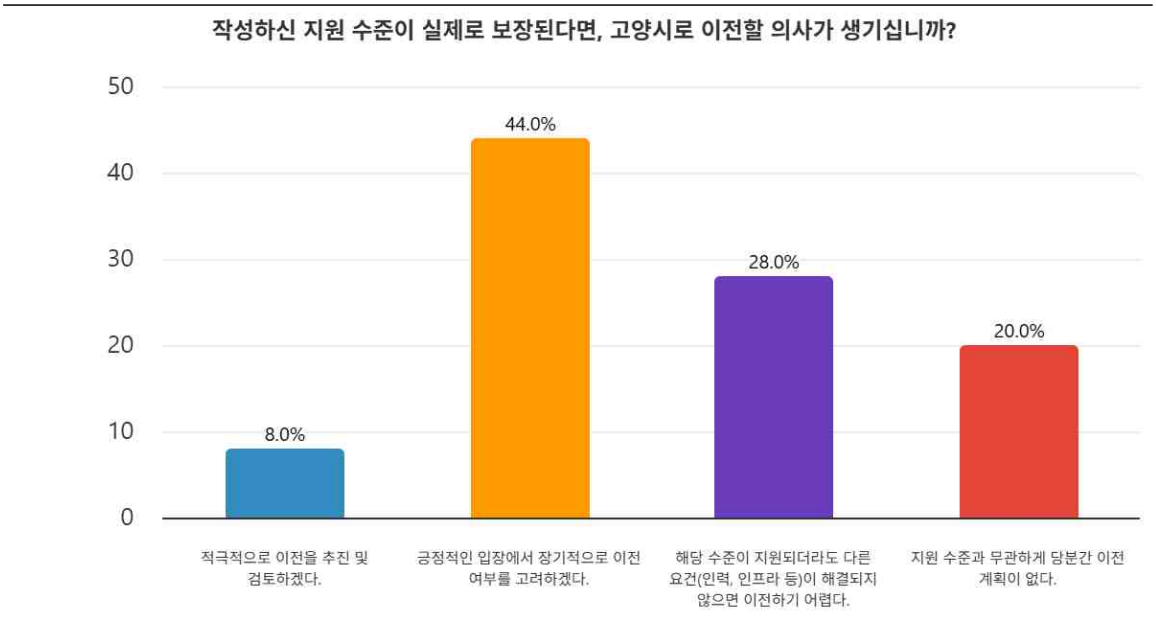
- 서울 주요 지역과의 교통 연결성,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 기업 운영 효율성과 연계를 요구함

○ 규제 및 실증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되며, 화학물질·위험물·대기환경 관련 행정 편의, 공공시설 실증 참여 기회 제공, 시장진입 지원 등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이전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확인됨

- 재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시장 접근성, 기업 성장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경영환경이 이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됨

그림 5-20 | 이전 의사(7)



○ 앞선 조사에서 세제 감면, 원스톱 행정 서비스, 규제 및 인허가 관련 행정 편의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작성한 행정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될 경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1개사(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친화적 지원체계가 이전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개사(28.0%)로 조사됨

- 행정 지원과 함께 교통 접근성, 산업 인프라,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남

○ 반면,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개사(20.0%),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2개사(8.0%)로 확인됨

- 일부 기업은 행정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현재 사업 기반 유지와 기존 입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고양시 인프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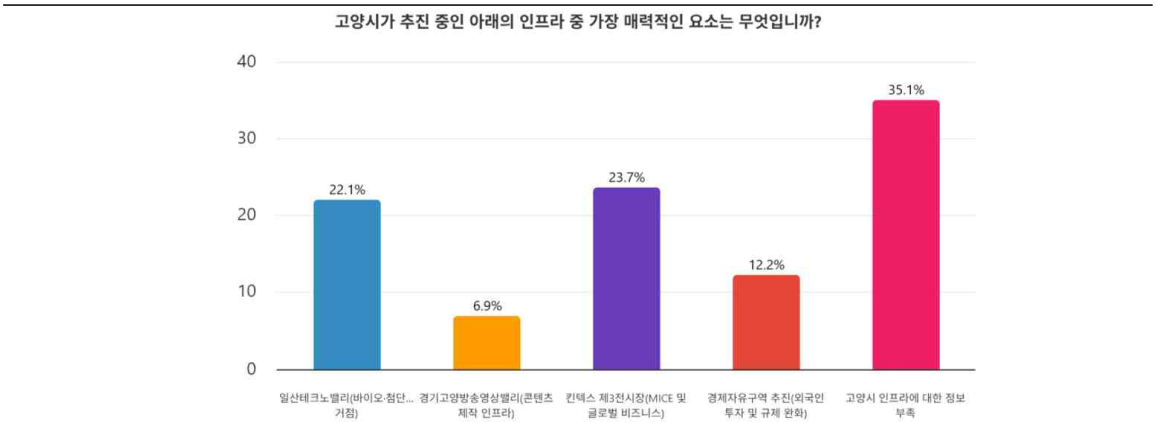
○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는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46개사(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양시의 주요 개발사업 및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킨텍스 제3전시장(MICE 및 글로벌 비즈니스)'이 31개사(23.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산테크노밸리(바이오·첨단제조 거점)'는 29개사(22.1%)로 조사됨

-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기반 인프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16개사(12.2%),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는 9개사(6.9%) 수준으로 나타나며, 콘텐츠 산업 및 제도적 특구 조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21 | 고양시 인프라 인식



□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사업분야별 고양시의 긍정적 평가요인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25개사(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산테크노밸리' 19개사(26.0%), '킨텍스 제3전시장' 17개사(23.3%) 순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업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5개사(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은 각각 2개사(15.4%) 수준으로 확인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5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3개사(30.0%) 수준으로 조사됨

○ 기타 업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14개사(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산테크노밸리' 8개사(22.9%), '킨텍스 제3전시장' 6개사(17.1%) 순으로 확인됨

- 대부분 산업에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은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기타 업종에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양시가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기업 지원 환경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표 5-24 | 사업 분야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사업 분야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 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경제자유구역 추진	고양시 인프라 정보 부족
제조업	19	2	17	10	25
정보통신업	2	2	5	2	2
전문·과학기술	0	1	3	1	5
기타	8	4	6	3	14
합계	29	9	31	16	46

□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기업규모별 고양시 주요 산업 인프라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7개사(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산테크노밸리' 5개사(33.3%)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35개사(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29개사(26.4%), '일산테크노밸리' 23개사(20.9%), '경제자유구역 추진' 15개사(13.6%) 순으로 확인됨

○ 중견기업은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2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은 각각 1개사(25.0%) 수준으로 조사됨

○ 대기업은 모두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 기업 수가 매우 적어 결과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기업 규모에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은 킨텍스 제3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고양시 주요 산업 인프라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한 기업 대상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표 5-25 | 기업 규모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기업규모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 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경제자유구역 추진	고양시 인프라 정보 부족
스타트업	5	1	1	1	7
중소기업	23	8	29	15	35
중견기업	1	0	1	0	2
대기업	0	0	0	0	2
합계	29	9	31	16	46

□ 사업단계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 사업단계별 고양시 주요 산업 인프라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는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3개사(6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각각 1개사(20.0%) 수준으로 조사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는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7개사(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산테크노밸리' 6개사(33.3%),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각각 2개사(11.1%) 수준으로 확인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24개사(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22개사(28.9%), '일산테크노밸리' 17개사(22.4%), '경제자유구역 추진' 11개사(14.5%) 순으로 조사됨

○ 사업 확장 단계는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이 14개사(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은 각각 5개사(15.6%) 수준으로 확인됨

- 모든 사업단계에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와 사업 확장 단계에서 정보 부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산업 인프라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기업유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추진 현황, 활용 가능성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5-26 | 사업단계별 고양시 인프라 인식

사업단계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 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경제자유구역 추진	고양시 인프라 정보 부족
연구개발·제품개발	1	0	0	1	3
초기 시장 진입	6	2	2	1	7
안정적 매출 확보	17	2	24	11	22
사업 확장	5	5	5	3	14
합계	29	9	31	16	46

□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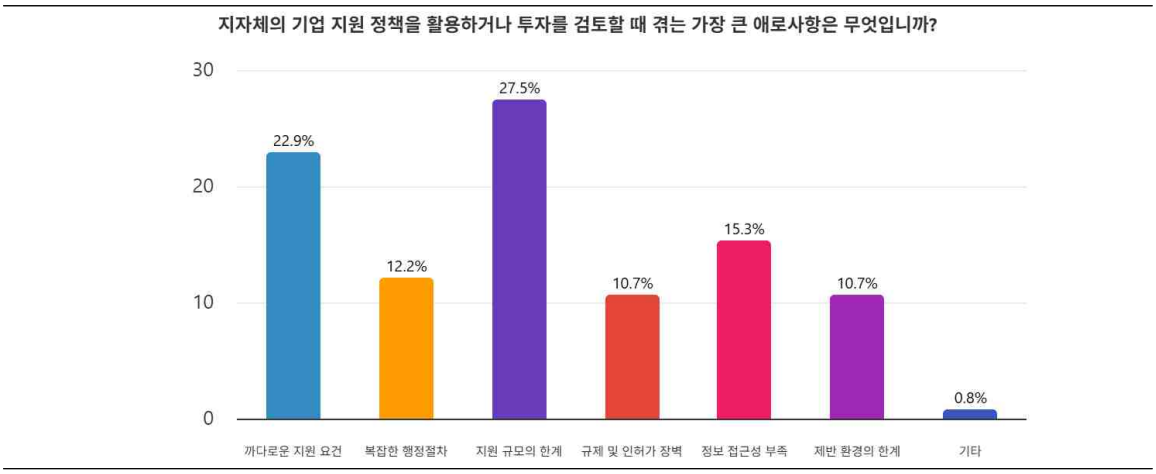
○ 지자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거나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원 규모의 한계'가 36개사(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까다로운 지원 요건'은 30개사(22.9%)로 조사됨

○ '정보 접근성 부족'은 20개사(15.3%), '복잡한 행정절차'는 16개사(12.2%)로 나타나며, 기업의 정책 활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규제 및 인허가 장벽'과 '제반 환경의 한계'는 각각 14개사(10.7%)로 동일하게 조사됨

- 기업들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입지·제도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5-22 |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사업 분야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사업분야별 기업 지원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가 21개사(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 15개사(20.5%), '규제 및 인허가 장벽' 11개사(15.1%), '제반 환경의 한계' 10개사(13.7%) 순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가 4개사(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 부족' 3개사(23.1%),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및 인허가 장벽'이 각각 2개사(15.4%) 수준으로 확인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지원 규모의 한계'가 각각 3개사(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 부족' 2개사(20.0%), '복잡한 행정절차' 2개사(20.0%) 순으로 조사됨

○ 기타 업종은 '까다로운 지원요건'이 11개사(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원 규모의 한계' 8개사(22.9%), '정보 접근성 부족' 7개사(20.0%), '복잡한 행정절차' 5개사(14.3%) 순으로 확인됨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기타 업종은 까다로운 지원요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정보 접근성 부족과 행정절차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절차 개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 접근성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5-27 | 사업 분야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사업 분야	까다로운 지원요건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규모 한계	규제 및 장벽	정보접근성 부족	제반 환경 한계	기타
제조업	15	7	21	11	8	10	1
정보통신업	1	2	4	2	3	1	0
전문·과학기술	3	2	3	0	2	0	0
기타	11	5	8	1	7	3	0
합계	30	16	36	14	20	14	1

□ 기업 규모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기업 지원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은 '까다로운 지원요건'이 5개사(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반 환경의 한계' 4개사(26.7%), '지원 규모의 한계' 3개사(20.0%)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가 31개사(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 24개사(21.8%), '정보 접근성 부족' 19개사(17.3%), '복잡한 행정절차' 15개사(13.6%) 순으로 확인됨

○ 중견기업은 '규제 및 인허가 장벽'이 3개사(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지원요건'은 1개사(25.0%) 수준으로 조사됨

○ 대기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가 2개사(100.0%)로 나타났으나, 응답 기업 수가 매우 적어 결과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스타트업은 지원요건과 제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지원 규모의 한계와 정보 접근성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에서 지원 규모의 한계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정책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요건과 기업 성장 기반 측면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요건 완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5-28 | 기업 규모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기업규모	까다로운 지원요건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규모 한계	규제 및 장벽	정보접근성 부족	제반 환경 한계	기타
스타트업	5	1	3	1	1	4	0
중소기업	24	15	31	10	19	10	1
중견기업	1	0	0	3	0	0	0
대기업	0	0	2	0	0	0	0
합계	30	16	36	14	20	14	1

□ 사업단계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 사업단계별 기업 지원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는 '까다로운 지원요건',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규모의 한계', '정보 접근성 부족', '기타'가 각각 1개사(20.0%)로 나타나 특정 애로사항으로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는 '지원 규모의 한계'가 5개사(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반 환경의 한계' 4개사(22.2%),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정보 접근성 부족'이 각각 3개사(16.7%) 수준으로 조사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는 '까다로운 지원요건'이 20개사(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원 규모의 한계' 17개사(22.4%), '정보 접근성 부족' 13개사(17.1%) 순으로 확인됨

○ 사업 확장 단계는 '지원 규모의 한계'가 13개사(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 6개사(18.8%),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및 인허가 장벽'이 각각 4개사(12.5%) 수준으로 조사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와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지원 규모의 한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에서는 까다로운 지원요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 확장 단계에서 지원 규모의 한계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금 및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초기 단계 기업에는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성장·확장 단계 기업에는 보다 실질적인 규모의 지원과 정책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함

표 5-29 | 사업단계별 기업 지원정책 애로사항

사업단계	까다로운 지원요건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규모 한계	규제 및 장벽	정보접근성 부족	제반 환경 한계	기타
연구개발·제품개발	1	1	1	0	1	0	1
초기 시장 진입	3	2	5	1	3	4	0
안정적 매출 확보	20	9	17	9	13	8	0
사업 확장	6	4	13	4	3	2	0
합계	30	16	36	14	20	14	1

□ 기업유치 지원정책 관련 건의사항(자유의견)

○ 지자체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자유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적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비용 절감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나타남

○ 특히 자금지원, 인건비 지원, 임대료 지원, 세제 감면 등 기업 운영비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수 확인됨

- 단순한 정책 존재보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또한 지원 규모가 작거나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어, 현재 정책 수준으로는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인됨

○ 행정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요건 완화, 서류 간소화 등 정책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개선 요구가 나타남

- 기업 입장에서 정책 활용 과정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교통 접근성 개선,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강화 등 인력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 요구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됨

- 기업 이전 결정 시 인력 문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일부 응답에서는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공공시설 연계, 인턴십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사업 기회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제시됨

-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기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됨

○ 전반적으로 기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해 재정 지원 + 행정 효율성 + 인프라·인력 환경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 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일 정책이 아닌 패키지형 정책 필요성이 확인됨

3. 외부 설문 분석 소결

○ **고양시 외부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저렴한 입지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형 지원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공간 지원, 인건비 지원,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나 기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부담 완화가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교통 접근성, 인적 자본 확보, 산업 인프라 등 실제 기업 운영환경과 관련된 요소 역시 중요한 이전 결정 요인으로 확인됨**

- 일부 기업은 지원 수준이 보장되더라도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교통 인프라 등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 **기업유치 정책 활용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의 한계, 까다로운 지원 요건, 정보 접근성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고양시 주요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업유치 정책과 산업 인프라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산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정주 및 주거 지원 등 성장 기반 조성과 연계된 정책 수요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제4절 고양시 전략산업 도출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고양시는 인구 105.8만의 특례시임에도 자족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옴

○ 과밀억제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의 3중 규제 아래에서 전통 제조업형 기업유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반면, 킨텍스·국립암센터·관내 대형병원·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항공대 등 활용되지 못한 자산이 관내에 산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첨단산업 현장 전문가의 경험적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양시의 입지 조건과 정합적인 전략산업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그 성립 조건과 정책 개입 지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질문

○ 주질문: 고양시에 적합한 전략산업은 무엇이며, 그 근거(입지 요인·생태계 조건·정책 수요)는 무엇인가?

○ 부질문: ① 첨단산업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② 고양시의 자산과 제약은 산업별 적합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③ 기업 유치·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설계 아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Braun & Clarke(2006)의 6단계(자료 친숙화→초기 코드 생성→주제 탐색→주제 검토→주제 정의·명명→보고)를 준용함

○ 개방코딩은 근거이론의 절차를 차용하여 수행하고, 통합분석 단계에서 축코딩으로 상위 범주를 구성한 뒤 전사문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도출함

□ 연구 참여자

○ 참여자는 후보 산업(바이오·의료, AI·클라우드, 로봇, 드론·UAM·항공, 양자, 반도체, 물류, 방산, 푸드테크) 전반을 포괄하도록 목적 표집함

○ 대기업·스타트업·학계·공공기관을 교차시켜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함

표 5-30 | 연구참여자 목록

코드	소속 유형	직위·전문분야	관련 산업	자료 형태
P01	공공병원	연구직(의료AI·연합학습·양자암호)	바이오·의료, AI, 양자	대면 인터뷰
P02	스타트업(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사업부 팀장	로봇, AI, 모빌리티	대면 인터뷰
P03	스타트업(푸드테크·농식품, AI)	대표	푸드테크, AI	대면 인터뷰
P04	대기업(건설, K-UAM 국책과제 참여)	UAM 인프라 실무자	UAM, 건설·부동산	대면 인터뷰
P05	대기업(클라우드 MSP)	양자컴퓨팅 담당	양자,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대면 인터뷰
P06	대기업(방산, 유도무기 PGM)	사업부 실무자	방산, 드론, 우주	대면 인터뷰
P07	스타트업(물류 플랫폼·포워딩)	대표	물류, 모빌리티	대면 인터뷰
P08	학계	교수(스마트물류)	물류, AI	대면 인터뷰
P09	스타트업(AI 솔루션·제조 AX)	대표	AI/클라우드	대면 인터뷰
P10	스타트업(디지털헬스케어, 공공병원 스핀오프)	대표(내과의사)·임원(공학박사)	디지털헬스케어	대면 인터뷰(1차)
P11	상동	상동	상동	대면 인터뷰(2차)
P12	스타트업(물류테크·AI)	이사	스마트물류, 모빌리티	대면 인터뷰
P13	시스템반도체 지원기관	실장	반도체(팹리스)	대면 인터뷰
P14	학계	박사(안티드론·탐지 식별)	드론, 방산, AI	대면 인터뷰
P15	학계(정보보안암호학)	교수(양자암호)	양자암호, 통신	대면 인터뷰
P16	대기업(반도체)	엔지니어	반도체, 양자	대면 인터뷰
P17	대기업(통신사)	연구직(양자암호)	양자암호, 통신	대면 인터뷰
P18	대기업(클라우드)·양자혁신랩	팀장(이사)	AI/클라우드, 양자, 데이터센터	서면 답변
P19	스타트업(실외 배송로봇)	임직원	로봇, AI, 모빌리티	서면 답변
P20	학계	교수(UAM 기체)	드론, UAM, 항공	대면 인터뷰
P21	학계	교수(항공관제)	UAM, 드론, 물류	대면 인터뷰

주: P10·P11은 동일 기관의 1·2차 인터뷰로 집계 시 1개 사례로 처리하였음. 이에 따라 전사 자료는 21건, 독립 참여 단위는 20개임(이하 빈도는 n=20 기준).

□ 자료 수집

○ 자료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된 전문가 인터뷰 전사문 21건, 총 약 60만 자임

○ 자료 형태는 대면 심층 인터뷰 19건, 서면 답변 2건

□ 분석 절차

○ 분석은 ①개방코딩 ②축코딩 ③주제 도출의 3단계로 진행하였음. 1단계에서 4개 독립 코딩팀(C1: P01~P05, C2: P06~P11, C3: P12~P16, C4: P17~P21)이 공통 코딩 프레임(산업 전망, 입지 강점·약점, 인프라·인력·정책 수요, 생태계) 아래 총 466개의 개방코드를 생성함

○ 2단계에서 통합분석팀이 4개 팀의 코드를 교차 검토하여 5개 상위 범주로 재구성하였고(축코딩), 3단계에서 전사문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5개를 도출한 뒤 산업별 적합성 분석과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전략산업 우선순위를 확정함

○ 분석 도구로 AI 언어모델 기반 다중 코더(4개 독립 코딩팀)를 활용하였으며, 통합·해석 단계는 연구진의 검토를 거침

□ 신뢰성 확보 전략

○ 첫째, 연구자(코더) 삼각화로서 4개 코딩팀이 독립적으로 코딩한 뒤 통합분석에서 교차 비교함

○ 둘째, 모든 코드에 전사문 원문 인용을 결부시켜 감사추적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부정적 사례 분석으로서 각 후보 산업에 대한 반대·유보 진술(예: "AI 특구 같은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P03])을 의도적으로 수집·대조함

○ 넷째, 대기업·스타트업·학계·공공, 긍정론자·회의론자를 포괄하는 참여자 다양화로 단일 관점 편향을 완화함

3. 연구 결과

1) 코딩 결과 개관

○ 개방코딩 결과 총 466개 코드가 생성되었음(C1 106개, C2 139개, C3 119개, C4 102개). 축코딩을 통해 이를 5개 상위 범주, 23개 중범주로 통합함(복수 범주 해당 코드는 주된 범주 기준)

표 5-31 | 코딩 결과

상위 범주	중범주	코드 수(약)	주요 출처
A. 산업 기회 구조	피지컬 AI·로봇 상용화 임박 / 디지털헬스케어 필연론 / 반도체 슈퍼사이클 / 양자·UAM의 시장 미성숙	118	전 사례
B. 고양시 입지 자산	서울 인접성·GTX / 병원 집적·국립암센터 / 킨텍스·공항 인접 / 접경·군 수요 / 실증 가능한 도시공간 / 방송·미디어 기반	74	P01, P02, P05, P10, P15, P21 등
C. 구조적 제약	수도권 규제 역차별·생산기능 불가 / 인력의 서울·판교 집중과 심리적 거리 / 베드타운 낙인 / 대학·앵커·펀드 부재 / 산업 테마 부재	62	P03, P06, P07, P09, P11, P15 등
D. 생태계 조건	실증·테스트베드·공유 인프라 / 앵커기관·클러스터 구심점 / 인력 양성(계약형·운영형) / 타지역 비교(판교·인천·원주 등)	124	전 사례
E. 정책 개입 지점	실증연계 R&D·공공조달 / 자금 매칭·바우처·펀드 / 규제 샌드박스·특구 / 전담조직·정책 지속성·락인 설계	88	P02, P09, P10/P11, P13, P15, P18, P19 등

2) 핵심 주제 분석

□ 주제 1. "땅이 아니라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 : 실증·테스트베드가 최대 유치 유인

○ 첨단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은 공간·임대료가 아니라 실증(PoC)과 실환경 데이터 축적 기회라는 진술이 13개 사례에서 반복됨(근거 코드 약 45개)

○ 로봇 기업 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보다 실증 공간 확보가 더 큰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P19)라며 "고양시는 로봇기업에게 땅을 파는 도시가 아니라,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P19)라고 요약함

○ 배달로봇 스타트업 실무자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내게 된다면 이런 실증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사무실을 구해서 낼 것 같습니다"(P02)라고 하였고, 관내 소재 푸드테크 대표는 "PoC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P03)라며 실증 기회 부재를 최대 애로로 지목함

○ 임대료 지원 단독의 한계("임대료 감면으로는 너무 메리트가 없다"[P02], "단순 임대료 감면만으로는 유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P19])도 교차 확인됨

□ 주제 2.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다" : 유치의 본질은 수요·매출 연계

○ 9개 사례에서 기업 유치·정착의 결정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수요기업·공공발주·데이터 접근)로 수렴함(근거 코드 약 35개)

○ 디지털헬스케어 창업자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P10)라고 단언하였고, AI 기업 대표는 "근데 돈이랑 매칭이 안 되면 갈 이유가 없어 갈 이유가 없죠"(P09)라고 함

○ 공공구매·군납 등 레퍼런스 창출형 수요 정책의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고양시가 무조건 사주겠다 약간 로봇을 한다든 두 대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고양시에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P02), "군의 보안 정책이 그 사람들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P15)라는 진술이 대표적임.

□ 주제 3. 3중의 구조적 제약과 그 반증 : 생산 불가, 판교 마지노선, 베드타운 낙인

○ 12개 사례에서 고양시의 구조적 제약이 세 층위로 진술됨(근거 코드 약 60개)

○ 첫째, 규제·부지 제약으로 생산기능 유치가 불가함: "전통 제조업 안은 안 된다는 거고 전통 제조업 안 돼요 네 아예 안 돼서"(P06), "모든 반도체는 개발하는 데랑 공장이 있는 데랑 붙어 있어야 돼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P16)

○ 둘째, 인력의 서울·판교 집중임: "요새 그래서 최 마지노선이 판교입니다. 대부분 판교까지 있고 싶어 하고"(P06), "고양시에 있는 기업으로 올 생각은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P03)

○ 셋째, 실제 접근성과 괴리된 심리적 거리·베드타운 낙인임: "사실 고양시가 되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이거든요"(P07)임에도 "전국 돌아다니면 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P11)

○ 다만 반증 사례도 확인되는데, 강남에서 과천으로 이전한 기업은 "여기 오니까 그냥 다들 적응하고 또 삽니다"(P05)라고 하였고, 집적이 완성되면 인력이 따라온다는 경험("그렇게 완전히 모여지면 익산처럼 해결돼요"[P03])도 제시되어, 제약은 고정 조건이 아니라 집적·비전·수요로 관리 가능한 변수로 해석됨

□ 주제 4. 잠자는 앵커 : 국립암센터·킨텍스·병원·군·공항 자산의 플랫폼화 요구

○ 9개 사례에서 고양시의 앵커 자산이 존재하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타남(근거 코드 약 40개)

○ 국립암센터는 "암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P01)이고, 스핀오프 기업은 "사실 암센터가 없으면 저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P10)라고 할 만큼 실질 앵커이나, "관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시에서 관심이 별로 없

고"(P01)라는 연계 단절이 지적됨

○ 대형병원 집적은 "규모 있는 병원이 한 개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갖춘 데는 고양시가 거의 최고예요"(P10)로 평가됨

○ 나아가 "예전에는 물리적인 앵커가 필요했어요. 기업이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 그 앵커의 역할을 해요"(P11)라는 진술처럼,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는 데이터·실증·전시 플랫폼을 앵커로 삼아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됨.

○ 경쟁 도시의 앵커 유출 시도("요즘 판교에서 (기업 이전하라고) 지금 다시 연락이 오고 있어요"[P10])는 위험 신호로 기록됨

□ 주제 5. 선택과 집중, 그리고 10년 : 테마 부재의 극복 조건은 지속성

○ 8개 사례에서 고양시의 산업 정체성 부재("고양시 항상 들어보면 이제 뭔가 뭐가 항상 이게 없어요"[P07])와 함께, 판교=IT처럼 하나의 테마를 선택해 장기 지속해야 한다는 처방이 수렴함(근거 코드 약 30개)

-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한 그런 분야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을 것"(P03),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꾸준히 한 10년 이상 해야 돼요"(P1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뀐다고 적으면 안 되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 꽤 괜찮아질 거"(P10)라는 진술이 대표적임

○ 전담조직 부재("그런 부서가 먼저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P02])와 행사성 시정에 대한 비판도 이 주제에 결부됨

3) 산업별 적합성 분석

(1)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 전문가 지지: 20개 참여 단위 중 14개가 언급하였고 13개가 긍정 논조였음(직접 집중 P01, P10/P11; 융합 수요처로서 긍정 P02, P08, P09, P12, P17, P18, P19, P20, P21 등)

○ 자산 정합성: 국립암센터의 암관리법상 데이터 수집 권한, 관내 대형병원 6개의 집적과 병원 간 비경쟁 구조, 인천공항 접근성, 킨텍스 헬스케어 전시(MEDICA 모델) 연계가 근거로 제시됨.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같은 거 하나 딱 때리면 사실은 할 만하거든요"(P10)

○ 제약·리스크: 시-앵커기관 연계 단절, 관내 동종기업 부재("되게 외로워해요. 저희가 헬스케어 회사가 없어요. 이 주변에"[P11]), 판교의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유치 공세. 부정적 사례로 전통 신약·시설형 바이오는 "이거를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간다는 건 조금 무리다"(P10)로 명확히 기각됨

○ 성립 조건: 의료데이터 획득 행정허들 해소, 마이데이터 특수전문기관 지정, 시 주도 중립 데이터 플랫폼과 리워드 거버넌스, 앵커 시설 고정(락인)임

(2)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 전문가 지지: 7개 단위 언급, 전원 긍정(집중 P02, P19; 결합형 제안 P08, P10/P11, P12). "저희가 11월쯤에는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P02)라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임박 진술처럼 성장성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자산 정합성: "일산에 되게 좋은 자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호수 공원이나 킨텍스나"(P02), 대규모 공동주택·병원·공원을 묶은 "도심형 피지컬 AI 실증지구"(P19) 구상이 제시되었고, 고밀도 성남 대비 실증 안전성 우위(P21)도 확인됨
- 제약·리스크: 로봇 전담부서 부재, 시 차원 수요 전무("고향[고양] 쪽에서 들어온 니즈가 없습니다"[P02]), 관내 공공입찰 불공정 경험
- 성립 조건: 수요조사 기반 실증처 매칭, 로봇 공용 인프라(충전·보관·관제), 실증비 보조와 실증 후 공공구매 연계, 로봇 오퍼레이터 등 현장운영 인력의 지역 양성임.

(3) 드론·UAM·항공(안티드론·MRO 포함)

- 전문가 지지: 9개 단위가 언급해 디지털 헬스케어(1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나 논조는 '단기 신중·중장기 긍정'으로 갈렸음
- 긍정 근거는 입지임: "항공대에 있지 김포공항 코앞이지 인천공항 코앞이지"(P15), "저는 고양시가 최고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P21), 킨텍스 버티포트 입지 긍정(P04), 군부대·접경지 수요(P14, P15, P20), 서울 인접 최대 유휴부지("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고양시밖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만한 부지가 나올 수 있는"[P21])
- 제약·리스크(부정적 사례): 기체 인증 지연으로 인한 산업 침체("지금 제일 관건은 기체예요"[P20]), 민간 드론 완제기의 중국 우위(P07, P14), 비행금지구역 규제, GTX의 역내 UAM 수요 잠식(P21), 메디컬 한정 MRO의 이중 협소 시장 경고(P20), 인천의 예산·준비도 우위(P21)
- 성립 조건: 생산이 아닌 R&D·실증·관제 기능 특화, 메디컬 드론·드론 배송 등 시민 체감형 실증 선행, 연구소·국가기관 분소 유치("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유치에 가장 좋은 거는 연구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P21]), MRO는 장기 선점 선언 과제임

(4) AI 데이터센터·GPU 인프라 및 미디어 AI(콘텐츠 결합)

- 전문가 지지: 6개 단위 긍정. "AI 데이터센터 산업 (최우선): 수도권 입지가 아주 우수합니다"(P18), "고양시가 사실 입지가 엄청 좋은 데예요"(P05, 데이터센터 심리적 한계선 수원·안양 이북 논리), GPU 수요("콘텐츠가 고양시잖아요. 영상은 무조건 GPU가 필요하거든요"[P01]). 방송영상밸리·DMC 연접의 미디어 AI 결합(P07, P18)도 제시됨.

○ 제약·리스크: 전력·냉각 인프라 확보가 선결이며, 주민 수용성 문제로 "크면 반대가 우려되므로 조그맣게 기업 지원을 위한"(P01) GPU 클러스터 워딩 전략이 권고됨

○ 부정적 사례로 범용 AI 단독 유치는 "AI 특구 같은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P03), 이전 의향 "없어요"(P09)로 기각되어, 데이터센터·GPU는 독립 전략산업이 아니라 핵심 산업들의 기반 인프라로 위치 지어짐

(5) 양자(양자보안 중심)

○ 전문가 지지: 7개 단위 언급, 논조는 '양자보안 조건부 긍정 / 양자컴퓨팅 신중·부정'으로 뚜렷이 분화됨. 긍정 근거: "국정원의 검증을 받으니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P15, 양자보안은 상용·검증 완료), 국립암센터의 양자암호 실증 선도 경험(P01), 군납 보안 인증 의무 수요(P15)

○ 부정적 사례: "지금 아직 겨울은 안 왔지만 겨울이 왔을 때 견뎌내야 돼요"(P05), "아직까지 양자 컨텀 이런 단어가 마케팅용 수단이지"(P17), 양자컴퓨터 직도입은 "현실적으로 진짜 그건 돈 낭비"(P15)

○ 성립 조건: 단독 산업이 아닌 의료데이터·드론·국방 보안의 '결합재'("약방의 감초"[P15])로 접근, 바우처·교육·QaaS 테스트베드 등 저비용 선행투자(P05, P18), 단계 로드맵(양자보안 선행→양자 확대)임

(6) 스마트물류·모빌리티

○ 전문가 지지: 5개 단위 조건부 긍정. 긍정 근거: 수도권 물류센터 희소 속 접근성(P12), 파주 물류단지(쿠팡·롯데) 연계(P21), 자유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적지(P12), 병원 연계 의약품 콜드체인(P08, P12), 소량 드론 배송의 경제성(P21)

○ 제약·리스크: 물류 간선 동선 이탈(P07), 물류센터의 고용 창출 한계와 기피시설 민원("물류센터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P08])

○ 성립 조건: 단순 물류센터가 아닌 공유형 실증 인프라(공동물류센터+데이터 개방+PoC) 결합형, 도심 복합형 모델임

(7) 푸드테크·농식품

○ 전문가 지지: 2개 단위(집중 1)로 빈도는 낮으나 논거가 구체적임. "농식품 클러스터 만들면 농식품부에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진짜 없어요. 수도권은 없어요"(P03)라는 수도권 공백 틈새, 도농복합·킨텍스 푸드박람회·동국대 연계, 서울 대비 공장 입지 우위가 근거임

○ 제약: 농식품 산업의 J커브 한계, 테크노밸리 고분양가·업종 제한

○ 성립 조건: 소기업용 공유 생산공정·공유 실험실(싱가포르 푸드팩토리 모델) 공급임

(8) 부적합 판정 산업(부정적 사례 종합)

- ○ 방산 생산시설은 "대부분의 공장 형태가 사이즈가 한 30만 최소 3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P06)와 주거지 이격 요건으로 원천 불가하며, MRO 거점도 양주가 선점함(P06)
- ○ 반도체 팹·설계는 개발-생산 인접 원칙(P16)으로 불가하고, 후공정 패키징만 공항 물류 관점에서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유보적 평가에 그침(P16)
- ○ 전통 신약 바이오는 송도 대비 추격 불가(P10), 범용 AI·IT 단독 유치는 판교·강남과의 경쟁상 비현실적(P03, P09, P15)으로 일관되게 기각됨
- ○ 이 부정적 사례들은 고양시 전략산업의 방향이 '생산·시설'이 아닌 '실증·R&D·데이터'여야 함을 역으로 뒷받침함

4) 전략산업 도출

- ○ 평가 기준은 ①전문가 지지도(n=20 중 언급·긍정 비율) ②고양시 기존 자산 정합성(킨텍스·국립암센터·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항공대·병원·군·공항) ③산업 성장성 ④실현 가능성(수도권 규제·부지·인력 제약 고려)임

표 5-32 | 전략산업 후보 평가

후보 산업	①지지도	②자산 정합성	③성장성	④실현 가능성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상 (14/20 언급, 13 긍정)	상 (암센터·병원 6개·킨텍스·공항)	상	중상 (규제 존재하나 저인프라 비용)	핵심 1순위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상 (7/20, 전원 긍정)	상 (호수공원·킨텍스·병원·공동주택)	상	상 (실증 중심, 생산 불요)	핵심 2순위
드론·UAM·항공 R&D·실증	중상 (9/20, 조건부 긍정 우세)	상 (항공대·버티포트·군·유휴부지)	중(기체 인증 지연)	중 (비행규제·인천 경쟁)	핵심 3순위
AI 데이터센터·GPU·미디어 AI	중 (6/20)	중상 (수도권 입지·방송영상밸리)	상	중 (전력·수용성)	연계·보완(기반 인프라)
양자보안	중 (7/20, 보안 한정 긍정)	중 (암센터 레퍼런스·군 수요)	중(장기)	중 (저비용 선행투자형)	연계·보완(장기 포석)
스마트물류·콜드체인	중 (5/20)	중 (파주 물류단지·자유로·병원)	중상	중 (민원·고용효과 한계)	연계·보완
푸드테크·농식품	하 (2/20)	중상 (킨텍스 박람회·도농복합)	중	중상 (수도권 공백 틈새)	연계·보완(틈새)
반도체(후공정 한정)	하 (2/20 유보)	하	상	하	장기 검토
방산 생산·전통제조·신약 바이오	부정 우세	하	—	하 (규제·부지 원천 제약)	부적합

□ 1순위: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 유일하게 "전국 최고" 수준의 배타적 자산 우위가 진술된 산업임("규모 있는 병원이 한 개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갖춘 데는 고양시가 거의 최고예요"[P10])

○ 국립암센터라는 법적 권한을 가진 앵커, 특구 지형의 공백(강원=헬스케어, 대전·세종=바이오가 선점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수도권 내 공백), 경상의료비 200조 시장의 성장성이 결합하며, 시니어 케어 로봇·메디컬 드론·의약품 콜드체인·헬스케어 MICE로 타 산업과의 확장성이 가장 큼

□ 2순위: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 상용화 임박의 성장성과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P19) 전략의 최적 적용 대상임

○ 도심이면서 저밀 공간을 가진 도시 구조("좀 더 도심이면서도 도심 같지 않은 지역이 있는 곳이 고양시잖아요"[P21])가 실증 자산이며, 생산시설이 불필요해 수도권 규제와 충돌하지 않음

○ 판교(AI·SW 개발 거점)와 차별화된 '도심형 로봇 실증 거점' 포지셔닝이 가능함

□ 3순위: 드론·UAM·항공 R&D·실증

○ 항공대·드론앵커센터·킨텍스 버티포트·군 수요·서울 인접 유휴부지라는 자산 정합성은 최상급이나, 기체 인증 지연 등 시장 성숙도 리스크로 3순위에 배치함

○ 메디컬 드론·드론 배송 실증과 연구소 유치를 선행하고 MRO는 "그래도 mro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선점하는 거지 않습니까?"(P21)라는 진술처럼 장기 선점 과제로 관리함

□ 연계·보완 산업

○ 연계·보완 산업은 핵심 3개 산업의 성립 조건이자 파생 기회로 배치함

○ AI 데이터센터·GPU는 의료AI·미디어·로봇의 공통 기반 인프라("전기만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데이터센터 유치하면 고양시는 되게 좋거든요"[P05]), 양자보안은 의료데이터·드론·군납의 보안 결합재, 스마트물류는 병원 콜드체인·드론 배송의 접점, 푸드테크는 킨텍스 박람회와 도농복합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 공백 틈새임

○ 세 핵심 산업은 '병원 로봇(1×2)', '메디컬 드론(1×3)', '도심 실증지구(2×3)'처럼 상호 융합되며, 공통분모는 모두 "생산이 아닌 실증"이라는 점임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음. 고양시에 적합한 전략산업은 ①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②피지컬 AI·서비스 로봇 ③드론·UAM·항공 R&D·실증이며, 그 근거는 세 산업 모두 (가) 고양시가 이미 보유한 배타적 자산(국립암센터·병원 집적, 실증 가능한 도시공간, 항공대·버티포트·군 수요)과 정합하고, (나) 생산시설이 불필요해 수도권 3중 규제를 회피하며, (다)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라는 단일 포지셔닝으로 통합 가능하다는 점임

○ 전문가들이 진술한 유치의 본질은 공간·보조금이 아니라 실증 기회와 매출 기회였으며, 따라서 고양시의 전략은 산업 '유치'가 아니라 관내 자산을 수요·데이터·실증 플랫폼으로 전환해 기업이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는"(P10)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됨

2) 정책적 함의

○ 첫째, '도심형 실증지구'의 제도화임. 호수공원·킨텍스·병원·공동주택을 묶은 실증 노선과 규제 대응 체계(운행구역·안전기준·민원 프로세스)를 사전 구축하고, 실증비 보조와 실증 후 공공구매 연계로 "실증→거점화→집적"의 경로를 설계해야 함

○ 둘째, 수요연계형 유치 패키지로의 전환임. 임대료 감면 단독이 아니라 R&D 매칭(실효선 3억 원 내외+정주 조건), 사업화 자금, 지역 펀드·바우처, 공공조달 초기구매를 결합해야 함("돈이랑 매칭이 안 되면 갈 이유가 없어"[P09])

○ 셋째, 앵커의 플랫폼화와 락인임. 시 주도의 중립 의료데이터 플랫폼과 실무 TF·리워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암빅데이터센터 등 기존 앵커의 역외 유출을 시설 고정·중장기 위탁 파이프라인으로 방어해야 함

○ 넷째, 계약형·현장운영형 인력 양성임. 개발 인력의 서울 집중을 전제로, 로봇 오퍼레이터·관제·정비 등 지역에서 양성 가능한 운영 인력과 인턴십-채용 연계, 대학 산학협력단 지소 유치에 집중해야 함

○ 다섯째, 전담조직과 10년 지속성의 확보임. 산업 테마를 3개 이내로 압축해 선언하고,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전담반·중장기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꾸준히 한 10년 이상"(P11)의 신뢰를 축적해야 함.

3) 연구의 한계

○ 첫째, 개방코딩에 AI 언어모델 기반 다중 코더를 활용하여 코더 간 수렴은 확인하였으나, 인간 연구자 단독 코딩과의 일치도는 별도 검증하지 못함

○ 둘째, 자동 전사 기반 자료의 오전사·인코딩 손상(일부 파일 원본 복구)과 서면 답변 2건의 제한된 심층성 등 자료 품질의 편차가 존재함

○ 셋째, 동일 기관 반복 인터뷰(P10·P11)로 실질 독립 사례는 20개이며, 산업별 표집 밀도가 균등하지 않아(양자·드론 과대표집 가능성) 언급 빈도를 산업 중요도와 동일시할 수 없음

○ 넷째, 참여자 진술은 소속 산업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음

○ 다섯째, 질적 연구의 특성상 도출된 우선순위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이론적·분석적 일반화의 성격을 가지므로, 후속 정량 검증(산업 통계·입지계수·기업 수요조사)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제6장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제2절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

제3절 고양시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

제6장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1. 경제 및 기업 환경 분석 결과 종합

□ 국내외 경제 및 기업 환경

○ **국외 경제 및 기업환경 분석 결과, 글로벌 FDI는 2024년 약 1.5조 달러로 양적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센터·AI·디지털 인프라 중심의 질적 재편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 인프라 투자 2.8조 달러(2029년 전망), 세계 반도체 매출 7,010억 달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2033년 1조 6,350억 달러 전망
- AI·반도체·바이오·UAM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입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암센터·한국항공대 등 고양시 보유 자산과 정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싱가포르 EDB의 고정자산투자 약정(S$13.5bn), 홍콩 InvestHK의 지역본부·지사 11,070개 유치 등은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 인센티브 패키지가 기업유치의 결정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고양시 역시 R&D·MICE·바이오 영역에서 도시 단위 경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 및 기업환경 분석 결과, 한국의 FDI 신고액은 2024년 345.7억 달러, 2025년 360.5억 달러로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정부 인센티브는 비수도권·외국인투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고양시는 광역 정책 패키지의 직접 수혜에서 배제되는 흐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경기도의 26%)에도 GRDP 비중이 약 17%에 그치는 저생산 구조이며, 고양시는 인구 105.8만 명의 경기북부 거점도시임에도 산업단지 0개, 1인당 GRDP 26위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회발전특구는 누적 14개 시·도 74.3조 원 규모로 지정되었으나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고양시가 배제되었고, 평화경제특별구역 경기도 후보지 3곳(연천·파주·포천) 선정에서도 고양시는 미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경제 및 기업 환경

○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의 거점도시로서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 광역교통망, 양호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등 광역교통망과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경제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역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입지적·생활환경적 강점은 기업의 인력 확보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등 주요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중심의 산업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하여 콘텐츠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융합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KINTEX를 중심으로 한 전시·컨벤션 산업 기반은 기업 간 교류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 드론(UAV), 피지컬 AI, 디지털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기반과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성장 구조를 보유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수도권 주요 특례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기업 간 협력과 산업 연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형성과 집적 효과 창출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정보통신업(사업체 5,060개·종사자 12,904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체 6,210개·종사자 16,928명)을 합산하면 11,270개 사업체와 29,832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잠재적 기반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 37,035개, 숙박 및 음식점업 12,092개, 운수 및 창고업 10,229개, 제조업 7,079개 순이며, 제조업 종사자 수는 30,670명, 공장등록업체는 1,346개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기준 고양시 사업체 수는 119,540개, 종사자 수는 396,369명이며, 이 가운데 1~4인 사업체가 104,535개로 전체의 87.4%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기업유치 지원정책 사례 분석 결과 종합

□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 **수도권 특례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사업 공간, 조세, 인건비, 금융, 연구개발(R&D), 복지, 행정 지원 등 공통적인 정책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방식과 중점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남

○ **고양시는 정주환경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집적 및 입지 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 정책을 통해 기업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 집적을 통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함

○ **수원시는 산업단지와 창업지원 인프라가 결합된 균형형 기업지원 구조를 보임**

-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지 결합형 지원 구조를 보임**

-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연계된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및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짐

○ **화성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집적과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 중심 지원 구조를 보임**

- 금융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결합된 체계를 통해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수도권 특례시는 산업단지 및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금융 및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산업단지 조성 및 입지 기반 확충을 통해 기업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6-1 | 수도권 특례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조세 혜택	보통	우수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우수	우수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우수
행정 지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자료〉 각 특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 **경의권에 속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세 지자체 모두 금융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분야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김포시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특례보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파주시는 수출지원과 기술혁신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물류비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시장 확대 정책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고도화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는 창업 및 금융지원 중심 정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의 금융 및 창업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 확충, 기술사업화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2 | 경의권 도시 기업유치 지원정책 유형별 비교

구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사업 공간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조세 혜택	보통	보통	부족
인건비 지원	부족	보통	보통
금융 지원	우수	우수	우수
R&D 지원	보통	우수	우수
복지 지원	부족	보통	보통
행정 지원	보통	우수	보통

〈자료〉 각 시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수도권 주요 특례시 및 경의권 도시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 공간 지원, 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도시들은 산업단지와 기업 집적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고양시는 금융지원과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 집적 기반과 성장 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중심의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

○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사례 분석 결과, 클러스터는 형성 주체와 핵심 자원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성공요인과 한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 1(원주·케임브리지)은 대학을 단일 앵커로 Marshallian 외부경제가 장기간 축적된 모델로 30~60년 이상의 시간축이 소요되었고, 유형 2(파주·신주)는 국가·광역의 장기 지원 패키지와 신뢰 가능한 제도적 약속(credible commitment)이 성공요인이었으며, 유형 3(포항·피츠버그)은 민간 거대자본과 대학이 결합해 산업 전환을 이룬 초장기 모델인 것으로 분석됨
- 유형 4(양재·싱가포르 one-north)는 도심 인접 입지와 기존 혁신자산을 활용한 도시형 모델로, one-north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약 20~25년 만에 400여 개 기업·5만여 명 종사자·700여 개 스타트업을 집적시킨 반면, 양재는 다기관 분산형 거버넌스와 단기 사업 중심 구조가 한계로 지적되어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비전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임이 확인됨

○ **클러스터 형성은 '단일 유형의 모방'이 아닌 '유형별 맞춤 정책의 설계'가 핵심임.**

○ **고양시는 지역의 자산과 제약조건을 고려한 '다중 앵커 기반 선택적 결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유형 4(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를 핵심 모델로 설정하고, 유형 1(자생적 대학 앵커형)을 보완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유형 3(민간자본 주도 하이브리드형)은 장기 비전으로 검토하고, 유형 2(국가전략 거점기업형)는 원팀 전략 등 일부 요소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하면 고양시는 유형 4(도시 다중 앵커 재생형)를 핵심 모델로 하고 유형 1(자생적 대학 앵커형)을 관내 대학 연계로 보완하며, 유형 2에서는 중앙정부·경기도를 설득하는 원팀(One-Team) 전략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다중 앵커 기반 선택적 결합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3. 고양시 기업유치지원정책 분석 종합

□ 고양시 기업 인센티브

○ **고양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와 비수도권의 세제혜택을 11개 항목으로 비교한 결과, 고양시는 "불가·배제·일몰" 항목 5개와 "제한적" 항목 6개로 구성되어 "최대 혜택" 항목이 하나도 없는 반면, 비수도권은 "최대 혜택" 항목 8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법인세 신·증설 감면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가 감면의 수혜지가 아니라 기업이 떠나야 감면이 발생하는 '출발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내기업의 역외이전을 유인하는 역(逆)인센티브로 작동하며, 산업단지 취득세는 고양시 35% 대 비수도권 50~75%, 청년창업 법인세 감면은 50% 대 100%로 격차가 발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고양시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패키지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8조의 입지·증설 규제까지 부담하는 '이중 배제' 구조에 놓여 있으며, 감면율·감면기간 등 세제 조건으로 비수도권과 정면 경쟁하는 전략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고양시 기업유치 정책은 세제 격차의 '해소'가 아닌 '우회'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

- 시설 요건 지방세 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지식산업센터·창업벤처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 조례 자체감면,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른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평화경제특별구역(시행령상 고양시 명시)·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구 지정, 입지 요건과 무관한 업종요건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조합이 우회 경로로 확인됨

□ 고양시 내부 정책수요

○ **기업 설문조사는 고양시 내부 기업 28개사와 외부 기업 131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내부 기업은 고양시의 가장 큰 강점으로 수도권 입지와 거래처·시장 접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부 기업이 고양시 기업활동의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제시한 1순위는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11개사, 39.3%)이었으며,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가 각각 4개사(14.3%)로 뒤를 이어, 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장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현재 고양시에 입지한 기업들 역시 거래처 확보의 용이성, 수도권 접근성,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주요 장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경제권과 연계된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됨

○ **내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사업(12개사, 4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금융지원은 향후 희망 지원정책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경영 안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확장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지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역시 중요한 정책 수요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이 단순한 행정지원보다 기업 성장과 경영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기업들은 사업 공간 부족과 비용 부담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사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높은 토지 가격 및 임대료 부담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됨
-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일수록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업들은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정책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 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환경 부족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 정책 활용 과정의 최대 애로사항은 정보 접근성 부족(9개사, 32.1%)이었으며, 지원 규모의 한계(8개사, 28.6%)와 복잡한 행정절차(5개사, 17.9%)가 뒤를 이었고, 기업 지원정책 인지율은 53.6%, 투자유치 지원정책 인지율은 40.0%에 그쳐 정책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정책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양시 외부 정책수요

○ **외부 기업 131개사 중 향후 3~5년 내 사업장 이전 계획 또는 지사·연구소 확장 계획을 보유한 기업은 44개사(33.6%)로 나타나, 기업유치 및 산업 입지 정책에 대한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로 80개사(61.1%)가 응답하였으며, 기업 지원 인센티브, 교통 인프라, 인적**

자본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됨

○ 고양시 이전 시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1순위 기준 사업 공간 지원(25.2%)과 인건비 지원(22.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 공간 → 인건비·조세 → 금융의 단계적 수요 구조를 보이며, 외부 기업의 정책수요가 직접적인 비용 절감형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다만 정책별 이전 의사 조사에서는 지원 수준이 보장되더라도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교통 인프라 등 다른 요건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단일 비용지원만으로는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고 재정·행정·인프라·인력이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46개사(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내부 기업의 정보 접근성 부족(32.1%)과 함께 정책 인지도·정보 접근성이 기업유치의 최대 병목으로 확인되며,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인력양성·정주 지원 등 성장 기반 조성과 연계된 정책 수요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분석됨

□ 고양시 전략산업 도출

○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 전사문 21건(독립 참여 단위 20개)을 대상으로 4개 독립 코딩팀의 개방코딩(466개 코드)과 축코딩·주제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 핵심 주제가 도출됨

- 첫째, 첨단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은 공간·임대료가 아니라 실증(PoC)과 실환경 데이터 축적 기회이며, 고양시는 '땅이 아니라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13개 사례에서 반복됨
- 둘째, 기업 유치·정착의 결정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수요기업·공공발주·데이터 접근)로 수렴하여, 임대료 감면 단독이 아닌 공공조달 초기구매 등 수요·매출 연계가 유치의 본질인 것으로 확인됨
- 셋째, 고양시의 제약은 규제·부지로 인한 생산기능 유치 불가, 인력의 서울·판교 집중, 베드타운 낙인의 3중 구조로 진술되었으나, 집적이 완성되면 인력이 따라온다는 반증 사례도 확인되어 고정 조건이 아닌 집적·비전·수요로 관리 가능한 변수로 해석됨
- 넷째, 국립암센터·킨텍스·관내 대형병원·군·공항 등 앵커 자산이 존재하되 시와 연계되지 못한 '잠자는 앵커' 상태이며, 물리적 앵커 대신 데이터·실증·전시 플랫폼이 앵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됨
- 다섯째, 고양시의 산업 정체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테마를 압축해 선택하고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속하는 정책 일관성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처방이 수렴함

○ 전문가 지지도·자산 정합성·산업 성장성·실현 가능성의 4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고양시 핵심 전략산업은 1순위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2순위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3순위 드론·UAM·항공 R&D·실증으로 도출됨

- 세 핵심 전략산업은 병원 로봇, 메디컬 드론, 도심 실증지구 등으로 상호 융합되며, 공통 분모는 모두 '생산이 아닌 실증'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AI 데이터센터·GPU 및 미디어 AI, 양자보안, 스마트물류·콜드체인, 푸드테크·농식품은 핵심 전략산업의 성립 조건이자 파생 기회로서 연계·보완 산업으로 배치되며, 반도체 팹·범용 AI 단독 유치는 규제·부지·경쟁 여건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4. 분석 결과 종합

○ **환경분석, 사례분석, 정책분석들을 종합한 결과, 고양시는 수도권 입지와 시장 접근성,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과 수도권 입지를 고양시의 주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환경 분석에서 확인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수도권 연계성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산업 인프라는 향후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됨

○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확충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앵커기관을 통한 산업 기반과 첨단기술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제5장에서 도출된 전략산업(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드론·UAM·항공 R&D)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실증(Test-bed)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소비·서비스 중심 산업구조를 보완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됨

○ **반면 기업 성장 기반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사업 공간 확보, 기술개발 지원,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부 환경 분석에서 확인된 산업집적도 및 기업 성장 기반의 한계와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 간 네트워크와 산업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집적과 협력 기반 강화 필요성도 함께 확인됨

○ **종합적으로 고양시는 우수한 입지 경쟁력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 성장 기반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 국립암센터 및 관내 대형병원·대학 등 주요 산업 인프라와 앵커기관을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드론·UAM·항공 R&D를 중심으로 한 실증 기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비수도권과 세제·보조금 총량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기업유치 정책은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사업 공간·기술개발 지원을 실증 기회 및 수요 연계와 결합한 패키지형으로 설계하고, 도구상자 2(맞춤형 기업 서비스)를 중심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정책 방향

□ 입지 경쟁력과 산업기반의 균형적 강화 필요

○ **고양시는 수도권 접근성과 우수한 정주환경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산업집적도와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하고(산업단지 0개·1인당 GRDP 26위·1~4인 사업체 87.4%) 세제·보조금 등 제도적 인센티브에서도 비수도권 대비 구조적 열위에 놓여 있어 보완 필요성이 확인됨**

- 기업유치 정책은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산업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되, 수도권 규제상 생산기능 확충이 제약되는 만큼 산업기반의 내용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개발(R&D)·실증(Test-bed)·데이터 기반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을 활용한 산업기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 기업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필요

○ **설문조사 결과 내부 기업은 금융지원(42.9%)을, 외부 기업은 사업 공간 지원(25.2%)과 인건비 지원(22.1%)을 최우선 수요로 제시하였으나, 지원 수준이 보장되더라도 인력·교통·산업 인프라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향후 기업유치 정책은 단일 비용지원이 아닌 재정·행정·인프라·인력이 결합된 패키지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확대가 요구됨
- 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고양시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필요

○ **수도권 내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고양시가 세제·보조금 총량에서 비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KINTEX,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지역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암센터·관내 대형병원·KINTEX·항공대·방송영상 인프라 등 배타적 자산과 결합하여 실증(Test-bed)·연구개발(R&D)·데이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디지털 헬스케어·의료데이터 AI, 피지컬 AI·서비스 로봇, 드론·UAM·항공 R&D)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증·수요 연계형 유치 패키지로의 전환 필요

○ 종합 분석 결과, 고양시 기업유치의 핵심 유인은 저렴한 공간이나 세제 감면이 아니라 실증 기회와 매출 기회이며,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산업 '유치' 자체가 아니라 관내 자산을 수요·데이터·실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임대료 감면 단독이 아닌 실증비 보조, 연구개발(R&D) 매칭, 사업화 자금·특례보증, 공공조달 초기구매를 결합한 수요연계형 유치 패키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인지도와 정보 접근성이 내부·외부 기업 모두에서 최대 병목으로 확인된 만큼, 분산된 기업지원·투자유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구축을 선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시사점은 제2절의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주거지원·실증 및 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킹 및 행정·융자 및 보증·멘토링·인력양성)과 제3절의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으로 구체화됨

□ 앵커 자산의 플랫폼화와 정책 지속성 확보 필요

○ 클러스터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 고양시는 대규모 단일 거점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신 국립암센터·KINTEX·관내 대형병원·군·대학 등 다중 앵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앵커를 데이터·실증·전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고양시에 거점을 두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락인)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one-north의 통합 거버넌스·장기 마스터플랜과 양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단기 사업 중심 구조의 대비는 통합 거버넌스와 장기 비전이 도시형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줌
-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바와 같이 산업 테마를 3개 이내로 압축하고,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속되는 전담조직과 중장기 사업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책 신뢰(credible commitment)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도구상자 2 중심의 정책 배합 전환 필요

○ **세제혜택 11개 항목 비교에서 고양시의 최대 혜택 항목이 전무한 반면 비수도권은 8개에 달하는 구조적 격차가 확인된 만큼, 비용 절감형 수단(도구상자 1)에 의존하는 유치 전략은 성립하지 않으며 역량 구축형 수단(도구상자 2)으로 정책 배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도구상자 1은 시설 요건 감면·조례 자체감면·특구 지정·업종요건 세액공제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전략산업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함
- 실증·테스트베드 기능, 지산학 협력과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매칭, 원스톱 행정 등 입지 규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서비스형 수단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함

제2절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안

1. 주거지원 분야

1) 고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고양시 산업클러스터 인근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조성

○ 시세 대비 할인된 임대료로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 및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배정함

○ 2026년 하반기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신청

□ 사례 가. 판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국토부와 LH는 2024년 하반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에 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304가구를 시세보다 1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함

○ 국토교통부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약 290억 원을 지원하며 입주는 2031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임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입지 선정과 IT기업 임직원 우선배정 구조가 핵심 모델임

□ 사례 나. 싱가포르 원노스(One-North) 정주여건 패키지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Biopolis 인근에 외국인 연구자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을 위한 임대주택 패키지를 운영함

○ R&D 인력의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 자녀 국제학교를 도보 거리에 배치하여 글로벌 인재의 정착률을 90% 이상 유지함

□ 기대효과

○ 고양 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의 안정적 정주를 확보함

○ 기업의 인력 유출이 방지되고 신규 채용 경쟁력이 강화됨

○ 청년창업인의 통근시간 절감으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됨

2) 일산테크노밸리 임직원 임대보증금 지원

○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함

○ 1인당 최대 3,000만 원, 최장 4년, 1사당 최대 5명 한도 수준

○ 고양시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사례 가.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026년)

○ 판교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중임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최초 2년에 연장 2년을 더해 최장 4년이며 1사당 지원인원은 최대 5명까지임

○ 판교가 인재 착근에 성공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사례 나.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KSP) 사택지원

○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정책투자은행이 3자 출자로 설립한 KSP는 117개 입주기업 임직원 3,719명에게 인근 단지형 사택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함

○ 도쿄 출퇴근권에 위치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R&D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함

□ 기대효과

○ 임직원 최대 500명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인재 착근률이 확보됨

○ 판교 모델로 입증된 통근시간 절감 및 이직률 감소 효과가 기대됨

○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 비용 절감으로 R&D 투자 여력이 증대됨

3) 고양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 주거 200세대와 업무공간·창업지원시설을 통합한 클러스터 1개소를 조성함

○ 행복주택 + 사무·회의공간 + IoT/Mobile LAB + 창업카페로 구성됨

○ 입주 대상은 청년창업인과 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임

□ 사례 가. 서울 청년창업주택 도전숙 (성북구)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북구·은평구·동대문구 등에 도전숙(挑戰宿)이라는 청년창업인 전용 주거+업무공간 복합형 시설을 운영 중임

○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동일 건물에 배치하여 통근시간을 0분으로 단축한 모델임

□ 사례 나. 베를린 팩토리(Factory Berlin) 코리빙·코워킹

○ 독일 베를린의 Factory Berlin은 스타트업 임직원의 거주공간과 업무공간을 통합한 14,000제곱미터 규모 복합단지임

○ Google for Startups, Audi, Deutsche Bank Innovation Lab이 입주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함

□ 기대효과

○ 주거시설 + 창업지원시설 통합으로 청년창업인 정주율 80% 이상 달성이 가능함

○ IoT/Mobile LAB·창업카페 결합으로 입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이 기대됨

○ 관내 대학과 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 간 융합 네트워크가 형성됨

2. PoC 및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1) 고양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사업

○ 사례 가. 경기도 2026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고양시가 추가 매칭하여 사업당 지원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함

○ 연간 50건, 시비 3억 원 규모로 일산테크노밸리·고양산업진흥원 입주기업과 매칭함

○ 고양시의 강점 수요기업인 국립암센터(의료데이터, 헬스케어), 킨텍스(MICE·AR/VR), EBS·JTBC·MBC(미디어 콘텐츠) 등과 매칭

□ 경기도 2026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경기도는 도내 스타트업과 대·중견·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매칭 및 기술·제품·서비스 검증(PoC)을 연계 지원함

○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PoC 트랙과 기수행 과제의 사업 적용 검증을 위한 Post-OI 트랙을 이원화하여 운영함

○ 대·중견·중소기업과 1:1 밋업 및 매칭 협업 기회 제공, PoC 협업 지원금 1천만 원, Post-OI 1천만 원, 기업성장 Value-Up 액셀러레이팅, 우수 스타트업 투자 및 TIPS 연계 혜택을 제공함

□ 사례 나. In-Best 판교 투자교류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제1·2테크노밸리 입주 IT·BT·NT·CT 7년 이내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In-Best 판교 투자교류회를 운영함

○ 투자역량강화 IR 집중 멘토링, 데모데이 4회(오픈이노베이션 연계 2회), 국내외 투자자 1:1 매칭, 경기도 1조원 규모 G-펀드 연계,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런치 교류회 신설 등을 포함함

□ 기대효과

○ 연 50건 PoC 매칭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35% 향상됨. 국립암센터·킨텍스·EBS·JTBC·MBC 수요기업 연계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함. 경기도 사업 매칭으로 시비 3억 원 투입 대비 15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함

2) 관내 대학 연계 PoC 트랙

○ 한국항공대·동국대 BMC·중부대·농협대 4개 대학의 보육 창업기업·연구실과 일산테크노밸리·고양산업진흥원·드론앵커센터 입주기업의 PoC 매칭 및 지원을 매년 추진함

○ 한국항공대(UAM·드론), 중부대(스마트 모빌리티), 동국대 BMC(의료기기, 바이오), 농협대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과 대학 매칭

□ 사례 가. 교육부 LINC 3.0 (산학연 협력) 사업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사업을 운영함

○ 선정 대학에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여 산학연 협력 인프라 구축, 가족기업 PoC 매칭,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함

□ 사례 나.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응용연구 매칭 모델

○ 독일 프라운호퍼 협회는 76개 연구소, 3만 명, 연매출 30억 유로 규모로 운영됨

○ 핵심은 1/3 매칭 모델로 연방·주정부 기본예산 1/3, 산업계약 1/3, 공모 공공프로젝트 1/3 구조임

○ 산업계약 수주가 곧 평가지표이므로 시장지향성을 강제하는 모델로 작동함

□ 기대효과

○ 누적 PoC 추진으로 사업화 성공률 증진이 가능함

○ 4개 대학 R&D 분야와 입주기업 사업 분야 직결로 매출 직결형 협력이 형성됨

○ 교육부 LINC 3.0 매칭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후속 사업 연계가 가능함

3. 네트워킹 및 행정지원 분야

1) 고양 관내기업·바이어 런치 교류회

○ KINTEX MICE 시설을 이용해 고양시 관내기업과 바이어 간 점심 시간을 활용한 정기 네트워킹 행사를 운영함

○ 판교 In-Best의 런치 교류회 모델을 고양시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임

○ 연간 12회(월 1회), 시비 0.5~1억 원 규모로 즉시 시행 가능함

□ 사례 가. 판교 In-Best 런치 교류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In-Best 판교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입주 스타트업과 투자자·대기업이 점심 시간에 자연스럽게 매칭되는 런치 교류회를 신설함

○ 격식 있는 IR 발표 대신 자유로운 교류 분위기가 매칭 성공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 기대효과

○ 월 1회 정기 매칭으로 연 12회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됨

○ 격식 없는 점심 교류로 매칭 성사율 증진이 기대됨

2)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조의2를 근거로 고양시 공무원을 고양시 산업클러스터 및 관내대학 창업기업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파견함

○ 기업의 인허가, 국가사업 신청, MOU 협상을 지원함

○ 관내대학에 고양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대학 내 창업기업의 국가사업 신청을 지원함

○ 파견공무원이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 시 승진 가점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 사례 가. 울산광역시 기업현장지원 전담조직

○ 울산시는 2022년 9월 현대차 지원 전담팀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기업현장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 중임

○ 2024년 1월에는 기업현장지원과장을 HD현대중공업에 직접 파견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를 즉각 청취하고 지원함

○ 이러한 민관 인적교류 덕분에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방위사업청 제재 위기에 놓였던 HD현대중공업의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재참여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함

○ 2025년부터는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현장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제도를 확대함

○ 울산시는 2025년부터 투자 책임관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구·군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음

○ 전담공무원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효과적인 인적교류 기반을 구축한 모델임

□ 사례 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글로벌 기업 전담 매니저

○ 싱가포르 EDB는 다국적 기업 1사당 전담 매니저(account manager)를 배정하여 부처 간 인허가, 외국인 비자, 부지 분양을 단일 창구로 처리함

○ Novartis, GSK, Roche 등 40개 글로벌 R&D 센터가 Biopolis에 집적된 핵심 요인임

□ 기대효과

○ 시 공무원 5명 파견으로 인허가·국가사업 신청의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됨.

○ 울산 모델(2024년 HD현대중공업 파견으로 7조 원 AI 데이터센터 유치)에서 입증된 효과가 기대됨

○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으로 추가 입주가 견인됨

○ R&D 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양주·파주 대비 차별성 확보가 가능함

3) 지산학 협력과 조직 창설

○ 부산시의 전국 최초 지산학 협력 전담조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조직 내 지산학 협력 전담부서(지산학협력과)를 신설하고, 고양산업진흥원에 지산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되, 고양시 지산학 협력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조직·센터·브랜치 지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관내 대학(한국항공대·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중부대 등)의 연구실과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방송영상밸리·국립암센터 등 산업 현장을 상호 연결하는 '고양형 지산학 브랜치'를 지정·운영함

○ 4대 특화기업(의료양자·UAM·콘텐츠·바이오) 관련 기업 현장·대학 연구실·앵커기관에 브랜치를 지정하여 공동연구, 인재 매칭, 계약학과 개설, 기술이전·사업화를 단일 창구로 연계함

○ 지산학협력센터는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결·중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와 연계하여 국가 산학협력 공모사업(LINC 3.0, 산학연 Collabo R&D 등) 유치를 지원함

□ 사례 가. 부산시 지산학협력과·지산학협력센터(지산학 브랜치)

○ 부산시는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시 조직에 지산학 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산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시가 총괄하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이원 체계를 구축함

○ 대학의 기술·인재와 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거점인 '지산학 협력 브랜치'를 지정·운영하여 개소 1년 반 만에 50개소, 3년 만에 100개소를 달성함

○ 2023년 기업브랜치 대상 조사에서 브랜치 지정 후 산학협력 건수가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제1차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4대 전략·20개 과제)을 수립하고, 2025년에는 지산학 연결중개 촉진 지원사업(30개사, 8.6억 원)을 통해 브랜치 융복합, 기술도입, 기업사업화의 3개 분야를 지원함

□ 사례 나. 독일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재단 기술이전센터

○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대학교수가 기업 현장 밀착형 기술이전센터를 직접 설립·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지산학 협력 모델로, 전 세계 1,000여 개 슈타인바이스 기업과 3,000여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함

○ 재단 소속 대학교수 700여 명이 이론과 기업 실무를 병행하며, 정부 지원 없이 100% 민간 프로젝트 수주로 연간 2,000여 개 기술이전·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함

○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개별 교수 단위로 기업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분권형 구조가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음

□ 기대효과

○ 지산학 협력 전담조직 신설로 분산되어 있던 대학·기업·시 지원사업의 연계 창구가 일원화됨

○ 부산 모델(브랜치 지정 후 산학협력 71.7% 증가)에 비추어 관내 대학-기업 공동연구·기술이전의 실질적 증가가 기대됨

○ 4대 특화기업의 기술 수요와 관내 대학 연구 역량의 매칭으로 R&D 기반 기업유치의 차별적 경쟁력이 확보됨

○ 계약학과·인재 매칭을 통해 관내 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동시에 도모됨

4. 융자 및 보증 분야

1) 고양 데이터 가치평가 매칭 지원사업

○ 기존 유사 사업인 고양산업진흥원 중소기업 AI·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을 확장·재편하는 것임

○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2026년 총 1.61억 원, 20개 기업)에 고양시가 매칭하여 평가비용을 추가 지원함

○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은행 데이터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조달 1,000억 원 규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례 가.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2026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운영함

○ 총 1.61억 원으로 20개 기업(보증·대출 15개사, 투자·거래 5개사)에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 원)와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25% 가산지원을 제공함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NICE평가정보 등이 인증된 가치평가기관임

□ 사례 나. 산업은행 데이터담보 대출(DTC) 프로그램

○ KDB 산업은행은 2023년부터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를 담보로 인정하여 평가가액의 70~80%까지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자본금이 부족한 데이터 보유 스타트업이 보유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기대효과

○ 연 50개 기업 평가비 매칭으로 산업은행 DTC 연계 시 자금조달 1,0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함

○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기업유치가 가능함

○ 보유 데이터의 자산가치 인정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됨

2) 고양시 전략산업 특례보증

○ 고양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증액하여 4대 특화기업(의료양자·UAM·콘텐츠·바이오) 우대 보증한도를 확대함

○ 연간 시 출연금으로 보증한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함

○ 출연금 증액 메커니즘이 성남시에서 입증된 모델임

□ 사례. 성남시 특례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

○ 성남시는 시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적립하여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해 옴

○ 기업당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인하, 신속 심사 등의 혜택을 제공함

○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가점을 부여함

□ 기대효과

○ 기존 시행 사업의 4대 특화기업 우대 확대로 전략산업 유치의 효과가 나타남

5. 멘토링 및 컨설팅 분야

1) 고양산업진흥원 1:1 멘토링 4대 트랙

○ 기존 유사 사업인 고양산업진흥원 28청춘창업소 1:1 전문가 멘토링 및 혁신창업 스타트업 아카데미 확장

○ 의료·UAM·콘텐츠·바이오 4대 특화 트랙별 멘토 풀을 구축하여 고양산업진흥원 입주기업과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함

□ 사례. 성남산업진흥원(SNIP) 상시멘토링

○ 성남산업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위한 상시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함

○ 분야별 전문 멘토 풀을 구축하여 경영, 마케팅, IR, 기술이전 등 전 영역의 1:1 상담을 제공함

□ 기대효과

○ 4대 특화 트랙별 전문 멘토 풀 구축으로 분야 적합도 90% 이상 확보가 가능함

○ 기존 사업을 SNIP 모델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추가 예산 없이 즉시 가동이 가능함

○ 입주기업의 경영·IR·기술이전 1:1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향상됨

2) 국제전시회 고양관 운영

○ 기존 유사 사업인 고양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확장함

○ 킨텍스가 자매전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전시(미국 CES, 독일 MEDICA, 미국 NAB Show)에 고양관을 설치하여 고양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

○ 킨텍스의 자매전시 관계를 활용하여 부스 비용 절감을 시도함

□ 사례 가. 판교 G-Frontier 글로벌 청년창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G-Frontier 사업으로 도내 청년 창업기업 20개사의 해외 전시·컨퍼런스 방문, 현지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멘토링을 지원함

○ 2026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신규·확대 사업으로 운영 중임

□ 사례 나. 미국 CES 한국관

○ KOTRA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

○ 부스 임차료, 통역, 바이어 매칭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함

□ 기대효과

○ 킨텍스 자매전시 활용으로 부스 비용 절감이 가능함

○ KOTRA 매칭으로 효율적 매칭 구조가 확보됨

제3절 고양시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안

1. 고양 퀀텀캠퍼스 조성안

1) 배경 및 필요성

○ 양자기술은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바이오·국방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전략기술로 부상함

○ 글로벌 양자기술 시장은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며 주요국은 양자기술을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인식함

○ 국내에서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양자기술 육성이 국가전략 차원으로 격상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6.6.9. 개정·시행) 제10조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민간 보안위협요소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정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클러스터 지정·지원 근거(제24조~제28조)는 2023년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음

○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접근성, GTX-A 및 공항 접근성,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개발자산, 국립암센터·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한국항공대 등 잠재 수요처와 연구자원을 보유함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대규모 제조 기반 양자 하드웨어 클러스터 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자보안·소프트웨어·서비스·실증 중심의 도시형 클러스터 전략이 적합함

2)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으로 구분되며 분야별 산업화 성숙도가 상이하므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양자보안 분야의 QKD·QRNG·PQC는 공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 상용화가 진행 중으로 단기 클러스터 구축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양자컴퓨팅은 아직 NISQ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성숙과 시장 검증이 필요함

○ 따라서 고양시는 1단계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양자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클라우드·응용서비스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양시는 세계 최초 수준의 양자보안 특화 클러스터를 지향함으로써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 없이도 글로벌 선점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3) 양자암호 중심 클러스터 토대 구축(1단계)

(1) 양자암호의 필요성

□ 성숙한 산업화 단계

○ 양자보안은 양자기술 3대 영역 중 가장 빠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분야임

○ 유선 광섬유 기반 QKD는 한국에서 KT·SK텔레콤이 이미 양자키분배 망을 일부 상용 운영 중이며, ID Quantique(스위스)·Toshiba(일본)는 글로벌 시장에서 QKD·QRNG 장비를 본격 판매 중임

○ PQC(양자내성암호)는 미국이 2030년까지, 한국이 2035년까지 정부·공공·금융 시스템 전반에 의무 적용하기로 정책 결정된 상태로, 향후 5~10년이 본격 도입 시기임

(2) 고양시의 비교우위

○ 대규모 제조·소부장 기반 없이 소프트웨어·통신·서비스 기업 위주로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여 고양시의 수도권 규제 환경과 정합됨

○ 국립암센터와 관내 의료기관, 인근 군부대·한국항공대, UAM 버티포트, 드론앵커센터 등 양자산업 관련 잠재 수요처가 인접해 있어 실증·구매 연계가 용이함

○ 국민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양자암호통신 관련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함

○ 고양시는 임상시험에 있어 관내 6개 병원의 데이터 특성이 다양하며 병원 간 협력이 비교적 원활함

○ 국립암센터의 양자암호·연합학습 선도 실적

○ 2022년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자 보안 통신 시범 인프라 사업' 주관, KT와 협력하여 국립암센터와 아주대병원 간 약 88km 양자암호통신 구간 구축

○ 해당 기술은 국정원 보안성 검토 통과

(3) 인프라 조성

□ 고양 퀀텀캠퍼스 조성

○ 공간구성

- 중앙 양자키 분배망 인프라 구축(KT, SKT 등과 협력)
- GPU 센터 구축(GPU 사용 지원, 전력 및 용수 공급)
- 양자기술 시연 및 전시공간
- 양자 암호통신 및 양자컴퓨터 기업 임대 공간

- 의료, 바이오, 방산, 드론, UAV 등 양자기술 수요 기업 임대 공간
- 양자 전공 대학원·연구실 등 R&D 기관 임대공간
- 고양시 파견 공무원 업무 공간(정부사업 지원, 기업유치)
- 양자기술 교육공간

□ 핵심 기업·기관 선제 유치

○ 양자통신망 운영사·양자보안 스타트업·대학 연구기관·글로벌 기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함

○ 입주 인센티브, 실증사업 참여기회, 연구공간 제공 및 정부 R&D 매칭을 결합하여 핵심 기업의 초기 입주를 유도함

○ 양자보안 기업 매출은 결국 의료·국방·UAM 시장에서 발생하므로, 기업 입주만 추진하지 않고 의료·국방·UAM 수요처와 연계한 동시 유치 패키지를 구성함

표 6-3| 유치 대상 양자암호통신 기업 및 역할

분류	대표 기관	역할
양자통신망 운영사	KT, SK텔레콤	QKD망 운영, 장비 제공, 공동 R&D
양자통신 스타트업	큐심플러스, SDT 등	양자모듈, 양자보안 장비 개발
연구기관	국민대·상명대·서울과기대·동국대·한국항공대 등	인증·검증, 인력 양성, 산학협력
글로벌 양자보안 기업	ID Quantique, Toshiba 등	한국 R&D 분소, 글로벌 기술협력

(4) 의료분야 양자보안 사업

□ 양자암호 의료데이터 플랫폼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암관리법」상 특수 절차 등 다중 규제가 적용되어 일반적 외부 반출이 매우 어려움

○ 고양 퀀텀캠퍼스에 R&D 분소를 두는 대학·기업에만 의료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하여 "고양시에 거점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 구조를 설계함

○ 양자암호통신은 인프라로서 활용하고 본질은 "안전한 통합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 6개 병원 데이터·시민 마이데이터·암 데이터를 결합한 고양시 주도 플랫폼이 글로벌 차별화 요소가 됨

○ 「의료법」 제3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병행

□ 의료 양자암호통신의 핵심 메커니즘

○ 연합학습

- 의료데이터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고 학습 산출물(가중치)만 중앙 서버로 송신

- 「의료법」상 원격의료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상 가명정보 처리 제약 완화 가능
- 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AI 모델 학습이 법적 위험 없이 가능

○ 비용구조 변화

- 종전에는 각 사이트마다 QKD 장비 풀세트(약 7~8억 원)를 설치해야 하므로 참여 진입 장벽이 높았음
- 중앙 키 생성장비 + 논리적 키 수신 구조 구축 → 비용 절감, 다수 의료기관 및 기업 참여 가능

□ 스위스 ID Quantique - 그라츠 의대 QKD 실증 사례

○ 스위스 양자기업 ID Quantique(IDQ)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대와 협력하여 환자 데이터를 QKD로 송수신하는 세계 1호 의료 양자보안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

○ EU OPENQKD 프로그램(1,500만 유로)의 헬스케어·전력·금융 통합 사업의 일부임

□ 의료 분야 양자보안 실증 사업 추진

○ 국립암센터와 관내 종합병원을 핵심 수요처로 하는 의료 데이터 양자보안 실증사업을 추진함

○ 의료 데이터 QKD 실증으로 진료기록·유전체 데이터·영상 판독 데이터 등 민감 의료정보를 병원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보관소 사이에 전송할 때 QKD 기반 암호 통신을 적용함

○ 유전체·생체 데이터 PQC 전환으로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장기 보관 암호 알고리즘을 PQC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 신약 임상 데이터 양자암호 적용으로 임상시험 무작위 배정·블라인드 키 생성에 양자난수 생성기를 적용하여 임상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화함

□ 고양시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사업

○ 시민과 연계된 마이데이터 수집 콘셉트로 접근하되, 고양시가 공공기관 자격으로 주도

○ ① 시민 자기결정권 기반 동의 체계, ② 의료 마이데이터 중개 전문기관 자격 획득, ③ 갤럭시 퀀텀 폰 등 양자보안 단말기 기반 연합학습을 결합함

○ 수집된 고양시민의 마이데이터를 양자암호를 통하여 병원,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이 활용하여 지역 의료산업 증진

(5) 국방·드론·UAV 관제 양자보안 사업

○ 고양시 인근에는 9사단을 비롯한 다수 군부대와 김포공항·인천공항이 인접해 있고, 한국항공대가 위치하여 국방 및 드론·UAV·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제 분야의 양자보안 실증에 가장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춤

○ 데이터·관제 데이터 역시 외부 반출이 어려우므로, 고양시 내 로컬 AI 인프라(억대 GPU 장비 포함)를 시가 구축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함

□ 군용 드론·정찰 UAV 통신 양자암호화

○ 군용 드론의 영상 데이터 실시간 전송과 명령·제어(C2) 통신은 적군의 신호 가로채기·재밍·해킹의 표적이 되기 쉬움

○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 드론·지상 관제소 간 통신에 PQC를 임베디드 펌웨어 단계에 탑재하고, (나) 무선 양자키분배(Free-Space QKD)를 통해 안전한 세션 키를 분배하며, (다) QRNG로 생성된 일회용 세션 키를 작전 단위로 갱신하는 3중 방어 구조를 실증함

○ 한국항공대의 무인기·UAM 연구 역량과 인근 군부대·방위사업청 R&D 매칭 사업을 결합함

□ 드론 군집(Swarm) 통신 양자보안

○ 다수 드론이 군집을 이루어 정찰·물류·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할 때 드론 간 메쉬 네트워크 통신의 보안이 핵심 취약점이 됨

○ 군집 내 키 동기화 알고리즘에 양자내성암호와 양자난수를 결합한 양자보안 메쉬 프로토콜을 개발·실증함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제 양자보안

○ 킨텍스 제3전시장 인근에 조성 예정인 버티포트와 김포공항·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도심 항공회랑(K-UAM Grand Challenge 수도권 실증 노선)의 관제 통신에 QKD·PQC를 적용함

○ UAM은 안전·신뢰성이 사업화의 핵심 전제이므로 관제 통신의 양자보안화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드론·UAV용 양자센서 융합

○ 양자센싱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위치측정(QPS)·관성항법(Quantum INS)·자기장 기반 GPS 차단 환경 항법을 양자보안 통신과 결합하여, GPS 재밍·스푸핑에 취약한 군용 환경에서도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UAV 통합 솔루션을 개발함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R&D 매칭

○ 위 네 가지 과제를 방위사업청 무인기 R&D 사업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과제로 매칭하여 정부 R&D 자금을 사실상 추가 인센티브로 확보함

한국항공대·국민대·인근 방산 중견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입찰함

4) 양자컴퓨팅 중심 클러스터 확장(2단계)

(1) 양자컴퓨팅의 필요성

□ 시장 성장 본격화 예상 시기

○ 글로벌 양자컴퓨팅 시장은 2024년 8조 9,155억 원에서 연평균 20.1% 성장하여 2031년 약 32조 1,2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 2028~2030년 사이 오류 정정 기술의 진전과 NISQ→FTQC(오류 내성 양자컴퓨터)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이 클러스터 확장의 적기로 판단됨

□ 1단계 자원의 자연스러운 확장

○ 1단계에서 구축한 양자보안 캠퍼스·인력·산학협력 인프라는 양자컴퓨팅 알고리즘·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로의 확장에 직접 활용 가능함

(2) 2단계 핵심 추진 과제

□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테스트베드(QaaS) 구축

○ AWS Braket·Azure Quantum·IBM Quantum 연계 양자공유바우처 사업을 고양시 모델로 정착시킴

○ ① 고양시가 대표 계정으로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괄 구매(연 2억 원 규모), ② 일산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대학·연구소가 공유 방식으로 활용, ③ 선정 기업에는 5,000만 원 한도의 지정 바우처 추가 지원함

○ 이 모델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구입(IonQ 등 600억 원 규모)하지 않고도 입주기업이 실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GPU·양자컴퓨터 실물 구축은 광주 등 타 지자체가 선점하여 한 발 늦었으므로 고양시는 "쉽게 접근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와 "양자 클라우드 활용 노하우"로 차별화함

□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기업 유치

○ 수도권 제조 입지 제약을 감안하여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제조기업보다 ① 양자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기업(SDT·노르마·SQK·큐노바 등 국내, IonQ·Quantinuum 등 글로벌의 한

국 분소), ② 양자 SaaS 응용 기업, ③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QaaS) 사업자(메가존클라우드 등)를 집중 유치함

○ 1단계 양자보안 캠퍼스 내에 양자컴퓨팅 전용 층을 추가하거나 인접 부지에 별도 양자컴퓨팅 동을 증축함

□ 지역산업 융합 응용: 의료·UAM·국방·콘텐츠·피지컬 AI

표 6-4 | 산업별 양자컴퓨팅 응용분야 및 고양시 관련기관

산업	응용분야	관련기관
의료·바이오	신약 분자 시뮬레이션, 단백질 구조 예측, 의료영상 최적화, 통합 임상데이터 플랫폼	국립암센터·동국대 BMC·관내 6개 의료기관
UAM·항공	도심항공 경로 최적화, 공항 디지털트윈 관제, 드론 군집 알고리즘	한국항공대·킨텍스 UAM 버티포트
국방·방산	작전 시뮬레이션, 군 물류 최적화, 양자센싱·통신 융합, 대드론 체계	인근 군부대(9사단 등)·방산기업
콘텐츠	영상 렌더링 최적화, 제작공정 최적화	EBS·MBC·SBS·JTBC
피지컬 AI	군용 로봇 자율판단 알고리즘, 산업용 로봇 보안 통신	한국항공대·중부대·방산기업·드론앵커센터

(3) 양자컴퓨터 실물 단계적 도입

○ 양자컴퓨터 실물 도입은 ① 정부·경기도 매칭 예산이 확보되고, ② 입주기업·연구소 수요가 충분히 누적된 2030년 이후 검토함. 그 전에는 IonQ·IBM·D-Wave 등 글로벌 양자컴퓨터에 대한 클라우드 접속이 더 비용 효율적임

○ 다만 국방·공공 영역의 데이터 외부 유출이 곤란한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양자 시뮬레이터(5~50 큐비트급)는 1단계 후반부터 단계적 도입을 검토함

5) 양자전환 교육 프로그램: 대학 연계 3단계 인력 양성

○ 양자보안 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인력 공급에서 결정됨

○ 양자기술 인력은 ① 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② 양자 알고리즘을 산업 현장의 드론·CCTV·UAM·의료·바이오·콘텐츠 등에 적용하는 융합 개발자, ③ 양자기술을 도입·활용·관리하는 사용자(공무원·시민·기업 임직원)의 3개 층위로 구분됨

○ 어느 한 층위만 강화해서는 클러스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고양시 양자보안 캠퍼스 내 교육 기능은 3단계 구조로 일원화하여 설계함

○ 인력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 유지이며, 교육만 받고 떠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① 대학 계약학과 기반 채용 보장, ② 입주기업 정주 가산점, ③ 클러스터 내 주거·정주 패키지를 동시 설계해야 함

□ 1단계: 원천 연구자 양성 (대학원·박사과정)

○ 대학원 양자 전공 과정 및 박사과정 운영을 통해 양자보안의 원천 기술을 개발할 연구자를 양성함

○ 정부의 양자캠퍼스 사업(고려대·포항공대·카이스트)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양자보안 캠퍼스 내에 국민대·상명대·서울과기대·동국대·한국항공대 등 협력대학의 산학협력단 분소 또는 양자보안 특화 대학원 분원을 유치함

○ 박사후과정·연구원에는 캠퍼스 내 주거·R&D 공간 우대 입주, 양자 클라우드 사용 바우처, 국제 학회 참가비를 지원함

○ 국제 공동 연구는 워털루대(캐나다)·시카고대(미국 CQE)·EU Quantum Flagship과의 MOU를 통해 활성화시킴

□ 2단계: 융합 개발자 양성 (대학 학부·계약학과·산학협력)

○ 양자 알고리즘을 드론·UAM·의료·바이오·콘텐츠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개발자가 클러스터의 양적 성장을 좌우함

○ ① 대학 계약학과 모델을 핵심으로 운영함. 가천대학교의 반도체 계약학과(성남)나 SK하이닉스 후원 학과처럼 한국항공대(드론·UAM 융합 양자보안),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의료 양자보안), 중부대(스마트 모빌리티 양자 융합), 국민대 경영정보학과(양자 최적화·물류·금융)와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입주기업과 채용 MOU를 동시 체결함

○ ② 12주 양자 알고리즘 집중 교육과정을 매년 2회 운영함. 24시간 이상의 실습 시간을 보장하며 AWS Braket·Azure Quantum·IBM Quantum 등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한 실습 환경을 제공함

○ ③ 양자 인턴십·바우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함. 양자보안 스타트업·중견기업에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임금의 6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양자 클라우드 사용 바우처로 지급함

○ 임금만 지급하면 양자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객관 검증하기 어려우나 클라우드 사용 로그를 통해 실질적 양자 알고리즘 개발 활동을 확인 가능함

□ 3단계: 공무원·시민·기업 임직원 인식 교육

○ 양자기술의 도입 수요는 공무원·시민·기업 임직원이 양자기술의 기본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발생함

○ 양자맹 탈출 세미나(3시간)를 분기별로 운영함

- 양자역학 기본 개념,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의 차이, 국내외 산업 동향을 소화하는 입문 과정으로 양자 클라우드 라이브 데모를 포함함

○ 고양시 공무원 양자 도입 워크숍을 연 2회 운영함

- 공공행정 데이터의 PQC 전환 계획, 양자보안 조달 사양서 작성, 양자기술 도입 시 규제 검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함

○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과학고 등) 양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양자 인력 저변을 확대함

- 고등학생 대상 양자 교육은 장기적 인재 풀 확보에 기여함

6) 고양 양자산업 추진단

○ 고양시·고양연구원·경기도 · 핵심기업(KT·SKT·큐심플러스·메가존클라우드)·핵심 대학(국민대·한국항공대·동국대)을 묶는 "고양 양자산업 추진단"을 시 직속으로 설치함

○ 추진단은 ① 양자보안 캠퍼스 건축·운영, ② 정부 공모사업 대응, ③ 입주기업 유치 협상, ④ 연 1회 마스터플랜 갱신을 담당함

○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여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의사결정 속도를 확보함

○ 첨단산업 관련 공모사업은 시장 직속 부서장이 직보·결재하는 구조로 운영함

2. 고양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안

1) 피지컬 AI 산업의 개요

□ 피지컬 AI(Physical AI)의 정의

○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가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봇·모빌리티·제어기술과 결합하여 인지·판단·행동까지 수행하는 산업 영역

○ 생성형 AI와 로보틱스의 결합으로 단순 자동화 로봇을 넘어 도심·건물·물류·보안·배송·돌봄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

□ 대표 적용 분야

○ 실외 이동로봇, 배송로봇, 순찰로봇, 물류로봇,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모빌리티

○ 안내로봇, 청소·방역로봇, 시설관리로봇, 돌봄로봇 등 도심·생활공간 응용 로봇

□ 산업의 본질

○ 단순 제조업이 아닌 로봇 하드웨어 + AI 소프트웨어 + 통신·데이터 + 운영·관제 + 규제 대응 + 서비스 모델이 결합된 융합 산업

○ 기술 시연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운영 가능한가"가 사업화의 핵심 : 우천·야간·보행자 혼잡·도로 단차·엘리베이터·자동문·민원 대응 등 복합 변수 처리 능력이 경쟁력

2) 고양시의 피지컬 AI 클러스터 비교우위

□ 도심 실증 자산의 다양성과 밀도

○ 일산테크노밸리(연구·기업 거점), 킨텍스(전시·컨벤션), 호수공원·고양종합운동장(공공 야외공간), 방송영상밸리(콘텐츠 인프라), 일산병원·국립암센터·명지병원(의료시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상업시설이 도심에 집적

○ 배송·순찰·안내·물류·돌봄·청소 로봇의 다양한 실증 시나리오를 단일 도시 내에서 모두 구현 가능

○ 고학력 개발자뿐만 아니라 실증·검증 현장의 운영인력도 필요로 하므로 관내 일자리 증진이 가능함

□ 수도권 접근성

○ GTX-A 운영,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김포공항·인천공항 인접, 자유로·외곽순환도로

○ AI·로봇 인재가 선호하는 서울 접근성과 정주여건 보유

□ 기업의 실수요와 부합

○ 피지컬 AI 기업은 현재 실증처가 매력적인 곳을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찾는 중

○ 여건이 맞으면 즉시 실증·검증 관련 분소 혹은 출장소 설립이 가능함

○ 도심 다중 실증 자산을 보유한 도시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이므로 고양시의 차별성 명확

3) 도심형 피지컬 AI 실증지구 구축(1단계)

(1) 1단계 개요

□ 정의

○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호수공원·방송영상밸리·일산병원·공동주택·상업시설을 단일 피지컬 AI 실증지구로 묶고, 배송·순찰·안내·물류 로봇의 실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도시환경을 구축

○ 단순 산업단지 분양·임대료 감면이 아니라 "실증 가능한 도시"로 포지셔닝

□ 필요성

○ 피지컬 AI 산업의 사업화 병목은 기술이 아닌 실증 공간 확보

○ 산업화 성숙도가 가장 빠른 영역(배송·순찰)에서 출발

(2) 1단계 핵심 추진 과제

□ 도심형 피지컬 AI 실증지구 지정

○ 일산테크노밸리· 창릉 자족용지: 기업 입주·정비·관제 거점, 물류 로봇 실증

○ 킨텍스 인근(제3전시장 포함): 전시·컨벤션 안내·물류 로봇 실증

○ 호수공원: 공원 순찰·청소·안내 로봇 실증

○ 방송영상밸리: 콘텐츠·미디어 제작 지원 로봇 실증

○ 일산병원·국립암센터·명지병원: 병원 물류·안내·소독 로봇 실증

○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일산 신도시): 단지 내 배송·순찰 로봇 실증

○ 라페스타·웨스턴돔·이마트 등 상업시설: 매장 내 안내·물류·청소 로봇, 배달 실증

□ 거점 간 연결 동선

○ 실외 보도 + 실내 시설 + 엘리베이터·자동문·보안게이트의 실내외 연계 이동을 실증할 수 있는 도시 단위 노선

○ 7대 거점을 단일 운영체계로 연결한 한국 최초의 도심형 피지컬 AI 통합 실증지구

(3) 로봇 전용 공용 인프라 조성

□ 피지컬 AI 운영 거점 신축

○ 피지컬 AI 기업 통합형 공용 인프라 시설

○ 로봇 충전 스테이션·기체 보관소·정비 공간·실외 주행 테스트 코스·관제실·통신망·데이터 수집 장비

□ 스마트빌딩 연동 테스트베드 구축

○ 엘리베이터·자동문·보안게이트 연동 표준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시범 건축물

○ 일산테크노밸리 내 신축 또는 기존 공공건물(예: 백석 업무빌딩) 활용 검토

○ 입주 기업이 별도 협상 없이 실내외 연계 이동 로봇을 시험 가능한 표준 환경

□ 도시 단위 데이터 수집 인프라

○ 7대 거점에서 발생하는 주행 데이터·장애물 인식·보행자 상호작용·운영 로그·이상상황을 시 차원에서 표준 수집·가공·공유

○ 개인정보 보호·보안 이슈 관리 매뉴얼 사전 정비

(4) 인증·규제 대응 체계 마련

□ 시·도·중앙정부 협의 패키지

○ 로봇 운행 가능 구역·실증 노선·보행자 안전 기준·민원 대응 프로세스·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시 조례·고시로 명문화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산업통상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와 연계

□ 안전관리 인프라

- 시 차원의 로봇 안전관리자 인증·보험 표준약관·사고대응 SOP 정립
-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전 설명회·민원 채널 일원화

(5) 핵심 기업 선제 유치

○ 1차 유치 대상 : 배송·순찰 로봇 영역 기업유치

표 6-5 | 로봇 활용 분야 및 관련기업

로봇 활용분야	관련 기업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딜리), 코가로보틱스
순찰·보안 로봇	도구공간, 트위니, 로보티즈
안내·서비스 로봇	로보티즈, 빅웨이브로보틱스
물류·배송 솔루션	우아한형제들

○ 글로벌 기업 R&D 분소 유치

- Boston Dynamics·Agility Robotics 등 글로벌 로보틱스 기업의 R&D 분소 유치 검토

4) 산업·서비스의 다양화(2단계)

(1) 2단계 개요

○ 1단계에서 확보한 실증 노하우·데이터·인력·인프라를 토대로 다음으로 확장

○ 휴머노이드·산업로봇·돌봄로봇·청소·방역로봇 등 서비스 영역 확장

○ 정부 R&D 본격 유치 : 산업부 지능형로봇·K-로봇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국토부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 데이터·관제 플랫폼 고도화 : 디지털트윈·5G/6G 결합

(2) 2단계 핵심 추진 과제

□ 휴머노이드·산업로봇 실증 영역 확장

○ 휴머노이드 시범 도입

- 킨텍스 안내·고양시청 민원 안내·일산병원 환자 안내 등 공공·서비스 영역
- Figure AI·Apptronik·Boston Dynamics Atlas 등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의 한국 실증처 유치

○ 산업·물류 로봇

- 방송영상밸리 콘텐츠 제작 지원 로봇(카메라 트래킹·세트 운반)
- 킨텍스 전시 설치·해체 자동화 로봇
- 일산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라스트마일 + 풀필먼트 연계)

□ 돌봄·청소·방역 로봇 : 의료·복지 결합

○ 의료기관 연계

- 일산병원·국립암센터·명지병원과 협력한 병원 물류·소독·안내 로봇
- 코로나19 이후 방역로봇 수요 회복기에 맞춘 의료·복지시설 표준 패키지

○ 고령자 돌봄

- 고양시 노인복지관·요양시설에서의 돌봄로봇 시범 : 보건복지부 사업 연계

(3) 데이터·관제 플랫폼 고도화

○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 1단계에서 축적된 주행·보행자 데이터를 디지털트윈으로 재구성
- 신규 진입 로봇 기업의 사전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 실증 비용·기간 단축

○ 5G/6G 특화망 연계

-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방송영상밸리에 5G/6G 특화망 설치
- 다수 로봇 동시 관제·저지연 영상 전송·원격 운영 표준화

5) 인재양성·인센티브·거버넌스

(1) 인재양성

□ 피지컬 AI 실무 아카데미

○ 고양시 내 대학(한국항공대·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중부대), 특성화고, 직업교육기관, 기업 연계

○ 커리큘럼: 로봇 자율주행 기초, ROS 기반 개발, 센서·카메라·라이다 이해, 원격관제 시스템, 로봇 정비, 배터리 안전, 현장 운영, 안전인증 대응

□ 현장 실증 인턴십

○ 실증사업 참여 기업의 지역 청년 인턴 채용 조건부 지원금

○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경로 설정·장애물 대응·고객 응대·운영 리포트 작성을 경험

□ 로봇 오퍼레이터 양성과정

○ 현장 세팅·기체 점검·원격 모니터링·고객 커뮤니케이션·사고 예방·긴급 대응 인력 양성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결 가능

□ 재직자 전환교육

○ 기존 물류·시설관리·보안·배달대행·제조·유지보수 인력의 피지컬 AI 산업 인력 전환

○ 시설관리 → 순찰로봇 운영자, 배달대행 운영 → 로봇배송 관제 인력 전환 경로

(2) 인센티브

□ 입지·임대료

○ 일산테크노밸리·창업지원시설·공공 유휴공간 입주 시 일정기간 임대료 감면·보조

○ 일반 오피스 기준이 아닌 로봇 기업 맞춤형 공간 : 기체 보관·충전·정비 공간 별도 제공

□ 고용·교육보조금

○ 고양시민 신규채용·지역 인재 교육 시 인건비·교육비 보조

○ 로봇 오퍼레이터·정비 인력·데이터 운영 인력은 지역 기반 채용 우선

□ 실증비용 보조

○ 보험료·안전관리자·현장 운영인력·통신비·지도 구축비·민원 대응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보조

○ 고양시를 우선 실증지로 선택하는 결정적 유인책

□ 공공조달 및 초기 구매 연계

○ 공원 순찰·공공시설 안내·도서관·병원 내 물류·전시장 배송·관광지 안내에 시가 직접 로봇 서비스 도입(로봇 1대당 2,000만 원 수준으로 공공조달 가능)

○ 실증 후 구매 연결 구조 : 입주 기업 레퍼런스 확보 가능

(3) 거버넌스

□ "고양 피지컬 AI 추진단" 설치

- 고양시·고양연구원·고양산업진흥원+ 핵심 기업 +관내대학 + 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 등) + 관내기관(KINTEX) 참여
- 7대 거점 운영·정부 공모 대응·기업 유치 협상·연 1회 마스터플랜 갱신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원연구원. (2024). 강원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다: 의미와 변화(양지원). 강원연구원.

경기도. (2025a).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2025. 7. 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경기도. (2025b). 경기도 RE100 추진배경 및 전략. 경기도에너지전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 (2026).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계획. 경기도.

경기연구원. (2020).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방안 연구(김은경 외 4인).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2024). 경기북부 신산업벨트 조성방안 연구(조성택 외 4인). 경기연구원.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5). 2025년 경기도 권역 구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양연구원. (2025). 고양특례시 양자기술산업 토대 구축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이현정 외 5인). 고양연구원.

고양특례시. (2026). 2026 고양특례시 기업지원 시책 안내. 고양특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월 29일).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2024 양자정보기술 백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부처 합동. (2025). 2025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정기획위원회.

국토교통부. (2026). 스마트시티·자율주행·생활물류 통합 사업.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025, 3월 14일).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김·장 법률사무소. (2025, 4월 23일).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뉴스레터].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1783

김포시. (2026). 2026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김포시.

산업연구원. (2019). 글로벌 시대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부. (2026a). K-로봇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2026b).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2026c, 1월 1일).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보도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2026d, 1월 7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보도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2024a, 7월 5일).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4b, 11월 6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5, 1월 7일). 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경신[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서초구의회. (2025).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398호). 서초구의회.

서초구청. (2017, 7월 23일). 「양재 R&CD 특구」 드디어 돛을 올리다[보도자료]. 서초구청.

서초구청. (2026, 1월 22일). 서초구,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완료[보도자료]. 서초구청.

수원특례시. (2026). 2026년도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2026). 2026년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용인특례시.

원주시. (2025). 2025년도(2024년 실적)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시.

이우천, 유왕근. (2007).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원주의료기기산업 발달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2), 55-70.

이우천, 윤형로. (2007). 원주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클러스터, 1(1), 67-86.

중소기업연구원. (2006).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2015).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홍운선 외 2인).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2016).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홍운선 외 2인).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 11월 29일).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김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통계청. (2025).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별 고용동향).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파주시. (2026).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파주시.
한국개발연구원. (2021). 원주, 의료기기 도시로 우뚝 서다(이지은). 나라경제, 2021년 1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5). KDI 경제전망, 2025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융합협회. (n.d.). RE100정보플랫폼. https://k-re100.or.kr
한국은행. (2025).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11월). 한국은행.
화성특례시. (2026). 2026년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화성특례시.
KITA(한국무역협회). (2026).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LG디스플레이. (2006, 4월 27일). 상생과 희망의 상징,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LG.Philips LCD 파주 공장 준공[보도자료].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2026). 2025년 사업보고서. LG디스플레이.

[해외문헌]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5).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In P. Aghion & S.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 c growth (Vol. 1A, pp. 385-472). Elsevier.
Agrawal, A., & Cockburn, I. (2003). The anchor tenant hypothesis: Exploring the role of large, local, R&D-intensive firm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1(9), 1227-1253.
Almirall, E., & Wareham, J. (2011). Living labs: Arbiters of mid- and ground-level innovati on.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3(1), 87-102.
Asheim, B. T., & Isaksen, A. (200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integration of local 'sticky' and global 'ubiquitous' knowledge.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7(1), 77-86.
Bank of America Institute. (2025, June 5). Battle of the titans: Reshoring vs. friendshorin g. Bank of America. https://institute.bankofamerica.com/content/dam/econom

ic-insights/reshoring-vs-friendshoring.pdf

Bartik, T. J. (1991). Who benefits from stat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Bartik, T. J. (2017). A new panel database on business incentives for economic developm ent offer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Bartik, T. J. (2019). Making sense of incentives: Taming business incentives to promote prosperity.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Birch, E., Perry, D. C., & Taylor, H. L., Jr. (2013). Universities as anchor institutions. Jour 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17(3), 7-15.

Boschma, R., & Frenken, K. (2006). Why is economic geography not an evolutionary scie nce? Towards a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 raphy, 6(3), 273-302.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 h in Psychology, 3(2), 77-101.

Brenner, T., & Mühlig, A. (2013). Factors and mechanisms causing the emergence of loca l industrial clusters: A summary of 159 cases. Regional Studies, 47(4), 480-50 7.

Bruegel. (2026). Revamping Europe's chips strategy: Indispensability, not self-sufficiency (Analysis 12/2026, N. Poitiers & T. Schenk). Bruegel.

Buckley, P. J., & Casson, M.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Macmilla n.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Cooke, P. (199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mpetitive regulation in the new Europ e. Geoforum, 23(3), 365-382.

Cooke, P. (2001).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lusters, and the knowledge economy. In 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0(4), 945-974.

Dunning, J. H. (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

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Dunning, J. H.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1), 1-31.

Dunning, J. H.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Duranton, G., & Puga, D. (2004). Micro-foundations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In J. V. Henderson & J.-F. Thisse (Eds.),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 4, pp. 2063-2117). Elsevier.

Edler, J., & Georghiou, L. (2007). Public procurement and innovation: Resurrecting the demand side. Research Policy, 36(7), 949-963.

Edquist, C., & Zabala-Iturriagagoitia, J. M. (2012).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as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Research Policy, 41(10), 1757-1769.

Etzkowitz, H., & Leydesdorff, L. (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2), 109-123.

European Commission. (2024a). European Chips Ac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

European Commission. (2024b, August 20). Commission approves €5 billion German State aid measure to support ESMC in setting up a new semiconductor manufacturing facility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4287

Flanagan, K., Uyarra, E., & Laranja, M. (2011). Reconceptualising the 'policy mix' for innovation. Research Policy, 40(5), 702-713.

Foray, D. (2015). Smart specialis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y. Routledge.

Foray, D., David, P. A., & Hall, B. (2009). Smart specialisation: The concept (Knowledge Economists Policy Brief No. 9). European Commission.

Frenken, K., Van Oort, F., & Verburg, T. (2007). Related variety, unrelated variet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Studies, 41(5), 685-697.

Gawer, A., & Cusumano, M. A. (2014). Industry platforms and ecosystem innovation.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1(3), 417-433.

Glaeser, E. L., Kolko, J., &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7-50.

Gordon, I. R., & McCann, P. (2000). Industrial clusters: Complexes, agglomeration and/or social networks? Urban Studies, 37(3), 513-532.

Heritage Foundation. (2025). 2025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Hooghe, L., & Marks, G. (2003). Unraveling the central state, but how? Types of multi-level govern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2), 233-243.

IEA. (2025).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D. (202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5.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Initiative for a Competitive Inner City. (2011). Anchor institutions and urban economic development: From community benefit to shared value (Inner City Insights, 1(2)). ICIC.

Intel. (2025, August 22). Intel and Trump administration reach historic agreement to accelerate American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hip [Press release]. https://newsroom.intel.com/corporate/intel-and-trump-administration-reach-historic-agreement

Katz, M. L., & Shapiro, C. (1985).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3), 424-440.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KEIA). (2025, July 8). What the Big Beautiful Bill means for South Korean businesses (T. Ramage). KEIA. https://keia.org/the-peninsula/what-the-big-beautiful-bill-means-for-south-korean-businesses/

Krugman, P. (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483-499.

Kydland, F. E., & Prescott, E. C. (1977).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3), 473-491.

Loewendahl, H. (2001). A framework for FDI promo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10(1), 1-42.

Lundvall, B.-Å. (Ed.).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Publishers.

Maillat, D. (1995). Territorial dynamic, innovative milieus and regional policy.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7(2), 157-165.

Markusen, A. (1996). Sticky places in slippery space: A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72(3), 293-313.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McCann, P., & Ortega-Argilés, R. (2015). Smart specialization, regional growth and applications to European Union cohesion policy. Regional Studies, 49(8), 1291-1302.

Menzel, M.-P., & Fornahl, D. (2010). Cluster life cycles: Dimensions and rationales of cluster evolu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9(1), 205-238.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 C., & Weingast, B. R. (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4), 803-832.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OECD. (2018).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OECD Publishing.

OECD. (2025).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2. OECD Publishing.

Pigou, A. C. (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SEMI Europe. (2025). SEMI Europe Chips Act report. SEMI. https://www.semi.org/sites/s

emi.org/files/2025-11/SEMI_Chips_Act_Report_Full_Report.pdf

SIA. (2024). 2024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2025). 2025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Investment and innovation amidst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2025, February 6). EDB year 2024 in review [Media release]. https://www.edb.gov.sg/en/about-edb/media-releases-publications/edb-year-2024-in-review.html

Slattery, C., & Zidar, O. (2020). Evaluating state and local business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2), 90-118.

Stanford FSI(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24, November 15). Friendshoring? Nearshoring? Reshoring? How the U.S.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is evolving (SCCEI China Briefs). Stanford University. https://sccei.fsi.stanford.edu/china-briefs/friendshoring-nearshoring-reshoring-how-us-trade-relationship-china-evolving

Stiglitz, J. E., & Weiss, A.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393-410.

Stor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Guilford Press.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UNCTAD. (2011). Investment promotion handbook for diplomats (Investment Advisory Series A, No. 6). United Nations.

UNCTAD. (2025a).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 United Nations.

UNCTAD. (2025b).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No. 49: Downturn in global investment persists in early 2025. United Nations.

UNCTAD. (2026).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No. 50. United Nations.

USTR. (2024).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von Hippel, E. (1986). Lead users: A source of novel product concepts. Management Science, 32(7), 791-805.

White House. (2025, November 14).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Free Press.

Williamson, O. E. (1991).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of discrete structur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2), 269-296.

Zodrow, G. R., & Mieszkowski, P. (1986). Pigou, Tiebout, property taxation, and the under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3), 356-370.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외무역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암관리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료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One Big Beautiful Bill Act, Pub. L. No. 119-21 (2025).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6, 3월 26일).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백석 요진업무빌딩, 항공대 산학융합 캠퍼스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89161

고양신문. (2025, 10월 29일). AI·SW 품은 성사혁신지구… 경기북부 AI 인재양성 '시동'.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70

뉴시스. (2025, 11월 17일). 삼성전자, 평택 5공장 60조 투자…완공되면 어떤 모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7_00034054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6월 7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규제 혁파…강원 규제자유특구 2년의 기록.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88346

데일리홍콩. (2026, 1월 28일). 홍콩 진출 해외기업·스타트업 사상 최대…한국 기업도 120개. https://dailyhongkong.com/2026/01/28/the-number-of-foreign-companies-and-startups-entering-hong-kong-reached-a-record-high-with-120-korean-companies-also-participating/

문화일보. (1998, 9월 13일). 원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활발. https://www.munhwa.com/article/10136687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2024, 12월 2일). 양재 40만㎡ 일대 'AI 특구'로 지정! 글로벌 기업·인재 유입.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863

전국인력신문. (2026, 3월 14일). 2026 무역 정책 재편과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대응. https://www.kjob.news/news/473446

전기신문. (2024, 10월 12일). (The 에너지) RE100 이행, 한국 기업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안 (김수이).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49

한국경제. (2024, 12월 21일). 삼성전자, 美 칩스법 보조금 47.5억달러 확정…16.5억불 감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11070i

한국경제. (2025, 12월 28일). 이상일 시장 승부수… 용인 반도체 투자 500조서 1000조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88130i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2024, 7월 1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총 5개 지정[Bio뉴스]. https://www.ibric.org/bric/trend/bio-news.do?mode=view&articleNo=9911271

CNBC. (2025, April 15). South Korea announces over $23 billion for chip sector as Trump tariffs on semiconductor imports loom. https://www.cnbc.com/2025/04/15/south-korea-announces-over-23-billion-for-chip-sector-as-trump-tariffs-on-semiconductor-imports-loom-.html

Reuters. (2025a, February 6). Singapore says investment commitments at S$21.9 billion in 2024, sees challenging 2025. https://www.investing.com/news/economic-indicators/singapore-says-investment-commitments-at-s219-billion-in-2024-sees-challenging-2025-3852515

Reuters. (2025b, September 30). Citigroup forecasts Big Tech's AI spending to cross $2.8 trillion by 2029. https://finance.yahoo.com/news/citigroup-forecasts-big-tech s-ai-11191525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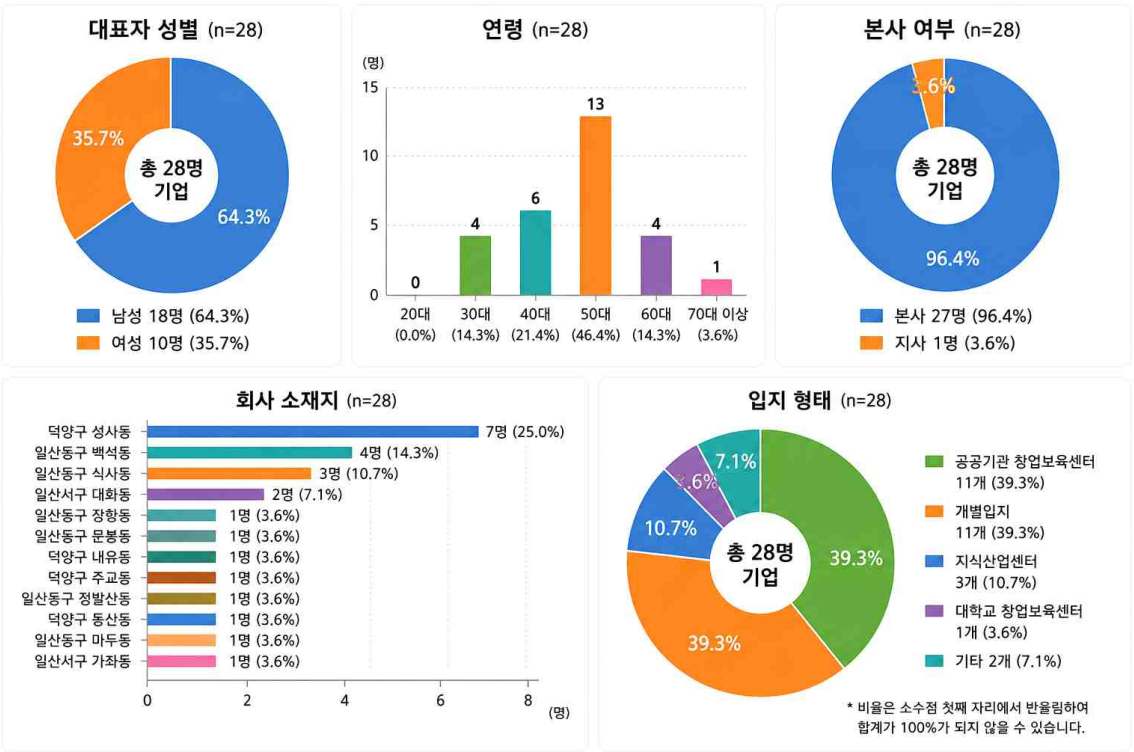
부록

[부록 1] 고양시 내부기업 응답자 및 일반현황
[부록 2] 고양시 외부기업 응답자 및 일반현황
[부록 3]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
[부록 4]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
[부록 5] 범주-코드-인용문 매핑표

[부록 1] 고양시 내부기업 응답자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

부록 그림 1-1 | 일반현황



○ 대표자 성별은 남성이 18명(64.3%), 여성이 10명(35.7%)으로 나타나 남성 대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남성 대표자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여성 대표자도 35% 이상을 차지하여 다양한 대표자 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13명(46.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 6명(21.4%), 30대와 60대가 각각 4명(14.3%), 70대 이상 1명(3.6%) 순으로 확인됨

- 40~50대 대표자가 전체 응답자의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경영 경험과 기업 운영 이력이 축적된 대표자 중심의 응답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30대 이하 대표자는 4명(14.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제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자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임

○ 응답 기업의 사업장 유형은 본사가 27개사(9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사 형태는 1개사(3.6%)로 확인됨

- 공장 및 연구소 형태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사 중심의 응답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며, 기업 운영 및 투자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본사 중심의 의견이 조사 결과에 주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함
- 기업지원정책과 기업활동 환경에 대한 응답 역시 실제 기업 경영 전반을 고려한 의견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응답 기업의 소재지는 덕양구 성사동이 7개사(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산동구 백석동 4개사(14.3%), 일산동구 식사동 3개사(10.7%), 일산서구 대화동 2개사(7.1%) 순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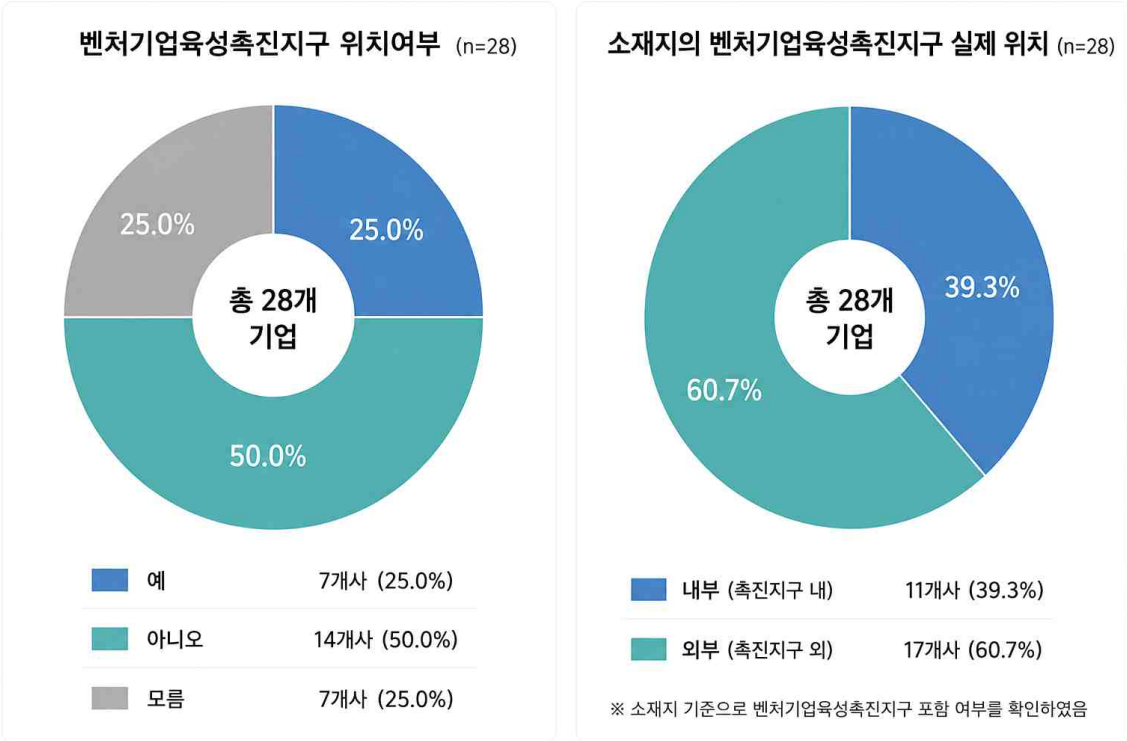
- 이외에도 일산동구 장항동, 문봉동, 정발산동, 마두동, 덕양구 내유동, 주교동, 동산동, 일산서구 가좌동 등 다양한 지역에 기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덕양구와 일산동구를 중심으로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고양시 내 주요 기업 활동 권역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특정 산업단지 중심보다는 생활권과 연계된 개별 입지 기반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입지 형태는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와 개별입지가 각각 11개사(3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산업센터는 3개사(10.7%), 기타는 2개사(7.1%),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개사(3.6%)로 확인됨

-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와 개별 입지 형태가 응답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성장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과 독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동시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비중이 일정 수준 확인되어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 활용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별 입지 기업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지원정책 수립 시 집적형 입지 기업과 개별 입지 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록 그림 1-2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위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14개사(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예'와 '모름'은 각각 7개사(25.0%)로 나타남

○ 응답 기업의 절반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외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5.0%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일한 비율의 기업은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및 지원 혜택에 대한 기업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소재지를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포함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11개사(39.3%)로 나타났으며, 비포함 지역은 17개사(60.7%)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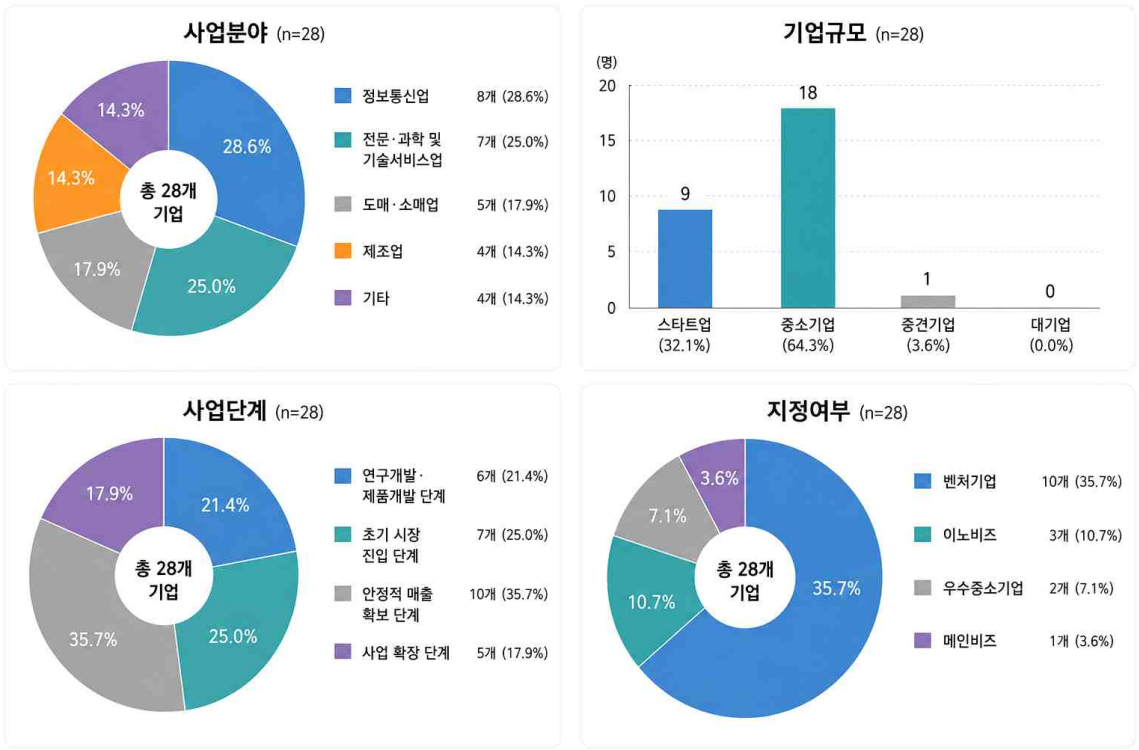
- 실제 소재지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약 40%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응답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업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와 혜택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 세제 및 행정지원 제도 홍보,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특성

부록 그림 1-3 | 사업 특성



○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8개사(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개사(25.0%), 도매·소매업 5개사(17.9%), 제조업 4개사(14.3%) 순임

-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기반 및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의 기업 분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과 도매·소매업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양시 내 기업 활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 18개사(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타트업 9개사(32.1%), 중견기업 1개사(3.6%)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 기업지원정책의 주요 수요층이 중소·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스타트업 비중도 30% 이상으로 나타나 창업 및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단계는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가 10개사(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초기 시장 진입 단계 7개사(25.0%),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 6개사(21.4%), 사업 확장 단계 5개사(17.9%)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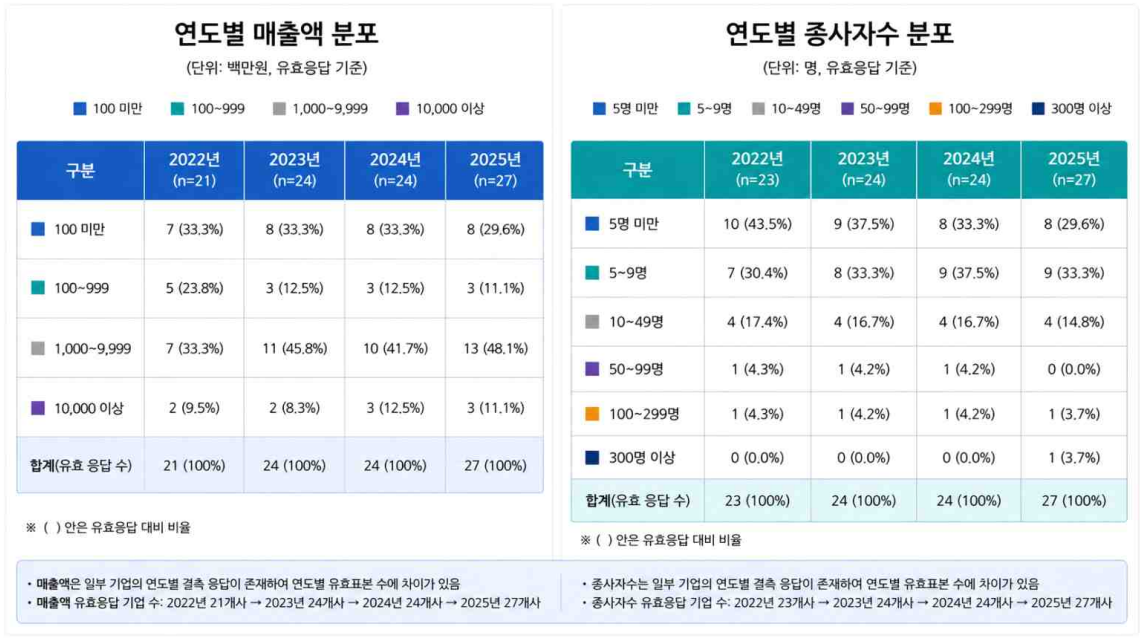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 확장 단계까지 다양한 성장단계의 기업이 고르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와 초기 시장 진입 단계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사업화 및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지정 기업이 10개사(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3개사(10.7%), 우수중소기업은 2개사(7.1%),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1개사(3.6%)로 확인됨

- 벤처기업 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술혁신 기반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며, 이노비즈, 우수중소기업, 메인비즈 등 추가 인증을 획득한 기업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증 취득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매출액 & 종사자 수

부록 그림 1-4 | 연도별 매출액 & 종사자 수



연도별 매출액 분포

(단위: 백만원, 유효응답 기준)

100 미만 | 100~999 | 1,000~9,999 | 10,000 이상

구분	2022년 (n=21)	2023년 (n=24)	2024년 (n=24)	2025년 (n=27)
100 미만	7 (33.3%)	8 (33.3%)	8 (33.3%)	8 (29.6%)
100~999	5 (23.8%)	3 (12.5%)	3 (12.5%)	3 (11.1%)
1,000~9,999	7 (33.3%)	11 (45.8%)	10 (41.7%)	13 (48.1%)
10,000 이상	2 (9.5%)	2 (8.3%)	3 (12.5%)	3 (11.1%)
합계(유효 응답 수)	21 (100%)	24 (100%)	24 (100%)	27 (100%)

※ ( ) 안은 유효응답 대비 비율

연도별 종사자수 분포

(단위: 명, 유효응답 기준)

5명 미만 | 5~9명 | 10~49명 | 5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구분	2022년 (n=23)	2023년 (n=24)	2024년 (n=24)	2025년 (n=27)
5명 미만	10 (43.5%)	9 (37.5%)	8 (33.3%)	8 (29.6%)
5~9명	7 (30.4%)	8 (33.3%)	9 (37.5%)	9 (33.3%)
10~49명	4 (17.4%)	4 (16.7%)	4 (16.7%)	4 (14.8%)
50~99명	1 (4.3%)	1 (4.2%)	1 (4.2%)	0 (0.0%)
100~299명	1 (4.3%)	1 (4.2%)	1 (4.2%)	1 (3.7%)
300명 이상	0 (0.0%)	0 (0.0%)	0 (0.0%)	1 (3.7%)
합계(유효 응답 수)	23 (100%)	24 (100%)	24 (100%)	27 (100%)

※ ( ) 안은 유효응답 대비 비율

• 매출액은 일부 기업의 연도별 결측 응답이 존재하여 연도별 유효표본 수에 차이가 있음
• 매출액 유효응답 기업 수: 2022년 21개사 → 2023년 24개사 → 2024년 24개사 → 2025년 27개사

• 종사자수는 일부 기업의 연도별 결측 응답이 존재하여 연도별 유효표본 수에 차이가 있음
• 종사자수 유효응답 기업 수: 2022년 23개사 → 2023년 24개사 → 2024년 24개사 → 2025년 27개사

○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 동안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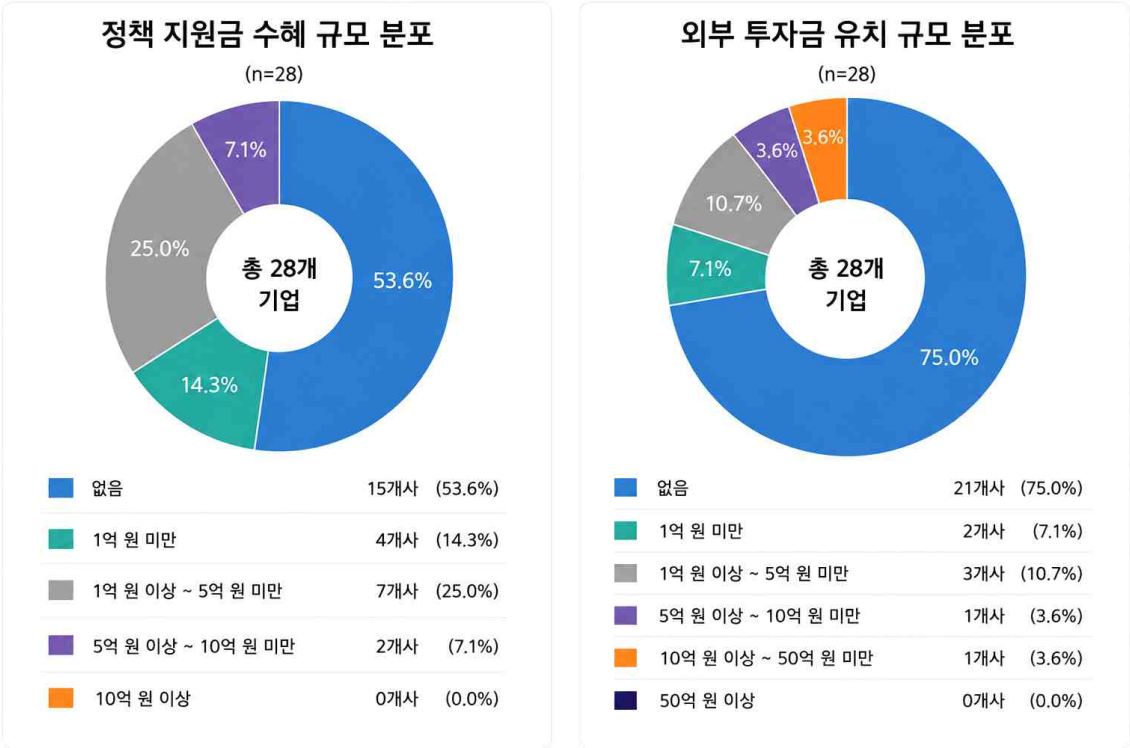
- 2022년에는 해당 구간 기업이 7개사(33.3%)였으나, 2023년 11개사(45.8%), 2024년 10개사(41.7%), 2025년 13개사(48.1%)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1억원 미만 및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응답 기업 간 규모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종사자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 동안 5명 미만과 5명 이상 9명 이하 구간에 속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5명 미만 기업은 10개사(43.5%), 5명 이상 9명 이하 기업은 7개사(30.4%)로 확인되었으며, 2025년에는 각각 8개사(29.6%), 9개사(33.3%)로 나타남
- 10명 이상 49명 이하 기업은 연도별로 4개사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0명 이상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정책 지원금 & 외부 투자금

부록 그림 1-5 | 정책 지원금 & 외부 투자금



○ 정책 지원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이 15개사(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7개사(25.0%)임

- 전체 응답 기업의 약 절반은 정책 지원금을 수혜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지원금을 수혜받은 기업 중에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 지원이 일부 기업의 성장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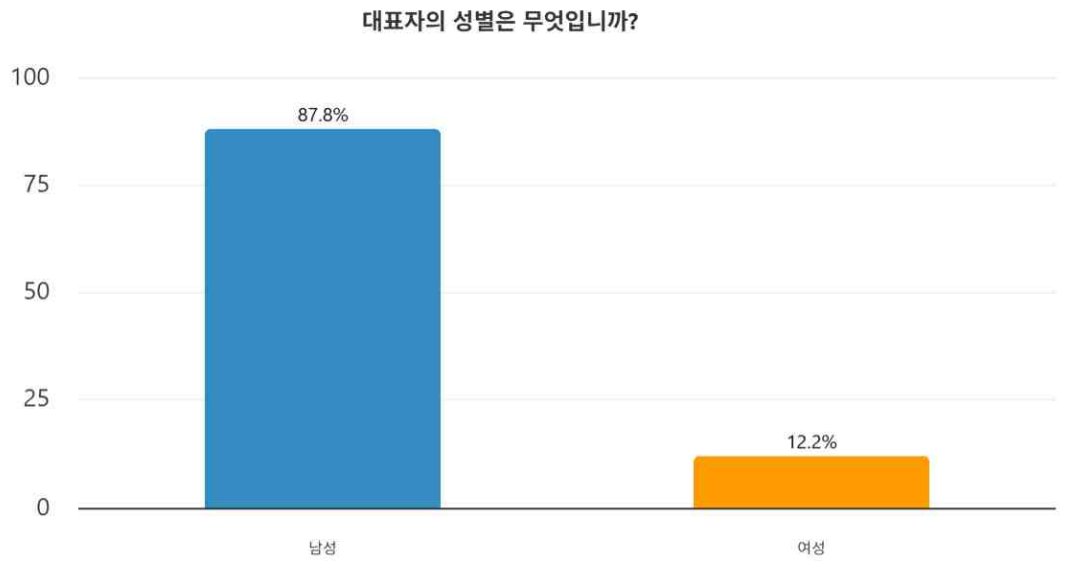
○ 외부 투자금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기업이 21개사(75.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체의 25.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5억 원 미만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됨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개사(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투자 유치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부록 2] 고양시 외부기업 응답자 및 일반현황

□ 대표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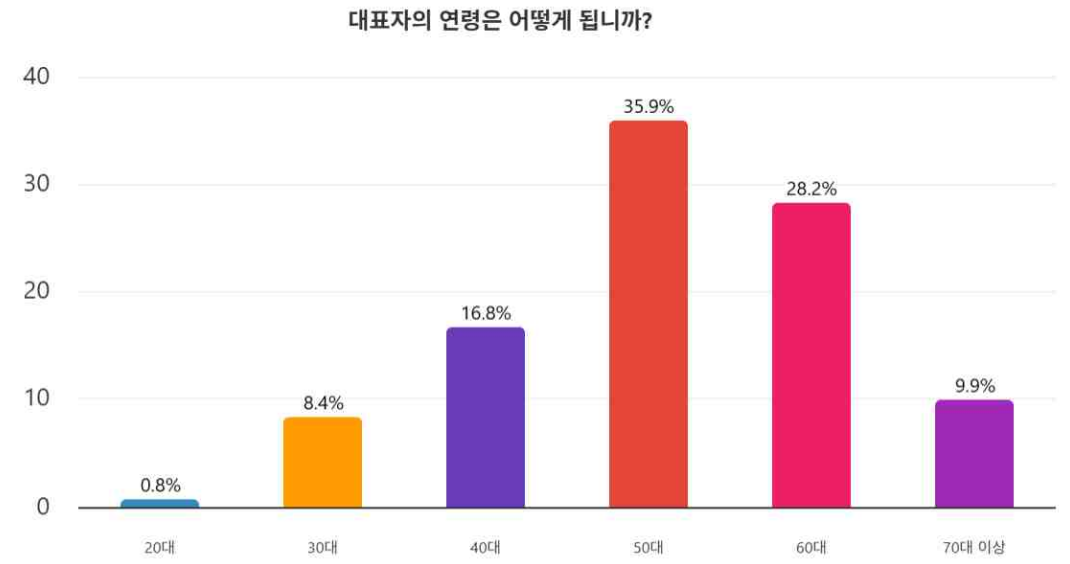
부록 그림 2-1 | 대표자 성별



○ 대표자의 성별은 남성이 115명(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16명(12.2%)으로 나타나며, 응답 기업의 대표자 구성은 남성 중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대표자 연령

부록 그림 2-2 | 대표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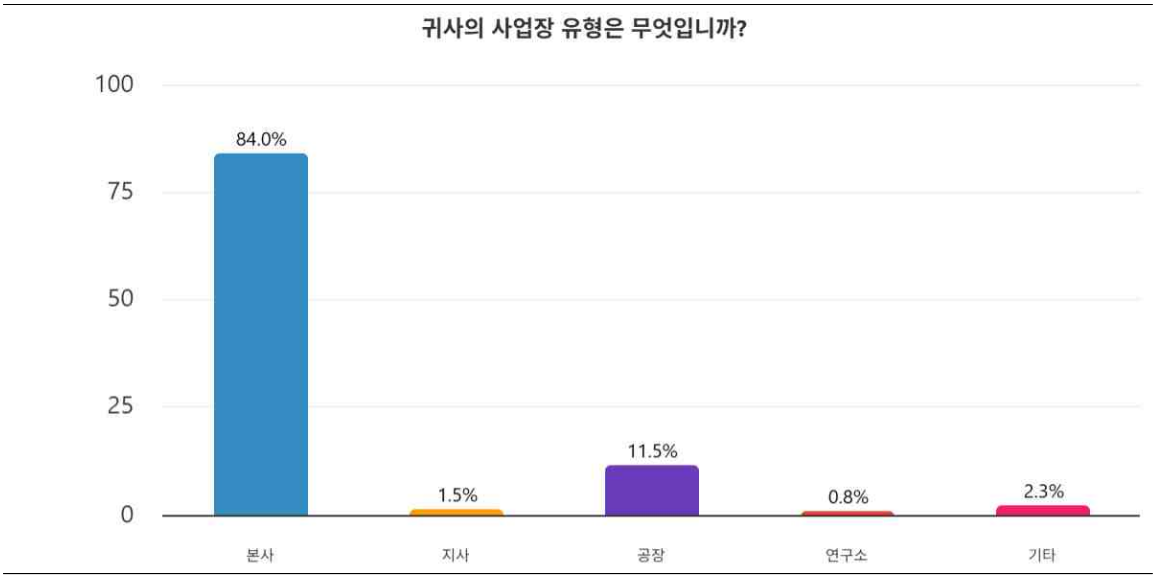
○ 대표자의 연령은 50대가 47명(3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 37명(28.2%), 40대 22명(16.8%) 순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대표자는 전체의 7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하 대표자는 12명(9.2%) 수준으로 확인됨

-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대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업 운영 경험과 의사결정 권한이 축적된 대표자 중심의 응답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기업 이전 및 투자와 관련된 장기적 경영 판단이 필요한 조사 특성상 실제 기업 운영 및 경영 전략에 관여하는 대표자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 유형

부록 그림 2-3 | 사업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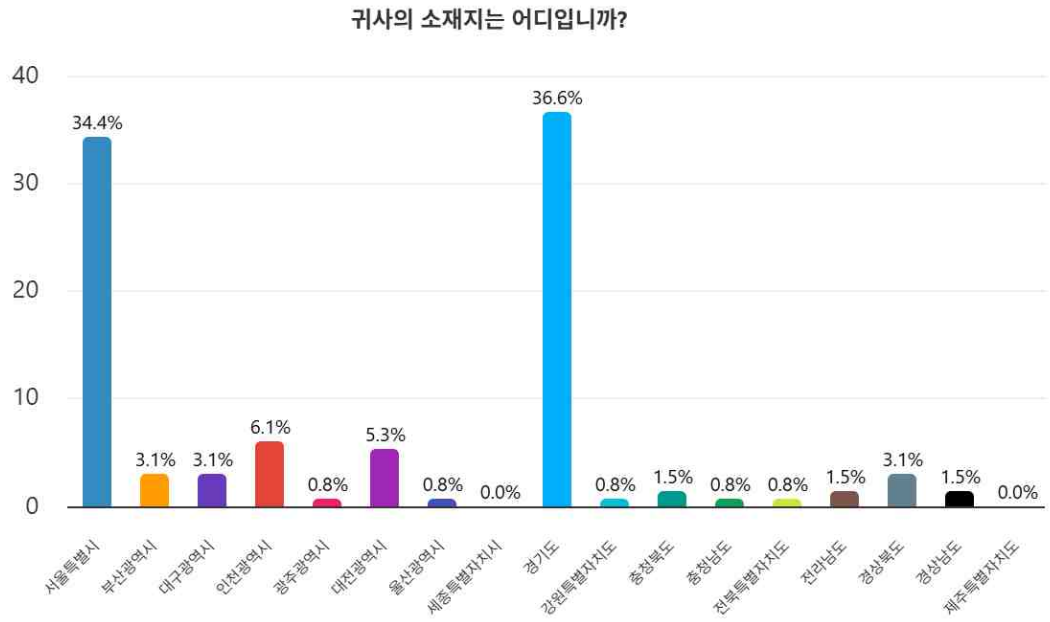


○ 사업장 유형은 본사가 110개사(8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장 15개사(11.5%), 기타 3개사(2.3%), 지사 2개사(1.5%), 연구소 1개사(0.8%) 순으로 나타남

- 본사 중심의 응답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업 이전 및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기업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부 제조 및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 형태의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 사무·관리 기능뿐 아니라 실제 생산 및 운영 환경과 관련된 기업 수요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 소재지

부록 그림 2-4 | 사업장 소재지



○ 소재지는 경기도가 48개사(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45개사(34.4%)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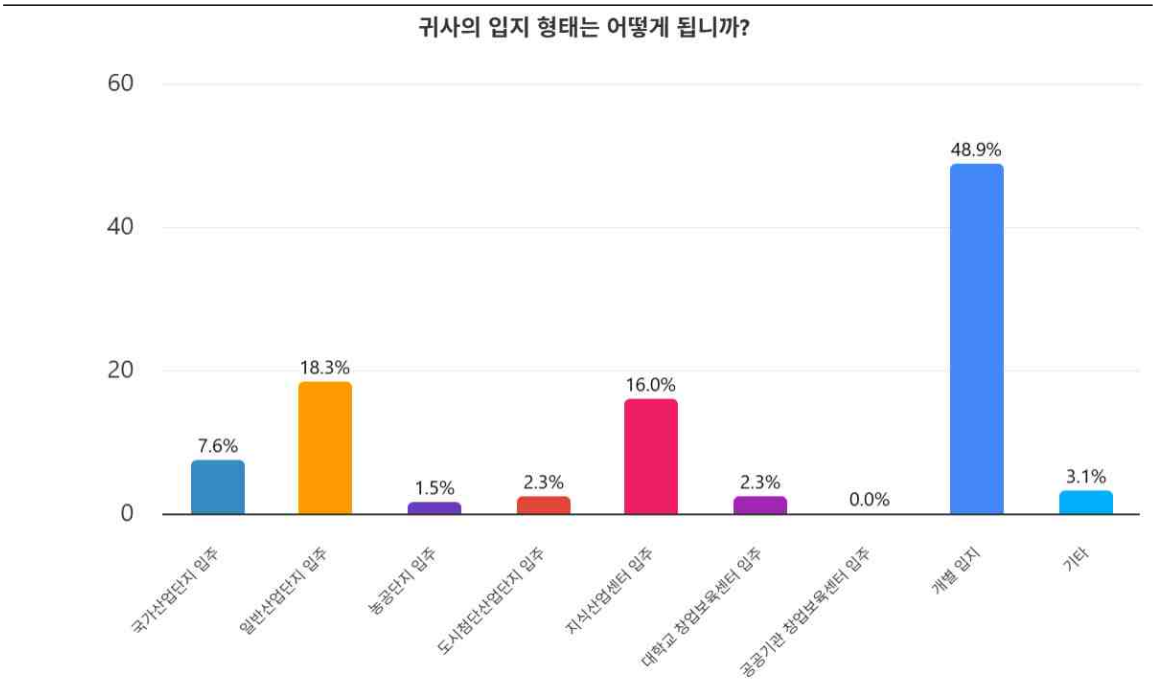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총 101개사(77.1%)로 집계되어 전체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지역은 대전광역시 7개사(5.3%),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각각 4개사(3.1%) 순으로 조사됨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양시의 서울 인접 입지 및 수도권 접근성이 기업유치 대상 지역으로서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일부 비수도권 기업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수요 가능성도 함께 확인된 것으로 판단됨

□ 입지 형태

부록 그림 2-5 | 입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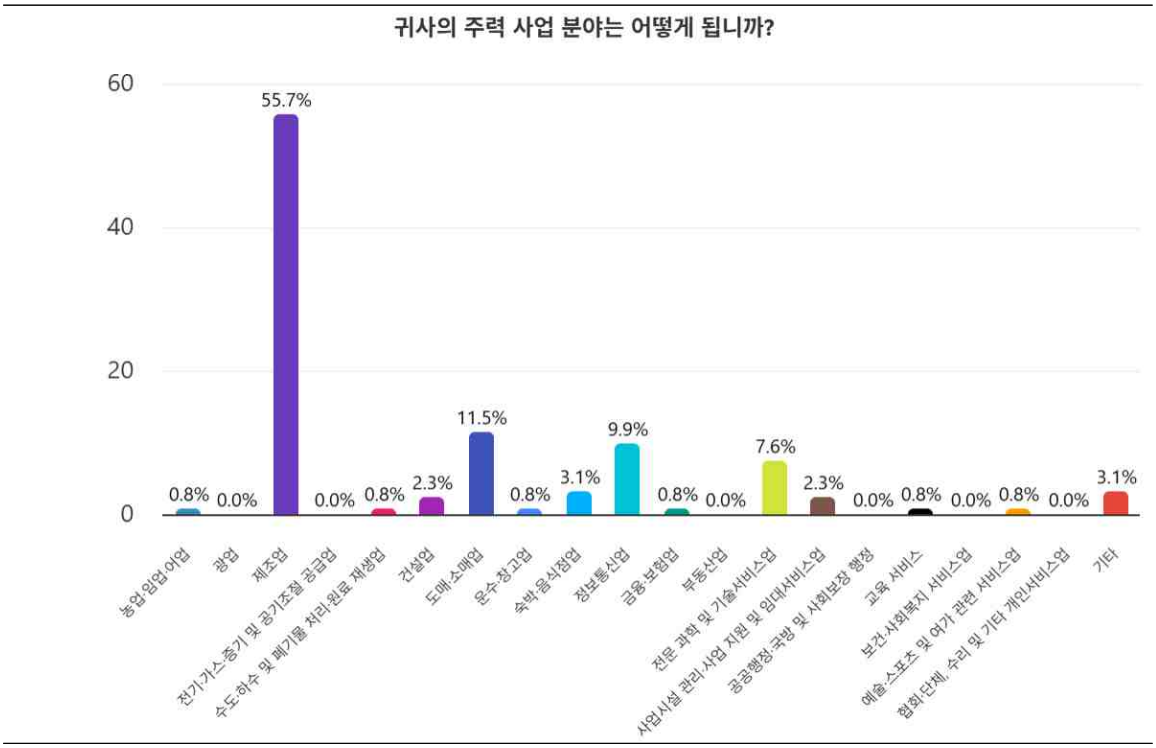
○ 입지 형태는 개별 입지가 64개사(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입주 24개사(18.3%), 지식산업센터 입주 21개사(16.0%) 순으로 집계됨

○ 국가산업단지 입주는 10개사(7.6%)였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각각 3개사(2.3%)로 확인되었고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집적형 입지보다 개별 입지 형태의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들이 산업단지 중심의 집적 구조보다는 개별 사업장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입지 선택 시 업종 특성, 비용 부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부 기업은 산업단지보다는 개별 입지를 통해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업유치 정책 추진 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개별 입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력 사업 분야

부록 그림 2-6 | 주력 사업 분야



○ 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는 제조업이 73개사(5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매·소매업 15개사(11.5%), 정보통신업 13개사(9.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개사(7.6%) 순으로 조사됨

- 생산·유통·기술 기반 업종 중심의 응답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 정책 수요가 제조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입지·인프라·인력 확보 등 제조업 운영 환경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보여줌

○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중도 일정 수준 나타나 기술 기반 및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의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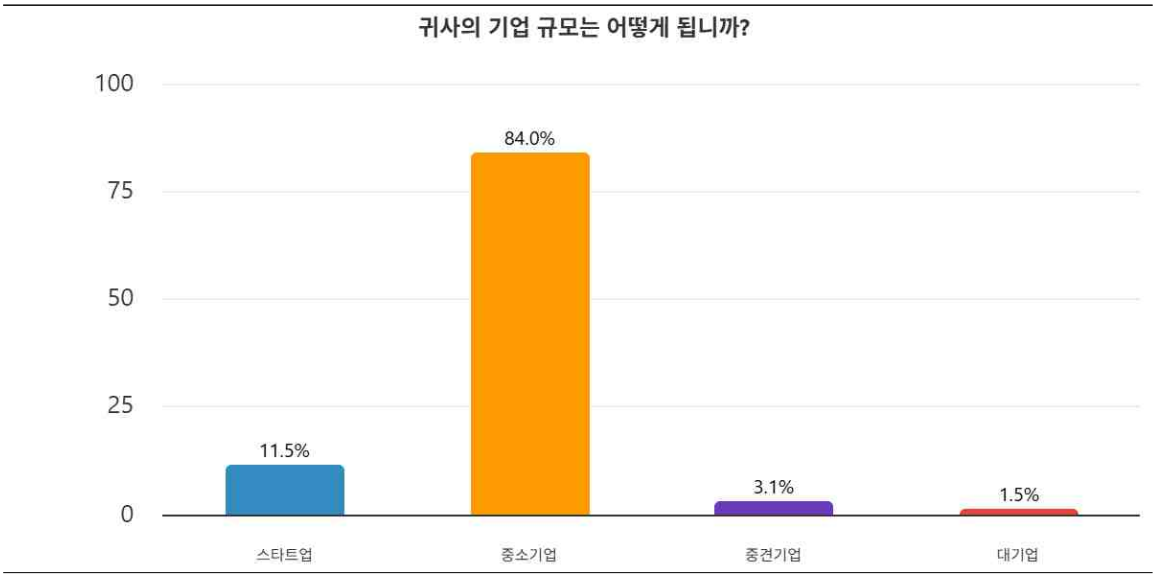
- 향후 고양시가 제조업뿐 아니라 ICT, 콘텐츠, 첨단기술 분야 등 신산업 기반 기업유치 전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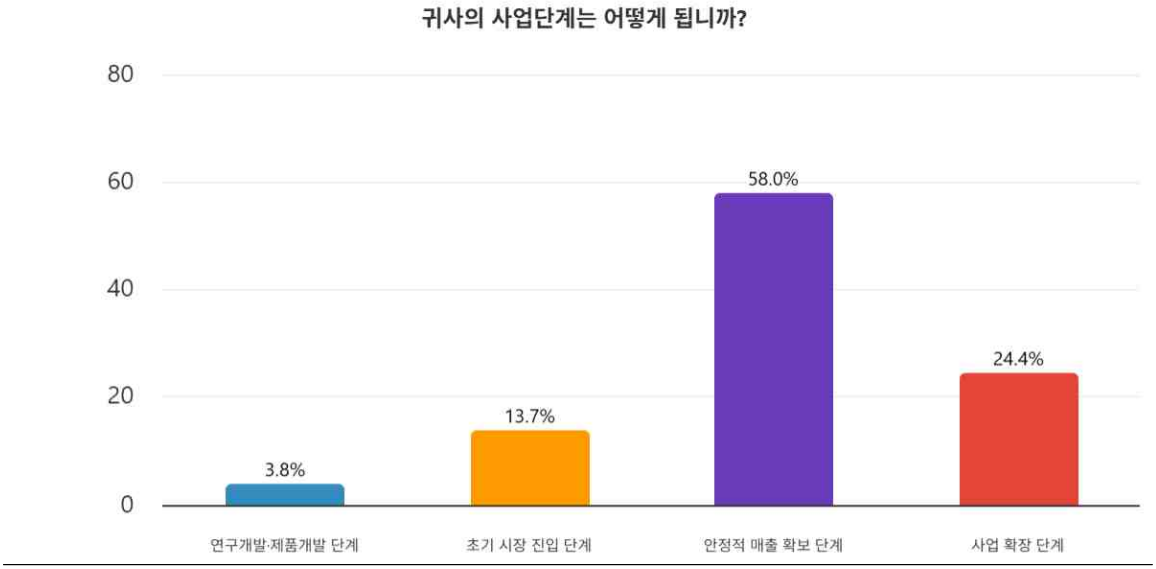
○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응답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응답 기업은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 중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규모 및 사업단계

부록 그림 2-7 | 기업 규모 및 사업단계





○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 110개사(8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타트업은 15개사(11.5%)로 조사됨

○ 중견기업은 4개사(3.1%), 대기업은 2개사(1.5%)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입지 비용, 금융 조달, 인력 확보, 행정지원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을 가능성을 보여줌

○ 스타트업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사업 공간 지원, 투자 연계,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중견기업 및 대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본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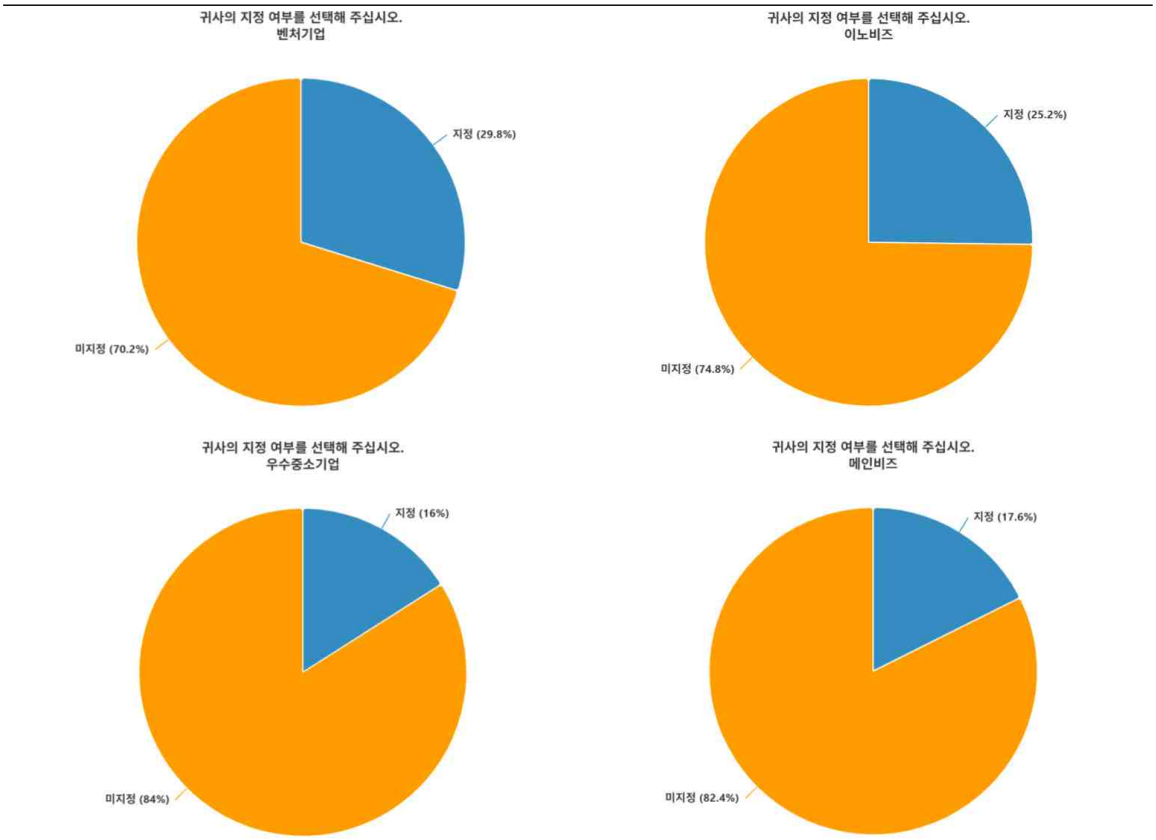
○ 사업단계는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가 76개사(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 확장 단계는 32개사(24.4%)로 조사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는 18개사(13.7%),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는 5개사(3.8%) 수준임

-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안정성과 매출 기반을 확보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와 사업 확장 단계 기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 창업 지원보다는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생산시설 확보, 인력 확충 등 성장 단계 기업 중심의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초기 시장 진입 단계 및 연구개발 단계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기술개발, 사업화, 투자 연계 등 초기 성장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 인증·지정 여부

부록 그림 2-8 | 기업 인증·지정 여부



○ 벤처기업 지정 기업은 39개사(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노비즈 33개사(25.2%), 메인비즈 23개사(17.6%), 우수중소기업 21개사(16.0%) 순으로 조사됨

○ 각 인증·지정 제도에 대해 미지정 기업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수중소기업 미지정 비율은 84.0%로 가장 높게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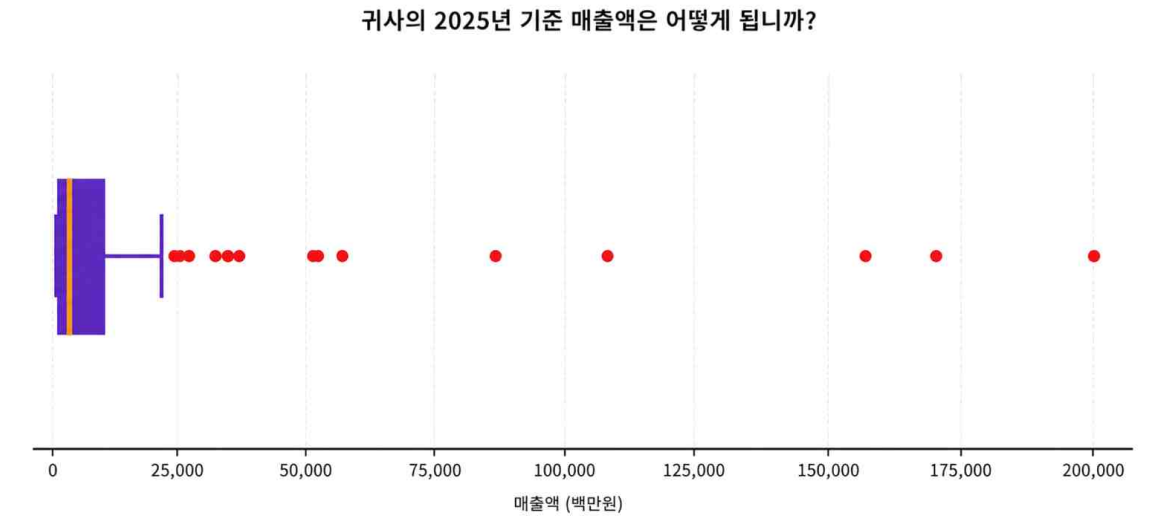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지정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혁신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이 일정 수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중심의 응답 구조와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각종 인증 및 지정 제도에 미지정된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상당수 기업이 아직 정책 지원체계 또는 인증 제도 활용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정책 접근성과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매출액 규모

부록 그림 2-9 | 매출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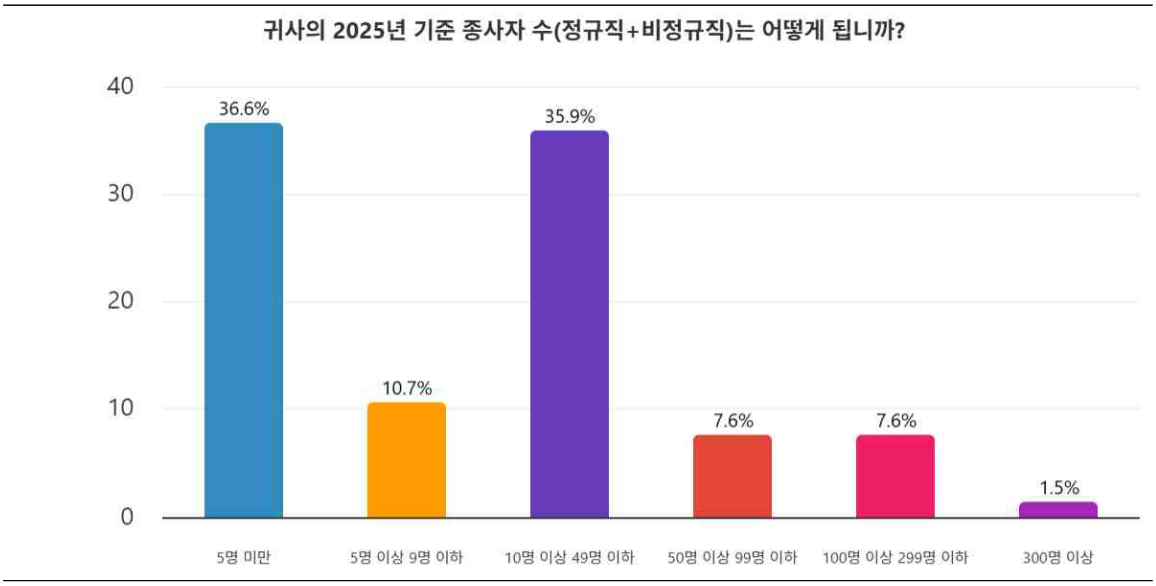
○ 매출액은 최소 11백만원에서 최대 200,000백만원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평균 매출액은 약 10,837백만원이었으나, 중위값은 1,750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됨

○ 매출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1,000백만원~10,000백만원 수준의 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 속에서 일부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함께 포함된 결과로 해석됨

□ 종사자 수

부록 그림 2-10 | 종사자 수



○ 2025년 기준 종사자 수는 5명 미만이 48개사(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명 이상 49명 이하가 47개사(35.9%)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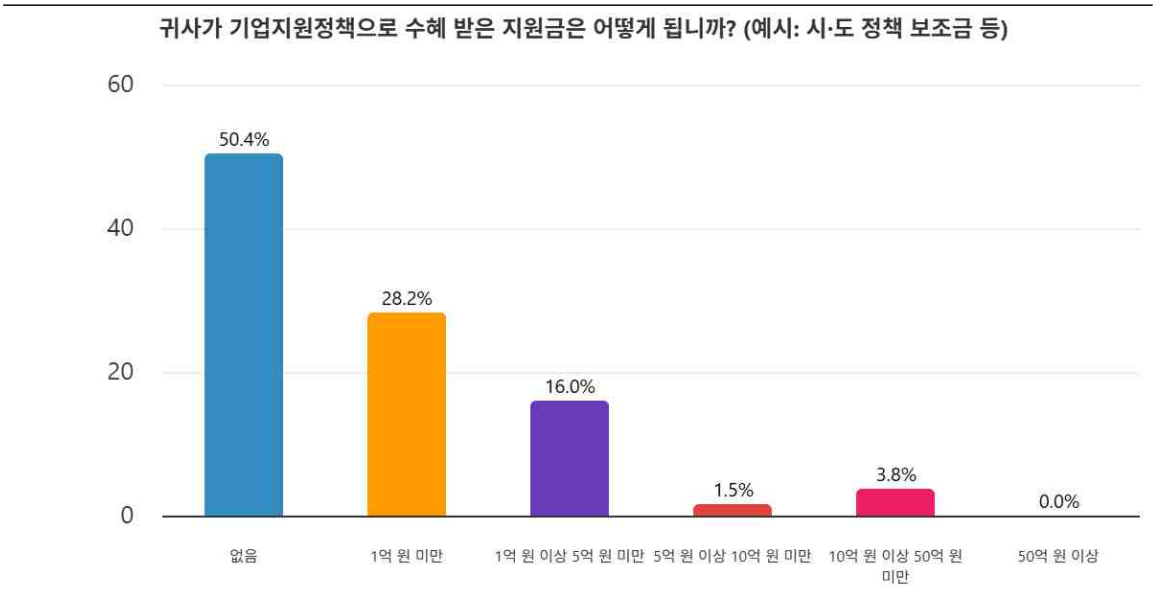
○ 50명 이상 기업은 총 22개사(16.8%)로 확인되었으며, 300명 이상 기업은 2개사(1.5%) 수준으로 조사됨

○ 종사자 수 49명 이하 기업은 전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규모 기업 중심의 응답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

- 상당수가 소규모 인력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앞서 분석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특성이 종사자 규모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수요 역시 인력 확보, 운영비 부담 완화, 사업 공간 지원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함

□ 정책 지원금 수혜

부록 그림 2-11 | 정책 지원금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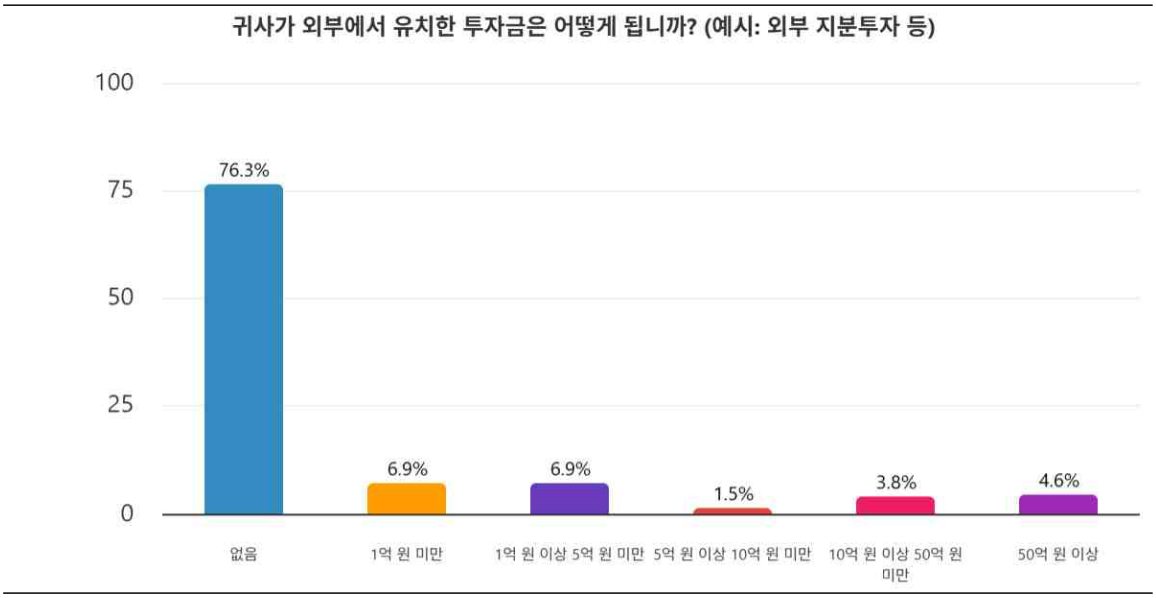
○ 기업지원정책 수혜 규모는 '없음'이 66개사(5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1억 원 미만'이 37개사(28.2%)로 가장 많았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1개사(16.0%)였으며,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개사(3.8%) 수준으로 확인되고 '5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절반 이상이 별도의 정책 지원금을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지원정책의 접근성 또는 활용도가 제한적인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원금을 수혜받은 기업 역시 대부분 5억 원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성장단계 기업 중심의 정책 수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순 지원제도 운영뿐 아니라 정책 정보 접근성, 지원 절차,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외부 투자 유치

부록 그림 2-12 | 외부 투자 유치



○ 외부 투자 유치 규모는 '없음'이 100개사(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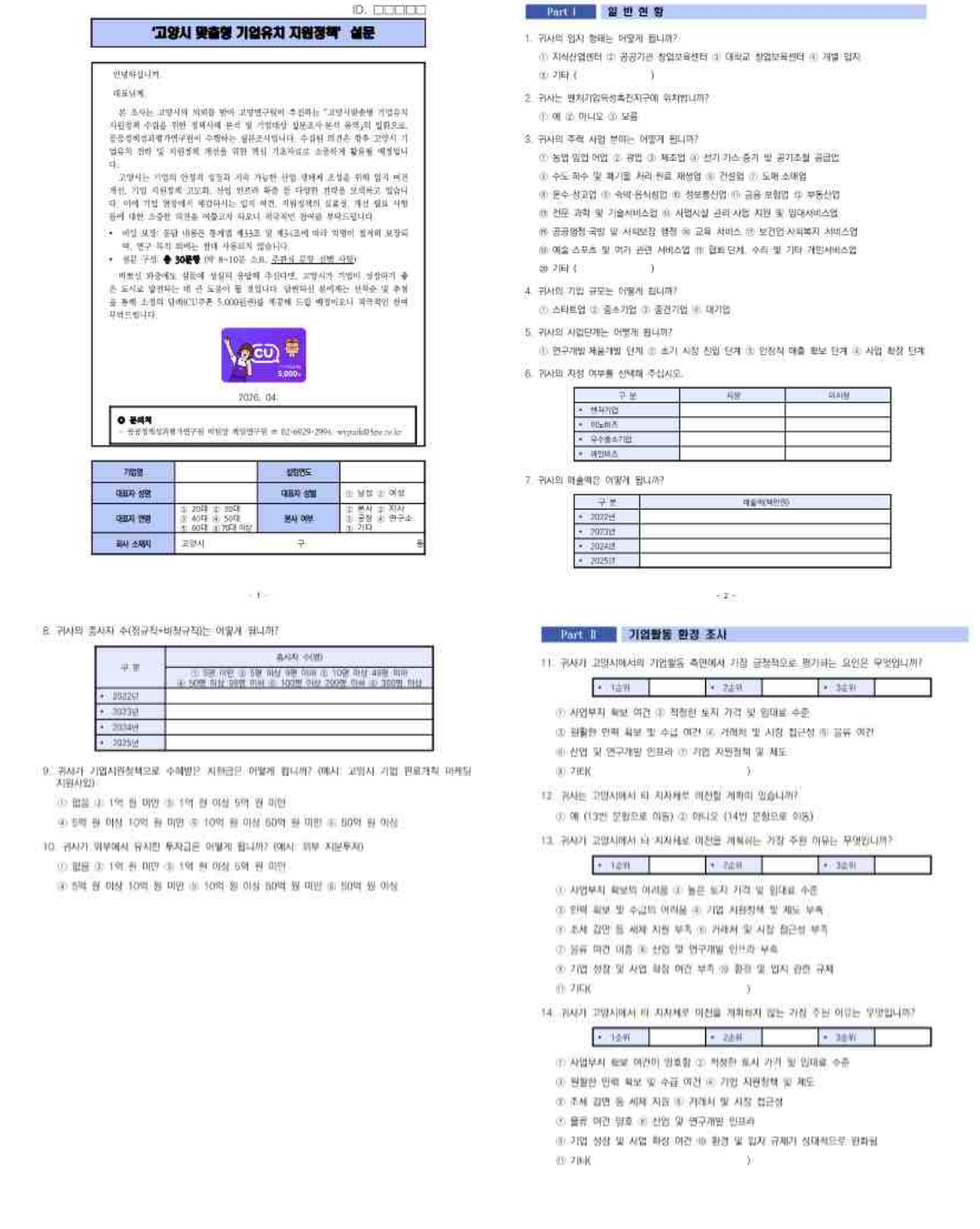
○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 가운데에서는 '1억 원 미만'과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각각 9개사(6.9%)로 가장 많았으며, '5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도 6개사(4.6%)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구간은 2개사(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외부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수 기업이 자체 자금 또는 제한적인 금융 조달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의 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투자 유치 역량 확보 및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 일부 기업은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력 또는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투자시장과 연계된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기업유치 정책 추진 시 단순 입지 지원뿐 아니라 투자 연계, 정책금융, 성장기업 지원체계 등 금융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부록 3]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

부록 그림 3-1 |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1)



ID. □□□□□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

본 조사는 고양시에 적합한 맞춤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지에 분석 및 기업대상 실태조사 분석 용역의 일환으로 공공정책과학평가연구원이 수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수집된 의견은 향후 고양시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지 여건 개선, 기업 지원정책 고도화, 산학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입지 여건, 지원정책의 실효성,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 보장: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 구성: ◆ **30문항** (약 8~10분 소요, 주관식 문항 선택 사항)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다면, 고양시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하신 분께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GS주존 5,000원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04.

○ 문의처
- 공공정책과학평가연구원 비상임 책임연구원 ☎ 02-6029-2994, wypark@5pw.or.kr

기업명		설립연도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대표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본사 여부	① 본사 ② 지사 ③ 공장 ④ 연구소 ⑤ 기타
회사 소재지	고양시	구	동

- 1 -

Part I 일 반 현 황

1. 귀사의 입지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지식산업센터 ②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③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④ 개별 입지
⑤ 기타 ( )

2. 귀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위치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3.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 소매업
⑧ 운수·창고업 ⑨ 숙박·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보험업 ⑫ 부동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 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⑳ 기타 ( )

4. 귀사의 기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스타트업 ② 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5. 귀사의 사업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연구개발 제품개발 단계 ② 초기 시장 진입 단계 ③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 ④ 사업 확장 단계

6. 귀사의 지정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지정	미지정
• 벤처기업		
• 이노비즈		
• 우수중소기업		
• 메인비즈		

7. 귀사의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구 분	매출액(백만원)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 -

8. 귀사의 종사자 수(정규직+비정규직)는 어떻게 됩니까?

구 분	종사자 수(명)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 9명 미만 ③ 10명 이상 49명 미만 ④ 50명 이상 99명 미만 ⑤ 100명 이상 299명 미만 ⑥ 300명 이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9. 귀사가 기업시민정책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시: 고양시 기업 원료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① 없음 ② 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④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⑥ 50억 원 이상

10. 귀사가 외부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시: 외부 지분투자)
① 없음 ② 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④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⑥ 50억 원 이상

- 3 -

Part II 기업활동 환경 조사

11. 귀사가 고양시에서의 기업활동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사업부지 확보 여건 ②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③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 ④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⑤ 금융 여건
⑥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⑦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⑧ 기타( )

12. 귀사는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13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14번 문항으로 이동)

13. 귀사가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전을 계획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② 높은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③ 인력 확보 및 수급의 어려움 ④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부족
⑤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부족 ⑥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부족
⑦ 물류 여건 미흡 ⑧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⑨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 부족 ⑩ 환경 및 입지 관련 규제
⑪ 기타( )

14. 귀사가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사업부지 확보 여건이 양호함 ② 적정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수준
③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수급 여건 ④ 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⑤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⑥ 거래처 및 시장 접근성
⑦ 물류 여건 양호 ⑧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⑨ 기업 성장 및 사업 확장 여건 ⑩ 환경 및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⑪ 기타( )

- 4 -

부록 그림 3-2 | 고양시 내부기업 설문지(2)

Part Ⅲ 기업지원정책 현황

15. 귀사는 고양시의 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귀사는 고양시에서 시행 중인 기업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17번 문항으로 이동)
②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지원받지) 못했다. (18번 문항으로 이동)
③ 신청하지 않았다. (18번 문항으로 이동)

17. 귀사가 지원받은 기업 지원정책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금융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② 마케팅 판로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 등)
③ 시설지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④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등)
⑤ 기술개발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닥터 사업,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⑥ 특화산업지원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사업,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⑦ 창업지원 (원스톱 창업 플랫폼 운영,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⑧ 인증 인센티브지원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⑨ 첨단산업 육성지원 (스마트헬스 지원사업 등)
⑩ 일자리지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등)
⑪ 기업애로지원 (기업애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등)
⑫ 기타( )

18. 귀사가 향후 고양시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금융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② 마케팅 판로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 등)
③ 시설지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④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등)
⑤ 기술개발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닥터 사업,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⑥ 특화산업지원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사업,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⑦ 창업지원 (원스톱 창업 플랫폼 운영,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⑧ 인증 인센티브지원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⑨ 첨단산업 육성지원 (스마트헬스 지원사업 등)
⑩ 일자리지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⑪ 기업애로지원 (기업애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등)
⑫ 산업 클러스터 입주지원 (일산테크노밸리 입주지원 등)
⑬ 기술 및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평가 및 데이터 가치 평가 사업 지원)
⑭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수요기업-스타트업 사업화 연계 매칭, 지원, 제품 서비스 실 검증 자금 지원)
⑮ 주거비 지원 사업 (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⑯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확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파견되어 투자유치 관련 승인 6기 등 행정절차 지원)
⑰ 기타( )

19. 고양시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까다로운 지원 요건 ② 복잡한 행정절차
③ 지원 규모의 한계 ④ 규제 및 인허가 장벽
⑤ 정보 접근성 부족 ⑥ 제반 환경의 한계
⑦ 기타 ( )

20. 기업 지원정책 사업이 실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1. 기업 지원정책 사업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2. 고양시의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Ⅳ 투자유치 지원정책 현황

23. 귀사는 고양시의 투자유치 지원정책(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4. 귀사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0번 문항으로 이동)

25. 귀사는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수혜 이후,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0번 문항으로 이동)

26. 귀사가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수혜 이후, 유치한 투자라운드는 무엇입니까?
① Pre-Seed (창업 준비 및 초기 검증 단계)
② Seed (초기 제품 서비스 개발 단계)
③ Series A (사업모델 검증 후 성장 단계)
④ Series B (시장 확대 및 매출 성장 단계)
⑤ Series C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상장 준비 단계)

27. 귀사가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수혜 이후, 유치한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없음 ② 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④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⑥ 50억 원 이상

28. 귀사가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수혜 이후, 투자를 유치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4년 이내 ⑤ 4년 이상

29. 귀사가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수혜 이후,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매출액 증가 ② 고용 증가 ③ 우수한 기술력 ④ 기업 구성원의 전문성
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⑥ 투자자 및 산업 네트워크 ⑦ 투자유치 지원정책 사업
⑧ 기타( )

30. 남겨분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 ] 예시: 01012345678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

부록 그림 4-1 |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1)

ID. □□□□□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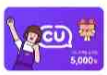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고양시의 의뢰를 받아 고양연구원이 추진하는 「고양시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시뮬 분석 및 기업대상 설문조사·분석 용역」의 일환으로,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수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수집된 의견은 향후 고양시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지 여건 개선, 기업 지원 정책 고도화,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입지 여건, 지원정책의 실효성,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비밀 보장: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 구성: **총 40문항** (응답에 따라 일부 문항 제외, 약 8~10분 소요)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다면, 고양시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하신 분에게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CU쿠폰 5,000원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03.

✪ 문의처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박원양 책임연구원 ☎ 02-6929-2994, wypark@3pc.re.kr

기업명		설립연도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대표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본사 여부	① 본사 ② 지사 ③ 공장 ④ 연구소 ⑤ 기타
회사 소재지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북특별자치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Part Ⅰ 일 반 현 황

1. 귀사의 입지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국가산업단지 입주 ② 일반산업단지 입주 ③ 농공단지 입주 ④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⑤ 지식산업센터 입주 ⑥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⑦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
⑧ 개별 입지 ⑨ 기타 ( )

2.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① 농업·임업·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⑤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소매업
⑧ 운수·창고업 ⑨ 숙박·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보험업 ⑫ 부동산업
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⑭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⑮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 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⑳ 기타 ( )

3. 귀사의 기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스타트업 ② 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4. 귀사의 사업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연구개발·제품개발 단계 ② 초기 시장 진입 단계 ③ 안정적 매출 확보 단계 ④ 사업 확장 단계

5. 귀사의 지점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지점	미지점
• 벤처기업		
• 이노비즈		
• 우수중소기업		
• 메인비즈		

6. 귀사의 2025년 기준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 연 [ ] 백만 원

7. 귀사의 2025년 기준 종사자 수(정규직+비정규직)는 어떻게 됩니까?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 9명 이하 ③ 10명 이상 49명 이하
④ 50명 이상 99명 이하 ⑤ 100명 이상 299명 이하 ⑥ 300명 이상

8. 귀사가 기업지원정책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시: 시도 정책 보조금)
① 없음 ② 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④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⑥ 50억 원 이상

9. 귀사가 외부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시: 외부 지분투자)
① 없음 ② 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④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⑥ 50억 원 이상

Part Ⅱ 투자 요인

10. 귀사는 향후 3-5년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① 이전 계획 있음 ② 지사 및 연구소 확장 계획 있음 ③ 검토하고 있음 ④ 없음

11. 귀사가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확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저렴한 입지 확보(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
② 교통 인프라(서울 중심지와의 교통망 및 접근성)
③ 인적 자본(기존 근무인력 유지, 우수 인력 수급 용이성)
④ 정주 여건(주거,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⑤ 산업 생태계(동종 업계, 병원, 연구소 등 관련 유관 산업 클러스터 형성 여부)
⑥ 행정 및 규제(지자체의 규제 완화 및 기업 친화적 행정 환경)
⑦ 기업 지원 인센티브(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

12. 만약 귀사가 기업을 고양시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귀사에서 희망하는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1, 2, 3순위 선택)
① 사업 공간 지원(사무공간 임대료 및 토지 매입비 보조금 지급 등) → 12-1문항으로 이동
② 조세 혜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직접적인 세금 감면 등) → 12-2문항으로 이동
③ 인건비 지원(신규 인력 채용 보조금 및 임직원 이주 지원금 등) → 12-3문항으로 이동
④ 금융 지원(기업 투자 자금 지원 및 기업 운영 자금 저리 융자 등) → 12-4문항으로 이동
⑤ R&D 지원(실증 테스트 베드 인프라 제공 및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 12-5문항으로 이동
⑥ 복지(기숙사 건립 지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복지 지원 등) → 12-6문항으로 이동
⑦ 행정 편의(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 12-7문항으로 이동

12-1.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소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사무공간 임대료 3.3㎡당 최소 [ ] 만 원 이상
- 토지 매입비 3.3㎡당 최소 [ ] 만 원 이상
* 현재 고양시는 토지 매입비를 평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 중임.

12-1-1. 작성하신 지원 금액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금액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2.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취득세 최소 [ ]% 감면 ~ 재산세 최소 [ ]% 감면
- 법인세 최소 [ ]% 감면
* 현재 고양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 지원 중임.

12-2-1. 작성하신 지원 혜택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혜택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혜택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3.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용보조금 1명당 최소 [ ] 만 원 이상, 최대 [ ] 개월
* 현재 고양시는 1명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중임.

12-3-1. 작성하신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부록 그림 4-2 | 고양시 외부기업 설문지(2)

12-4.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 최소 [ ] % 이상

* 현재 고양시는 중소제조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 (최대 2.5%)를 지원 중임.

12-4-1. 작성하신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4-2.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 기업 투자 유치 자금 최소 [ ] 억 원 이상

*현재 고양시는 고양벤처 펀드를 운영 중임.

12-4-3. 작성하신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5.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지원 혜택은 무엇입니까?

① 기술개발자금 지원
② 실증테스트 베드 인프라 제공
③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기업 기술 매칭 등)
④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기술 및 데이터 가치 평가 지원 등)
⑤ R&D 전문 인력 고용 및 양성 지원

12-5-1. 선택하신 지원 혜택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혜택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혜택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6. 귀사가 이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및 청주 지원 혜택은 무엇입니까?

① 기숙사 건립 지원 및 주거비 보조
② 서울 주요 거점 연결 셔틀버스 운영 지원
③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④ 문화 레저 인프라(쇼핑, 공연 등) 접근성 개선

12-6-1. 작성하신 지원 혜택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혜택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혜택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2-7. 귀사가 원하시는 행정 지원의 수준 또는 사항을 명시해주십시오.

12-7-1. 작성하신 지원 수준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고양시로 이전할 의사가 생기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
②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③ 해당 수준이 지원되더라도 다른 요건(인력, 인프라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
④ 지원 수준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다.

13. 고양시가 추진 중인 아래의 인프라 중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일산테크노밸리(바이오 첨단제조 거점)
②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콘텐츠 제작 인프라)
③ 킨텍스 제3전시장(MICE 및 글로벌 비즈니스)
④ 경제자유구역 추진(외국인 투자 및 규제 완화)
⑤ 고양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 부족

14. 지자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거나 투자를 검토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까다로운 지원 요건 ② 복잡한 행정절차 ③ 지원 규모의 한계 ④ 규제 및 인허가 장벽
⑤ 정보 접근성 부족 ⑥ 제반 환경의 한계 ⑦ 기타 ( )

15. 귀사가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센티브를 알려주십시오. (선택응답)

① 입지 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3.3㎡당 [ ] 만 원 지원
② 조세 혜택	취득세 [ ]%, 재산세 [ ]%, 법인세[ ]% 감면
③ 인건비 지원	고용보조금 1명당 [ ] 만 원, [ ] 개월
④ 금융 지원	기업 투자 자금 지원 [ ] 억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 ] %
⑤ R&D 지원	① 기술개발자금 지원 ② 실증테스트 베드 인프라 제공 ③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기업 기술 매칭 등) ④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기술 및 데이터 가치 평가 지원 등) ⑥ R&D 전문 인력 고용 및 양성 지원 ⑥ 없음
⑥ 복지	① 기숙사 건립 지원 및 주거비 보조 ② 서울 주요 거점 연결 셔틀버스 운영 지원 ③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④ 문화·레저 인프라(쇼핑, 공연 등) 접근성 개선 ⑤ 없음
⑦ 행정 편의	( )
⑧ 기타	( )

16. 지자체의 기업 유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7. 답례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 ] 예시: 01012345678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범주–코드–인용문 매핑표

부록 표 5–1 | 범주–코드–인용문 매핑표 (주요코드 발췌)

상위 범주	코드명	참여자	인용문(원문)
A. 산업 기회 구조	휴머노이드 상용화 임박	P02	"저희가 11월쯤에는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A. 산업 기회 구조	경상의료비 200조 효율화 시장	P10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가 200조인데 이거를 기업이 어느 정도 가져가냐"
A. 산업 기회 구조	의료의 AI 대체 필연론	P10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 처방받고 이런 거 다 인공지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A. 산업 기회 구조	글로벌 빅테크의 헬스 슬롯 개방	P11	"이 플랫폼 하는 애들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12월에 다 헬스 산업을 다 열었어요"
A. 산업 기회 구조	피지컬 AI = 융합산업	P19	"로봇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통신, 데이터, 운영, 규제 대응, 서비스 모델이 결합된 융합 산업"
A. 산업 기회 구조	드론의 민수·방산 경계 소멸	P06	"저도 드론은 사실 민수와 방산이 이제는 구분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A. 산업 기회 구조	반도체 슈퍼사이클(2028년까지)	P16	"3년 동안은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야 그건 확실히"
A. 산업 기회 구조	기체 인증 지연 = UAM 병목	P20	"인증을 다 받은 기체가 지금 없고 그게 언제 나올 거라고 누구도 확신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A. 산업 기회 구조	양자 겨울 전망	P05	"지금 아직 겨울은 안 왔지만 겨울이 왔을 때 견뎌내야 돼요"
A. 산업 기회 구조	양자보안은 검증된 상용 기술	P15	"국정원의 검증을 받으니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A. 산업 기회 구조	소량 드론 배송의 경제성	P21	"소규모의 물품인 경우에는 차량으로 가는 것보다 드론으로 가는 게 저렴하더라고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병원 데이터 집적 전국 최고	P10	"규모 있는 병원이 한 개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갖춘 데는 고양시가 거의 최고예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암관리법 기반 데이터 권한 앵커	P01	"암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실증 자원 풍부(호수공원·킨텍스)	P02	"일산에 되게 좋은 자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호수 공원이나 킨텍스나"
B. 고양시 입지 자산	공항·항공대 인접	P15	"항공대에 있지 김포공항 코앞이지 인천공항 코앞이지"
B. 고양시 입지 자산	도심 속 저밀 공간 = 실증 최적	P21	"좀 더 도심이면서도 도심 같지 않은 지역이 있는 곳이 고양시잖아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데이터센터 입지 우위	P05	"고양시가 사실 입지가 엄청 좋은 데예요. 네 왜 그러면 데이터 센터들이 서울에 많이 못 들어오거든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서울 인접 최대 유휴부지	P21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고양시밖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만한 부지가 나올 수 있는"

B. 고양시 입지 자산	수도권 농식품 클러스터 공백	P03	"농식품 클러스터 만들면 농식품부에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진짜 없어요. 수도권은 없어요"
B. 고양시 입지 자산	군 수요 인접성	P15	"드론 CCTV uam 수요자가 어디 있을까요? 판교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저기 있다니깐요"
C. 구조적 제약	전통 제조업 원천 불가	P06	"전통 제조업 안은 안 된다는 거고 전통 제조업 안 돼요 네 아예 안 돼서"
C. 구조적 제약	방산 생산시설 부지 요건	P06	"대부분의 공장 형태가 사이즈가 한 30만 최소 3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C. 구조적 제약	판교 마지노선 인력 담론	P06	"요새 그래서 최 마지노선이 판교입니다. 대부분 판교까지 있고 싶어 하고"
C. 구조적 제약	인재의 서울 지향 딜레마	P03	"고양시에 있는 기업으로 올 생각은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C. 구조적 제약	베드타운 낙인	P11	"이건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 돌아다니면 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C. 구조적 제약	심리적 거리와 실제의 괴리	P07	"사실 고양시가 되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이거든요"
C. 구조적 제약	수도권 규제 역차별	P07	"이 경기권에 속해 있어 가지고 서울 경기로 묶여 있으니까 베니핏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C. 구조적 제약	산업 테마 부재	P07	"고양시 항상 들어보면 이제 뭔가 뭐가 항상 이게 없어요"
C. 구조적 제약	개발-생산 인접 원칙(반도체)	P16	"모든 반도체는 개발하는 데랑 공장이 있는 데랑 붙어 있어야 돼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C. 구조적 제약	범용 AI 특구 불가론	P03	"AI 특구 같은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하고"
D. 생태계 조건	실증 공간이 최대 병목	P19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보다 실증 공간 확보가 더 큰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 생태계 조건	앵커기관 의존 정착	P10	"사실 암센터가 없으면 저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D. 생태계 조건	플랫폼형 앵커 전환	P11	"예전에는 물리적인 앵커가 필요했어요. 기업이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 그 앵커의 역할을 해요"
D. 생태계 조건	시-앵커 연계 단절	P01	"관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시에서 관심이 별로 없고"
D. 생태계 조건	집적 완성 시 인력난 해소	P03	"그렇게 완전히 모여지면 익산처럼 해결돼요"
D. 생태계 조건	이전 후 인력 적응(반증)	P05	"여기 오니까 그냥 다들 적응하고 또 삽니다"
D. 생태계 조건	대학 = 기업 유치의 미끼	P15	"대학이라는 미끼가 있어야 기업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고"

E. 정책 개입 지점	실증 기회 판매 도시 포지셔닝	P19	"고양시는 로봇기업에게 땅을 파는 도시가 아니라, 실증 기회를 파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E. 정책 개입 지점	매출 기회 중심 유치론	P10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왔더니 돈을 벌 수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E. 정책 개입 지점	R&D 자금 매칭 조건	P09	"근데 돈이랑 매칭이 안 되면 갈 이유가 없어 갈 이유가 없죠"
E. 정책 개입 지점	공공구매 확약의 유인 효과	P02	"고양시가 무조건 사주겠다 약간 로봇을 한다든 두 대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고양시에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E. 정책 개입 지점	임대료 지원 단독의 한계	P02	"임대료 감면으로는 너무 메리트가 없다"
E. 정책 개입 지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제안	P10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같은 거 하나 딱 때리면 사실은 할 만하거든요"
E. 정책 개입 지점	10년 지속성 요구	P11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꾸준히 한 10년 이상 해야 돼요"
E. 정책 개입 지점	정책 지속성(시장 교체 무관)	P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뀐다고 적으면 안 되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 꽤 괜찮아질 거"
E. 정책 개입 지점	전담조직 필요	P02	"그런 부서가 먼저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in Goyang City

Jong Yoon Park[1], Yong Deok Kim[2], Ji Ho Ahn[3], Jin Guen Yoo[4]

This study formulates a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for Goyang City, a special-case city of about 1.06 million residents located in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of the Seoul Capital Area. Despite strong accessibility to Seoul, a favorable living environment, and anchor assets such as KINTEX, the National Cancer Center, and the Ilsan Techno Valley, Goyang has a weak manufacturing base, low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a commuter-dependent economy. Adopting Bartik's two-toolbox framework, which distinguishes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Toolbox 1) from customized business services (Toolbox 2), the study combines a legal and theoretical review of firm attraction policy, an analysis of global and domestic business environments, comparative case studies of six local governments and eight industrial clusters at home and abroad, surveys of firms located inside and outside Goyang, and a thematic analysis of 21 expert interview transcripts.

Three findings emerge. First, an eleven-item comparison of tax and subsidy provisions shows that, as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Goyang is structurally excluded from the strongest incentives, holding no top-tier benefit in any

1) Associate Research Fellow, Goyang City Institute, Korea
2) Research Fellow, Goyang City Institute, Korea
3) Research Fellow, Goyang City Institute, Korea
4) Invited Senior Research Fellow, Goyang City Institute, Korea

category; competing with non-capital regions on incentive volume is legally untenable. Second, firms rank affordable sites, labor-cost relief, tax benefits, and financing as their leading location factors, yet consistently report that cost support alone is insufficient unless workforce,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nditions are resolved together, with limited access to policy information cited as the largest bottleneck. Third, experts identify demonstration (proof-of-concept) opportunities and revenue linkage, rather than land or rent discounts, as the decisive determinants of firm location, and converge on three strategic industries: digital healthcare and medical-data AI, physical AI and service robots, and drone/UAM/aviation R&D.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that Goyang bypass rather than close the incentive gap by expanding facility- and sector-based tax reductions and ordinance-based abatements, pursuing Free Economic Zone or Peace Economic Zone designation, and rebalancing its policy mix toward Toolbox 2. It presents a support package covering housing, open innovation and PoC, networking, credit guarantees, and mentoring, together with two cluster development plans: a Goyang Quantum Campus centered on quantum security and a Goyang Physical AI Cluster organized around an urban living-lab district. Sustained delivery through a mayor-level task force over a ten-year horizon is identified as the critical condition for success.

Keywords: Firm Attraction Policy, Goyang City, Bartik's Two Toolboxes, Industrial Cluster,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Strategic Industry

정책 26-07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 연구

발 행 일 2026년 06월 30일
저 자 박종윤, 김용덕, 안지호, 유진근
발 행 인 김현호
발 행 처 고양연구원
주 소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전 화 031-8073-8341
홈 페 이 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24069-23-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양시 맞춤형 기업유치 지원정책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Firm Attraction Policy in Goyang City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